

#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1991. 12.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 序 文

최근 수년간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공산당체제가 잇달아 붕괴하면서 2次大戰 이후 동구사회를 지배하던 스탈린식 社會主義體制가 政治的 多元主義와 市場經濟體制로 대체되었다. 東歐社會主義圈의 군사동맹체인 바르샤바조약기구와 경제동맹체인 동유럽經濟相互援助協議會(COMECON)도 완전히 해체되었다. 특히, 蘇聯의 급진적인 改革·開放과 蘇聯邦의 해체는 정치·경제·군사 등 諸 분야에서 北韓이 지금까지 의존하여 온 대외관계의 기본골격을 와해시켰고 또 결과적으로 社會主義體制의 내재적인 矛盾에 기인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北韓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적 폐쇄정책을 고수해 오던 北韓도 마침내 UN에 가입했고, 日本과의 수교 및 美國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대외관계에서는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共通點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歷史的·政治文化的 차이에서 오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특히 北韓은 金日成 主體思想을 유일지도 이념으로 삼고 首領·黨·大衆이 三位一體가 된 국가체제와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大勢

속에서 北韓은 變化要求와 體制固守라는 딜레마에 처해 있으며 경제적 위기, 국제적 고립, 권력승계 문제 등으로 중대한 變化의 岐路에서 있는 것 같다. 따라서 北韓體制의 분야별 實相, 체제변화의 展望에 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理解는 학문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당면한 정책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금년 4월 9일 개원한 본 民族統一研究院의 北韓研究室에서는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로서 이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7-8個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정리 및 집필상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충분히 다듬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時點에서 北韓體制의 각 부문별 實相과 變化의 展望에 관한 이 보고서를 내놓게 된 것은 北韓의 변화문제에 대한 國內外的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단 需要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전환기의 北韓體制를 이해하고 統一政策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1. 12.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目 次

序文

要約 ..... 1

第 1 部 序 論 ..... 55

I. 問題提起 ..... 57

II. 社會主義 變化를 보는 視角 ..... 59

1. 追擊發展 戰略으로서의 社會主義의 失敗 ..... 59

2. 社會主義 變化類型의 差異: 普遍性和 特殊性 ..... 62

III. 變化의 概念과 接近方法 ..... 66

IV. 이 책의 構成 ..... 69

第 2 部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 71

第 1 章 理念 ..... 73

I. 主體思想의 起源 ..... 74

1. 對外狀況 ..... 75

2. 政治狀況 ..... 76

3. 經濟狀況 ..... 77

II. 主體思想의 發展過程 ..... 78

|                            |            |
|----------------------------|------------|
| III. 主體思想의 主要 內容           | 80         |
| 1. 主體思想의 思想의 原理            | 80         |
| 2. 主體思想의 具體的 實現            | 84         |
| IV. 1980年代 以後 主體思想의 內容 變化: |            |
| 體制守護와 社會統合의 強調             | 92         |
| 1. 1980年代 以後의 狀況變化         | 92         |
| 2. 北韓 指導部의 狀況認識            | 93         |
| 3. 主體思想의 새로운 內容            | 94         |
| V. 變化의 展望                  | 112        |
| <br>                       |            |
| <b>第 2 章 政治體制</b>          | <b>115</b> |
| <br>                       |            |
| I. 政治體制의 特性과 變化의 內容        | 116        |
| 1. 金日成 唯一 支配體制와 世襲體制       | 116        |
| 2. 理念官僚와 技術官僚의 構成變化        | 128        |
| 3. 北韓의 軍部                  | 146        |
| II. 體制變化의 要因               | 154        |
| 1. 促進要因                    | 155        |
| 2. 抑制要因                    | 165        |
| III. 變化의 展望                | 171        |
| 1. 金日成 死亡 以前               | 171        |
| 2. 金日成 死亡 以後               | 177        |
| 3. 展望                      | 185        |

|                            |     |
|----------------------------|-----|
| 第 3 章 經濟體制 .....           | 187 |
| I. 北韓經濟의 實相 .....          | 187 |
| 1. 經濟體制와 政策基調 .....        | 187 |
| 2. 經濟發展 水準 .....           | 195 |
| 3. 經濟沈滯 要因과 變化의 不可避性 ..... | 214 |
| II. 社會主義 諸國의 變化過程 .....    | 220 |
| 1. 經濟改革의 動機와 主要內容 .....    | 220 |
| 2. 經濟改革의 過程 .....          | 224 |
| III. 北韓의 經濟政策 變化 徵候 .....  | 230 |
| 1. 對內政策 .....              | 230 |
| 2. 對外政策 .....              | 234 |
| IV. 變化의 展望 .....           | 239 |
| 1. 促進要因과 抑制要因 .....        | 239 |
| 2. 展望 .....                | 243 |
| <br>                       |     |
| 第 4 章 對外政策과 對外關係 .....     | 246 |
| I. 北韓 對外政策의 基本性格 .....     | 246 |
| II. 北韓과 周邊4強 關係 .....      | 247 |
| 1. 北韓과 中國·蘇聯 關係 .....      | 249 |
| 2. 北韓과 美國·日本 關係 .....      | 273 |
| III. 變化의 展望 .....          | 304 |
| 1. 北韓과 中國·蘇聯 關係 .....      | 304 |
| 2. 北韓과 美國·日本 關係 .....      | 310 |
| 3. 展望 .....                | 317 |

|                                     |     |
|-------------------------------------|-----|
| 第5章 社會體制                            | 348 |
| I. 北韓 社會構造의 特徵                      | 351 |
| 1. 社會構造의 概念                         | 351 |
| 2. 社會主義的 生産樣式                       | 353 |
| 3. 社會主義的 統治樣式                       | 356 |
| 4. 社會主義的 生産樣式과 統治樣式이 社會體制에 미친影響     | 372 |
| II. 社會體制 變化의 潛在力 增大                 | 375 |
| 1. 工業化와 階級構造의 再編 및 階級葛藤의 構造變化       | 377 |
| 2. 社會分化, 都市化, 教育水準의 向上에 따른 社會統制의 弛緩 | 391 |
| 3. 工業化와 革命後期 症候群                    | 396 |
| 4. 世代交替와 革命後期 症候群                   | 400 |
| 5.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의 社會的 效率性 危機           | 409 |
| III. 社會的 挑戰                         | 417 |
| 1. 經濟難과 社會的 不滿                      | 418 |
| 2. 反金正日 思潮의 一般化                     | 423 |
| 3. 體制比較 및 體制批判의 思潮                  | 426 |
| IV. 變化의 展望                          | 432 |
| 1. 抑制要因                             | 433 |
| 2. 促進要因                             | 437 |
| 3. 展望                               | 441 |

|                              |     |
|------------------------------|-----|
| 第3部 結 論                      | 443 |
| 1. 短期的 展望：改革과 統制의 딜레마        | 445 |
| 2. 長期的 展望：統制의 限界와 改革潛在力의 顯著化 | 452 |
| 3. 結 論                       | 458 |

# 要 約

## I. 問題提起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은 사회주의로의 移行 後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하기 시작한 生産性的의 低下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혁조치를 취해왔다. 예컨대 蘇聯의 리베르만 방식, 헝가리의 NEM(New Economic Mechanism),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리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에서 體制自體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社會主義 體制의 틀 내에서 시도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體制 自體의 붕괴를 초래한 것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社會主義 體制內의 부분적인 개혁이 개혁으로서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혁의 영향이 社會的·政治的 多元主義를 촉진시켜 체제붕괴의 動因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에서도 일찍부터 社會主義 體制의 여러가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산리방법,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 합영법 등의 體制內 改革措置를 취해왔으나 이러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北韓에서도 體制內 改革이 결국 體制의 變化로 연결될 것인가? 지금까지 北韓 社會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北韓은 변화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보는 관점과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대립되어 왔다. 不變論은 北韓體制의 特殊性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있는데 반해 變化論은 北韓體制의 社會主義 體制로서의 普遍性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보다 객관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보다 普遍性과 特殊性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특정한 관점에서 斷定的인 結論을 내리기보다는 北韓社會에서 대체로 80년대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實相을 분석하고 거기서 발견된 사실에 기초하여 北韓體制의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 II. 社會主義 變化를 보는 視角

### 1. 追擊發展<sup>1)</sup> 戰略으로서의 社會主義의 失敗

지금까지 社會主義 體制들의 붕괴 원인으로 경제적 침체, 정치적 불만 및 사회적 저항, 주변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經濟的

1) 경제적으로 후진 사회인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적 목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아 자기중심적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주의를 추격발전의 한 전략적 체제로서 파악한 사람은 쟁아스이다. Dieter Senghaas,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sgeschichtliche Betrachtungen*(edition suhrkamp, 1982), 한상진·유팔무譯,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0).

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政治的 正統性이 쉽게 유지될 것이고 사회통합도 잘 될 것이며, 외부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社會主義 體制들의 變化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하면 社會主義는 階級葛藤 問題에서 출발하여 계급적 搾取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레닌(Nikolai Lenin)에 있어서는 社會主義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레닌에 있어서 러시아혁명은 마르크스의 대내적 계급투쟁이론을 국제적 영역으로 확대적용한 것으로, 착취당하는 식민지 국가와 착취하는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투쟁인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감행한 民族解放鬪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이 손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民族運動의 역사적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자결권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2)</sup>

레닌의 이러한 주장은 社會主義 革命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제3세계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았던 월러스타인(Immanuel Walerstein)의 주장<sup>3)</sup>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월러스타인에 의하면 社會主義 革命은 마르크스가 예견한 것과는 달리 反資本家 階級革命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부<sup>4)</sup> 피지배계급의 反帝國主義革命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2)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서울: 까치, 1989), p. 234.

3)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The Capitalist World-Econom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다. 소련의 지휘에 의해 위로부터 사회주의가 강요된 대부분의 동구 국가를 제외하고 혁명이 내부에서 발생한 러시아, 中國, 베트남, 유고 슬라비아, 쿠바, 니카라구아 등의 社會主義 國家들이 그러했고 1925년의 조선공산당 결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선진국을 追擊發展<sup>5)</sup>하고자 하는 후진국의 경제발전 전략개념으로 社會主義의 生成을 설명하는 쟁아스(Dieter Senghaas)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sup>6)</sup>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있는 쟁아스는 經濟적으로 낙후한 나라들이 선진국들의 경쟁력에 밀려 周邊化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으며, 發展史的으로 볼 때 社會主義는 이제까지 주변부 자본주의적 환경속에서 追擊發展을 위한 전략의 지주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는 社會主義는 자본주의가 실패한 조건속에서 제국주의에 의한 종속을 방지하는 발전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쟁아스에 의하면, 周邊部 資本主義의 극복이 문제였던 곳에서 社會主義는 주변부의 追擊發展을 확실히 촉진했지만 社會主義的 發展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후에는 근본적인 체제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4) 윌러스타인은 세계체제를 中心部(core)-半周邊部(semiperiphery)-周邊部(periphery)로 나누어 각 체제간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설명했다. 중심부에는 선진자본주의 국가, 주변부에는 제3세계와 후진사회주의 국가가 포함되며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반주변부가 존재한다.

5) 周邊化에 대응하여 자립적인 선진국과 같은 자기 중심적 발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쟁아스의 발전이론의 주제이며 종속이론이 제시하는 단절의 발전전략개념과도 유사하다. Senghaas, *op.cit.*, 참조.

6) Dieter Senghaas,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edition suhrkamp, 1982), 한상진·유팔무譯,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나남, 1990).

社會主義는 명령경제와 정치적 전제주의하에서 퇴보를 겪게 되는데 이는 改革的 社會主義 이론가들<sup>7)</sup>이 지적했듯이 人的 資源이 질식되고 엄청난 物的 資源이 낭비되었기 때문이다. 專制體制속에서 민주주의적 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공적인 의사소통은 기형화하여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동기유발이 메말라버린다. 이로 인해 지도집단들이 현실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줄어들고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過程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비교적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적 발전정책이 도입된 경우(동독, 체코 등)에는 이러한 위기증상들이 더 빨리 나타난 반면,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가 社會主義로 이행한 경우에는 위기증상들이 다소 늦게 나타났다.

사회주의적 발전전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대외적 요인도 중요하다. 社會主義 國家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중심부 국가)의 강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世界經濟體制에서 소외되고 봉쇄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침략으로부터의 자기보호라는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고립전략을 채택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社會主義를 枯死시키기 위해서 봉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사회들도 외연적 경제(extensive economy)에서 내포적 경제(intensive economy)<sup>8)</sup>로 이행하는

7) Ota Sik, *Plan und Market im Sozialismus*(Prag und Wien, 1967); R. Selucky, *Marxism, Socialism, Freedom*(London, 1979).

8) 외연적 성장은 노동력과 자연자원의 투입에 의존한 양적 성장을 의미하며, 내포적 성장은 성장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기형적인 계획관료제로 인하여 우선순위가 불합리한 정책들, 社會主義 世界體制內 分業의 미발달로 인한 경제효율성 결여, 누적된 소비욕구 불만 등은 사회주의 발전의 경제적 정당성을 손상시켰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정당성의 위기가 서로 상승작용하여 體制危機를 불러일으켰다.

蘇聯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社會主義的 틀 안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헝가리에서처럼 개혁이 몇가지의 성과를 나타내면서 이루어진 곳에서는 社會的 불평등이 심해짐으로써 새로운 社會的 갈등이 생겨났다. 개혁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고, 개혁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전례가 없는 새로운 개방적인 갈등조절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社會主義 社會들이 직면한 절박한 구조적 딜레마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體制內 變化는 체제의 문제를 해소시켜 체제강화를 가져오기 보다 오히려 體制의 變化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였고, 體制內 변화를 억제하면 體制의 모순이 누적되어 루마니아의 경우처럼 체제가 폭발적으로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다.

## 2. 社會主義 變化의 類型別 差異: 普遍性和 特殊性

최근 東歐와 蘇聯에서 일어난 변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北韓 中國 베트남 알바니아 쿠바 등의 社會主義 국가들은 아직도 社會主義를 지도이념으로 고수하고 있는 반면 蘇聯

이나 東歐 社會主義 국가들은 脫社會主義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社會主義를 공식적인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 社會主義 국가들 중에서도 北韓이 中國, 베트남 등에 비해 개혁·개방이 늦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各國의 政治·經濟·社會的 指標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를 比較分析할 필요가 있다.

#### 가. 各國의 經濟水準이 體制變化에 미친 影響 比較

첫째, 社會主義 국가들 중에서 1인당 GNP가 상대적으로 높은 蘇聯 및 東歐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社會主義 體制의 붕괴를 경험했다. 이는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그만큼 개인의 物質的 慾望이 증대하고 갖가지 精神的·文化的 生活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多元化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둘째, 각국의 經濟成長率을 비교하면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經濟成長率이 급속히 鈍化된 반면 社會主義를 고수하고 있는 中國, 베트남 등은 낮지만 안정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蘇聯 및 東歐의 경우 外延的 성장단계에서 體制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內包的 성장의 단계로 轉換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長期的으로 침체되고 있는 반면, 中國이나 베트남 등은 산업구조상 지금까지 勞動力 중심 또는 低賃金에 기반하고 있으며 國際分業上 노동력의 비교우위에 의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 및 東歐의 경

우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가 곧 體制不安으로 직결되고 있는 반면, 中國이나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

北韓의 1인당 GNP는 蘇聯이나 東歐에 비해 1/3 내지 1/2정도에 불과한 반면, 經濟成長率은 그들 국가들과 비슷하게 下落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物質的 慾望, 社會의 多元化 정도는 蘇聯이나 東歐에 비해 훨씬 낮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 국가에서 처럼 경제의 長期的 沈滯에 따른 不滿 累積으로 인한 돌발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 나. 各國의 多元化 比較

다원화의 尺度로서는 시민사회와 경험, 소유제도, 민족주의 및 종교적 전통을 들 수 있다. 첫째, 市民社會의 역사적 경험 여부에 따라 市民社會를 경험하면서 공산화된 蘇聯 및 東歐 국가들(알바니아 제외)과 半封建 사회에서 市民社會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산화된 나머지 社會主義 國家들로 구분된다.

둘째, 所有制度의 변화는 社會體制의 變化를 의미하므로 각국의 소유제도의 변화를 多元化의 指標로 설정할 수 있다. 國有化 過程에서 私的 所有의 경험 여부가 나머지 社會主義 국가들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이며, 경제개혁에서 所有制度의 변화가 다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東歐에서는 유고와 헝가리, 아시아에서는 中國의 例에서 확인할 수 있다. 北韓은 시민사회와 경험이 없으며 소유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셋째, 民族主義 및 宗教的 전통도 각각 社會主義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唯物論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s)로서 多元化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東歐에서는 민족주의적 전통이 공산화 초기의 反蘇 저항운동으로 표출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원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自生的 혁명전통이 있는 유고, 中國 등에서는 獨自路線의 추구로 나타났다.

이상 사회주의 각국의 經濟·社會構造를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각국의 理念 및 政治體制의 차이는 단순히 정치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그 근저에 깔린 경제·사회구조 및 문화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토대와 상부구조를 통틀어 크게 두 類型의 社會主義 國家群을 설정할 수 있다. 즉, 蘇聯 및 東歐 유형과 北韓, 中國, 알바니아, 베트남, 쿠바 등이 포함되는 유형의 국가들로 나눌 수 있는 바, 前者는 상대적으로 革命的 變化(體制의 變化)를 보이고 있으며, 後者는 漸進的 變化(體制內 變化)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유형에 속하면서도 北韓, 알바니아, 쿠바 등은 中國이나 베트남에 비해 개혁과 개방이 늦어지고 있는 바, 그 요인은 1인의 장기독재와 그에 따른 批判勢力의 不在로 인하여 體制가 硬直되어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경직성은 체제내 부분적 개혁이 체제의 변화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經濟的으로 後進國家로서의 社會主義 國家들이 先進資本主義 국가들을 따라잡고자 하는 發展戰略으로서의 社會主義가 失敗하게 된 일반적인 원인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北韓이 社會主義

國家로서 가지는 普遍性和 北韓만의 特殊性이 개략적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화의 경향들이 北韓에서도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北韓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그러한 變化를 抑制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각 부문별 實相을 분석하고 그 토대위에서 변화의 促進要因과 抑制要因을 판별하여 북한 사회의 향후 변화를 展望하고자 한다.

### Ⅲ. 變化의 概念과 接近方法

사회 또는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構造機能主義 理論과 葛藤理論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體制內 變化’(change within the system)를 강조하는데 반해, 갈등이론은 ‘體制의 變化’(change of the system)를 강조한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社會體制의 각 부분이 全體 體制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體制가 갑자기 변화할 수 없으며 변화하더라도 점진적인 진화의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서 갈등이론은 사회의 각 집단이 지배와 억압의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집단의 감정적 폭발과 조직화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가 매우 격렬하게 혁명적으로 일어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파슨즈(Talcott Parsons)는 體制의 變化와 體制內 變化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특정 社會體制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임을 강조하지만<sup>9)</sup> 體制의 變化와 體制內 變化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코저(Lewis A. Coser)에 의하면 體制의 變化는 體制內 下位體制의 變化가 누적됨으로써 발생하며, 特定 社會體制가 葛藤의 自體調節機能을 상실함으로써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때 既存體制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變化가 下位體制의 각 부문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기간동안 특정 부문에서 限定的으로 일어나면서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다른 부문에 파급됨으로써 體制의 變化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社會主義 國家들에서는 점진적인 體制內 變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혁명적 변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즉 體制內 變化가 體制의 變化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體制內 變化의 수준을 넘어선 체제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다만 북한체제의 실상(과거 및 현재)에 관한 분석에서는 ‘변화’를 體制內의 점진적인 개혁의 의미로 쓰며,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관련해서는 體制의 급진적 혁명을 ‘변화’의 의미로 쓰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개념에 관한 구조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각각 과거의 분석과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9) Talcott Parsons, "A functional theory of change", in Amitai Etzioni and Eva Etzioni-Halevy (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pp. 72-86.

10) Lewis A. Coser, "Social conflict and the theory of social change," in Amitai Etzioni and Eva Etzioni-Halevy(eds.), *op.cit.*, pp. 114-122.



변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변화의 단위를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동일한 개념의 변화를 체제의 모든 단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中國의 경우 經濟分野에서는 體制의 變化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政治分野에서는 體制內 變化가 진행되는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北韓體制의 變化에 관한 분석과 전망을 위해서는 다측면적인(multi-dimensional)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어떤 部門에서는 어떤 요인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部門에서는 왜 비슷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관한 분석을 한 이후에 각 下位體制간의 상호작용과 體制全體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北韓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진적인 體制內 變化가 體制의 變化로 연결될 것인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귀납법적인 논리 전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 IV. 北韓의 部門別 實相

### 1. 理 念

#### 가. 主體思想의 起源과 發展過程

主體思想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 28일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문 일꾼 앞에서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

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주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主體思想이 대두된 배경은 당시의 국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정권 수립의 대부였던 스탈린이 1953년 3월에 사망하고 이후 등장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자 김일성은 자기의 獨裁와 個人崇拜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소련으로부터의) 思想에서의 主體를 주장하게 되었다. 둘째, 자신의 반대세력으로서 외국과 연계하고 있던 연안파, 소련파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政敵 제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政治에서의 自主를 강조했다. 셋째, 1차5개년계획(1957-1960) 추진과정에서 ‘형제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원조를 기대했으나 소기의 援助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1차5개년 계획에 대하여 국내의 소련파, 연안파, 감산파로부터 비판을 받게되자 외부의 원조없이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經濟建設에서의 自立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비슷한 논리로 國防에서의 自衛와 外交에서의 自主를 주장하게 되었다.

#### 나. 主體思想의 機能

主體思想은 기본적으로 金日成의 정권 공고화를 위해서 ‘위대한 수령’을 정당화하는 논리체계이지만 8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경제건설을 위한 노력동원을 정당화하는 논리체계로서도 활용되었다. 1958년까지 정적 숙청을 완료하고 권력을 공고화한 金日成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는 경제건설이었다. 특히 北韓의 급속한 경제건설을

통하여 6.25전쟁으로 성취하지 못한 南韓의 공산화를 완수할 수 있다고 본 만큼 金日成에게 경제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主體思想의 네가지 지도원칙이 思想에서의 주체, 政治에서의 자주, 經濟에서의 자립, 國防에서의 자위이나 그중에서 經濟自立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金日成이 자립경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北韓의 현실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창한 구호는 ‘自力更生’이었으며 主體思想은 전인민의 노력동원을 위한 이념적 토대로써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3大革命小組運動, 속도전 등이 발전되어 오는 동안 5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北韓社會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고,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이념적 支柱로서 기능하여 왔다.

다. 1980년대 以後 主體思想의 內容 變化:

體制守護와 社會統合 內容의 強調

1980년대 이후 北韓의 지도부는 경제적으로 위기의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政治적으로 金正日의 승계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이라는 흐름에도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의 상황에서 金日成-金正日 體制는 인민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상통제와 체제단속에 돌입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노력동원을 독려하던 主體思想이 체제단속위주로 變

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6년부터 1990년까지의 로동신문의 사설 내용분석을 통해서 보면, 8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문제가 가장 많이 강조되었으며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이 정치문제에 대한 언급 보다 2배정도 많다는 사실은 전쟁이후 北韓社會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발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초부터는 정치문제에 관한 언급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문제에 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1989년에는 경제문제에 관한 언급과 정치문제에 관한 언급의 頻度가 거의 동수로 되었다가 1990년에는 정치문제에 관한 언급이 더 많아졌다. 이는 80년대 초반의 中國의 개혁·개방과 東歐社會의 變化 그리고 1985년 이후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영향을 받아 北韓社會에서 사상단속의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는 주체사상체계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主體思想의 내용변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北韓에서 社會的 통합을 강화할 목적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령-당-대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통일체라는 것이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 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라는 뜻이다. 대중은 여기서 당조직과 黨이 영도하는 사회정치적 조직의

한 성원으로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연결을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主體思想體系에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사회적 含意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러한 사회관계의 새로운 개념은 北韓社會의 전통적인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전체주의적 사회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수령에 대하여 충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생물학적인 유기체설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사회통합의 강조는 결국 中國, 東歐 諸國, 蘇聯에서의 개혁 바람에 대해서 北韓의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은 資本主義에 대한 社會主義의 우위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민주주의”는 東歐 社會主義 體制가 붕괴한 시기인 1989년 이후 도입되기 시작하여 金正日의 1991년 5월 5일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논리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논문은 앞에서 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는 상당히 상치되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수령중심의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를 강조한 주장이라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주체사상의 내용중 강조점이 바뀐 원인은 다음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루마니아를 비롯한 東歐 社會主義 체제들의 붕괴를 관료주의의 병폐로 인한 밑으로부터의 저항의 결과라고 파악

하고 北韓에서 인민의 離叛을 방지하기 위하여 北韓體制는 이미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는 中國 및 蘇聯의 개혁 바람이 北韓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식 社會主義의 우월성과 우리식 社會主義의 고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中國, 東歐, 蘇聯에서 개혁을 해도 北韓과는 무관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2. 政 治

### 가. 北韓政治體制의 特性

北韓 政治體制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 정부기관 및 주권기관간의 검직제도와 金日成의 종신 권력독점이다. 당의 핵심인물이 행정부서의 장은 물론 의결기관의 간부직까지 겸한 결과 국가적 의사결정은 당의 정점으로 귀결된다. 金日成은 당에서 정치국상무위원, 당총비서,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는 국가주석, 국방위원회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首位를 맡고 있다.

둘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하부조직이 군을 포함한 각 기업소, 농장, 행정 및 사법기관등의 예하조직에 파견되어 있다.

셋째, 국가의 각급기관에 상응하는 당의 기능조직이 있어 수직적, 수평적 통제가 기획에서 시행단계까지 미친다.

넷째, 집행부서의 유능한 전문관료를 중앙당의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기능집단의 관료주의화 또는 전문화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다섯째, 수령, 당, 대중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념적 이론적 체계로서 주체사상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주로 수령과 당에 대하여 대중이 충성하고 복종하게 하는 메카니즘인 것이다.

북한 정치체제의 본질은 “首領의 唯一的 領導體系”인 바, 이는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지침으로 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全黨, 全軍, 全民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北韓 政治體制의 기본적 특성은 모든 것이 金日成에 의해서 統制되고 결정되는 金日成 카리스마 體制라는 것이다.

#### 나. 엘리트構造의 變化

北韓 政治體制의 전제주의적 특징은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까지 社會主義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스탈린식 專制主義 政治體制가 도입되었던 바, 北韓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까닭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專制的인 體制가 근대화 담당기관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北韓의 경우에 행정적 집행기관인 政務院은 44개 部處 가운데 외교부, 사회안전부, 체신부, 문화예술부, 보건부 및 교육위원회 등 10개부처를 제외한 34개 부처가 모두 경제관련 부처이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은 경제를 관리하는 기구로 특징지어질 만큼 경제문제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北韓에서는 政治體制내에서 경제부처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혁명 엘리트들에 의한 지배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관료들의 기용이 증대되었는 바, 특히 1970년대초 金正日이 登場하면서 黨과 政府의 中間指導層에 젊고 유능한 기술관료들이 등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6차 당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145명중 82명이 기술관료로서 56.6%를 차지했고, 정치국 위원 19명 중 12명이 기술관료로서 63.2%, 비서국 10명 중 8명이 기술관료로서 80%를 각각 차지하였다. 1982년 이후에 정무원 총리로서 경제전문가인 이종옥, 이근모, 연형복이 등장하였고, 1990년 5월에 부총리로 김달현, 최영립, 김복신 등의 工業·農業分野의 경제전문가들이 등장하였는 바, 이는 經濟問題解決이 80년대 북한의 當面課題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선거 結果에서는 대의원들이 高學歷化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11)</sup>. 金正日과 비슷한 연령층이 主軸을 이룸으로써 世代交替의 양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金日成 사후에 北韓이 좀 더 개방·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指標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階級的 性格을 강하게 띠으로써 지배계급의 利益을 위해 奉仕하는 支配道具의 役割을 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蘇聯이나 中國에서는 관료들이 ‘새로운 계급’(The new class)이 됨으로써 인민들의 不滿을 야기시키는 原因이 되었다. 北韓에서의 관료들 대다수도 體制維持의

11) 대졸학력자의 비율은 제 7기 50.4%, 제 8기 56.7%, 제 9기 68.2%로 증가했다.



前衛隊로서 '새로운 계급'화 되어가고 있다.

#### 다. 權力構造 變化의 轉機

北韓은 이러한 성격의 政治體制를 유지하고 있지만 北韓 政治體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의 轉機는 金正日에게 權力승계가 임박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金正日是 1973년 노동당 비서국의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를 시작으로 3대혁명소조 지휘책임자, 1980년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군사위원, 1990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군최고사령관으로 지명되면서 후계자로 훈련되었다. 1974년 이후 '당중앙'으로 호칭되었고, 1981년 6월 부터는 '친애하는 지도자'로, 1990년에는 '자애로운 스승', '친근한 아버지', '각하' 등으로 불리워져 承繼의 正當化 作業이 繼續되어 왔다. 金日成은 1991년 6월 1일 교도통신 사카이 신지 社長과의 인터뷰에서 "金正일이 노동당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당사업 뿐만아니라 경제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權力승계 작업이 사실상 종료했음을 시사했다. 金正日도 1991년 5월 5일 당 책임일군들과의 談話에서 스스로 "대를 이어 나가는 령도의 계승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金正日 世襲體制를 유지해 주는 주요 세력은 官僚集團과 軍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는 크게 理念官僚와 技術官僚로 구분해 볼 수 있는 바, 특히 이념관료들은 保守的이고 現狀維持的인 성향이 강하여

金正日 世襲體制를 견고하게 해주는 根幹이되고 있다. 혁명1세대들이 이념관료들은 目標指向的이어서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에 의해 勞動力을 動員, 社會主義 建設을 이룩하려 한다. 反面에 혁명2-3세대로 일컬어지는 專門·技術官僚들은 手段指向的이어서 合理的이고 說得指向的인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性向을 보인다.

金正日에로의 승계가 완료되면 새로운 세대의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北韓 政治體制가 이념지향적인 성격에서 효율성 지향적인 체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3. 經 濟

#### 가. 經濟發展 戰略과 原則

北韓 정권에 있어서 1950년 이전까지는 社會主義 정권의 수립, 권력의 공고화가 당면과제였다면 6.25전쟁이후는 前後復舊와 經濟建設이 당면과제였다. 6.25이후 經濟的 自立은 정치에 선행하는 과제였다. 그것은 정권 형성기(1945-50)와 전후 복구기(1954-1956)에 있어서 蘇聯 및 中共의 경제원조를 계기로 내정에 대한 간섭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물질 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가 되며 경제적으로 예측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sup>12)</sup> 北韓이 經濟的 자

12) 「김일성저작선집」 4(1968), p. 537.

립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으로써, 5개년 계획(1957-1960)의 추진과정에서 ‘형제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원조를 기대했으나 소기의 원조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차5개년 계획에 대하여 국내의 蘇聯派와 延安派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자 외부의 원조없이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경제건설에서의 주체를 주창하게 되었다.

北韓이 경제발전 전략과정에서 일관하여 견지하고 있는 원칙은 社會主義에 입각한 自力更生 原則이며, 이러한 政策基調下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基本運營構造로서 첫째,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둘째, 國家計劃에 의한 자원배분, 셋째, 生産手段의 국가소유, 넷째, 規範的 동원유인 방법을 유지해 왔다.

#### 나. 經濟政策의 變化

北韓에서는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청산리 방법」이나 「대안의 사업 체계」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70년대 후반 이후 主觀主義, 機關 및 地方本位主義, 官僚主義 등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투자의 불균형등 경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생산의 效率性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國營工場과 企業所를 중심으로 1978년 이후 시작된 獨立採算制 방식이 1984년 6월에는 비생산분야에까지 半獨立採算制, 二重獨立採算制 등의 형태로 확대 적용되면서 각 기업소들의 경제적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資源配分方式에 있

어서도 理念的이고 規範的인 동기유발방식과 함께 터밭이나 農民市場, 副業經理등을 허용하는 등 물질 동기유발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1985년부터 中央集權的 命令體制內에서도 경제적인사결정과정에서 일종의 分權化를 허용하는 제도인 연합기업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經濟生活面에서도 몇가지 變化가 나타났다. 1984년에 도시지역에 초기 시장경제 형태인 장마당이 개설되었고, 1985년부터 경공업 분야에서 能力別 임금제가 실시되었으며, 80년대 중반부터 국가고시가 격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개인 副業이 허용되었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국내경제의 發展 및 國內外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政策的 變遷過程을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北韓은 80년대 이후 수출확대가 경제계획 성패의 관건이 됨을 인식하고 「輸入을 위한 輸出」이라는 종래의 정책에서 벗어나 '80, '83, '85, '88년을 「수출 제일주의의 해」로 설정하는 등 수출우선정책으로 선회하여 수출증대에 총력을 집중해 왔다. 이러한 北韓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는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北韓은 계획기간 중 무역규모를 사회총생산 증가목표 1.8배를 훨씬 상회하는 3.2배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北韓의 對外經濟協力關係도 변화해 왔다. 北韓은 外延的 成長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6개년계획(1971-1976)이 시작된 1970년대 초 內包的 成長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위해 對西方 接近을 시도하고 차관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수입원자재 가격이 上昇하고 世界經濟가 불황에 빠짐에 따

라 北韓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1975년 이후 外債償還이 不可能해지자 대외경제협력관계 확대노력을 중단하였다.

蘇聯과 中國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문제로 인하여 서방국가로부터의 외자도입도 중단되자, 北韓은 외채상환 부담이 없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합영법을 制定, 公布하였다. 합영법의 주요 내용은 工業, 農業, 建設, 觀光, 科學技術 등 5개 부문에서 北韓內에 합영기업을 설립한다는 것인바, 이는 외국 특히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법규상 問題點 때문에 합영법을 발표한 이후 1990년 6월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실적은 北韓내 유치가 66건, 해외진출이 21건 등 총 87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北韓이 유치한 합영기업 중 50건(77%)은 정치적 동기에서 제일 조총련이 합작으로 설립한 것이다.

北韓은 1991년 7월 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회의에서 함경북도 두만강 연안의 새별과 선봉, 나진 일대에 1차적으로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이것이 잘 운영되면 청진에 2차 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北韓이 경제특구의 개발투자규모, 운용방식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일단 中國의 深圳, 珠海 등의 경제특구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南北韓간 경제교류는 南北韓간 교역의 門戶를 開放하고 南北 교역을 민족내부의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한국정부의 기본방침을 선언한 1988년 「7.7 특별선언」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88년 10월 「남북

물자교류지침」이 발표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즉 1988년 11월 현대 종합상사가 北韓의 원산지 표시가 된 모시조개 40kg을 수입한 것을 시발로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991년 4월에는 남북한간 직교역이 성립되었다. 특히 1991년에 들어와서 南北韓 물자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최근 北韓이 가시화하고 있는 경제특구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참여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 다. 經濟問題의 實相

이러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경제는 70년대 중반 이후 침체되어 오다가 80년대 후반들어 악화되기 시작하였는 바, 1985-1990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3%에 불과하며, 특히 1990년에는 휴전 이후 최악의 상태인 -3.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北韓의 총체적 경제역량을 반영하는 國民總生産은 90년대 말 235억달러, 경제발전의 정도 및 후생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NP는 1천64달러로 추계되는바 이는 남한 GNP의 10분의 1, 1인당 GNP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北韓經濟 危機의 가장 가시적인 징후는 식량난과 에너지난이다. 농업부문에서는 관개수로의 확장, 간척지 개간 등 영농기반의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이후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는바, 1989년에는 548.2만톤이던 쌀과 옥수수 등의 알곡생산량이 1990년에

는 481.2만톤으로 줄어 들었다. 北韓이 한 해에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약 600만톤으로 추정할 때 1989년에는 약 50만톤, 90년에는 120만톤 이상의 식량부족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北韓은 심각한 에너지난에 봉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北韓의 전체 에너지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1990년 생산능력은 계획목표인 1억 2천만톤의 36%에 해당하는 4,330만톤이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3,300만톤에 불과했다. 1990년의 전력생산량은 1989년의 293.7억 킬로와트보다 오히려 감소한 277억 킬로와트에 불과했다. 이러한 전력부족으로 인하여 北韓의 공장가동률은 현재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국제가격의 30-50% 수준으로 원유공급을 하던 蘇聯·中國이 국제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1990년도 北韓의 원유도입량은 정유능력(350만톤)에 비해 약 100만톤이 부족한 252만톤에 불과했다. 1991년 소련으로 부터 원유도입은 전년대비 10%에 불과했다.

#### 라. 經濟危機의 原因

北韓經濟의 침체원인을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특징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計劃經濟體制의 문제점, 인센티브제도의 결여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내수위주의 경제정책, 산업구조의 불균형,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社會主義 경제권의 붕괴로 인한 대외경제여건의 악화 등이 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이라 하겠다.

둘째, 北韓의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北韓의 産業構造는 1990년 현재 1차산업이 26.8%, 2차산업이 56%, 3차산업이 17.2%로서 2차산업에 비해 3차산업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업분야의 경우 소비재 및 경공업 분야의 미발달로 인한 소비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北韓은 도로, 항만, 철도, 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극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수송의 병목 현상은 원자재공급 및 상품수송을 지연시키고 산업시설의 가동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對蘇依存度の 문제이다. 1990년 현재 北韓 무역의 GNP에 대한 비율은 20%수준으로 대외의존도가 낮지만 무역의 對中·蘇 의존도는 매우 높다. 1989년 현재 北韓의 무역총액에서 對蘇聯 무역량은 58.4%를 차지하고, 對中國 무역량은 13.8%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北韓의 대외무역과 경제협력 기반은 와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91년의 경우 蘇聯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1.2%에 불과했다.

다섯째, 北韓經濟는 이같은 구조적 요인 및 경제정책상의 문제점 외에도 GNP의 20-25%(50억달러)에 이르는 군사비지출, 기념비적 건물의 건설과 대규모 행사(89년 평양축전 등)에 대한 과도한 투자, 외화의 낭비 등과 같은 北韓經濟의 특수한 요인들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4. 北韓의 對外政策 및 對外關係

##### 가. 東歐 및 蘇聯의 體制 崩壞와 對中國 依存 深化

北韓의 대외관계는 기본적으로 資本主義 陣營 및 南韓에 대한 철저한 斷絶로 특징지어졌다. 이는 선진 자본주의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를 追擊發展하겠다는 社會主義的 發展戰略, 소위 '자력갱생' 노선에 의해 규정된 것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진영의 대북한 孤立化 戰略에 의해서 강요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北韓은 이러한 단절의 상황을 南韓, 美國, 日本에 대한 적대감으로 연결시켜 體制維持와 내부통합을 위한 政治的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北韓은 中國, 蘇聯, 東歐 등 社會主義國家들을 체제유지와 혁명의 지원세력으로 보고, 그 국가들과의 관계유지 및 단결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中國 및 蘇聯과는 동맹을 통하여 '北方三角關係'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권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 예컨대 中國의 改革·開放 지속,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의 崩壞, 蘇聯 邦의 解體와 獨立國家聯合(CIS)의 誕生過程에서 北韓은 理念, 軍事, 政治, 經濟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지원세력들, 특히 蘇聯을 상실하고 말았다. 고르바초프 정권초기에는 蘇·北韓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었으나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이래 蘇·北韓 관계가 冷却되다가 韓·蘇 국교정상화(1990.9.30) 이후에는 惡化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보수파 쿠데타의 실패로 말미암아 蘇·北

韓間 同盟關係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독립국가연합의 탄생으로 兩國의 同盟關係는 사실상 斷絶되기에 이르렀다.

北韓과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는 實利追求에 입각한 구성국들과의 개별적 외교관계로 재편되고 있다. 北韓은 독립국가연합이 탄생하자 한국보다도 먼저 그 構成國들을 과거 동맹국이었던 소련의 承繼者로 承認하고 나섰다. 이는 독립국가연합 출범이라는 大變革이 北韓의 體制에 미치는 深刻性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維持시켜 나가야 한다는 실리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北韓이 정치·경제·군사·기술 분야에서 蘇聯에 依存해 왔던 기존 關係를 斷絶할 경우 北韓의 체제는 보다 심각한 打擊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國際環境의 變化와 더불어 北韓의 ‘자력갱생’노선에 의한 사회주의적 폐쇄경제의 실패 및 蘇聯邦의 붕괴로 인한 경제지원의 斷絶 등은 北韓經濟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北韓이 정치·이념·경제·군사적으로 依存할 수 있는 나라는 改革·開放 政策을 추진하면서도 사회주의체제를 固守하고 있는 中國 뿐이다. 北韓은 中國이 1989년 6월의 天安門事態를 武力으로 鎮壓하자 이를 支持하고 나선 바 있다. 이후 北韓과 中國은 社會主義圈의 體制變動을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和平演變)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난하면서 정치·이데올로기적 共同步調를 취해 왔으며, 고위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을 통하여 전통적인 同盟關係를 強化시켜 왔다.

그러나, 中國의 北韓에 대한 經濟 및 軍事的 支援은 蘇聯의 역할을 代替할 수 없는 限界를 지니고 있다. 中國도 改革·開放 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經濟發展의 후유증과 反體制 運動 등 내부분제와 함께 對西方關係 및 南韓과의 관계개선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中國은 南韓과 무역대표부를 교환설치하고 이를 準公館으로 승격시켰으며,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北韓에게 改革·開放을 권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朝·中血盟關係'를 現實主義的 實利追求의 관계로 재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나. 對美·日 關係改善 노력과 南北對話 持續

蘇聯 및 東歐의 '혁명적' 변화와 中國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사회주의적 동맹·우호관계의 붕괴 및 변질은 北韓의 전통적인 對外政策과 對外關係의 變化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도 北韓은 이미 經濟優先主義의 路線에 입각한 對外政策, 現實主義的 實利追求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美國과의 관계개선노력, 日本과의 수교교섭, 南韓과의 대화지속 등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1988년 10월 31일 레이건 행정부는 비자규정 내에서 北韓 체육인 학자 문화인의 민간차원의 美國訪問 허용, 美國人의 北韓訪問 제한완화, 人道的 次元에서의 美國의 對北韓 交易許容, 美國外交官의 북한외교관 접촉허용 등 4개항목의 「대북한 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후 美國과 北韓의 북경에서 參事官급 접촉(1차 1988.12.6-18차 1991.11.20)을 가져 왔다.

참서관급 접촉과 더불어 美·北韓 간에는 상호교류 및 방문이 증

대되기 시작했으며, 美國의 대북수출과 스포츠교류, 재미교포와의 경제교류도 진전되기 시작했다.

日·北韓關係도 역시 「7·7선언」 이후 급속히 改善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9월 자민당(단장: 金丸信) 및 사회당(단장: 田邊誠)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로동당과 함께 ‘北·日관계에 관한 三黨共同宣言’ 8개항을 발표했다. 이 宣言 第2項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국교관계를 수립해야 함을 認定”하였다. 그후 3회의 예비회담을 거쳐, 1991년에는 5차례의 修交交渉을 위한 본회담이 진행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양국간의 상호교류 및 방문 및 경제적 교류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다.

北韓은 南北關係 즉, 南北對話와 交流에 있어서도 柔軟性を 보이기 시작했다. 北韓은 南韓과 함께 유엔에 가입(1991.9)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포기한 상태이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991.12.11-13)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그 후 실무접촉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도 합의하였다. 더욱이 北韓은 이미 南韓과의 直交易를 허용하였고 한국의 두만강 경제특구 개발사업 참여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는 별개로 北韓은 아직도 남북대화과 통일 전선 사업을 병행하는 2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體制維持를 위한 사항과 부문에 있어서만 戰術的인 變化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北韓의 대외·대남 관계에 있어서의 정책변화가 體制維持를 위한 변신일뿐 결코 體制改革을 위한 根本的 變化

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5. 社會

北韓社會의 구조적 특징은 社會主義的 생산양식과 그에 상응하는 社會主義的 통치양식, 그리고 정권수립이후 지금까지 金日成 1인의 장기독재와 그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네가지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어졌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社會主義 工業化, 최근의 사회주의 體制의 붕괴, 새로운 世代의 등장과 같은 巨視的인 변수의 영향에 의해서 북한의 사회구조와 의식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工業化와 階級構造의 再編 및 階級葛藤의 構造變化

北韓에서 社會主義 工業化는 新中間階級の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1946년 말 6.2%에서 1987년에는 약 17%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중간계급 또는 근로인테리는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즉 신중간계급 또는 근로인테리는 社會的 상승이동을 통하여 專門官僚集團化 함으로써 빨치산세대와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정무원과 노동당의 30-40%, 정치국 정위원의 50%, 후보위원의 70%가 전문관료 출신이다.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의 직업별 출신성분

을 보면 1982년 이후 사무·전문직출신 대의원이 전체의 55%를 넘었다.

北韓에서는 아직도 혁명 1세대가 지배하는 社會主義 國家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상과 정치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복합성과 다원화가 진전되면서 사상과 정치중심의 리더쉽 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쉽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 專門官僚集團의 役割이 증대되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다.

新中間階級の 성장은 전인민의 노동계급화, 무계급사회의 건설노선과 상충됨으로써 이론적·정책적 딜레마를 야기하고 새로운 계급투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계급의 팽창을 체제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中間階級の 출현이 勞動階級 獨裁理念과 相衝됨으로써 體制의 矛盾으로 대두되었는 바,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 나. 社會分化, 都市化, 教育水準의 向上에 따른 社會統制의 弛緩

工業化로 야기되는 필연적인 현상은 사회분화, 도시화, 교육수준의 향상이다. 북한에서도 공업화는 일차적인 사회분화 현상으로써 직업구조를 분화시켰다. 1946년말 현재 74.1%가 농부이었던 것이 勞動者, 事務員, 販賣員, 技術者 등으로 분화되었다. 社會分化의 두번째 水準은 職業分化, 都市化, 教育水準의 向上 過程에서 나타나는 職位集團(status group)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관계의 분화이다. 예컨대 교육기관을 통해서 개인들은 각급 학교의 동기동창 그룹으로 분

화되거나, 도시화의 진전으로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동향집단이 형성하게 되며, 같은 직장에 종사하는 職場同僚, 留學同僚 등의 다원화된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사회관계가 분화되면 이전과 같은 劃一的이고 일사불란한 國家統制가 이완되기 마련이다. 각종의 비공식집단이나 小集團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사회의 독자적인 여론형성구조를 낳게 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인 체계모니가 부식되는 것이다.

도시화가 진전되면 개인간 상호작용의 패턴이 달라져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퍼지는 비공식 정보유통체계가 발달할 수 있다. 비공식 정보유통체계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정보유통체계에 비해 같은 내용이라도 과장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都市化의 進展은 情報統制에도 불구하고 批判意識이 전파될 가능성을 높인다.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정보유통과 상호작용의 도시화 조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北韓에서도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공업분야의 새로운 직업기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서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sup>13)</sup>.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제유지 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北韓體制가 남한보다 열등하다는 정보가 일단 유입되면 그것을 계기로 하여 독자적인 思惟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化의 傾向도 높아지는 것이다. 北韓 청년세대의 혁명성이 약한 것으로

13) 1991년 현재 북한의 대졸자 수는 146만명임.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그들이 단지 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北韓의 젊은 세대가 高等教育을 받고 理性的으로 보다 覺醒된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工業化와 世代交替에 따른 革命後期 症候群

北韓은 정권수립이후 지금까지 革命을 사회적 동원의 핵심적 메카니즘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北韓體制는 革命熱氣의 지속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도 社會構造의 分化, 都市化의 進展, 教育水準의 向上 등 社會變化와 더불어 이전 시기의 혁명전통이 쇠퇴하고 있다. 北韓에서 革命性的의 弱化로 革命後期 局面이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로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1945년 이후 北韓社會에 일어난 또다른 변화는 革命世代의 死滅과 革命後期世代의 진출을 들 수 있다. 6.25전쟁(1953년)이후에 출생한 인구가 전체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쟁전에 출생한 사람은 21.5%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쟁 전에 유년기(인민학교 입학전)를 보낸 사람을 새세대에 포함시키면 戰後世代는 83.7%에 달한다. 北韓에서 혁명세대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日帝期間 동안 抗日運動에 참여했거나 6.25 전쟁기간 동안 “美帝”와 싸운 경험이 있는 세대(6.25 당시 10세 이상을 포함하면 현재 50세 이상)는 1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새세대는 戰前 日帝의 지배와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기성세대에 비해 대체로 思想性和 革命性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北韓 지도부의 표현에 의하면 “學生 등 새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黨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西歐의 부르조아 문물에 물들기 쉽다”는 것이다. 이른바 청소년에 대한 社會化 失敗 現狀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1991년에 8월 28일을 처음으로 「청년절」로 제정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靑少年의 ‘革命性’ 문제가 우려할 정도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간접적인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라. 社會主義的 生産樣式과 社會的 效率性的 低下

北韓社會 變化의 잠재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社會主義的 生産樣式的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社會主義的 生産樣式的 위기에 관련되는 측면들을 합리성의 위기, 동기부여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첫째, 北韓의 社會主義的 生産양식은 합리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징후의 구체적인 예로서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경제 도그마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 중앙의 계획과 ‘현장지도’사이에 혼란이 빈번하다는 점, 자본과 기술에 의한 근대적 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北韓은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점, 평양에 있는 불필요하게 많은 ‘위대한 기념건물’들과 축제행사에서 잘 나타난 金日成 개인숭

배가 직접·간접적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점, 당의 모든 정책은 세부사항에 있어서까지 항상 絶對적으로 옳았다고 주장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北韓은 動機誘發의 危機에 처해 있다.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불꽃’이 타고 있어야 하며, 그 불꽃을 계속 타게 하는 것이 動機誘發이다. 北韓에서 아직은 동기유발의 위기가 만연되지는 않았으나 동기유발의 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동기유발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모든 인민들이 核心階層, 動搖階層, 複雜階層 등 身分制로 묶여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며, 자발적 동기유발을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은 지나친 順從的 文化이다.

셋째, 북한정권은 正當性의 危機에 처해 있다. 北韓 정권 초기에는 상당수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이고 자발적인 충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나, 점차 심화되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초기의 정당성의 기초가 점차 약화되었다. 다만, 北韓의 대다수 인민들이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망명 외교관 고영환의 증언)에 의하면 北韓經濟官僚들 사이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안전부에서 이들을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를 도저히 처벌할 수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잠재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北韓 사회가 蘇聯이나 東歐 社會主義 諸國처럼 붕괴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北韓이 무너지지 않은 다른 사회

주의 국가인 中國이나 베트남 등과 함께 아시아적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普遍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이한 정도의 철저한 사회통제, 폐쇄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展 望

北韓社會는 아직까지 통치양식, 특이한 이념체제 및 철저한 대외 정보차단 정책으로 인하여 東歐 및 蘇聯에서와 같은 체제의 변화는 경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社會主義體制가 東歐 및 蘇聯과는 다른 아시아적 사회주의체제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환경변화, 경제 위기의 누적, 정치권력 교체시기의 압박, 사회구조의 變化, 그리고 사회적 불만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體制變化의 潛在力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경제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 운영, 대외적으로는 합영법의 제정 등 社會主義 體制의 틀내에서 여러가지 개혁을 실시했으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理念, 政治體制, 對外政策, 社會部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양면적인 實相을 볼 때 北韓體制의 향후 變化展望은 어떠한가? 북한에서도 東歐나 蘇聯에서처럼 체제내의 부분적 변화가 體制의 變化로 연결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지금

까지 살펴본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내용을 토대로 하여 향후 북한에서 전개될 變化를 短期와 長期로 구분하여 전망해 보기로 한다.

## 1. 短期的 展望 : 改革과 統制의 딜레마

### 가. 딜레마의 性格

단기적으로<sup>14)</sup> 보아 北韓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中國의 경험을 좇아 政治的으로는 통제와 폐쇄를 계속하되 經濟的으로는 실질적인 개혁과 개방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이러한 선택을 추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sup>15)</sup> 그의 직관이 어떤 면에서는 옳은 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派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개혁을 통해서 合理性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動機誘發의 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정당성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실제로 개방의 문호를 넓히면 남한의 경제적 우월성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요인

---

14) 여기서 '단기'는 김일성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을 의미하며, '장기'는 김일성 사후의 김정일에게로 승계된 기간을 말한다.

15) 陶炳蔚, 「민족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1991.11.15).

16)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1991.10.28-29), p.18-9.

이 될 것이다. 일단 北韓 인민들이 남한의 1인당 소득이 그들보다 무려 5배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을 속아왔으며 아무 이유나 목표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金日成主義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변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파멸을 초래하여 인민봉기를 유발할 것이고,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경제는 회생시킬 수 있겠지만 北韓體制의 정당성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北韓體制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sup>17)</sup>

北韓社會가 쉽게 개혁·개방으로 선회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東歐 社會主義體制들의 붕괴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모든 이념, 정치, 경제, 사회의 요소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變化도 전체 시스템의 궁극적인 붕괴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이었다. 즉 사회주의체제의 하위체계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급격하게 개선되거나 재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北韓과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체제의 경우에 더욱 긴밀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체제의 安定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개혁·개방을 회피함으로써 체제 전체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다.<sup>18)</sup>

北韓社會는 金日成 長期獨裁에 대한 비판·저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인민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조직화하여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정책을 變化시켜 인민

17) *Ibid.*, p.19.

18) Oleg Davydov, “북한의 정치체제변화와 대외정책”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1991.10.28-29), p. 4.

에 대한 급작스런 통제를 완화시키는 경우에는 정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파괴적 결과를 일으킬 뿐이다.<sup>19)</sup> 만약 개혁·개방의 潛在力이 현 체제를 유지시키는 힘보다 커지게 되면 東歐 社會主義國家에서 처럼 ‘밑으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改革 潛在力 보다는 統制의 힘이 아직 크다.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意志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北韓은 아직 현 체제를 가능한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개혁을 하더라도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숨은 改革(hidden reform)을 制限的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sup>20)</sup>

#### 나. 變化의 抑制要因

北韓體制 變化의 잠재력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첫째, 東歐 社會主義國家의 개혁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의 敎訓이다. 다비도프(Oleg Davydov)가 지적한 대로<sup>21)</sup> 北韓은 蘇聯을 포함한 社會主義國家들이 개혁을 시작한 이후 모순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90년대에 들어섰다. 北韓지도층이 蘇聯과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은 개혁은 예기

19) 이정식, “표류하는 북한”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기초연설 (1991.10.28-29).

20) Hy-Sang Lee, “The Economic reforms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s,”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h Int’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1991).

21) Oleg Davydov, *op.cit.*, p. 4.

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욱이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1989년 北京 天安門事態도 사회주의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도 黨의 사회통제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증대되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의 처형, 東獨의 호네커의 망명, 레닌 동상의 철거 등은 金日成·金正日の 개혁·개방 공포증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인 때문에 北韓 指導層은 東歐의 이러한 예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실제로 그들은 蘇聯의 경험이 北韓에는 수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蘇聯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은 당국이 범한 실수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즉 北韓 지도자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하거나 訂正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北韓은 東歐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北韓의 독자적인 발전양식을 주장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東歐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을 국내적 요인 때문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간의 투쟁의 결과로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동유럽과 蘇聯에서 나타난 위기의 상황이 인민대중 사이에 이념적 혁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산당이 사회에 대한 통제를 잃은 데서 기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또한 北韓의 체제는 강하고 단일화된 당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인민들

22) 陶炳蔚, 「민족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1991.11.15).

은 독창적이고 가장 발달된 이념체계를 제시한 위대한 지도자 밑에  
결속돼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3)</sup>

둘째로, 北韓社會에서 東歐나 蘇聯과 같은 變化를 억제하는 또 하나  
의 요인은 主體思想인 바, 최근에는 東歐社會의 교훈을 토대로 主  
體思想教養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北韓은 金日成과 金正日 권력의  
정당성의 기반이 경제가 아니고 이념적 순수성에 입각한 主體思想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를 경제적 發展度에 두지  
않는 것이다. 金日成은 北韓의 “인민들이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한다고  
는 할 수 없지만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며 노동자 농민과 사  
무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  
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sup>24)</sup>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은 1986년 이  
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首領, 黨, 大  
衆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단일한 생명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있으며, 1989년 이후로는 ‘인민 대중중심  
의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새로 도입하여 인민대중이 주인인 北韓體  
制에서는 인민이 離叛하여 체제전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교양하고 있  
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인민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유지하는 한 北韓  
體制의 變化는 억제될 것이다.

셋째, 北韓體制의 變化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체제

---

23) 「로동신문」, 1991.10.10일자 사설, “당의 기치따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어 나가자.”

24) 김일성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최고인민회  
의 제9기 1차대회에서 행한 시정연설) 「로동신문」(1990.5.25).



의 폐쇄성이다. 東歐사태 이후, 특히 蘇聯의 강경보수파가 주도한 쿠데타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공산체제가 종식된 후 북한의 폐쇄화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蘇聯과 東歐의 공산당을 몰락시킨 자유화 바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외부바람’을 막기 위해 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國家에 관한 자료를 모두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넷째, 北韓社會의 變化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金日成의 절대적 카리스마이다. 北韓의 고위 간부들, 인테리, 인민대중할 것 없이 金日成의 항일 빨치산 경력, 정권창건 업적 등으로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귀순자들과 방북자들의 증언이다. 이것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北韓의 군부,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와 같은 조직들의 물리적 통제력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北韓 軍部는 金日成의 積極的 支援政策으로 인하여 극도로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北韓體制 變化의 가장 큰 沮害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진우, 최 광, 오극렬, 주도일, 전병호, 김철만 등 군의 고위장성들은 金日成·金正日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있고, 金正日 時代에도 金正日이 軍의 位相에 害가 되는 革命的 轉換을 시도하지 않는 한 체제변혁세력과 對抗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北韓體制 變化의 潛在力은 이들 變化의 억제요인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표면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이나

위로부터의 의도적 개혁·개방이 없는 한 개혁·개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체제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한, 개혁이라는 이름없이 필요에 따라서 ‘숨은 개혁’(hidden reforms)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예컨대, UN 가입, 남한과의 합의서 채택과 같은 것이 사례인 바, 이들 변화는 그 자체로 대단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 2. 長期的 展望：統制力の 限界와 改革潛在力の 顯著化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外風의 통제와 사상교양을 통해 정치권력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改革을 필요로 했던 원래의 모순은 해소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되어갈 것이다. 北韓體制에서 改革·開放 潛在力과 이에 대한 통제능력이 균형을 잃어 체제자체에 變化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일 것인가?

### 가. 統制力の 限界

기든스(Giddens)가 ‘개구리 뿔뛰기식 변화’(leapfrog idea of change)<sup>25)</sup>라는 말로 표현했듯이 한때 變化의 억제요인이었던 것이 變化의 기

---

25) Anthony Giddens, *Studies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London : Hutchinson, 1977).

폭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北韓의 경우, 北韓體制를 유지하는데 金日成의 절대적 존재가 절대적 역할을 했다면, 반대로 金日成의 죽음 그 자체는 체제유지에 절대적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주체사상이 北韓社會의 질서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主體思想이 대중적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主體思想과 같은 관념체계는 물질적 유인동기에 점차 퇴색당하게 되고 체제붕괴의 원인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폐쇄적 사회통제가 北韓體制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이었다면 UN가입 이후 대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인민대중의 離叛이 가속화될 수 있다. 통제력과 개혁 잠재력의 균형이 깨어지는 시점은 김일성의 사망, 사회세력의 조직화 여부, 경제위기의 극복 여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발전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다.

#### 나. 改革 潛在力의 顯著化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北韓體制에서 꾸준히 성장한 개혁·개방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顯著化(manifestation)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北韓社會가 東歐와는 달리 붕괴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변화의 억제요인도 있지만 개혁·개방의 잠재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변화의 요인과 변화의 실상을 종합해 볼 때 현단계의 北韓에서는 經濟問題 해결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

로 향후 體制內變化와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經濟問題 克服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 1991년에 있었던 일련의 대외관계 變化 가운데 UN가입, 對日 수교교섭, 남북합의서 서명, 핵사찰수용선언은 외국으로부터의 資本과 技術 流入을 위한 사전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변화의 촉진요인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中國, 쿠바, 베트남, 北韓을 제외한 東歐 및 蘇聯의 사회주의체제들이 와해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北韓體制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주의권에 의존해온 北韓의 대외경제협력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특히, 蘇聯은 北韓 무역 총액의 58.4%, 원유도입의 17%, 총외채의 50%를 차지해왔던 바, 蘇聯이 국제가격의 30%로 제공하던 원유를 91년부터 국제가격으로 판매하고 대금의 경화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北韓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가격의 50%로 원유를 공급하던 中國도 1991년 5월 李鵬 총리의 訪北時 1992년 부터 국제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를 요구하였다.

둘째,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만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南北韓의 경제적 격차가 80년대에 더욱 크게 벌어져서 90년 말 北韓의 GNP는 남한의 1/10, 1인당 GNP는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격차는 北韓으로 하여금 경제개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즉 北韓의 경제는 기존의 생산양식과 정책으로는 되살릴 수 없으며 개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계에 직면했다. 따라서 北韓은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北韓의 경제난은 사회적 불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평양주재 蘇聯 외교관인 다비도프(Oleg Davydov)에 의하면 北韓 주민들이 ‘心理的 離叛’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北韓의 주민들은 쌀과 고기가 충분했던 70년대를 향수에 젖어 회고하고 있는 바, 현재의 경제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축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셋째, 韓國의 대북정책 변화이다. 北韓은 ‘美帝와 남한괴뢰’를 ‘共同의 敵’으로 규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社會統合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남북합의서 채택을 통해 쌍방의 實體를 認定하고 쌍방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 바, 합의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 나간다면 北韓은 傳統的 對南政策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넷째, 金日成이 高齡化되어감에 따라 조만간 권력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리더가 交替되면 政策的 轉換이 있어 왔다. 카리스마가 부족한 金正日이 국내외적 危機를 效率的으로 管理하지 못할 때, 軍部나 技術官僚, 人民들로부터 강한 政治的 抵抗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東歐나 蘇聯에서와 마찬가지로 北韓에도 신중단계급의 성장과 계급정책의 모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에서 자본가, 지주 등 ‘착취계급’은 청산되었지만 산업화의 결과로 새로운 신중단계급이 등장함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모순이 東歐 및 蘇聯에서는 공산체제를 붕괴시켰고 中國에서는 천안

문사태를 야기시켰으며, 北韓 인테리들의 사회비판기능과 여론주도 역할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에서도 變化의 要因은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北韓도 정도는 미약하나마 工業化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정치주도적 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수준의 향상, 도시화, 사회분화 또는 직업분화의 진전 등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는 金日成과 金正日의 정치적 주도에 의해서 구성된 北韓社會에 점차 市民社會의 공간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주도하고 개방을 추진하는 세력은 전문관료출신의 고위간부들, 젊은 엘리트층, 소환유학생들, 외교관 그룹, 북송교포 등이다. 北韓에서는 현재 위로는 외교관 및 체제불만 中堅幹部 등을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소환유학생 및 인테리층을 중심으로 체제비판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北韓社會에서 變化를 촉진하는 구조적인 요인은 革命熱氣의 消盡이다. 北韓社會는 革命이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유지되는 동원사회이다. 그러나 社會變化의 결과 革命後期 症候群이 나타나고 있다. 北韓社會에서 6.25 전쟁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8.5%에 달한다. 또한 北韓에서 ‘革命’이라고 말하는 항일투쟁과 6.25 전쟁동안의 ‘對美鬪爭’을 10세 이상의 나이로 직·간접 체험한 사람은 전체인구의 12% 미만이다. 北韓 사회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문제의 하나는 ‘지주와 자본가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함’을 모르는 전후세대들의 정치·사회적 진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東歐와 蘇聯 사태이후 대대적인 사상교양의 주된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사실이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준다.

여덟째, 反金正日 思潮의 一般化이다. 北韓社會의 경제적 곤란은 金正日에 대한 불만으로 직결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70년대 초에는 잘 살았으나 金正日이 등장한 70년대 중반부터 經濟가 침체되었다고 인식하며 그것은 “철없는 아이가 정치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金正日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일반주민들 역시 상층부와 마찬가지로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나 金正日에 대해서는 불만 및 비판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는 실정이다.

1989년 「평양축전」 이후 귀순자들과 방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관찰해 볼 때 北韓의 간부급을 포함한 인테리들이 金正日과 알력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北韓 고위간부들은 金日成에 대해서는 항일 빨치산 경력, 정권창건 업적 등을 인정하여 대단한 충성심을 보이지만, 金正日에 대해서는 측근을 제외하고는 정책노선과 지도자 자질, 그리고 세력다툼으로 인해 불만 및 내부 알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體制比較 및 體制批判 思潮의 증가이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外國과의 교류 증가로 말미암아 비교의 계기(cue)가 점차 증가하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1989년 「평양축전」은 큰 계기가 되었다. 체제비교와 체제비판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첫째, 엘리트들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北韓 지도층은 北韓의 경제적 낙후, 지나친 사회통제,

26) 1989년 이후 망명한 북한의 외국 유학생의 증언,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p. 160.

주체사상의 맹점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體制 및 政權에 대한 비판으로 비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경제체제 개혁 건의 및 기념비적 건설사업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해외유학생들의 체제비판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蘇聯을 비롯한 동구국가 유학생은 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바, 북한은 1989년 이후 이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 한국으로 망명한 유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東歐나 蘇聯으로 나간 유학생들은 2년만 지나면 거의 100%가 北韓體制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變化된다는 것이다. 셋째, 反體制 組織의 징후이다. 軍 및 黨의 下級幹部, 인테리, 학생들 중에는 소그룹을 형성, 지하조직을 구축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北韓의 잠재적인 체제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3. 結 論

北韓社會의 變化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구조 변동의 거시적 흐름을 볼 때, 北韓이 變化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變化의 類型은 점진적·단계적으로 變化하는 경우와 대부분의 東歐 사회처럼 매우 폭발적·혁명적·폭력적으로 變化하는 경우이다. 급진적인 變化로는 현재의 집권층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는 위로부터의 계획적 개혁이 있을 수 있고(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교체를 하고 급속한 政策變化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으며, 루마니아처럼 민중봉기가 발생하여 새로운 體制가 출범하거나 기존의 體制가 급속하게 變化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에는 政治보다는 經濟 위주로, 對內分野 보다는 對外分野를 앞세워 단계적으로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체제개혁 보다는 경제관리개선과 대외개방에 중점을 두는 北韓 특유의 개혁·개방모델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개혁·개방모델은 지금까지의 선례중에서는 中國의 경우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이지만, 變化의 速度는 中國보다 완만하며 幅과 深度 역시 中國보다 좁고 얇을 것으로 보인다.

結論적으로 北韓體制 내에서의 위로부터의 통제력과 밑으로부터의 變化 潛在力을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金日成의 生死, 南北韓 關係, 日·北韓 修交, 사회적 압력 등 變數의 變移(variation)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變化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또한 日·北韓 修交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재의 경제적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급진적인 변화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에서 루마니아식의 폭력적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아시아적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北韓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르며 루마니아의 경우와 같이 政權과 人民이 괴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金日成을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主體思想과 같은 정치이념이 사회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體制의 變化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變化의 類型을 결정지을 집단은 인테리 및 전문가 집단일 것이다. 마치 蘇聯에서 고르바초프와 그 주변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인테리 집단의 상황변화에 대한 認識變化가 축적되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듯이 北韓에서도 위로부터의 정책변화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北韓에서의 변화는 東歐나 蘇聯에서와 같이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體制의 變化라기 보다는 中國과 같이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體制內 變化의 성격을 띠 것으로 보인다.

빈 면

# 第Ⅰ部

## 序 論

빈 면

## I. 問題提起

최근 2-3년 사이에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거의 모두가 붕괴되는 혁명적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은 社會主義로의 移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하기 시작한 生産性 정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여러가지 體制內的 개혁조치를 취해왔다. 예컨대 蘇聯의 리베르만 방식,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리제, 헝가리의 NEM (New Economic Mechanism)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體制內的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社會主義 국가에서 體制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北韓에서도 일찍부터 社會主義 體制의 여러가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산리방법,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 합영법 등의 體制內 개혁조치를 취해왔으나 이러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社會主義 體制의 틀 내에서 시도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體制 자체의 붕괴로 歸結된 것은 세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社會主義 體制內的 부분적인 개혁이 개혁으로서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개혁의 영향이 社會的·政治的 多元主義를 촉진시켜 體制崩壞의 動因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체제의 내부요인과는 별도로 동서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 체제의 붕괴와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北韓은 어떠한가? 北韓 社會主義體制는 왜 아직 붕괴하

지 않았으며 향후의 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北韓이 붕괴된 다른 社會主義 國家와 공유하고 있는 普遍性은 무엇인가? 북한이 社會主義 體制를 고수하고 있는 中國,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社會主義 國家들과 공유하고 있는 共通點은 무엇인가? 또 北韓이 蘇聯 및 東歐는 물론이고 中國 등 아시아 社會主義 國家와 구별되는 特殊性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社會主義로서의 普遍성과 北韓만의 特殊性이 향후 北韓 體制變化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본 연구에서 대답하고자 하는 問題이다.

지금까지 北韓 사회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北韓체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과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대립되어 왔다. 不變論은 北韓體制的 特殊性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는데 반해 變化論은 北韓의 社會主義 體制로서의 普遍性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보다 객관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보다는 普遍성과 特殊性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특정한 관점에서 斷定的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北韓 사회에서 대체로 80년대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實相을 분석하고 거기서 발견된 사실에 기초하여 北韓體制的 향후 변화를 展望하고자 한다.

## II. 社會主義 變化를 보는 視角

### 1. 追擊發展<sup>1)</sup> 戰略으로서의 社會主義의 失敗

지금까지 社會主義 體制들의 붕괴 원인으로 경제적 침체, 정치적 불만 및 사회적 저항, 주변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경제적 문제라는 것이다. 經濟的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政治的 正統性이 쉽게 유지될 것이고 사회통합도 잘 될 것이며, 외부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社會主義 體制들의 變化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하면 社會主義는 階級葛藤 問題에서 출발하여 계급적 榨取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레닌(Nikolai Lenin)에 있어서 社會主義의 의미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民族主義的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레닌에 있어서 러시아 혁명은 마르크스의 대내적 계급투쟁이론을 국제적 영역으로 확대적용하여 착취당하는 식민지국가와 착취하는 제국주의국가 사이의 투쟁인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감행한 民族解放鬪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

1) 경제적으로 후진 사회인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적 목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 잡아 자기중심적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주의를 추격발전의 한 전략적 체제로서 파악한 사람은 쟁아스이다. Dieter Senghaas,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 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edition suhrkamp, 1982), 한상진·유팔무譯,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나남, 1990).



것이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이 손상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民族運動의 역사적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자결권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2)</sup>

레닌의 이러한 주장은 社會主義 革命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제3세계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았던 월러스타인<sup>3)</sup>의 주장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월러스타인에 의하면 社會主義 革命은 마르크스가 예견한 것과는 반대로 反資本家 階級の 革命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부<sup>4)</sup> 피지배계급의 反帝國主義革命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소련의 지휘에 의해 위로부터 社會主義가 강요된 대부분의 東歐國家를 제외하고 혁명이 내부에서 발생한 러시아, 中國,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쿠바, 니카라구아 등의 社會主義 국가들이 그러했고 1925년의 조선공산당 결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선진국을 追擊發展<sup>5)</sup>하고자 하는 후진국 경제발전의 전략개념으로 社會主義의 生成을 설명하는 쟁아스(Dieter Senghaas)<sup>6)</sup>

2)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서울: 까치, 1989), p.234.

3)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The Capitalist World-Econom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4) 월러스타인은 세계체제를 中心部(core)－半周邊部(semiperiphery)－周邊部(periphery)로 나누어 각 체제간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설명했다. 중심부에는 선진자본주의 국가, 주변부에는 제3세계와 후진사회주의 국가가 포함되며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반주변부가 존재한다.

5) 周邊化에 대응하여 자립적인 선진국과 같은 자기 중심적 발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쟁아스의 발전이론의 주제이며 종속이론이 제시하는 단절의 발전전략개념과도 유사하다. Senghaas, *op.cit.*, 참조.

6) Senghaas, *op.cit.*

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있는 쟁아스는 經濟적으로 낙후된 나라들이 선진국들의 경쟁력에 밀려 周邊化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으며, 發展史的으로 볼 때 社會主義는 이제까지 주변부 자본주의적 환경 속에서 追擊發展을 위한 발전전략의 지주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는 社會主義는 자본주의가 실패한 조건 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는 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쟁아스에 의하면 周邊部 資本主義의 극복이 문제였던 곳에서 社會主義는 주변부의 追擊發展을 확실히 촉진했지만 社會主義的 發展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근본적인 체제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社會主義는 명령경제와 정치적 전제주의 하에서 퇴보를 겪게 되는데 이는 개혁적 社會主義 이론가들<sup>7)</sup>이 지적했듯이 人的 資源이 질식되고 엄청난 物的 資源이 낭비되었기 때문이다. 전제체제 속에서 민주주의적 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공적인 의사소통은 기형화되어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동기유발이 메말라버린다. 이로 인해 지도 집단들이 현실성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줄어들고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過程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비교적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적 발전정책이 도입된 경우(예, 東獨, 체코)에는 이러한 위기증상들이 더 빨리 나타난 반면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가 社會主義로 이행한 경우에는 위기 증상들이 다소 늦게 나타났다.

---

7) Ota Sik, *Plan und Market im Sozialismus*(Prag und Wien, 1967); R. Selucky, *Marxism, Socialism, Freedom*(London, 1979).

사회주의적 발전전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대외적 요인도 중요하다. 社會主義 국가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중심부 국가)의 강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世界經濟體制에서 소외되고 봉쇄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침략으로부터의 자기보호라는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고립전략을 채택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社會主義를 枯死시키기 위해서 봉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사회들도 외연적 경제(extensive economy)에서 내포적 경제(intensive economy)<sup>8)</sup>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기형적인 계획관료제로 인하여 우선순위가 불합리한 정책들, 社會主義 世界體制內 분업의 미발달로 인한 경제효율성 결여, 누적된 소비욕구 불만 등은 사회주의 발전의 경제적 정당성을 손상시켰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정당성의 위기가 서로 상승작용하여 體制危機를 불러일으켰다.

## 2. 社會主義 變化類型의 差異: 普遍性和 特殊性

현재의 사회주의 국가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하나는 공식적으로 脫社會主義를 표방한 국가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공식적인 지도이념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한 국가들이 있다. 前者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은 蘇聯과 東歐 국가들로서 대부분 사회

8) 외연적 성장은 노동력과 자연자원의 투입에 의존한 양적 성장을 의미하며, 내포적 성장은 성장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주의 체제가 붕괴했으며, 後者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은 北韓, 中國, 알바니아, 베트남, 쿠바 등으로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우선 各國의 經濟水準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1인당 GNP가 높은 蘇聯 및 東歐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社會主義 體制의 붕괴를 경험했다. 이는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그 만큼 개인의 物質的 慾望이 증대하고 갖가지 精神的·文化的 生活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多元化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둘째, 각국의 經濟成長率을 비교하면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經濟成長率이 급속히 鈍化된 반면 社會主義를 고수하고 있는 中國, 베트남 등은 낮지만 안정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蘇聯 및 東歐의 경우 外延的 성장단계에서 體制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內包的 성장의 단계로 轉換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長期的으로 침체되고 있는 반면, 中國이나 베트남 등은 산업구조상 지금까지 勞動力 중심 또는 低賃金에 기반하고 있으며 國際分業上 노동력의 비교우위에 의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 및 東歐의 경우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가 곧 體制不安으로 직결되고 있는 반면, 中國이나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

北韓의 1인당 GNP는 蘇聯이나 東歐에 비해 1/3 내지 1/2정도에 불과한 반면, 經濟成長率은 그들 국가들과 비슷하게 下落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物質的 慾望, 社會의 多元化 정도는 蘇聯이나 東歐에 비해 훨씬 낮을 수 밖에 없지만 그들 국가에서 처럼 경제의 長期的 沈滯에 따른 不滿 累積으로 인한 돌발적인 변화

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各國의 多元化를 比較해 보자. 첫째, 市民社會의 역사적 경험 여부에 따라 대체로 市民社會를 경험하면서 공산화된 蘇聯 및 東歐 국가들(알바니아 제외)과 半封建 사회에서 市民社會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산화된 나머지 社會主義 國家들로 구분된다. 둘째, 所有 制度의 변화는 社會體制의 變化를 의미하므로 각국의 소유제도의 변화를 多元化의 指標로 설정할 수 있다. 國有化 過程에서 私的 所有의 경험 여부가 蘇聯 및 東歐와 北韓을 포함한 나머지 社會主義 국가들과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이며 경제개혁에서 所有 制度의 변화가 다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는 東歐에서는 유고와 헝가리, 아시아에서는 中國에서 확인할 수 있다. 北韓은 시민사회와 경험의 경험이 없으며 아직 소유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셋째, 民族主義 및 宗教的 전통도 각각 社會主義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唯物論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多元化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동구에서는 민족주의적 전통이 공산화 초기의 反蘇 저항운동으로 표출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원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自生的 혁명전통이 있는 유고, 中國 등에서는 獨自路線의 추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유형에 속하면서도 北韓, 알바니아, 쿠바 등이 中國이나 베트남에 비해 개혁과 개방이 늦어지고 있는 바, 그 요인은 1인의 장기독재와 그에 따른 批判勢力의 不在로 인하여 體制가 硬直되어 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경직성은 체제내 부분적 개혁이 체제의 변화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中國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北韓, 쿠바, 알바니아에 앞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좌파와 실용주의파들 간의 오랜 노선투쟁과 78년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파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北韓, 쿠바, 알바니아는 1인의 장기집권<sup>9)</sup>과 비판세력의 부재로 체제의 경직성을 낳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經濟的으로 後進國家로서의 社會主義 國家들이 先進資本主義 國家들을 따라잡고자 하는 發展戰略으로서의 社會主義가 失敗하게 된 일반적인 원인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北韓이 社會主義 國家로서 가지는 普遍性和 北韓만의 特殊性이 개략적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화의 경향들이 北韓에서도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北韓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그러한 變化를 抑制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각 부문별 實相을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변화의 促進要因과 抑制要因을 판별하여 북한 사회의 향후 변화를 展望하고자 한다.

---

9) 北韓과 쿠바는 공산정권 수립 이후 현재까지 김일성과 카스트로의 1인 장기 집권이고 알바니아는 공산정권 수립 이후 85년까지 호자의 1인 장기집권이 계속되다가 그해 알리아로 권력이 승계되었다.

### Ⅲ. 變化의 概念과 接近方法

사회 또는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구조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이론의 두가지가 있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體制內 變化’(Change within the system)를 강조하는데 반해, 갈등이론은 ‘體制의 變化’(Change of the system)를 강조한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社會體制의 각 부분이 전체 體制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體制가 갑자기 변화할 수 없으며 변화하더라도 점진적인 진화의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서 갈등이론은 사회의 각 집단은 지배와 억압의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의 感情的 強度와 組織化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가 매우 격렬하게 혁명적으로 일어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Parsons<sup>10)</sup>는 體制의 變化(Change of the system)와 體制內 變化(Change within the system)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특정 사회체제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하지만 ‘體制의 變化’와 ‘體制內 變化’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코저<sup>11)</sup>에 의하면 體制의 변화는 體制內 下位體制의 변화가 누적됨으로써 발생하며 特定 社會體制가 葛藤의 自體調節機能을 상실함으로써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때 기존 體制가 붕괴되고 새로운 體制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體制內 下位體制

---

10) Talcott Parsons, "A functional theory of change," in Amitai Etzioni and Eva Etzioni-Halevy (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p.3.

11) Lewis A. Coser, "Social Conflict and the Theory of Social Change," in Amitai Etzioni and Eva Etzioni-Halevy(eds.), *op. cit.*, pp.114-22.

에서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기간 동안 특정부문에서 限定的으로 일어나고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다른 부문에 파급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社會主義 국가들에서는 점진적인 體制內 變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이 누적되면서 혁명적 변화가 단시간에 일어났던 것이다. 즉, 體制內 변화가 體制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體制內 변화의 수준을 넘어선 체제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다만 북한체제의 과거 및 현재의 실상에 관한 분석에서는 ‘變化’를 體制內의 점진적인 개혁의 의미로 쓰며 미래에 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體制의 급진적 혁명을 ‘變化’의 의미로 쓰기로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개념으로 구조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각각 과거의 분석과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변화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변화의 단위를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사회이든지 변하고 있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理論的으로나 經驗的으로 변화의 단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동일한 변화 개념을 모든 하위체제에 동시에 적용할 수도 없다. 中國의 경우 경제분야에는 體制의 變化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정치분야에서는 體制內 變化가 진행되는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變化의 概念을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變化의 概念的 定義에서 나타나는 모호성과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하여 몇몇 共產主義 體制를 研究하는 학자들은 變化의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존슨(Chalmers Johnson)은 全體主義 모델이 變化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變化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sup>12)</sup>

① 政治體制의 變化: 독재자에 의한 일당통치로부터 集團指導體制와 黨 中心의 寡頭體制로의 移行,

② 社會體制의 變化: 정치테러의 높은 의존수준에서 낮은 의존수준으로의 이행,

③ 經濟體制의 變化: 고도의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로부터 分權的 經濟管理體制 내지 市場社會主義로의 移行,

④ 외부로부터 강요된 共產政權의 경우: 衛星國家의 지위로부터 顧客國家의 지위 확보와 民族的 共產國家로서 獨立國家로의 이행.

그는 상기 네가지 종류의 變化가 반드시 상호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즉 一黨體制가 아닌 고도의 中央集權的 市場社會主義 體制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 體制의 變化에 관한 분석과 전망을 위해서는 다측면적인(multi-dimensional) 분석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理念, 政治, 經濟, 對外政策 및 對外關係, 社會를 포함한 북한체제의 諸 部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리하여 어떤 부문에서의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變化가 일어나고 어떤 部門에서는 왜 비슷한 變化가

---

12)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발생하지 않는지에 관한 分析을 한 후에 각 下位體制 간의 相互作用과 體制全體에 대해 綜合的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 IV. 이 책의 構成

이 책은 第1部 序論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3部로 구성되어 있다. 第2部에서는 북한 사회의 部門別 實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第2部 第1章에서 理念을 살펴본다. 다른 社會主義와 마찬가지로 北韓에서도 理念이 사회구성의 指導的인 原則으로 된다. 잇달은 주변 社會主義 國家의 붕괴와 經濟的 危機의 상황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상황을 새롭게 定義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 동요에 대비하여 어떻게 인민대중들을 설득하고 통합하여 체제단속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第2章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을 기초로 한 북한체제가 어떻게 중앙집권적이고 일당 독재적인 金日成 政權을 형성시켰는지를 살펴보고 또 주변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위기적 국면에서 政治的으로 어떻게 對應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第3章에서는 붕괴된 社會主義 國家들이 普遍的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제문제가 北韓에서는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體制內 改革의 원리와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第4章에서는 주변환경의 변화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변화가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에 第5章에서 주변환경의 변화, 권력의 승계, 경제적 위기, 대외정

책의 변화가 북한의 사회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리고 어떠한 변화잠재력이 증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第3部에서는 각 부문의 분석에 발견된 사실을 간단히 要約한 다음에 北韓體制의 향후 변화를 展望해 볼 것이다.

## 第 2 部

#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빈 면

# 第1章 理 念

中央集權的이고 大衆動員的인 全體主義 사회일수록 支配的 理念 또는 이데올로기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욱이 資本主義 체제에서는 社會의 자율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變化가 이루어지지만 社會主義 체제는 주로 위로부터의 계획에 의하여 社會變化가 추진되기 때문에 지배적 이념은 상대적으로 社會主義體制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政策變化에 앞서 반드시 理念體系의 變化가 선행하여 인민대중을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中國이 1979년 이후에 개혁을 추진할 때나 蘇聯의 고르바초프가 1985년 이후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할 때 理念의 變化가 선행했던 것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北韓社會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主體思想이라는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며 主體思想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의 전 부문에서 핵심적 支配原理, 社會構成의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體制의 理念 특히 主體思想의 연구는 北韓社會의 實相과 變化展望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北韓 勞動黨은 1970년 제5차 黨대회에서 개정된 黨規約에서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主體思想을

최초로 黨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채택했다. 이어서 1980년 제6차 黨 대회에서 개정된 黨 規約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함으로써 오직 金日成의 主體思想만을 공식 이데올로기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1974년 2월 이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구호를 내세워 철저한 主體思想의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主體思想이 지난 수년 사이에 東歐와 蘇聯에서의 社會主義 체제 붕괴 이후 대외관계의 변화, 사회적 동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變化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主體思想의 變化가 지도부의 상황인식과 대응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目的은 1950년대 후반 主體思想이 형성된 이래 北韓社會의 變化過程 속에서 이데올로기로서의 도구적 기능을 하는 主體思想의 내용이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 I. 主體思想의 起源

金日成이 1955년 12월 28일 勞動黨의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主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主體思想의 起源이 된다. 이 연설에서 金日成은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배우되 蘇聯이나 中國을 형식적으로 모방하지 말고 민족적 자부심을 찾으라

고 강조했다.

우리의 선전사업은 많은 점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체가 없는 것이 사상사업의 가장 주요한 결함입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우리 인민의 투쟁 역사를 거부하고 무슨 밑천으로 혁명을 하겠습니까? — 우리의 선전선동사업에서 남의 것만 좋다고 하고 우리 자체의 것을 소홀히 하는 현상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연설 이후 主體思想이 급속히 발전되어 北韓社會의 전일적 사회적 가치, 정치적 원칙, 철학적 세계관으로 정립되었고 全體 社會가 主體思想化되었다. 이렇게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 主體思想이 생성된 배경과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제적 상황,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對外狀況

金日成이 1955년 12월에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한 대외적 이유 중의 하나는 1953년 3월 北韓政權 수립의 대부였던 스탈린 사망에 따른 蘇聯의 변화였다. 그해 7월 위성국 공산당 간부의 실질적 조종자

---

1) 「김일성저작집」 제9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467-95.



였던 베리아가 숙청되었고 1955년 2월 스탈린의 후계자 마렌코프가 실각하는 등의 격동기를 맞아 蘇聯의 對北韓 통제력은 약화되었고,<sup>2)</sup> 실권을 잡은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개인숭배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蘇聯의 변화는 유일독재 개인숭배를 강화하고 있던 金日成에게 유리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金日成은 나름대로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방어기제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 政治狀況

金日成은 1945년 이후 진행된 권력투쟁에서 南勞黨派, 延安派 그리고 蘇聯派를 숙청하면서 정권을 공고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종파투쟁을 완결하고 黨의 통일과 단결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金日成은 자신의 반대집단(연안파, 소련파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主體의 확립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政敵 제거를 합리화시키려 했다. 그는 ‘主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1955년 12월 28일의 연설에서 많은 그의 정적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번에 박창옥 등이 범한 과오도 그들이 조선문학운동의 역사를 부인한 데 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카프’ 즉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참가한 우수한 작가들의 투쟁도 없습니다... 박창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연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조아 반동작가인 이태준과 사상적으로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빈동무는 소련에 갔다와서

---

2) 김갑철, “북한통치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북한통치이데올로기 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 81-84.

하는 말이 소련에서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방향이니 우리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를 집어치워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허가이와 박일우의 시비는 당내에서 규율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창옥과 기석복에 대한 비판도 너무 늦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당시에 비판하였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헌영도당과의 투쟁과 반간첩투쟁의 경험을 당원들 속에서 철저히 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간첩을 정확하게 잘라낼 줄 알게 하여야 합니다.<sup>3)</sup>

金日成은 특히 자신의 政敵들이 교조주의, 형식주의, 종파주의, 관료주의 등에 젖어있어 혁명과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主體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主體라는 말은 이론적이나 논리적 해석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의 하나의 구호형식에 불과하였으나 金日成은 그것을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하나의 理念的 道具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經濟狀況

金日成은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독립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형성기(1945-50)와 전후 복구기(1954-56)에 蘇聯 및 中國의 경제원조를 계기로 내정간섭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물질 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 국가가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 노예의

3) 「김일성저작집」 제9권, p.469.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sup>4)</sup> 그러나 경제적 자립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이다. 金日成은 1차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후복구계획 시기와 같이 ‘兄弟社會主義’ 국가들로부터 경제원조를 기대했으나 소기의 원조를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1차5개년계획에 대해서 여러 파벌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자 외부의 원조없이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경제건설에서의 主體를 주창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sup>5)</sup>

앞의 세가지 요인은 오늘날까지 主體思想의 핵심적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외관계에서의 자립, 정치영역에서 金日成의 유일독재체제의 유지, 경제영역에서 자립과 이를 위한 내부적 생산력의 동원이 主體思想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 II. 主體思想의 發展過程

主體思想을 이론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서 北韓에서는 사회과학을 총동원한 이론화 작업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主體思想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거의 민족주의운동, 민족해방운동을 부각시켰는데, 특히 1955년에서 1967년 사이에 「력사과학」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1920-1930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金日成은 이와 같은 연구의 중

4)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8), p.537.

5) 김갑철, 앞의 글, p.88.

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사, 민족해방 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 또는 편찬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혁명을 옹기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sup>6)</sup> 이러한 맥락에서 1979년에서 1983년사이에는 22권으로 된 「조선전사」가 1983년에는 「현대조선력사」가 그리고 1987년에는 「조선통사」가 발간된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主體思想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특히 金正日 등장 이후에 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化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金正日은 黨權 장악 직후인 1974년 4월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6년 10월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옹기 인식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主體思想에 철학적 외피를 입히고, 金日成主義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선전하는 데 전력하였다.<sup>7)</sup> 특히 金正日은 1982년 3월에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하여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를 완결하였고, 主體思想의 체계와 내용 그리고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였다.<sup>8)</sup> 이 글은 오늘날 主體思想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설서의 역할을

6) 「제4차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통일원, 1988).

7)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문우사, 1988), p.142.

8) 김창원,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설명,” 「근로자」(1987), p.13. 金正日의 「주체사상에 관하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체사상의 창시
2.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3.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 1)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하고 있다. 현재 北韓은 이 논문에 대하여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연구 선전과 교양을 위한 참된 교과서,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기념비적 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불멸의 전투적 기치”<sup>9)</sup> 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 문건을 해설하기 위하여 1985년에는 「主體思想叢書」가 발간되었다.

### Ⅲ. 主體思想의 主要 內容

#### 1. 主體思想의 思想的 原理

主體思想이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서 채택된 것은 蘇聯의 변화와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에 기인하였지만 主體思想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 역사적 배경과 그 내용은 抗日빨치산 혁명전통이라고 할 수 있

---

2)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3)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4) 혁명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 4.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1)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① 사상에서 주체 ② 정치에서 자주 ③ 경제에서 자립 ④ 국방에서 자위

2)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①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②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3) 사상을 기본적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① 사상개조선행 ② 정치사업선행

#### 5.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

9) 김창원, 앞의 글, p. 13.

다. 北韓은 抗日유격대의 빨치산 혁명 전통을 이후 사회통제의 핵심적 기제로 사용하고 있다. 金日成의 표현을 빌면 “오랫동안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日帝를 반대하여 싸워 이긴 항일빨치산들의 투쟁과 생활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그들을 영웅적 투쟁으로 고무하는 산 모범”으로 되고 있다. 이 빨치산 혁명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오늘의 생활을 규정하는 革命의 指導方針이다. 항일유격대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근로자」에 나타난 내용을 인용하기로 한다.

사회주의 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벽두밀림에서 높이 발휘하였던 그 불타는 열정과 투지,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그대로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전투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다그쳐 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sup>10)</sup>

항일빨치산의 혁명전통의 본질은 群衆路線이다. 主體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1955년의 연설에서부터 群衆路線과 抗日빨치산 革命

10) 「근로자」(1980.3), p.8.

의 관계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당원들에 대한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당원들, 특히 간부들이 군중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중을 쟁취해야 합니다. —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항간에 떠도는 옳지 못한 여론에 기초하여 사업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군중은 우리가 의거하고 있는 기본군중, 즉 노동자, 농민들과 우리를 지지하며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동맹자들입니다. 우리는 응당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일군이거나 사회단체 일군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철두철미 혁명의 이익과 군중의 이익의 견지에 서서 사업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항일빨치산이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었습니까? 빨치산들이 옳은 군중 관점에서 있었고 그들이 군중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군중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싸웠기 때문에 그들도 이와같이 우리를 지지하고 보호해 온 것입니다. — 군중을 이탈한 당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군중이 없는 당이 무엇을 가지고 혁명을 하겠습니까?」<sup>11)</sup>

이와 같이 金日成 主體思想의 핵심은 群衆路線이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11) 「김일성저작집」 제9권, pp.488-89.

12) 대중동원을 主體思想의 한 기능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김갑철, 유영준, 박채용, 정한구 등이다. 김갑철,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 분석」(서울:서향각, 1977; 유영준, “발전정치론에서 본 주체사상”, 「북한」 10월호, (1979); 정한구,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동원운동”, 「북한」, 5월호 (1978). 이 중에서 정한구의 논문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정한구는 北韓 사회는 “본질적으로 전사회의 동원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p. 176)고 보았다. 그러나 경제적 후진 사회인 북한이 주민을 물질적 보상으로 동원에 유도할 수 없으므로 “이데올로기 운동에 의한 규범적 유인(normative incentive)이 정치적 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상·기술·문화혁명의 3대혁명은 하나의

金日成은 “군중로선은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sup>13)</sup>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군중로선’ 원칙과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한 항일혁명 및 對美 革命의 원칙이 主體思想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群衆路線과 革命의 원칙이 때로는 金日成에 대한 충성으로 동원되고 때로는 천리마운동이나 3大革命小組運動과 같은 경제적 노력동원으로 이용되는 등 만능의 도구가 되고 있다.

主體思想은 한마디로 革命과 建設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힘도 인민대중으로부터 나온다는 思想이다. 이러한 群衆路線에 哲學的 外皮를 입힌 主體思想은 물질과 의식의 통일체인 사람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세계를 바라보는 사상이므로서, 北韓은 그 의의를 유물론의 관념론에 대한 승리, 社會主義 革命의 승리라는 조건 하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람은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주인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sup>14)</sup>

---

이데올로기 운동으로서 동원 이데올로기로서의 主體思想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북한에서 主體思想이 표방되기 시작한 시기와 동원이 본격화된 시기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즉, 북한에서 대중동원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천리마 운동의 시발을 1956년으로 잡고 전면적으로 추진된 때를 1959년으로 볼 때, 김일성의 主體의 강조(1955년 12월)와 경제자립의 제창시기(1958년)와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13)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1978), p.84.

14) 사회과학출판사(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주체사상총서 1);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주체사상총서 2),(평양, 1985) 참조.



그러나 北韓에서 主體思想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金正日이 제시한 내용이 아닌 다음 절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실제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다.

## 2. 主體思想의 具體的 實現

1958년까지 政敵 숙청을 완료하고 권력을 공고화한 金日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는 경제건설이었다. 이것은 金日成이 6.25전쟁으로 성취하지 못한 南韓의 공산화를 급속한 경제건설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主體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한 1955년 12월 28일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반부에서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경제토대를 강화하여 전체 인민을 우리당 주위에 단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승만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에 의하여 부단히 고 무되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여 민주기지를 강화하며 남반부에 대한 정치 사업을 잘하여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투쟁에 꺾기시킨다면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sup>15)</sup>

主體思想의 네가지 지도원칙이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15) 「김일성저작집」 제9권, p.483.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인데 그 중에서 經濟自立的 선차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경제에서 자립성이 없이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입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측되어 가지고는 정치적 자주성도 보장할 수 없으며 자주적인 경제력이 없이는 국방에서의 자위노선을 관철할 수 없다.<sup>16)</sup>

金日成은 전체주의적 동원체제의 포괄적 목표를 경제발전에 집약시키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北韓에서는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생산관계를 社會主義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축성 강화하고 社會主義的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적 재건을 발전정책의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sup>17)</sup>

金日成이 자립경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北韓의 현실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창한 구호가 바로 ‘自力更生’이었다. 물질적 보상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상 자극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主體思想이 노력동원과 생산성 제고에로의 구심점을 찾게 해 주는 기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北韓과 같은 전체주의 社會가 체제를 유

16) 「김일성 주석 담화집」, p.296.

17) 안병영, 「북한 사회의 변동가능성과 자유화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72), p.55.

지하기 위하여는 계속 동태적인 대규모의 大衆動員과 교화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主體思想이 大衆動員 및 교화를 위한 규범적, 심리적 요소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主體思想은 大衆動員과 全人民의 노력동원을 위한 理念的 토대가 되었고 실현방법으로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3大革命小組運動, 속도전 등이 추진되어 1950년대 후반 이후 北韓社會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으며, 北韓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기제가 되었다.

#### 가. 천리마운동

천리마운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58년 말부터이다. 1958년 北韓은 ‘전국생산혁신자대회’를 가지고 제1차5개년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천리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천리마운동은 1959년 3월 평남 江價郡 소재 降仙 제강소의 陳應元작업반으로 하여금 새로운 작업기준량을 창조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하여 이를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 호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에는 北韓 전역의 모든 경제기관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일체의 기관과 부문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北韓은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자 의도했다. 천리마운동은 또 大衆動員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

18) 박상섭, “주체사상 비판연구에 관한 비판적 내용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북한통치 이데올로기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300.

이 아니라 主體思想을 전 인민대중에게 침투시키는 사상운동의 한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이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전국 천리마 작업반운동 선구자 대회가 있는 후 천리마작업반 운동의 발전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이 운동이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로 더욱 심화된 데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이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좌우경 기회주의를 견결히 배격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사업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고 있는데 있습니다. 천리마작업반 운동이 심화 발전됨으로써 생산과 건설, 기업관리의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주인다운 역할이 더욱 높아졌으며 혁명적 대고조가 더욱 양양되어 사회주의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었습니다.<sup>19)</sup>

#### 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主體思想의 경제관리방법의 핵심으로 청산리정신에는 ‘혁명적 균중로선’이나 ‘대중지도의 기본원칙’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8일 金日成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北韓은 이를 “주체사상과 혁명적 균중로선에 기초한 조선노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전일적으

19)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장철의 보고, “전국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정형총화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천리마의 대고조를 이룩할 데 대하여,”(제2차 전국 천리마운동작업반 선구자대회, 1968년 5월 9일).

로 체계화한 과학적이고 공산주의적 대중지도사상이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sup>20)</sup> 金日成은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나서 문제해결의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한다.<sup>21)</sup> 金日成은 청산리 協同農場에서의 현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1960년 2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행한 연설 「강서군당 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에서 청산리방법을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대중지도방법으로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농업지도에서 시작된 청산리방법은 ‘청산리정신’으로 발전되어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은 물론이고 黨, 國家 사업의 기본정신이 되어 헌법에 명시되었다.

#### 다. 대안의 사업체계

1961년 12월 金日成이 대안전기공장에서 현지지도를 하는 가운데서 비롯된 경제관리형태이며 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을 공업분야에 적용시킨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핵심은 대형화된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해 기존의 지배인 유일관리체제를 폐지하고 다수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공장과 기업소를

20) 「백과사전」 5권, p.48

21) 「김일성저작선집」, 4권(1968), pp.298-99.

관리,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을 옹계 구현하며 … 기업관리에서 웃사람과 아랫사람, 생산자들 사이에 서로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단결하며 생산자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공산주의적 방법을 많이 체현한 기업관리형태입니다”<sup>22)</sup>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대안의 사업체계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구호 아래 근로대중을 동원, 정치활동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北韓의 공업부문 관리형태이다.

### 라.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적 군중노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것이다. 金日成은 1975년 3월 4일 ‘공업열성자대회’에서 행한 연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3大革命小組運動을 ‘3대혁명의 역사적 필연성,’ ‘3대혁명소조운동의 발단,’ ‘3대혁명에서 이룩한 성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金日成은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계단을 거치지 못한 나라들과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이 더

22) 「김일성저적선집」, 5권(1972), p.442

오래 걸리며 이런 나라들이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3대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3大革命小組들을 파견한 중요한 목적은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 관료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黨이 요구하는 대로 일을 잘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원만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3대혁명 소조의 규모는 공장, 기업소에는 20-30명씩, 큰 공장, 기업소에는 50여 명씩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金日成은 黨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大革命小組를 파견한 것은 3대革命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데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3大革命小組運動은 김창순과 고성준 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金正日이 세습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측면도 있다.<sup>23)</sup> 왜냐하면 3大革命小組運動이 金正日이 후계자로 결정된 시기의 직후인 1973년 2월 13일에 처음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 마. 속도전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 대안의 사업체계 및 3大革命小組運動 이외에도 北韓에서는 군중동원 방법의 하나로 속도전 운동

23) 김창순, “북한통치 이데올로기가 사회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통치이데올로기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태백 편집부(편), 『주체사상연구』(서울:태백, 1989) 참조.

을 전개해 왔다. 1959년 이후 천리마작업반 운동이 속도전의 주된 운동이었는데, 1975년 말부터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력경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이른바 革命과 건설에서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金日成 主體思想의 요구대로 3대혁명을 촉진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속도전은 종래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같이 작업반을 기본단위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보다 넓은 단위와 영역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1982년 7월 9일 김책제철소의 쫓기모임을 시발로 하여 소위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이 金正日의 주도 하에 적극 추진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을 가미하여 작업성과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운동이었다.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와 관련하여 1988~89년 기간 중 2차에 걸쳐 ‘200일 전투’를 추진한 것을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sup>24)</sup>

北韓에서 主體思想은 金日成의 지배를 위한 이론적 토대이기도 하고 金正日의 승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主體思想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제발전을 위한 群衆路線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천리마운동, 청산리 방법, 청산리정신, 대안의 사업체계, 3大革命小組運動, 속도전 등의 여러가지 형태의 실천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4) 統一院, 「北韓概要」(서울: 統一院, 1991), pp.115-16.



#### IV. 1980년대 以後 主體思想의 內容 變化: 體制守護와 社會統合의 強調

##### 1. 1980년대 以後의 狀況變化

1980년대에 들면서 北韓은 대내외적으로 體制變化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變化의 압력은 외부에서 먼저 왔는데, 中國이 1979년에 鄧小平이 집권하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것과 蘇聯에서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社會主義체제 개혁정책은 北韓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더욱이 1989년에 東歐 社會主義 국가들이 밑으로부터의 저항에 의하여 차례로 붕괴되고, 蘇聯에서 社會主義 강경 보수파가 주도한 쿠데타에 시민들이 전면적으로 저항하고 나선 사실에 北韓의 지도부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대내적으로는 다른 社會主義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北韓에서도 경제 문제가 위기국면에 이르렀다. 北韓經濟는 社會主義 體制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특히 ‘兄弟社會主義’ 체제의 붕괴는 北韓의 대외경제협력관계를 와해시켰다. 이러한 결과 1990년의 경우 경제성장율이 -3.7%를 기록하게 되었고 원자재 및 연료의 수입에 차질이 생겨 공장가동율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金日成이 80세에 가까와짐에 따라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金正日에로의 권력승계가 임박해 있으며, 社會主義 국가들의 체제붕괴 및 개혁·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北韓 指導部의 狀況認識

東歐와 蘇聯에서 개방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東獨이 西獨에 흡수 통합되며 社會主義의 종주국인 蘇聯에서 공산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에 대해서 北韓의 지도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北韓社會 變化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北韓의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러가지 연설문이나 문건의 내용을 분석하면 그들은 社會主義 체제의 변혁이 다음과 같은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내부적 차원에서는 東歐 및 蘇聯 변혁의 원인을 특권층이 부패하고 관료주의가 만연하여 정권과 인민대중이 괴리된 것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91년 5월 5일 金正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의 담화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문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sup>25)</sup>

외부적 요인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과 그 결과적 영향을 社會主義 국가들의 붕괴의 중대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 이행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 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자본주의에 되돌려 세우려고

25) 「로동신문」, 1991.5.27.

책동하고 있습니다.<sup>26)</sup>

### 3. 主體思想의 새로운 內容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의 상황에서 金日成-金正日 體制는 인민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상통제와 체제단속에 돌입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군중로선에 입각하여 노력동원을 독려하던 主體思想이 變化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主體思想의 內容 變化의 거시적인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동신문 사설의 내용을 분석한 이은죽과 서진영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sup>27)</sup> 이은죽의 연구는 1952년부터 1987년 사이의 로동신문의 사설 전부인 5,989편을 대상으로 연대별로 내용을 분석한 것이고, 서진영의 것은 1980년부터 1990년 9월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표 2-1-1>과 <표 2-1-2>에 각각 나타나 있다. 이 두 표에 의거하면 1952년부터 1990년 사이에 로동신문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다. 로동신문의 사설의 내용이 모두 主體思想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北韓社會에서 로동신문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로동신문의 사설을 主體思想의 주요 내용으로 보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2-1-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50년대와 1980년대의 전 기간

26) 金日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1990.5.24.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연설).

27) 이은죽, 「북한사회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대비계획연구」(통일원, 1990).

〈표 2-1-1〉 로동신문 분석: 연대별 주제의 분포 (1952-1987)

|      | 1950s | 1960s | 1970s | 1980s | 계    |
|------|-------|-------|-------|-------|------|
| 경제   | 34.8  | 37.9  | 45.2  | 44.6  | 40.6 |
| 정치   | 24.2  | 22.3  | 24.2  | 26.2  | 24.1 |
| 국제관계 | 19.8  | 26.8  | 17.2  | 12.5  | 19.3 |
| 사회   | 15.8  | 8.3   | 9.1   | 11.6  | 11.1 |
| 문화   | 4.8   | 3.7   | 3.6   | 4.5   | 4.2  |
| 기타   | 0.5   | 1.1   | 0.7   | 0.6   | 0.8  |

자료: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pp.142.

에 걸쳐서 경제문제가 가장 많이 강조되었으며 그 빈도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제문제에 대한 비중은 정치문제에 대한 언급보다 2배 정도나 된다. 이것은 전쟁 이후 北韓社會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발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표 2-1-2〉에서 1980년 이후를 볼 때 1981년과 1982년까지는 앞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경제문제에 관한 언급이 정치문제에 관한 언급의 두배가 된다.<sup>28)</sup>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정치문제에 관한 언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반대로 경제문제에 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1989년에는 경제문제와 정치문제의 언급 빈도가 거의 동수가 되었다가 1990년에는 정치문제에 관한 언급이 더 많아졌으며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91년에 들어서는 정치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것은 1980년대 초반의 中國의 개혁 개방과 東歐社會의 변화 그리고 1985년 이후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으로 北韓社會에서 사상단속의 문제가

28) 이것은 이은죽의 자료와 서진영의 자료가 분류방법이 유사하며 두 자료가 모두 신뢰성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표 2-1-2〉 로동신문 분석 (1980 - 1990)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
| 국 내 정 치 | 정 치     | 당, 국가<br>사상, 대중운동<br>3대혁명<br>기타   | 20<br>46<br>1<br>1            | 19<br>23<br>1                  | 13<br>29<br>1                  | 12<br>35<br>1                      | 13<br>42<br>1<br>3            | 10<br>48<br>1<br>2                 | 6<br>42<br>1<br>2                  | 6<br>54<br>1                            | 2<br>62<br>1                       | 8<br>63                           | 8<br>55                      |
|         |         | 소 계   | 68                            | 43                             | 43                             | 48                                 | 59                            | 61                                 | 51                                 | 61                                      | 65                                 | 72                                | 63                           |
|         | 경 제     | 일 반<br>경제관리, 경제지도<br>경제구조, 경제제도<br>산업, 운수<br>농림수산업<br>대외무역<br>과학기술<br>기 타 | 19<br>2<br>20<br>19<br>7<br>9 | 11<br>7<br>16<br>29<br>2<br>15 | 13<br>2<br>27<br>19<br>4<br>10 | 16<br>4<br>1<br>41<br>24<br>2<br>9 | 13<br>2<br>33<br>19<br>5<br>7 | 17<br>4<br>36<br>19<br>2<br>3<br>2 | 14<br>2<br>40<br>19<br>1<br>8<br>4 | 14<br>2<br>1<br>34<br>20<br>1<br>6<br>1 | 13<br>1<br>31<br>13<br>1<br>8<br>2 | 7<br>2<br>37<br>13<br>2<br>6<br>7 | 12<br>2<br>29<br>7<br>1<br>7 |
|         |         | 소 계   | 76                            | 80                             | 75                             | 97                                 | 79                            | 83                                 | 88                                 | 79                                      | 69                                 | 73                                | 58                           |
|         | 사 회 문 화 | 일 반<br>교육, 체육<br>의료, 보건, 복지<br>문학, 예술<br>기 타                              | 3<br>1<br>1                   | 2<br>1                         | 2                              | 1<br>1                             | 2<br>1                        | 2<br>2<br>1<br>3                   | 3<br>2<br>1                        | 1<br>2                                  | 1<br>1<br>1<br>2                   | 1<br>3<br>2                       | 2                            |
|         |         | 소 계   | 5                             | 3                              | 2                              | 2                                  | 3                             | 8                                  | 6                                  | 3                                       | 5                                  | 6                                 | 2                            |
|         | 군 사     | 민군관계<br>기 타   | 1                             |                                |                                | 1                                  |                               | 1                                  | 1                                  | 1                                       | 1                                  |                                   | 1<br>2                       |
|         |         | 소 계   | 1                             |                                |                                | 1                                  |                               | 1                                  | 1                                  | 1                                       | 1                                  |                                   | 2                            |
|         | 남 북 관 계 | 정 치<br>경 제<br>통일문제<br>군 사<br>기 타  | 6<br>6                        | 3<br>6<br>1                    | 3<br>4<br>1                    | 3<br>6<br>2                        | 3<br>1<br>5<br>3<br>1         | 1<br>3<br>4<br>1                   | 2<br>8<br>3<br>1                   | 1<br>7<br>3<br>1                        | 2<br>13<br>3<br>1                  | 3<br>3<br>2                       | 1<br>6<br>1<br>1             |
|         | 계       |   | 12                            | 10                             | 8                              | 11                                 | 13                            | 9                                  | 14                                 | 12                                      | 16                                 | 8                                 | 9                            |
|         | 국 제 관 계 | 일 반<br>북한-소련<br>북한-중국<br>북한-동구<br>북한-미국<br>제3세계<br>국제기구                   | 1<br>2<br>2                   | 1<br>2<br>1                    | 1<br>1<br>3<br>2               | 1<br>3<br>1<br>2                   | 1<br>1                        | 1<br>1<br>1                        | 2<br>1<br>3<br>1                   | 1<br>3<br>1                             | 1                                  | 1<br>2<br>2                       | 2                            |
|         | 계       |   | 5                             | 4                              | 7                              | 7                                  | 1                             | 3                                  | 7                                  | 5                                       | 1                                  | 5                                 | 2                            |

자료 :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 대비 계획 연구」, pp.94-9.

\* 1990년은 1월-9월까지의 수치임.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의 표를 보면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문제를 주로 취급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상과 정치의 교양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主體思想의 내용변화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의 성격 변화는 1991년 5월 5일 金正日의 연설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 침투를 강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을 불어 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적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 원리 교양과 당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 교양, 사회주의 애국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sup>29)</sup>

이것은 主體思想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 동원이 강조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상과 정치적 측면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실에 모순이 커질수록 이데올로기 강화는 필

29) 金正日,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27.

연적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主體思想의 내용도 사상과 체제의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變化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北韓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되는 사상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980년 후반부터 주체사상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첫번째 내용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金日成은 1964년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정치적 생명이라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였고,<sup>30)</sup> 1974년 2월 노동당 중앙위 결의 형식으로 발표된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부터 부여된 정치적 생명을 소중히 지키고 수령의 커다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대하여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에 입각한 충성으로써 보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金正日은 1982년 3월 31일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생명이라면, 사회적·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생명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쓰이던 社會政治的 生命體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개념이 정의되고 主體思想의 새로운 해석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1986년 7월 15일 金正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였다.<sup>31)</sup> 이

30) 김일성 "지도일꾼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4」(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p.165.

31) 金正日,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7호(1987).

담화 이후 主體思想은 이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인민대중들에게 교양되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령-당-대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통일체라는 것이다.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社會政治的 生命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社會政治的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수령을 社會政治的 집단의 최고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黨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집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社會政治的 生命體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여기서 黨組織과 黨이 영도하는 社會政治的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 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社會政治的 生命體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연결을 공고히 하고 자기의 社會政治的 생명을 빛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金正日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한 이후 北韓의 모든 언론과 지도부는 이를 되풀이해서 교양하고 있다. 北韓에서 대표적인 매체인 로동신문, 근로자, 라디오방송을 각각 하나씩만 인용해 본다.

수령은 사람들에게 생명수인 혁명사상을 주고 그들을 정치조직에 묶어 세워 정치적 영도로 이끌어준다. 개인들의 생명의 존재와 발전과 관련되는



모든 것은 바로 수령이 마련하여 수령에게 체현되어 있다.<sup>32)</sup>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단결과 협력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 있으며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 집단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사람들 사이의 동지적 협조, 특히 창조력을 더욱 높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혁명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sup>33)</sup>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체사상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귀중한 사상 정신적 양식입니다. 생명체가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정치적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생명은 사상적 양식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귀중한 정신적 양식입니다.<sup>34)</sup>

主體思想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사상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社會的 含意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러한 사회관계의 새로운 개념은 北韓社會의 전통적인 全體主義 또는 集團主義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전체주의적 사회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生物學的 生命보다 社會的 生命이 선행함을 다

32) 1987년 8월 23일자 로동신문 논설.

33) 1990년 8월호 「근로자」에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의 글.

34) 1991년 9월 2일자 9시37분 조선중앙방송.

음과 같이 명백히 강조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가운데서도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에 입각해야 개인의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생명의 모체인 수령-당-대중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 요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한 것입니다.”<sup>35)</sup>

둘째, 수령에 대한 충성의 당위성을 생물학적인 유기체설의 비유를 도입하여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령은 社會政治的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것만큼 革命的 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은 社會政治的 生命體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강조한다.

혁명적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인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와 미제를 타도하고 천리에 조선의 명예를 떨치도록 우리 인민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우리 수령이시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분도 다름 아닌 아버지

35) 「근로자」(1987.7), p.16.

수령이십니다.<sup>36)</sup>

셋째, 이러한 사회통합의 강조는 결국 中國, 東歐 諸國, 蘇聯에서의 개혁 바람에 대해서 北韓의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金正日은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을 주장하는 1986년의 논문의 뒷부분에서 인민들로 하여금 이반을 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식들이 자기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들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다.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생사 운명을 같이해 나갑니다. 만일 그 누가 자기나라가 뒤떨어졌다고 하여 실망하고 자기조국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먹거나 조국이 위협에 처하였을 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조국을 배반하고 자기 한 몸만을 건지려고 한다면 그 어느 나라 인민도 그러한 인간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sup>37)</sup>

스즈끼 마사유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86년이래로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을 체계화하고 이를 강조해 왔던 목적과 이유는 蘇聯 및 中國의 개혁 이론이 국내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sup>38)</sup> 金正日은 1986년의 담화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36) 「근로자」(1987.7), p.17.

37) 위의 글, p.17.

38) 스즈끼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박한식(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동화연구소, 1991).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들에 대하여서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러한 나라들의 경험이라고 하여 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나라들의 역할을 응당하게 평가하고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주성을 쥐 버리고 큰 나라들이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sup>39)</sup>

이 담화가 발표되었던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말한 큰나라나 선진국이란 바로 中國이나 蘇聯을 지칭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 여기서 말한 이들 나라의 경험이란 것도 바로 체제개혁, 혹은 페레스트로이카를 가리킨 것임이 명백하다. 金正日은 그것을 北韓의 현실에 선택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 결코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蘇聯이나 中國의 체제개혁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네번째로, 스즈끼도 지적한 대로,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은 資本主義에 대한 社會主義의 우월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등의 체제개혁 논의의 배후에는 현존 社會主義가 資本主義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金正日은 발전된 資本主義가 물질적인 생산력에서는 社會主義를 능가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는 했어도 資本主義는 개인적인 생명을 보장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社會主義만이 개인에게 永生을 줄 수 있

---

39) 「근로자」(1987.7), p.11.

으며 그 결과 개인의 자주성이 실현되므로 社會主義는 資本主義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社會主義는 社會政治的 生命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재정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도를 가진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은 최근 들어서 자주 되풀이해서 인민대중들에게 교양되고 있으며 정보가 차단된 北韓社會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의도한 대로 정치적 효과를 상당히 거둘 것으로 보인다.

#### 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主體思想의 또 다른 내용 변화는 東歐 社會主義 체제가 붕괴한 시기인 1989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로서 金正日의 1991년 5월 5일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집대성되어 있다.<sup>40)</sup>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과의 담화의 형식으로 되어있는 매우 긴 논문이다. 이 담화는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며칠 동안 되풀이 방송되었다(27일 7회, 28일 5회, 29일 4회, 30일 4회). 이 논문은 앞에서 본 社會政治的 生命體論과는 상당히 상치되는 주장을 담고 있다.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이 수령 중심의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를 강조한 주장이라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社會主義’는 인민대중중심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金正日의 이 논문에 대한 「근로자」의 해설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40) 「로동신문」 1991.5.27.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참다운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면모, 우월성과 불패성의 원천을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사람 위주의 견지에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에 관한 이론이 새롭게 체계화되었으며...로동계급의 사회주의 학설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 완성하게 되었다.<sup>41)</sup>

北韓의 主體思想이 인민대중 중심이며 사람 위주의 사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는 하였지만 金正日의 5월 5일 담화에는 대중의 역할이 전례없이 중시되고 있다. 이 문건의 어휘 빈도분석을 한 결과 인민대중이라는 단어가 444회 사용되었는 데 반해 수령이라는 단어는 불과 39회, 당이라는 단어는 151회씩 사용되었다. 또, 문맥상의 빈도수를 세어보면 인민대중 중심의 社會主義를 강조한 내용이 124회 나타났는데 반해 수령이나 黨의 영도에 관한 언급은 14회에 불과했다. 그만큼 전체 내용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는 다르게 인민대중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두 절이 모두 인민대중 중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여전히 수령과 당의 영도를 되풀이하고는 있지만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수령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행하여 온 청산리방법이나 현지지도 같은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제1절은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北韓의 社

---

41) 「근로자」, (1991.7).

會主義는 인민대중 중심의 社會主義로서 가장 우월한 社會主義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기 때문에 우리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의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 인민대중이 사회적 운동에서 주체로 되는 것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것이 창조되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가 발전되기 때문이다.

제2절은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 세운 인민대중 중심의 독특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北韓의 사회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원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조아 의회제와 부르조아 다당제를 그 무슨 민주주의로 표방하고 있지만 부르조아 의회제와 부르조아 다당제의 배후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 자본가들입니다. ... 참다운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국가의 중앙 집권적 제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金正日의 5월 5일의 담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핵심

적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주주의에 장애가 되는 관료주의와 세도를 비판하고 노동계급의 黨이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올바른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제3절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아무리 黨政策이 정당하여도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나쁘면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社會主義 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업방법과 작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과제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집권을 악용하여 권세를 부리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입니다. 일꾼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부 일꾼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권력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主體思想의 재해석에 대하여 사카이 다카시는 성급한 측면은 있지만 의미있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사카이의 논문<sup>42)</sup>은 金正日의 1991년 5월 5일 담화가 나오기 전에 쓰여진 글인데 이미 1989년 가을 이래 黨의 지도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련의 變化가 엿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變化의 특징으로 사카이는 다음의 세가지 점을 지적했다. 첫째,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지적하는 경우에 이전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우월성'을 제도면에서 언급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졌으나 이제는 그것을 어

---

42) 사카이 다카시, "북한의 정치개혁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5호(1990).



떻게 ‘발양’, 구체화하는가 하는 방법론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면서 대중의 역할이 전례없이 중시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대중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구체적 방법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철저한 수행이 강조되고 그 가운데서 생산자 대중의 기업관리에의 실질적인 참가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의 우월성 발양’의 방법의 하나로 ‘관료주의’ 비판이 주장되고 있는 점이다. 이 세가지 징후를 근거로 사카이는 北韓에서는 일단 정치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정치개혁이 시작된 이상, 개혁은 그것을 개시한 지도자의 의도를 떠나 대중 속에서 자기증식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하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중의 자발성’을 해방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사카이의 이러한 분석은 그동안의 상황정의를 집대성한 金正日의 1991년 5월 5일의 담화가 발표되기 일년 전에 나온 논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예리한 분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43)</sup>

그러나 실제로 체제유지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나온 인민대중중심론이 현실의 問題와 矛盾을 은폐하기 위한 언어적 유희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적인 정책 변화를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는 더 자세히 현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는 현실적 처방이 불가능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현실은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正日의 담화가 실제 개혁과 거리가 있든 없든 간에 본래

43) 처음으로 사카이 다카시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1990년 3월 27-29일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주최의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였다.

의도되었던 정치적 목적은 분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는 루마니아를 비롯한 東歐 社會主義 국가들의 붕괴를 관료주의의 병폐에 기인하여 발생한 밑으로부터의 抵抗이라고 파악하고, 인민의 離叛을 방지하기 위하여 北韓體制는 이미 인민대중 중심의 민주주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둘째는, 中國 및 蘇聯의 개혁의 바람이 北韓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식 社會主義’의 우월성과 ‘우리식 社會主義’의 고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中國, 東歐, 蘇聯에서 개혁을 해도 그것은 北韓에게는 무관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식의 사상 관점과 사고방식이란 다름아닌 우리 당의 노선과 방침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는 불패의 자주적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땀땀이 살며 혁명을 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sup>44)</sup>

다. 社會統合을 위한 그 밖의 내용들

1980년대 후반의 주체사상에서 社會政治的 生命體論과 인민대중 중심의 社會主義論 이외에 부각되고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은 공통적으

---

44)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일해 나가자,” 「조선중앙방송」(1991.9.2).

로 체제위기의 상황에서 대중들을 체제에 통합시키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음의 몇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내부의 문제와 모순의 원인을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방적인 자기정당화의 논리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는 외부에 대한 배척을 핵심적인 원리로 하는 主體思想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 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자유화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 침투를 감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을 불어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sup>45)</sup>

둘째, 東歐 諸國의 몰락을 社會主義의 내부모순에 기인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資本主義의 危機를 선전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떠들면서 환성을 올리고 있지만 이것은 가소로운 일입니다. 오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제국주의이며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시대를 다 산 제국주의가 인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으며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 세울 수 없습니다.<sup>46)</sup>

45) 金正日,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셋째, 대세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北韓은 社會主義 체제 건설 이후 엄청난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현재의 고비를 잘 넘기자는 내용의 선전을 하고 있다.

넷째, 抗日빨치산의 과거 전통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복원하고 있다. 抗日빨치산 전통이 동원되는 목적은 中國이나 蘇聯, 東歐 사회들이 개혁한다고 해서 北韓도 개혁할 것이 아니라 ‘주체식’ 또는 ‘우리식’으로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變化 사조가 北韓 내부로 침습하여 東歐나 中國 및 蘇聯에서처럼 인민대중들이 봉기할 것을 우려하여 대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우리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세우는 것은 옳바른 로선과 전략전술이 없어 실패만 거듭하던 선행한 운동들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그리고 전인미답의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해 나가야 할 항일혁명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밝히는 것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시었으며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는 전기간 우리 혁명의 실정에 전적으로 맞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해 나가시었습니다.<sup>46)</sup>

이와 아울러서 抗日 빨치산 革命 때 고생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지

---

46) 金日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1990. 5.24).

47) 박인근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 「근로자」(1989.1).

켰듯이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도 정권을 離叛하지 말고 사회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자주 반복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자주 인용되고 있는 金日成의 말이 있다.

지난날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무장투쟁을 할 때에 늘 부모형제들에 대한 생각, 고향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싸웠습니다.<sup>48)</sup>

요약하자면 1980년대 후반,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社會統合을 강조하는 여러가지 새로운 내용의 상황정의와 상황처방이 개발되어 인민대중의 사상교양에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신문, 라디오, 사회과학 저널 등 모든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北韓 특유의 다양한 방식의 群衆路線, 즉 꺄기대회, 祝典 등을 통해 매일 매일 되풀이해서 주민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 V. 變化의 展望

지금까지 北韓의 主體思想의 원리와 內容 變化를 살펴보았다.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노력동원과 金日成 숭배를 위해서 主體思想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1980년대 후반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와 같은 社會統合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48) 「김일성저작집」 제3권, pp.237-38.

이러한 主體思想의 내용 變化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네 가지 정도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인민대중 중심의 社會主義的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에는 두가지 상반된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성공적 사상교양으로 체제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보가 차단된 사회에서는 단기적으로 왜곡된 현실 해석이 주민 설득에 효과적일 수가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해석은 사카이 다카시가 시사하는 대로 주민들이 선전과 현실의 괴리에 불만을 갖고 실질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效果’가 올 수도 있으며 이는 東歐와 蘇聯과 같이 밑으로부터의 革命的 초기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主體思想의 재해석과 내용 變化가 환경 變化에 따른 대응방식의 變化이지 主體思想 자체의 포기나 變化는 아니라는 것이다. 主體思想은 變化된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서 적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여전히 사회전반에 대한 지도원리로서 包括性和 總體性を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主體思想이 갖는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언어의 지속적 반복이 일상화되는 경우에는 主體思想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主體思想의 이데올로기로서의 효율성 문제로서 이는 北韓의 世代交替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토지개혁으로 金日成 정권의 덕을 본 革命世代는 이미 사멸하여 소수에 불과하고, 北韓 주민의 대부분(78.5%)이 6.25전쟁 이후에 출생한 世代라는 점을 생각한

다면 새로운 世代에게 革命이라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北韓社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 새世代의 思想性 문제라고 보여진다. 지도부에서도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몰들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主體思想이 革命의 사상이 아닌 새로운 설득력있는 내용으로 變化되지 않고는 새세대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번째로, 主體思想 내용 變化의 正當性의 문제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모든 노력이 경제발전으로 집중되어 主體思想이 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동원되었다. 그런데 經濟危機가 원인이 되어 東歐社會와 蘇聯의 공산당 체제가 붕괴한 시점에서 北韓은 체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사회통합과 체제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經濟에 집중한 1980년대에도 경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사회적 충력을 체제유지에 집중한다면 위기의 원인인 經濟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 第 2 章 政治體制

1985년 고르바초프 정권의 改革·開放 政策의 영향으로 蘇聯은 물론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도 사회전반에 걸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北韓體制에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東歐 국가들과 蘇聯에서의 社會主義의 붕괴가 北韓의 정치체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北韓의 사회주의체제는 東歐 및 蘇聯의 그것과는 다른 特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體制가 變化하더라도 그 변화의 主體와 方向, 範圍 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보편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만의 특수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北韓의 政治體制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한 김일성과 같은 지도자의 특수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상호작용하여 북한의 정치체제가 향후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를 고찰해 보는 것이 본 章의 目的이다.



# I. 政治體制的 特性과 變化의 內容

## 1. 金日成 唯一 支配體制와 世襲體制

### 가. 카리스마적 지배체제

北韓의 政治體制는 金日成의 카리스마적 리더쉽에 의해 維持되고 있는 唯一支配體制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베버(Weber)는 카리스마를 “보통사람과는 다른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또는 적어도 특별히 예외적인 힘이나 특질을 부여받은 개인적 인간성의 일정한 특성”<sup>1)</sup>이라고 定義한다. 한편, 베버의 정의를 발전시켜 카리스마적 指導力과 카리스마적 運動을 區分하고 있는 터커(Tucker)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運動의 과정에서 뛰어난 자질 예컨대 설득력, 응변, 융감성 등을 과시하는 자라고 말하였다.<sup>2)</sup> 슈바이쩌(Schweitzer)는 카리스마적 運動을 세단계, 즉 카리스마적 熱望→카리스마적 發狂→카리스마적 巨人으로 區分하였고<sup>3)</sup> 이를 박한식교수가 좀더 發展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4)</sup>

---

1)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Talcott Parsons,ed.)(New York: The Free Press, 1964), p.353.

2) Robert Tucker, *Stalin as Revolutionary: 1879-1929*(New York: W.W.Norton & Company, 1973), p. 968.

3) Arthur Schweitzer, *The Age of Charisma*(Chicago: Nelson-Hall, 1984), p. 3.

4) 朴漢植, “金日成時代 이후의 金日成 카리스마,” 朴漢植 編, 「北韓의 實相과 展望」(서울: 同和研究所, 1991), pp.112-13. 참조.

카리스마적 熱望段階에서는 카리스마적 人間性을 創造하기 위한 강한 열망과 계획을 소유한 사람들이 출현한다. 그들은 정치적 소요나 경제적 침체로 물질적 生存에의 두려움이 社會全體에 만연하면서 社會安定을 위한 강력한 指導力에 대한 要求가 增大될 때, 군부나 당을 장악하여 권력을 공고히 한 후, 물리적 강제를 통해 이러한 慾求를 充足시켜주고 政治的 正統性을 확보하게 된다. 카리스마적 發狂段階에서는 지도자가 단순히 國民을 物理的 暴力이나 威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만으로는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고, 이데올로기를 통한 위로부터의 끊임없는 政治的 教化를 통해서 國民의 服從을 얻어내어 정통성을 확보해 간다. 이 단계에서 이데올로기의 창조가 지도자의 중요한 役割이 되어 지도자는 이데올로기의 創造者로 등장한다. 카리스마적 巨人段階에서 이데올로기는 價値體系 또는 準宗教的인 性格과 救援者的인 비전을 내포하게 되고, 이때 지도자는 구원자의 위치로 昇華하게 된다.

카리스마적 指導者는 자신의 카리스마를 영속시키기 위하여 世襲의 制度化를 시도하기도 한다. 리비(Levy)에 따르면, 先任 指導者의 카리스마가 크면 클수록 그 후계자의 카리스마 繼承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의 카리스마를 능가하지 못할 때, 追從勢力은 懷疑를 품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게 된다고 한다.<sup>5)</sup> 리비의 주장은 北韓의 父子世襲體制의 變化 可能性을 考察함에 있어서도 많은 示唆點을 지니고 있다. 즉, 과연 金日成 카리스마는 金正日에게 효율적으로 승

---

5) Marion J. Levy Jr., *Modernization and the Structure of Societie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 45.

계될 것인가, 두사람 사이의 카리스마에는 어떤 差異가 존재하는가 등을 糾明함으로써 金日成 이후의 政治體制의 變化를 展望할 수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카리스마는 ①南·北韓 뿐만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統一戰線을 헌신적으로 추구하는 熱誠 ②以夷制夷 能力 ③名分과 實利, 攻擊과 協商을 동시에 추구하는 2중성 ④權力の 필요에 따라 ‘敵’과 ‘人民’을 再規定하는 능력 ⑤自主的 力量을 形成하는 능력 등<sup>6)</sup>을 들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金日成은 1930년대부터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하였고, 1945년 9월 귀국 후 蘇聯의 강력한 후원으로 權力을 獲得했다. 그는 權力的 획득 과정에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여 1948년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조만식 등 민족주의자와 현준혁 등 토착 공산주의자들을 몰리치고, 초대 수상이 되었다. 정권 수립 후에도 그는 權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950년 무정과 延安派 및 박헌영 등의 國內派, 1956년 ‘8월 종파사건’때의 蘇聯派 등 반대파들에 대한 숙청을 계속했다. 또한 政府樹立 以前과 韓國戰爭 後의 肅清, 中·蘇 理念分爭 기간의 위기타개, 1970년대 데탕트에의 적응, 1980년대 후계체제의 확립, 1990년대 초의 UN가입 등은 그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實例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金日成은 자신의 카리스마적 지배의 정당성을 확립했고, 北韓의 정치체제를 강력한 閉鎖體制로 만들었다.<sup>7)</sup>

6) 양성철, 「분단의 정치」(서울: 한울, 1987), p. 136.

7) 김일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 서대수,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林 隱, 「金日成政傳」(서울: 沃村文化社,

한편 金日成은 戰爭마저도 대내적 통합 수단으로 이용하였고,<sup>9)</sup> 그러한 정치적인도가 성공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전쟁을 통해 그는 北韓에 殘存했던 지주나 친일관료들의 월남 또는 처형에 의한 계급타파, 體制維持에 이용되어 온 美國이라는 ‘公敵’의 創出, 전쟁실패의 책임에 의한 默示的·明示的 정적의 除去 등으로 자신의 唯一支配體制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9)</sup> 그의 성공은 너무나 많은 비극을 남기고 얻은 승리(Pyrrhic victory)였으나, 國內的으로 政治統合과 카리스마에 의한 유일체제를 강화시켰고 金正日을 後繼者로 내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對外的으로는 南韓과 資本主義國家들과의 관계개선이 沮害되는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金日成은 정적 제거를 위하여 以夷制夷式 문제해결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sup>10)</sup> 즉, 그는 경쟁적인 派閥들을 서로 비판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적 立場에서 파벌싸움을 制御했던 것이다. 예컨대 그는 파벌들 내부의 정적을 친미주의자, 사대주의자, 분파주의자, 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 좌·우익 이탈자 등으로 상호비판시킴으로써 숙청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그는 주로 ‘사대주의’<sup>11)</sup>와 ‘친미주의’<sup>12)</sup>를 숙청의 名分

---

1989): 양성철, 위의 책,; 裴桓達, 「北韓의 權力鬭爭論」(서울:學文社, 1990); 許東燦, 「金日成評傳(續)」(서울:北韓研究所, 1988); Robert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8) 김학준, 「한국전쟁」(서울:박영사, 1989), pp. 346-47.

9) 서대숙, 앞의 책, pp. 97-119.

10) 양성철, 앞의 책, p. 176.

11) 사대주의는 교조주의와 함께 ‘주체사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김일성은 이것들을 철저히 배척했다. 노동당 5차당대회에서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멍청이가 되고 민족

으로 利用하였다.

1953년 부터의 社會主義 改造期를 마치고 1957년부터 社會主義 革命期를 설정한 金日成은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經濟復興·發展에 힘을 기울여 공업생산물 가치가 연평균 36.6%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대에 들어 그는 軍事優位主義에 따른 負擔과 중·소 이념분쟁에의 適應 등의 難關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豊饒를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그의 神的 統治力의 效果로 顯現되었고, 1967년부터 그의 카리스마가 ‘조작’되기에 이르렀다.<sup>13)</sup> 이즈음부터 北韓에서는 金日成 個人崇拜를 고양하기 위한 대규모 운동이 전개되었다.

金日成은 최고의 칭호인 ‘수령’ 이외에도 ‘위대한 지도자, 용감무쌍한 애국자, 민족의 영웅, 언제나 승리하는 강철같은 의지를 가진 빛나는 사령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뛰어난 지도자, 천재적인 철학자, 민족의 태양, 세계피압박 민족의 붉은 태양’ 등으로 불려졌다.<sup>14)</sup> 그는 이러한 정도로 만족치 않고 그의 카리스마를 法制化할 필요성까지 느

---

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친다”고 말했다. 「김일성저작집(25)」, p. 330.

12) 김일성은 1948년 3월 28일 노동당 2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미제국주의의 딸라에 매수된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 장로, 목사” 등을 비난하기 시작한 후 박헌영도 ‘미제간첩’으로 처형하는 등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미제’를 이용하였다. 「김일성저작집(4)」, pp. 244-45.

13) 金日成은 그의 카리스마와 항일 빨치산 경력, 정부수립, 전후의 효율적인 경제복구만으로도 정치적 정통성 확립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歷史마저 ‘조작’하기 시작했다. 또한 1967년 12월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종합 체계화되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同格으로 되었다.

14) 서대숙, 앞의 책, p. 274.

〈表 2-2-1〉 首相과 主席과의 比較

|               | 首相(1948.9.8제정)  | 主席(1972.12.27개정)  | 備考  |
|---------------|---|---|---|
| 地位<br>및<br>權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의 수석</li> <li>·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수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국가 주권을 대표</li> <li>·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li> <li>· 정무원회의를 소집, 지도</li> <li>·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위원장</li> <li>· 임기는 4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수상은 수상을 대리하고, 대리하는 경우,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나, 부주석은 승계권도 없고 권한도 없음.</li> </ul> |
| 特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에 관한 규정은 제59조에 규정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석에 관한 규정은 제6장에서 11개조항으로 규정</li> </ul>   |   |

끼게 되었다.

〈표 2-2-1〉에서처럼 1972년 개정된 社會主義 憲法에 主席制가 신설되면서, 金日成은 首相으로부터 주석으로 승격되어 주체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1人獨裁體制를 완성하였다. 主席의 강화된 권한은 기타 헌법상에 규정된 각 기구들의 권한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최고인민회의, 당중앙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당정치국 등은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이었고, 金日成의 ‘私見’은 곧 ‘黨’의 이름으로 決定되고 執行되었다. 수령으로서의 金日成의 권한은 절대적이어서 그의 말과 행동은 ‘敎示’라는 형태로 모든 정책결정의 준거들이 되었고, ‘主體思

想'으로 체계화되어 金日成 자신(후에는 金正日도 포함)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sup>15)</sup> 金日成은 아렌트(Hannah Arendt)가 묘사한 것처럼 “운동의 중앙에서 그 운동을 작동하는 모니터의 중앙에 앉아 있게” 되었다.<sup>16)</sup>

#### 나. 세습체제의 구축

金日成은 자신만의 절대권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대를 이어’ 權力을 세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가 친아들인 金正日을 선정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社會主義 建設이 당대에 끝나지 못했을 때 ‘대를 이어’ 후임자가 이끌어 간다는 계속혁명론의 논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蘇聯의 스탈린 비판이나 中國의 毛澤東 비판의 전철을 밟지 않은 채, 자신의 ‘象徴的 不滅性’<sup>17)</sup>을 입증하고 카리스마적 지배를 전수시켜 ‘김씨가문’을 신성가족(holy family)<sup>18)</sup>으로 역사에 남기려는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金日成은 동생인 김영주를 후계자로 내정하려고도 했으나, 결국 金正日을 후계자로 지목하였고,<sup>19)</sup> 우선 黨을 장악시키기 위하여 1973년

15) 이상두, “북한의 철학비판,” 「북한학」(서울: 중앙일보 동서문제연구소, 1975), p. 238.

16) Hannah Arendt, “The Totalitarian Leader,” in Barbara kellerman(ed.), *Political Leadership: A Source Book*(Pittsburgh: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6), pp. 212-13.

17) 이 용어에 대해서는 고병철, 「북한의 정권이양: 문제와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세미나(1991.10.28) 발표논문 참조.

18) 林 隱, 앞의 책, pp. 305-14.

19) 申敬完(가명), “결에서 본 김정일,” 「月刊 中央」(1991.6월호), pp. 356-68.

당중앙위원회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로동당 비서국의 組織 및 煽動 擔當 秘書로 任命하였다. 1974년에는 金正日을 당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하였고, ‘유일사상 10원칙’<sup>20)</sup>을 통해 ‘당중앙’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黨權을 掌握한 金正日은 黨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무능하고 나태한 黨官僚들을 도태시키는 한편, 黨內部를 親金正日派로 대체하여 지지기반을 넓혔다.

한편 金日成은 그의 권한 확대와 무능한 관료들의 제거를 목적으로 만든 ‘3대혁명소조’(1973)를 金正日에게 맡겨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정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결국 金正日이 카리스마를 획득할 수 있는 운동영역은 ‘3대혁명소조’ 관련업무와 문화예술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 두 부문은 金正日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중요했다. 첫째는 金正日이 그의 예술적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아버지인 金日成을 偶像化하는 데 성공하여, 후계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金正日 政權의 지주가 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중간지도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조운동을 軍部에까지 침투시키는 데 성공하여 金日成 사후에 있을지도 모를 카리스마의 위기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軍과의 關係를 원활히 하였다.

요컨대 3대혁명소조운동은 生産性的의 極大化라는 經濟的 目的 이외

---

20) ‘유일사상 10대원칙’ 중 10번째 항목은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에 사회주의 운동과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 등의 缺陷과 矛盾을 打開하면서, 金正日의 당권세습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既成幹部들을 追放하고 金正日을 지지하는 젊은 세력을 양성하려는 政治的 目的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sup>21)</sup>

이 운동은 보다 강압적인 면을 띄기 시작하여 1975년 12월 1일부터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바뀌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퍼지게 되었다. 각 생산단위나 기관마다 3대혁명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룩한 단위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방식인데, 중앙 및 각 도·시·군에 설치된 ‘3대혁명 붉은기 수여 판정위원회’가 수여대상을 審査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 인민위원회 활동가, 당 활동가, 3대혁명소조 책임자, 근로단체활동가, 행정·경제활동가 등을 포괄하여<sup>22)</sup>, 金正日의 영향력을 지방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基盤으로 활용되었다.

金日成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軍 내부에도 침투시켜 군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를 실시하였다. 1977년 11월에는 金日成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軍關係者 6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선인민군선동원대회’를 개최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군이 힘차게 밀고 나갈 것”을 결의했다. 金正日은 이 운동을 통하여 軍을 統制하는 한편, 그때까지 2월 8일로 되어 있던 조선인민군 창군 기념일을 1978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하면서 軍의 근간이 항일 빨치산에 있음을 강조하여

21) 梁好民, “정치: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 李相禹 外, 「북한40년」(서울: 乙酉文化社, 1988), p. 85.

2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7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8), p. 268.

軍元老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어내었다.

1980년대에 들어 金日成에 의한 金正日의 후계작업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그 이유는 金正日이 이미 黨의 支持를 확보했으므로 그를 밖으로 表出시켜, 大衆性을 획득하도록 도와 줄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支持基盤을 바탕으로 金日成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金正日을 공식 ‘後繼者’로 對內外에 선포하였고, 金正日을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군사위원으로 등용하고, 金日成, 김 일, 오진우에 이어 권력서열 4위로 부상시켰다. 金正日是 1981년 10월 20일 「사로청」 제7차 대회에서 서열 2위로 격상되었고,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12월 24일 당 6기 19차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推戴되면서 이제 黨·政·軍의 實權을 모두 掌握하고 있다.

한편 金日成의 의도에 부응하여 1981년 6월부터 언론에서는 金正日을 ‘당중앙’이라는 호칭 대신에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金日成과의 同一視 作業 一環으로 1982년부터는 ‘백두산밀영출생론’과 함께 그를 찬양하는 전기물들이 출판되었다. 金日成은 1986년 5월 31일 金日成 고급당학교 창립40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천명했다.<sup>23)</sup> 1970년대까지 주로 宣傳煽動 事業部門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면서 인민들의 노력동원에 필요한 영화나 구호를 만들어 왔던 金正日是 1980년

---

23) 「조선중앙년감(1987)」, p. 23.

6次黨大會 以後로 金日成과의 동행지도 및 독자적인 현지지도<sup>24)</sup>를 시작했으며 지도분야도 문화, 보건, 체육으로부터 경제·군사분야로 확대시켜 갔다. 즉, 金正日의 권력기반은 宣傳部門에서 經濟部門, 그리고 軍事部門으로 점차 擴張되어, 결국 藝術家, 科學技術者, 黨員, 官僚, 軍人, 地方의 有力者 등 多樣한 分野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최근의 社會主義 國家들의 변화와 더불어 金正日의 활동은 더욱 많아 졌고, 그의 카리스마 造作도 強化되고 있다. 예컨대, ‘백두산밀영 탄생설화’, ‘김정일 혁명사적지’, ‘정일봉순례’, ‘김정일화 찬양’ 등의 조작은 물론, 그동안 金日成과 김정숙에 관한 ‘구호나무’만을 선전하던 것을 1989년부터 金正日에게까지 擴大해 나갔고<sup>26)</sup>, 1990년부터는 ‘백두산밀영 쌍무지개’를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金正日은 ‘작은 수령’으로서 金日成과 나란히 ‘閣下’라는 呼稱으로 불리면서, 人爲的으로 카리스마적 巨人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sup>27)</sup>

金日成은 1991년 6월 1일 共同通信 사카이 신지(酒井新二) 사장과 의 인터뷰에서 “金正日이 노동당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당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업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sup>28)</sup>고 말하여 사실상 北韓을 統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金正日도 1991년 5월 5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 후계자임을 자처했다.

24) 시기별 방문횟수는 1981년 3회, 1982년 2회, 1983년 3회, 1984년 7회, 1986년 5회, 1987년 6회. 이종석, “김정일연구 1,” 「역사비평」(1991.가을호), p. 286.

25) 사카이 다카시, “金正日의 權力基盤,” 朴漢植 編, 앞의 책, pp. 16-5.

26) 「로동신문」, 1989. 10. 2.

27) 「로동신문」, 1991. 10. 19. <김정일 지도자각하는 건설의 영재> 참조.

28) 자세한 회견내용은 「중앙일보」, 1991.6.3 참조.

…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黨 건설위업도 대를 이어 계승발전 되어야 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결국 당의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나가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sup>29)</sup>

이와같이 金正日이 현재까지는 金日成의 카리스마적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金正日이 카리스마적 後繼者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金正日이 最高 權力家인 金日成 카리스마의 後援下에서 活動을 했다는 점. 둘째는 카리스마적 指導者의 指名이나 수뇌부의 결정에 의해 後繼者가 결정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관행이 있었다는 점. 셋째는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神政的 唯一支配體制이었다는 점. 넷째는 북한의 主體思想과 모든 인민이 수령의 영도에 따라야만 의식적, 자주적,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수령론’이 있었다는 점 등이다.<sup>30)</sup>

그러나 金正日의 카리스마는 金日成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사이비 카리스마이다. 金日成은 적어도 天賦的 資質과 ‘造作’된 카리스마가 合一되어 內面化되었으나, 金正日의 카리스마는 단순히 ‘造作’된 것에 불과하다. 金正日是 金日成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술분야 이외에는 카리스마적 資質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

---

29)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한 담화) 「로동신문」, 1991.5.27.

30) 韓昇洲, “北韓의 權力構造變動時 對應方案,” 國土統一院, 「北韓權力構造 및 軍事問題 研究」(서울: 國土統一院, 1988.12), pp. 12-14.

지고 있다. 즉 카리스마적 후계자로서의 金正日이 안고 있는 問題點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리스마적 지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데올로기 창시자가 되려하지만 金日成에 버금가는 이데올로기를 提示할 수 없다는 점 둘째, 金日成처럼 日本과 같은 공동의 적과의 처절한 투쟁이나, 체제변혁을 통한 國家 創建의 偉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체탑 건설 등 이상화 상징물 이외의 생산적인 經濟發展 成果가 없기 때문에 政治的 正當性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 金日成이 혁명1세대로서 中國·蘇聯등에 同時代의 支持者들이 많은 반면, 金正日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넷째, 金正日세대가 아닌 50, 60, 70대의 中堅幹部들과의 乖離와 3대혁명소조원들에 의해 밀려난 소외엘리트와 권력투쟁에서 밀린 김영주, 김성애 계열의 엘리트들이 不滿狀態로 存續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危機를 直接 打開해본 經驗이 없기 때문에 迅速하고 正確한 綜合判斷 能力이 缺如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金日成 死後 金正日이 정치적 정통성을 確保해 가는 過程에서 豫測할 수 없는 結果를 낳게 할 수도 있다.

## 2. 理念官僚와 技術官僚의 構成變化

### 가. 官僚들의 一般的 性格

現代社會는 職業과 機能이 多元化되어 이를 專門的으로 管理·運營할 수 있는 전문가(테크노크라트)들을 필요로 한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國家 및 社會의 효율적인 産業發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인간의 물질문명을 發展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전문가들의 존재는 어떤 체제의 사회에서든 중요하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를 운영하는 요원, 즉 官僚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베버(Weber)에 따르면, 官僚에 의한 국가 및 사회의 통제운영방식인 官僚主義는 그 病幣를 안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合理的인 手段이라고 한다.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그들의 목표를 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해 該當 分野의 專門家들을 관료로 기용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문관료들에 대한 依存度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 부산물로 권력이 정치인들로부터 전문관료에게로 移動되는 權力移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結果가 招來된다.

첫째, 국가는 發展된 産業社會의 諸般 問題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내기 위해 專門化된 知識과 情報를 必要로 하게 되고, 이것은 전문관료들의 政治的 役割을 높여주게 된다. 둘째, 대부분의 政策決定에 있어서 기술적인 複雜性 때문에 전문관료들은 전문화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政策決定過程에 점점 깊이 介入하게 된다. 셋째, 專門관료들의 政治적 權力은 이러한 역할 때문에 增大되고, 相對的으로 정치지도자나 理念官僚들은 지식과 전문화된 정보를 專門官僚들에게 依存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권력을 分配하게 된다. 여기에서 정책결정은 실제로 專門관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은 抽象的인 權力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 집행되어지는 관료주의 국가가 생성된다.<sup>31)</sup>

이러한 전문관료들의 役割에 대한 評價는 크게 두가지로 分類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국가는 국가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역할 분화와 결부된 能率性和 合理化를 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권력이 정치인으로부터 '새로운 계급' 또는 '지식 엘리트'나 '기술엘리트'로 특징지어지는 전문관료들에게 넘어 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이다. 둘째로는 전문관료들은 결국 管理的 지위 이상을 占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富와 特權에 基礎한 既存의 權力과 財産의 形態에 별다른 威脅이 되지 않으며 단지 産業社會에 있어서 권력의 公的·私的 制度를 지배해 온 사람들에게 奉仕할 뿐이라는 평가이다. 즉, 권력이 既存의 엘리트들로부터 선진산업사회의 지배적인 새로운 엘리트에게로 넘어간다고보다도 오히려 기존체제가 '새로운 지식인들'에 의해 強化된다는 評價이다.<sup>32)</sup>

이에 대한 평가는 국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역할을 규정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一般的으로 官僚들을 ① 慈愛的 官僚 ②自己利益의 官僚 ③權力的 侍女로서의 官僚 ④自律의 官僚 등 4가지의 理念型으로 分類해 볼 수가 있다.<sup>33)</sup>

慈愛的 官僚는 科學이 部分的인 政治를 超越하여 絶對的인 妥當性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 정치적 諸過程은 필요없게 되며 오직 自然의 法則을 理解하고 이러한 法則에 좇아 社會的, 技術的 發展을 指導하

31) 이해두, "테크놀로지와 테크노크라시,"李克燦 編, 「民主主義와 韓國政治」(서울: 法文社, 1985), p.108.

32) 위의 책, p. 111.

33) David Elliott and Ruth Elliot, *The Control of Technology*(London and Winchester: Wykeham Publication Ltd., 1976), pp. 56-57.

고 管理할 수 있는 일단의 技術人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과학적 技術의 使用이 個人的인 利益이 아니라 公共의 需要에 適合하도록 하고, 社會를 無限히 發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며, 그들 自身은 보다 나은 社會의 建設을 위해 獻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自己利益的 官僚는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이용해 上層部에 進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自身들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政策을 決定하고 모든 國家機構들을 자신의 私有物처럼 생각하고 國民의 福祉를 곧 그들 자신의 福祉와 同一視한다. 이들은 生産手段을 直接 所有하는 방식이 아니라, 生産수단을 所有하고 支配하는 國家를 支配하는 間接的인 方式으로 生産을 지배하고 商品分配의 先取權을 獲得한다. 이들은 관료주의나 관료적 권위주의의 전형인 ‘계급’으로서의 관료라고 볼 수가 있다.

權力の 侍女로서의 官僚는 자기들의 能力에 의해 政治的 役割은 增大되게 되나 權力自體의 획득까지는 上정치 못하고 정치엘리트나 支配者들의 道具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즉 자의든 타의든 全體 國民을 代辯하는 것이 아니라 支配階級의 利益을 대변하게 된다. 이들은 정치적 지배계급을 위해 高度로 發達된 擄取技術을 提供해 주고 권력을 鞏固히 하는 各種 아이디어를 提供해 줌으로써 스스로의 存在理由를 찾는다. 독재 권력가들은 이러한 屬性을 利用하여 자신들에게 철저히 忠誠할 수 있고, 支配이데올로기를 誠實히 遂行할 수 있는 전문가만을 取捨選擇하여 登用하고, 社會化 過程을 통해 奉仕的 技能人으로만 역할을 하도록 교육시킨다.



自律的인 官僚는 技術決定論的인 立場에 서서 政治와 價値보다 이를 달성하는 手段을 중요시한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의 終焉을 주장하면서 政治와 가치에 重點을 둔 政策 選擇이 消滅될 것이며, 모든 것이 技術의 문제로 還元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技術환원주의자들이다. 技術만이 인간을 자유스럽게 해줄 것이라는 信念下에 전문관료들의 自律性과 獨立性을 주장하고, 특히 政治的 中立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선진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技術官僚들은 初期 革命段階에서 慈愛的 官僚로 출발하여, 사회주의체제가 정착되면서부터 소수 지배계급의 權力維持를 위한 시녀로 轉落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1948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여 국가를 설립한 이후로 43년이 지나 '사회주의의 높은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하는 特殊한 사회주의 국가인 北韓의 관료들은 과연 어떻게 生成되었으며, 構造化되어 왔는가를 고찰해 보고, 위의 4가지 이념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관료의 성격변화에 대한 억제요인과 촉진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나. 技術官僚들의 登場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를 중국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작성된 <표 2-2-2>에 의거한다면 당관료와 기술관료의 두 가지 이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당관료는 政治的 支配階級이고 기술관료는 經濟的 支

〈표 2-2-2〉 中國의 당관료와 전문관료의 비교

| 당관료(Red)의 전형                     | 전문관료(Expert)의 전형                 |
|----------------------------------|----------------------------------|
| 1. 충원 / 상향 변동은 정치적<br>충성심에 기초함   | 1. 충원 / 상향 변동을 교육수준과<br>기술수준에 기초 |
| 2. 개인적 리더쉽                       | 2. 제도상의 리더쉽                      |
| 3. 조직에 대한 코미트먼트                  | 3. 이기적 동기                        |
| 4. 일반적 접근: 역할과 기능에 대한<br>특수지식 결여 | 4. 명확한 분업: 역할과 기능에 대한<br>특수지식 보유 |
| 5. 인간적 유대                        | 5. 기술상의 유대                       |

출처: John A. Kringen, "An Exploration of the 'Red-Expert' Issue in China through Content Analysis," *Asian Survey*, Vol.1, XV, No.8(August, 1975), p. 694.

配階級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中國과는 다른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北韓의 관료들을 이같이 양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金日成 유일체제라는 권력구조적 특수성 때문이다.

앞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관료는 국가체제가 정착되면서 국가나 지배계급의 利益을 위해서 奉仕하는 집단이 되어 간다.<sup>34)</sup> 예컨대 蘇聯의 노멘클라투라처럼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명령의 중개자로 전락하여 保守化한다. 이들은 자포자기적인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하여 사회 위에 군림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본래의 사명인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利益을 위한 자애적 관료가 아닌 支配者와 自身の 利益만을 위

34) 金光雄, "國家官僚의 政策理解," 韓國政治學會 編, 「現代韓國政治와 國家」(서울: 法文社, 1987), pp. 294-300.

한 관료집단이 되어, 제반가치를 排他的으로 享有하고, 不正과 腐敗를 日常化하는 성향을 띄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 기술관료들이 登場하게 된 背景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발전 초기에는 勞動力 動員에 의한 經濟發展을 시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成功을 하게 된다. 그러나 工業化가 進行됨에 따라 이념과 열정에만 의존하는 發展戰略은 限界를 드러내게 된다. 즉, 未來의 希望에 의한 現實의 克服은 虛構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인민의 物質的 慾求는 커진다. 인민의 의식이 外形的 發展에서 內形的 發展의 段階로 옮겨 감에 따라 指導者들은 이를 充足시키기 위해 혁명 1세대를 서서히 또는 急激히 退陣시키고 2-3세대 가운데 기술관료를 등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심화되면서 官僚體制가 形成이 되고 공산주의 理念보다 體制維持가 정권의 가장 중요한 目的이 되고, 目標보다는 手段이, 理想보다는 政治過程 자체가 重要視되는 世俗化가 진행된다.<sup>35)</sup>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아직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국가의 최고목표로 삼고 있는 北韓에서는 관료들이 어떻게 登用되었으며, 이들의 性向과 態度는 어떠한가를 分析해 본다. 이를 토대로 향후 金正日 政權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豫測해 본다.

北韓 정치권 내의 핵심지위는 여전히 理念(紅)을 重視하는 金日成, 오진우 등 革命 1세대들<sup>36)</sup>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老衰하여 소수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자리에서는 멀어

35) 鄭鍾旭, 「新中國論」(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2), pp. 92-93.

36) 徐鎮英, 「北韓權力變動 및 社會變化對備計劃 研究」(서울: 統一院, 1990), p. 118.

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회주의 발전의 완성이 천명되고 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 발전을 최고목표로 정한 1970년대에 와서는 金正日 이 등장했고 이와함께 黨과 政府의 중견지도층에 젊고 유능한 專門的인 技術官僚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계응태, 김영남, 김용순, 강석주, 리화선(당중앙위 조직지도부 부부장겸 2과장), 이 철(제네바 대사) 등이 그 대표자들이다.

1980년 6次黨大會를 기점으로 정치권력구조에 있어서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혁명2세대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당중앙위원회 위원의 56.6%와 후보위원 87.4%가 신진인물로 채워졌고, 정치국 정위원 19명 중 12명이 신진으로 충원되어 63.2%를 차지했으며, 당비서국 비서들은 10명 중 8명이 신진으로 채워져 80%를 나타냈다(<표 2-2-3>참조). 한편 당정치국은 혁명 1세대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기술관료와 신진세대들이 76%를 차지하게 되었다(<표 2-2-4>참조). 특히 후보위원으로 충원된 인물들은 거의 경제전문가 또는 실무자들로서 당중앙위원회의 등에서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당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들이다.

〈표 2-2-3〉 6次 黨大會 新進人物 登場 現況

| 구 분   | 당 중앙위원회 |      | 당 정치국 |      | 당 비서국 |
|-------|---------|------|-------|------|-------|
|       | 위 원     | 후보위원 | 위 원   | 후보위원 | 비 서   |
| 구성인원  | 145     | 103  | 19    | 15   | 10    |
| 신 진   | 82      | 90   | 12    | 13   | 8     |
| 비율(%) | 56.6    | 87.4 | 63.2  | 86.7 | 80    |

출처: 한용원, 「北韓연구」(서울: 박영사, 1989), p. 150.

〈표 2-2-4〉 黨 政治局 世代變化 趨勢

| 당대회<br>구분    | 5차 당대회<br>(15명) | 6차 당대회<br>(34명) | 1991년 현재<br>(25명) |
|--------------|-----------------|-----------------|-------------------|
| 혁명1세대        | 9 (60%)         | 11 (32.4%)      | 6(24%)            |
| 당·기술<br>관료세대 | 6 (40%)         | 13 (38.2%)      | 14(56%)           |
| 金正日세대        | 0 ( 0%)         | 10 (29.4%)      | 5(20%)            |

출처: 한용원, 위의 책, p. 151.

1986년 12월 第6期 12次 中央委員 全員會議에서는 정위원 15명 중 7명이 선출됨으로써 신진기술관료의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미 1986년 2월 勞動黨 中央委 第6期 第11次 全員會議에서 “...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명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 과학기술간부 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평가하여 주는 사업을 개선할 것”이 중점적으로 지적된 바가 있었다.<sup>37)</sup>

한편 〈표 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務院의 총리들은 1977년 제 2차 7개년 계획(77-84년)시작때부터 총리를 맡았던 이종옥 총리를 위시하여 이근모, 연형묵 등 經濟專門家들이 총리를 맡고, 부총리들도 공업·농업분야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各 分野의 전문가들이 最高位職까지 맡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北韓이 중공업에 우선을 둔 경공업·농업 同時 發展戰略을 樹立하면서 慈愛的 官僚로 등장한 자들로서 사회주의 發展 成功與否는

37) 「조선중앙년감(1987)」, p. 174.

〈표 2-2-5〉 總理 · 副總理 變動狀況

| 구분 \ 시기 | 1982. 4<br>(7기 내각) | 1986. 12<br>(8기 내각) | 1990.5<br>(9기 내각) |
|---------|--------------------|---------------------|-------------------|
| 총 리     | 이 종 욱              | 이 근 모               | 연 형 목             |
| 부 총 리   | 강 성 산              | 홍 성 남               | 김 영 남             |
|         | 계 응 태              | 김 영 남               | 최 영 립             |
|         | 허 담                | 김 복 신               | 홍 성 남             |
|         | 홍 성 봉              | 최 광                 | 김 복 신             |
|         | 홍 시 학              | 정 준 기               | 강 희 원             |
|         | 최 재 우              | 김 창 주               | 김 윤 혁             |
|         | 공 진 태              | 김 윤 혁               | 김 달 현             |
|         | 최 광                |                     | 김 환               |
|         | 김 창 주              |                     | 김 창 주             |
|         | 김 희 일              |                     | 장 철               |
|         | 김 두 영              |                     |                   |
|         | 김 복 신              |                     |                   |
|         | 정 준 기              |                     |                   |
|         | 부총리 13명            | 부총리 7명              | 부총리 10명           |

출처: 김남식, '北韓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통일원, 「통일문제연구」(1991년 봄호), p. 33.

우수한 기술자와 이들에 의한 기술발전水準에 左右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이미 既得權 勢力 내지 支配階級으로 登장을 했고 理念型 技術官僚로 성격이 변하여 權力의 侍女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이 權力의 上層部에 登용된 것은 金正日의 등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들의 성격을 일반적 으로나마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金正日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부류와

인물들의 면모를 살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金正日의 지지세력은 크게 1) 勞動黨 組織 2) 軍 組織 3) 만경대 革命學院 出身과 3대혁명소조출신 4) 친인척 등의 네 部類로 나뉘어 진다.<sup>38)</sup>

첫째, 勞動黨 組織은 金正日이 1973년 9월 勞動黨 宣傳·煽動擔當 秘書職을 맡으면서 접촉한 인물들로서, 오늘날 北韓 권력의 증추를 이루는 인물들이다. 이근모, 김중린, 김영남, 홍시학, 현무광, 김 환, 강성산, 서윤석, 전병호, 연형묵, 계응태 등이다.<sup>39)</sup> 둘째, 軍 組織은 오진우, 전문섭, 오백룡, 김철만, 오극렬, 백학림, 김두남, 리을설, 주도일, 김봉률, 김광진, 리두익 등이다. 셋째, 만경대 革命學院出身들로는 1989년 현재 당서열 50위 이내에 12명이 올라 있으며, 1990년 현재 黨中央委員會에 179명 중 29명, 黨軍事委員會에는 16명 중 8명, 黨中央委 政治局에는 25명 중 6명, 中央人民委員會에는 17명 중 5명, 國防委員會에는 11명 중 2명, 政務院에는 부장급이상 50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인물들로는 백학림, 김강환, 김두남, 윤기정, 김병률, 오극렬, 김 환, 박용석, 이재륜, 최문선, 김의순 등이 있다.<sup>40)</sup> 제6기 12차 黨中央委員會(1986.12)에서 정치국 정위원 18명 중 7명이 이들 출신으로 채워졌고, <표 2-2-6>과 <표 2-2-7>에서처럼 당 중앙위 비서국도 주로 金正日系列로 채워졌다.

넷째, 친인척들로는 친 여동생의 남편인 장성택을 비롯하여 김달현,

38) 서진영, 앞의 책, pp. 119-23.

39) 서대숙, 앞의 책, p. 246.

40) 도홍렬, “엘리트 형성과 순환,” 도홍렬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극 동문제연구소, 1990), p. 239.; 한헌준, “김정일은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가,” 「통일한국」(1990.2월호), p. 40.

〈표 2-2-6〉 黨 秘書局 成員 世代交替 現況

| 당대회              | 5차 당 대회<br>(10 명)                | 6차 당 대회<br>(10 명 )                              | 1991년 현재<br>(13 명)   |
|------------------|----------------------------------|---|--|
| 혁명<br>1세대        | 金日成, 최용건<br>김 일, 오진우<br>김동규, 한익수 | 김 일 성   | 김 일 성  |
| 당·기<br>술관료<br>세대 | 김영주, 김중린<br>현무광, 양형섭             | 金正日, 김중린, 김영남<br>김 환, 연형묵, 윤기복<br>홍시학, 황장엽, 박수동 | 金正日, 황장엽, 계응태<br>한성룡, 전병호, 서관희<br>허정숙, 최태복, 김용순<br>김중린, 윤기복, 박남기 |
| 비율               | 6 : 4                            | 1 : 9   | 1:12   |

출처: 서희수, 「北韓 권력엘리트구조의 변화에 관한 비교론적 연구」, p. 112의  
자료와 1990년 7월 현재의 통일원 발표 자료의 종합.

〈표 2-2-7〉 秘書局 變動狀況

| 1980. 10 | 1984. 2 | 1986.12 | 1990.12   |
|----------|---------|---------|-----------|
| 김 정 일    | 김 정 일   | 김 정 일   | 金正日(사업전반) |
| 김 중 린    | 허 담     | 허 담     | 계응태(공안)   |
| 김 영 남    | 현 무 광   | 김 환     | 한성룡(경제)   |
| 김 환      | 황 장 엽   | 황 장 엽   | 전병호(경제)   |
| 연 형 묵    | 허 정 숙   | 이 근 모   | 최태복(교육)   |
| 윤 기 복    | 서 관 희   | 계 응 태   | 박남기(경제)   |
| 홍 시 학    | 채 희 정   | 허 정 숙   | 서관희(농업)   |
| 황 장 엽    | 안 승 학   | 서 관 희   | 황장엽(사상)   |
| 박 수 동    | 김 용 순   | 채 희 정   | 김중린(사회단체) |
|          | 연 형 묵   | 박 남 기   | 허정숙(근로)   |
|          |         |         | 윤기복(대남)   |
|          |         |         | 김용순(국제)   |
| 9명       | 10명     | 10명     | 12명       |

출처 : 김남식, 앞의 글, p. 29.



김창주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장성택은 金正日의 분신으로서 金正日 못지 않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기 國家保衛部長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金正日系列의 專門官僚들은 대체로 北韓의 최고 엘리트 코스인 만경대 혁명학원을 나와 金日成 대학과 蘇·東歐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들로서 金日成 고급당학교를 거친 자들이다. 이들의 정책 스타일은 비교적 합리적이며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나고 金正日에 대한 충성심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대표자로서 연형묵(정무원 총리), 김용순(당 국제부장), 김영남(외교부장), 강성산(함북도당 책임비서겸 인민위원장), 김환(부총리), 오극렬(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윤기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연형묵, 강성산, 김환 등 3명은 온건파의 주역들이다.

대체로 이들 金正日 지지세력은 金正日뿐만 아니라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이 높아 登用된 자들로서 金日成-金正日 세습체제를 強化시켜 온 中心人物들로서 2중관료적 성격이 강한 集團이다. 自己利益的 官僚型과 權力의 侍女型이 結合된 官僚型이라고 볼 수 있다. 金日成 사후에 이들은 자기이익의 관점에서 행동할 것인 바 그 態度가 매우 流動的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 제9기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구성에서는 <표 2-2-8>에서 보는 것처럼 관리직, 교육자, 교수, 외교관, 언론인, 작가, 예술인 등 순수노동자·농민이 아닌 중간계층 기술집단이 2/3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당의 인텔리화 정책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농민들의 정

(표 2-2-8)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成分變化狀況

| 구분 \ 시기             | 7기(1982.4) | 8기(1986.12) | 9기(1990.5)                                |
|---------------------|------------|-------------|---|
| 대의원수                | 615명       | 655명        | 687명                                      |
| 노동자                 | 34.6%      | 36.4%       | 37.0%                                     |
| 협동농장원               | 10.2%      | 12.0%       | 10.4%                                     |
| 박사, 교수, 과학자,<br>기술자 | 49.4%      | (미발표)       | 64.5%                                     |
| 기 타                 | 5.8%       | 5.8%        | (미발표)                                     |
| 35세 이하              | 3.9%       | 2.7%        | 2.9%                                      |
| 36세-55세             | 71.2%      | 68.7%       | 56.8%                                     |
| 55세 이상              | 24.9%      | 28.6%       | 40.3%                                     |
| 대 줄                 | 50.4%      | 56.7%       | 68.2%                                     |
| 전문 줄                | 12.8%      | 19.1%       | 31.8%                                     |
| 중 줄                 | 36.8%      | 24.2%       | (중줄포함)                                    |
| 여성                  | 19.6%      | 21.1%       | 20.1%                                     |
| 비 고                 |            |             | ※ 사회민주당 7.4%<br>천도교청우당 3.2%<br>무 소 속 1.9% |

출처 : 김남식, 앞의 글, p. 35.

치적 참여기회가 적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산업화에 걸 맞는 인사정책을 시행하려는 변화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대의원들의 학력별 구성에서 대졸출신들의 비중(68.2%)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인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第9期 代議員들 중에는 혁명 1세대가 死亡·肅清 등으로 거의 등장치 못하고, 55세 이상의 대의원수가 증가된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金正日 지지집단의 자연적인 연령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사민당 7.4%, 청우당 3.2%, 무소속 1.9%가 당선되었는데, 비록 이들이 로동당 외곽단체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명분상으로나마 政治的 多元化的의 징조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30-50대들이 여전히 대의원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에 대한 지배자들의 정치적 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한편 北韓에서는 代議員의 交替가 매우 빈번한데,<sup>41)</sup> 각 지역의 '우리식 사회주의' 建設에 功勳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예우의 형식으로 대의원에 발탁, 체제의 지지자들로 만들기 위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北韓 指導集團의 人的構成에 있어서의 변화는 金日成 獨裁體制의 維持를 위해 理念에 忠實한 충성과 중심의 충원방식에도 불구하고 세대교체와 함께 현실적 필요 즉, 産業化를 效率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中間階層의 擴大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성향에 있어서 流動的인 集團의 增加를 意味하여 金日成 死後에 北韓 체제의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다. 理念官僚와 技術專門官僚의 性格

##### (1) 理念官僚로서의 革命世代

北韓은 조선로동당 중심의 '1黨 優位'<sup>42)</sup>의 국가로서, 프로레타리아

41)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연임자수는 양성철, 「북한정치론」(서울:박영사, 1991), p. 56 참조.

42) 형식적으로는 주석도 당의 지도를 받고 비판받아야 하나, 수령이라는 위치 때문에 항상 예외로 된다.

독재국가론에 입각하여, 공산당인 조선로동당이 모든 권력을 ‘틀어 쥐고’ 인민들의 삶을 규제해 나가고, 金日成의 主體思想에서 연유된 國家目標인 ‘우리식 사회주의’ 실현의 전위대 役割을 한다.

프리드리히(Friedrich)와 브르제진스키(Brzezinski)는 全體主義體制가 갖는 특징으로서 6가지<sup>43)</sup>를 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인 독재자에 의해서 영도되는 대중적 정당’이다. 北韓도 많은 異論이 있긴 하지만 全體主義體制에 해당하는 바, 계급정당인 노동당이 프로레타리아 獨裁國家를 이끌고 있다. 노동당은 수많은 政敵과의 鬪爭에서 勝利하여 당을 창립한 金日成을 中心으로 빨치산세대들이 主軸이 되어 사회주의 이념을 具現하기 위한 道具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당관료들은 자애적 관료임과 동시에 金日成 개인의 시녀였다고 볼 수 있다.

당을 움직이는 人的 要素는 레닌(Lenin)의 당이론에 입각하여 당원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充員이 되었다. 특히 1世代들은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을 지녔고 金日成의 路線을 충실히 따르며 혁명이념이 투철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학식, 기술, 경제적 경험 등은 거의 全無한 대신 국가에 대한 忠誠心과 發展에 대한 熱情, 道德的 良心, ‘우리’ 意識 등은 신진관료들보다 뛰어났다. 다만 초기의 발전과정에서는 革命精神과 熱情만으로도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

---

43) ①정교한 공식 이데올로기 ②1인 독재자에 의해서 영도되는 대중적 정당 ③공포의 체계 ④매스컴의 독점 ⑤군에 대한 독점 ⑥중앙집중적 통제경제 등이 그것이다.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56), p. 9.

었으나, 점차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닌 專門家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sup>44)</sup>

## (2) 專門官僚의 性向과 官僚主義

北韓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관료들의 인민집축의 기본으로 삼고 “모든 것을 인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강조하였다. 관료들은 3대혁명 소조운동 등을 통해 이를 具體的으로 實踐함으로써 北韓사회의 누구보다도 당이나 정부의 矛盾點을 잘 파악하고 있으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改革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무사안일과 保身에만 급급했다.<sup>45)</sup>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社會主義 社會의 建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념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부문이 증대되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데서 파생된 것이다.<sup>46)</sup> 물론 형식적 절차로는 기술관료들 중에서 귀속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이념성이 뛰어난 자들만 선택적으로 등용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모든 전문가들을 혁명의 목표와 ‘사회주의적 품성’을 확고히 갖추도록 할 수는 없었다. 金日成은 이러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專門家라는 職業意識에서 나오는 優越意識은 더욱 커

44) 김일성은 1976년 신년사를 통해 1970년에 49만 7천명이었던 기술요원이 1976년에는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동신문」, 1976.1.1.

45) 북한의 전직 외교관 고영환의 증언. 「서울신문」, 1991.10.2.

46) 1986년에는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과 정부기구인 중앙인민위원회와 2회에 걸쳐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중앙년감(1987)」, p. 179.

져 갔다.<sup>47)</sup>

1991년 5월 5일 金正日도 관료들의 세도문제를 아래와 같이 거론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에 걸쳐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세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새 사회건설의 첫날부터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官僚主義를 반대하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내세우는 문제를 당과 국가활동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적극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간부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일군들의 비중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 세우는 문제를 계속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sup>48)</sup>

金日成과 金正日是 이러한 문제를 解決기 위한 手段으로 ‘紅’과 ‘專’을 겸비한 ‘2重官僚’로 당관료를 충원 했는데, 정부규모의 비대화와 관료의 수적 증가는 ‘2重官僚’로서도 관료주의와 부패를 해결치 못하고 있다.<sup>49)</sup>

관료주의에 대한 문제는 金日成정권이 確立되었을 때부터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事案들인데,<sup>50)</sup> 그 폐해의 정도가 사회주의 건설 사

47) 북한의 사회안전부 고위관리였던 김정민(민족통일연구원 초청연구원)의 증언. 1991년 11월 21일 면담.

48)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p. 29.

49) 도홍렬, 앞의 글, pp. 246-47.

50) 「김일성저작집(9)」,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김일성은 1955년 4월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당 내에 있는 그릇된 사업작풍들을 반대하고 옳은 령도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부 일군들에게 남아있는 작풍상 주요한 결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료주의입니다…”고 비난하고 관료주의를 퇴치할 것을 강력히 제창했었다.

업의 확장과 더불어 생산구조와 유통구조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 대학입학, 여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고 構造的으로 퍼져 있다. 배타적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관료의 배후에는 소외당한 불만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8월 24일 日本 「産經新聞」의 報道에 의하면 약 800명의 노동자, 농민, 군인으로 구성된 ‘朝鮮人民自由同盟’ 반체제단체가 남포, 원산 신의주 등지에서 식량배급량 증대와 생활 개선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한 바가 있다고 한 여행자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하였다. 또한 루마니아의 구국 지도자인 브루칸 박사도 北韓노동당 중앙위원과 언론인으로 구성된 반체제세력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북한에도 抵抗勢力이 存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金日成 사후에 정치체제의 변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 3. 北韓의 軍部

#### 가. 北韓軍의 性格

헌팅톤(Huntington)에 의하면 後進國家의 軍隊는 體制改革的인 반면 發展된 國家일수록 體制擁護的이 되어 既存秩序에 순응하면서 中流階層으로 기능한다고 한다.<sup>51)</sup> 이러한 논거에 입각하여 北韓軍의 性

51)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閔俊基·裊成東 共譯, 「政治發展論」(서울: 乙酉文化社, 1971), pp. 275-88.

격을 고찰하고 金日成의 死前, 死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 北韓軍의 지도급들은 항일 빨치산운동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들은 정치적 混亂期에 金日成정권의 樹立에 決定的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혁명에 가담하였고 그 대가로 金日成의 1차내각에 김책, 최용건 등이 발탁되었다. 한국전쟁 후 이들은 體制改革에 獻身하였고, 金日成의 개인숭배주의를 배격하는 일부 軍지도급이 金日成에 의해 肅清당하거나 沒落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軍지도급은 金日成에 忠誠하는 자들로 채워졌다.

한편 南北分斷體制는 軍의 중요성을 더욱 增大시켰고, 金日成의 적극적인 軍優待政策으로 軍의 위상은 크게 증대되었다. 빈곤한 가정 출신들의 자제들이 軍에 입대함으로써 사회적 身分이 上昇되었고, 軍 출신은 취업과 대학진학에서 特惠를 받았다. 또한 <표 2-2-9>과 <표 2-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軍事費 增加와 높은 봉급수준 등으로 軍은 점점 保守化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軍은 人民의 軍隊이자 黨의 목표를 수행하는 黨의 軍隊로 看做된다. 그러나 北韓軍은 「우리식 사회주의」 建設의 첨

<표 2-2-9> 군사비 증가 추세

단위 : 억\$

| 년 도  | 금 액  | 년 도  | 금 액  |
|------|------|------|------|
| 1974 | 27.6 | 1986 | 45.8 |
| 1976 | 31.6 | 1989 | 52.8 |
| 1982 | 41.3 | 1990 | 54.4 |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1990)」, p. 117.



〈표 2-2-10〉 계층별 임금

| 직 종   | 임금(원)   | 직 종   | 임금(원)   |
|-------|---------|-------|---------|
| 당 부 장 | 300-350 | 교 수   | 200-250 |
| 기 사 장 | 150-200 | 장 성 급 | 250-490 |
| 중노동자  | 130     | 인민배우  | 200-300 |

출처 : 국토통일원, 『북한개요(1986)』, p. 91.

병으로서 당과 인민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軍隊<sup>52)</sup>로서 세습 정치체제를 擁護하는 세력이다. 나아가 ‘미제타도’와 ‘남조선해방’의 主力軍이기도 하다.

北韓의 黨-軍關係는 政治的 性格이 강한 一元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즉, 黨의 政治的 目標를 效率的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軍은 민간 부문에 수시로 介入함으로써 人民들과의 關係를 기본적으로 圓滿하게 維持하고 있다. 김영진교수는 조선인민군의 政治的 役割을 첫째, 政權의 正當性的 強化 둘째, 政治社會化의 代行者 셋째, 全體社會의 機動化 및 軍事化, 넷째, 노동당의 政治적 目的들을 實現키 위한 武裝된 道具, 다섯째, 政策決定過程에의 重要的 參與者로 規定하고 있다.<sup>53)</sup>

52) 『로동신문』, 1980. 4. 24 일자 사실. 여기에서는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군대이자 김일성동지의 군대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53) 金英鎭, “軍部の 政治的 役割,” 金俊燁, 스칼라피노 共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서울: 法文社), p. 93.

## 나. 世襲體制와 軍部

北韓軍의 役割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軍이 세습체제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이다. 즉 金日成 死後, 北韓軍部는 과연 어느 정도로 金正日에게 충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80년대 후반 이래 國際環境의 變化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은 붕괴와 변혁을 경험하였으나 그들 각국에서의 軍部の 역할에는 多樣性이 表出되었다. 예컨대 1989년 루마니아의 경우는 軍이 차우세스쿠의 逐出에 決定的인 역할을 한 반면, 中國에서는 ‘천안문사태’에서처럼 軍이 黨의 命숨에 따라 改革示威群衆들을 武力으로 鎮壓하였다. 한편 蘇聯에서는 1991년 8월 軍부와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 北韓의 軍部가 世襲體制 또는 金正日 體制 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하여 곧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金正日 體制의 成立過程에서 軍內部는 지지파와 반대파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인가 아닌가? 金日成의 死前 또는 死後, 북한이 군부 쿠데타를 통한 體制 變革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가를 예상해 봄으로써 軍에 의한 체제변혁의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1975년 黨 創建 30周年을 기념하는 논문에서 오진우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뜻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당 중앙이 제기하는 모든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며 최후까지 관철하고,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반대되는 어떠한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타협 없는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sup>54)</sup>고 말하여 金日成-金正日體制의 유지와 당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北韓軍의 政治的 位相을 명백히 했다. 또한 1980년 第6次 勞動黨大會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제46항에는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sup>54)</sup>라고 規定되어 있다.

한국전쟁을 치루고 난 後로 인민군은 戰爭 失敗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의 政治적 의도에서 발로된 ‘勝戰論’에 의해,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빨치산 출신들이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 시작했고, 국가발전 우선순위에서 군사부분이 1순위로 되었다. 1962년 12월 10-14일까지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全員會議에서는 “한손에는 총을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표어에 따라, 인민군은 전쟁만을 위한 군대가 아니고 社會主義建設의 勞動力으로도 봉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4大 군사로선’이 채택되었는데,<sup>55)</sup> 北韓군이 ‘우리식 사회주의’ 建設의 무장력으로서, 美國과 南韓을 저지하는 군사 능력을 갖추기 위한 지침이 되었다.

‘우리식 사회주의’ 建設의 장애인 美國과 南韓의 위협을 저지한다는 목표 하에 당이나 정부에 앞서서 군부가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1966년 勞動黨 第2次 代表者會議에서 빨치산 출신과 軍將星들 다수가 중앙위원으로 새로 임명되었다. 김광협, 김창봉, 최 현, 최용건, 김 일, 박금철, 이효순, 석 산, 허봉학, 오진우, 임춘추, 김동규 등이었는데,

---

54)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이다.” 「근로자」, 1975.10 월호.

55) 이상우 외, 「북한40년」, 앞의 책, 부록 중 〈3.조선로동당규약〉참조.

56) 「조선중앙년감(1963)」, pp. 157-62.

당연한 결과로 이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남조선을 해방키 위해 군사모험주의를 채택했다.<sup>57)</sup>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金正日의 後繼體系가 준비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군부에 대한 金正日의 지도권 확립문제가 대두되었다. 金正日是 1974년부터 3대혁명소조운동을 주도해 갔고, 1975년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전개해 갔는데, 이러한 운동을 군부대에까지 확산시켜 군의 기층부분과의 결속을 강화해 갔다. 軍隊에 대한 統制手段으로서의 官制運動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어느 정도 成功하였고, 1976년 이후로 매년 군의 주요 행사 때마다 이 운동을 찬양하고, 金日成과 당중앙을 중심으로 굳게 뭉칠 것을 호소하는 논문들이 고급 장성들에 의해 발표되었다.<sup>58)</sup>

1980년대에도 軍의 金日成-金正日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에 대한 충성의 맹세는 계속 되었는데, 오극렬은 인민군 창군 48주년 기념식에서 ‘主體思想’을 강조하고, “... 인민군 장병과 모든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을 더욱 철저히 다져 관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sup>59)</sup>고 말했다. 한편, 金日成은 軍士氣의 진작을 위하여 1982년 4월 5일 最高人民會議 제7기 1차회의에서 인민무력부를 정무원 산하로부터 중앙인민위원회 直屬으로 改編하였다. 또한 1985년 4월 13일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대장에서 차수로, 상장인 오극렬, 백학림, 김두남, 이을설, 주도일, 김봉을, 김광진, 이두익 등 8명을

57) 1968년 124군 부대에 의한 청와대습격 미수 사건, 미 정보함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등.

58) 「근로자」, 1976.11월호; 「로동신문」, 1977.12.1.

59) FBIS, Asia and Pasific, April 28, 1980.

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들은 오극렬을 제외하고는 60-70대의 항일유격대 출신들로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외에도 최 광은 1988년 인민군 총참모장에 복귀했고, 1990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 후인 12월에 당정치국 후보위원 서열 3위로 부상했다. 이들 혁명 1세대의 權力浮上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들로 하여금 蘇·東歐 變化的 충격을 완화시켜 金正日 登場과 함께 군부에 진출한 신진세력을 통제시키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군부내의 1세대들의 불만을 무마하여 金正日에 대한 지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金正日 登場 以後 신진세력에 밀린 구세대들은 불만을 품고, 일부는 中國으로 亡命하기도 했다.<sup>60)</sup> 셋째는 군부내에서 급부상한 오진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國防委員會의 副委員長으로 오진우와 함께 최 광을 임명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sup>61)</sup> 오늘날 北韓의 각종 선전 매체들이 金日成 세습체제에 대한 군부의 절대적 신임이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sup>62)</sup> 있는 것으로 볼 때, 金日成은 일단 군부의 소외감과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어, 군의 지

60) 1982년 7월말 「Newsweek」誌는 중국자료를 인용하여 김일성이 1982년 4월과 5월에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약 12명의 군장성을 숙청하였으며 이들은 중공으로 망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Korea Times>, October 3, 1982. 유석렬, “일탈:원인·유형·통제방법,” 유석렬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90), p. 7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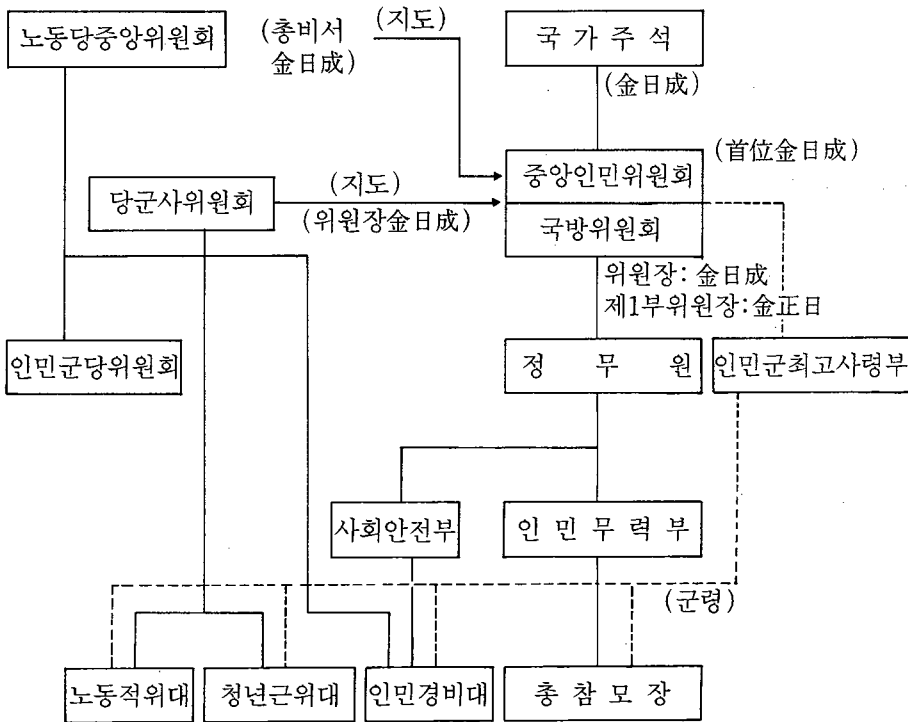
61) 차두현, “김정일 권력승계체제와 북한군부,” 「안보환경과 군사협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0), pp. 373-74.

62) 가장최근의 선전으로는 「로동신문」, 1991.10.18.〈사관장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철의 전투대대로 강화하자〉 이러한 행사는 역시 변화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오진우, 최광, 김봉률, 전문섭, 리봉원, 리병욱, 원명균 등이 참석,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日成은 金正日 體制의 成立過程에서 군부가 중대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을 알고 <표2-2-11>에서 보는 것처럼 軍을 인민무력부 외에 사회안전부와 당군사위원회 직속으로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한편, 金日成은 金正日이 軍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위를 공고히 해 줄 필요를 느껴, 1990년 5월 最高人民會議 제9기 第1차회의를 빌어 金正日을 國防委員會 第1副委員長으로 격상시켰고,

<표 2-2-11> 인민군을 움직이는 메카니즘



출처 : 이기택, “北韓의 군사정책과 정치”, 이기택 외, 「北韓군사정책론」(서울: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3), p. 22.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했다. 이로써 金正일은 정규군 및 사회안전부 산하의 모든 軍事組織에 대한 最高統帥權者가 된 것이다.

## II. 體制變化의 要因

위에서 分析한 북한정치체제의 特性은 첫째, 김일성의 絶對的 권력을 根幹으로 김정일 세습체제를 이루고 있으나, 김일성과 김정일 간에는 카리스마의 程度나 개인적 性格面에서 分명한 差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둘째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지탱하고 있는 官僚나 軍의 충성심은 매우 높으나, 김일성 死後에 이념관료와 기술관료간의 개발노선의 差異가 露呈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특히 장기간의 관료중심 체제에서 도출된 관료주의의 病弊가 深化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軍의 保守的 태도는 김일성의 死亡과 關係 없이 계속되리라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와 관련 ‘凍土의 王國’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를 促進하는 要因과 沮害하는 要因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促進 要因

### 가. 리더십의 交替

前述한 바와 같이 리비(Levy)는 카리스마 위임자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승계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인민들은 전임자와 후임자를 比較하여 후임자의 카리스마가 相對적으로 不足할 때 正當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強力한 카리스마에 의해 통치되어 온 金日成체제를 金正日이 金日成의 절대적 後見 下에서 조작된 카리스마만으로 金日成 사후에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면서 大部分 붕괴되고 말았다. 社會主義國家들에서는 <표 2-2-12>에서 보듯이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기에 많은 정치·경제적 변화를 경험해왔다. 독재지도자는 비슷한 理念과 政策路線을 가진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後繼者로 사전에 내정하여 사후에 자기를 격하시키지 않고, 理想을 連繫性있게 실천해 갈 수 있는 安全裝置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견인의 본래 의도와 달리 이러한 안전장치는 후임자가 전임자를 背信함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허물어졌다.<sup>63)</sup>

---

63) 공산국가에서 후계자로 지명 또는 내정되었던 11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許景九, 위의 책, pp. 5-6.



〈표 2-2-12〉 共產各國 改革者의 性向

| 국명     | 개혁자   | 대수 | 개혁내용           | 참고       |
|--------|-------|----|----------------|----------|
| ① 蘇 聯  | 레닌    | 1代 | 신경제정책(1921-)   | 被襲臥病死    |
|        | 후르시초프 | 4代 | 이윤제(1960년대)    | 실각(1964) |
|        | 고르바초프 | 8代 | 페레스트로이카(1985-) | 실각(1991) |
| ② 몽 고  | 오치바트  | 4代 | 페레스트로이카(1990-) | ?        |
| ③ 폴란드  | 야루젤스키 | 6代 | 급진개혁방지, 체제내적개혁 | ?        |
| ④ 헝가리  | 나지    | 3代 | 반소, 반공중립화 선언   | 실각(蘇聯군)  |
|        | 카다르   | 4代 | 삼자공존, 시장제도입    | 실각       |
| ⑤ 체코   | 두브체크  | 3代 | 자유선언(급진주의)     | 실각(蘇聯군)  |
| ⑥ 루마니아 | 차우세스쿠 | 2代 | ×              | 처형       |
| ⑦ 불가리아 | 쥐프코프  | 3代 | ×              | 실각       |
| ⑧ 東 獨  | 호네커   | 2代 | 동서독공존합의        | 실각       |
| ⑨ 유고   | 티토    | 1代 | 자주관리·비동맹       | 자연사      |
| ⑩ 알바니아 | 알리아   | 2代 | 체제내적 개혁 시도     | ?        |
| ⑪ 베트남  | 구엔반딘  | 3代 | 체제내적 개혁 시도     | ?        |
| ⑫ 쿠바   | 카스트로  | 1代 | ×              | ?        |
| ⑬ 中 國  | 덩소평   | 3代 | 정경분리 개혁        | ?        |
| ⑭ 北 韓  | 김일성   | 1代 | ×              | ?        |

출처 : 박일성, “북한체제관리의 한계성과 개혁모형,” 통일원, 「북한체제관리의 한계성과 개혁모형연구」(통일원:1990), p. 53.

金日成은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부자세습체제’를 20여년 간이나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다르다. 그러나, 권력계승의 주된 힘이 金日成의 강력한 카리스마라는 점이 오히려 金正日의 권력을 脆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리비의 이론을 빌리지 않는다 해도, 金正日是 金日成과 달리 그의 정치적 위치의 확보 과정이 비교적 순탄했으며 그의 성격 자체가 即興的이고,

初志一貫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對內·外的 葛藤을 스스로 처리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즉, 그는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戰後 世代로서 危機管理 능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軍, 官僚 및 人民들로부터의 挑戰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金正日이 權力을 承繼하게 되면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더 개혁·개방적인 정책을 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치체제의 개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 나. 技術專門官僚들의 登場과 官僚主義

이념관료들과는 달리 기술관료들은 전문적 분야에서의 병폐와 비리에 대한 正確한 診斷이 確立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 단지 관료들의 속성상 체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정치권력에 대해 정면으로 挑戰하기보다는 체제에 順應하면서 지배계급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奉仕하는 시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변혁기에는 의식의 존재구속성에 따라 體制改革的인 태도를 보인다. 관료체제는 일단 형성되면 응집력이 강하여 解體시키기가 어려우며 가능한 한 집단적 이익을 옹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體制維持의 주축이었던 金日成체제 하에서의 관료들이 金正日체제에서는 體制의 改革勢力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관료자신들도 체제 變革의 原因을 제공할 수 있다. 브린톤(Brinton)도 지적했듯이 관료에 대한 특혜와 부패는 혁명의 근원이 된

다. 사회주의적 독재국가의 관료들은 일단 黨이나 政府의 관료가 되면 많은 權益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官僚로 진출키 위하여 獻身的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일단 기득권을 획득한 관료는 適當主義와 形式主義를 屬性으로 하는 관료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이들은 업무결과를 虛僞로 報告하거나 責任을 回避하고 昇進·轉職을 위한 賂物授受를 자행한다.

北韓의 官僚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의 創意性 不足과 專門技術의 缺乏은 생산성을 저하시켜 북한사회를 慢性的인 物資不足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를극복하기 위해 인민들에게는 ‘사상적토대’의 강화라는 명목으로 인내를 강요하고 南韓의 經濟沈滯를 誇張되게 宣傳하여 상대적 優越感을 느끼도록 해 사실을 隱蔽하였으며, 情報 및 社會 統制를 통해 정상적 判斷機能을 상실케하여 一次元的인 人間으로 만들어 버렸다.

북한은 관료계층이 197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되어 관료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관료들의 세력화문제, 부패문제는 政治體制의 變化要因으로까지 등장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념관료들과는 달리 기술관료들은 일단 지위를 점유하면 자기이익적 관료로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金日成·金正日도 관료주의를 퇴치하기 위해 관료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지만 인민들의 不滿은 점증하고 있다. 만일 북한 지도자들이 官僚들의 腐敗와 無事安逸을 치유키 위해 적절한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민들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 蘇聯이나 東歐와 같은 舊사회주의국가의 운명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 다. 蘇聯 및 東歐社會主義 國家의 變化

蘇聯의 경우 1985년 등장한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 政策이 시작된 이래 소연방이 해체되고 공산당이 해체되는 등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이제 엘친의 러시아 공화국이 주도하는 독립국가연합(CIS)의 構成國들은 急進的인 改革을 추진하고 있으며 內部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서방국가들의 支援을 필요로 하고 있다. 蘇聯은 사라졌으며 舊소련의 구성國들은 자본주의국가의 정치체제를 비롯한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수용하기 위한 陣痛을 겪고 있다.

東歐國家들의 내재적 모순은 1953년 동독의 자유화 운동에서 표출되기 시작하여, 스탈린 死亡 후 1956년에 열린 蘇聯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의 ‘스탈린 비판’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즉 1956년 폴란드의 ‘포즈난’ 시위사태를 위시한 자유화 운동, 헝가리의 탈소·민주화운동 등이 일어났으나 이들은 모두 蘇聯의 무력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또한 195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를 필두로 시작한 경제개혁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들의 脫스탈린화노선 채택을 계기로 자본주의적 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導入하면서 확대되어 나갔다.

폴란드에서는 그 동안 자유화 실현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온 자유노조는 1989년 초반 정부 당국과 정치·경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의회민주주의의 실천에 합의하고, 자유노조의 합법화, 의회 및 선거제도의 변경, 大統領制의 신설, 시장경제원리의 확대 실시를 겨냥한 사기업의 육성과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

한 정부 보조금 지급의 철폐 등을 施行하기로 하였다. 또한 1989년 6월 비공산당 후보의 출마가 허용된 가운데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유노조가 공산당에 압승함으로써 東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最初로 非共産黨 政府의 出現을 보게 되었다.

헝가리의 경우도 1956년 蘇聯의 무력개입에 의해 脫蘇 자유화 운동이 좌절된 이후 정치보다는 경제부문에서 漸進的으로 改革措置를 推進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1968년 이후 헝가리는 계획경제 체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대폭적으로 도입하는 헝가리형 혼합체제(NEM)를 통해 경제개혁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서방국가들과도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였다. 1985년 선거 때부터 複數候補制가 시험적으로 채택되었고, 1988년 5월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카다르 서기장은 물러나고 개혁파인 그로스가 서기장이 되었다. 그로스는 協同組合的 所有를 創設하고 私的 所有를 허용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소유제도의 개혁을 단행한 데 이어 당의 명칭을 헝가리 사회당으로 개칭하면서 “국가사회주의와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의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복수정당제의 도입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포기를 비롯하여, 경제운영의 중앙집권주의의 배격과 사회주의적 국유기업, 조합기업 노동자의 주식제에 토대를 둔 다양한 소유형태 및 이에 기초한 혁신적인 기업민주주의 풍토의 정착 등의 개혁을 시도했다.

또한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민주화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만 해도 잠잠하던 동독에서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 東獨 국민들의 대탈출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 사건 후에 강경보수파인 에릭

호네커는 퇴진하고, 크렌츠가 등장하였다. 이어 1989년 11월 9일에는 냉전시대의 상징인 동서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고, 결국 獨逸의 統一이라는 세계사적인 대변혁이 일어났다. 東歐 사회주의국가들 중에서 경제발전의 수준이 가장 앞서 있던 동독에서의 민주화 요구는 단순히 經濟的 次元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 體制의 全般에 걸쳐 있는 自由와 民主의 결핍에서 오는 자유화의 도미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在野團體인 ‘시민포럼’을 중심으로 기존질서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示威가 시작되었다. 체코 공산당은 1968년의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침공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체코의 지방정부의 하나인 체코공화국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여 체코공화국이 비공산당계에 의한 聯立政府의 樹立을 承認하는 등의 變化를 보였다. 이외에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와 같은 보수주의 국가들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루마니아 철권 통치자인 차우셰스쿠가 1989년 12월 25일에 처형됨으로써 東歐의 민주화는 절정에 달했다.

東歐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에 대한 여러가지의 학문적 논란과 설명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東歐圈 변화와는 달리 經濟構造의 改革뿐만 아니라, 政治的 改革과 教條的인 理念으로부터의 解放을 동시에 수반하는 全面的 改革의 樣相을 띠었다는 점이다. 둘째, 개혁의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밑으로부터의 組織的인 改革의 要求가 체제변화를 主導해 나갔고, 각종 재야단체가 정치협상의 주역으로 부각되었다는 점

이다.

또한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했다. 첫째는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蘇聯의 국내외 정책이 개혁과 개방노선에 입각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1988년 3월 18일부터 5일간 유고를 방문하여 소위 '신베오그라드 선언'을 發表하여 東歐 國家들의 自主路線을 허용하였고 1989년 7월 8일의 바르샤바기구 정상회담 후 발표된 합의문에서도 동맹국들의 국내문제에 관한 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결국 東歐 국가들이 국내외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둘째는 美·蘇간, 東·西간의 활발한 관계개선과 협력관계의 증진으로 東歐 국가들이 理念보다는 國家利益 中心의 實用主義的 接近 態度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東歐의 변혁은 美國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외교적 지원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셋째, 東歐 국가들 내에는 아래로부터 개혁과 개방을 이끌고 가는 民間團體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헝가리의 '민주광장', 폴란드의 '자유노조', 동독의 '노이에스 포름', 체코의 '77헌장 그룹'과 같은 재야단체들이 변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北韓의 政治體制는 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의 政治體制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 사실이야 어떻든 北韓은 對外的 葛藤 要因들과의 처절한 투쟁을 해왔고, 그 결과로 극도의 폐쇄체제를 유지하여 東歐와는 달리 인민들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둘째, 북한은 '살아 있는 神'인 金日成이 존재하고 있고, 더구나 유교적 전

통의 유지 속에서 民主主義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統治對象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資本主義화된 인텔리겐차들은 이미 죽거나 南韓으로 피난 가버려 人間的 變動要因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sup>64)</sup> 셋째, 시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재야단체들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 兄弟國이었던 蘇·東歐 國家들의 變化(〈표 2-2-13〉 참조)는 北韓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은 蘇·東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제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취약성인 정치·경제적 경직성은 같은 이념을 수용하고 있는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기술관료들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金日成 死後에 개혁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北韓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모순을 이미 극복한 ‘完全한 眞理’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主體思想의 實踐的 側面的 진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모범적으로 主

〈표 2-2-13〉 社會主義 國家들의 變化

|         |     |     |     |     |      |     |      |
|---------|-----|-----|-----|-----|------|-----|------|
|         | 蘇 聯 | 헝가리 | 폴란드 | 유 고 | 알바니아 | 체 코 | 루마니아 |
| 정 치     | 다당제 | 다당제 | 다당제 | 다당제 | 다당제  | 다당제 | 다당제  |
| 경 제     | 시 장 | 시 장 | 시 장 | 시 장 | 준시장  | 시 장 | 시 장  |
| 외 교     | 개 방 | 개 방 | 개 방 | 개 방 | 개 방  | 개 방 | 개 방  |
| 한국과의 관계 | 수 교 | 수 교 | 수 교 | 수 교 | 수 교  | 수 교 | 수 교  |

출처 : 國際民間經濟協議會, 「北方國家便覽」, 1991. 9.에서 綜合.

64) 朴漢植·許東燦, 「金日成 이후의 北韓」(서울: 國土統一院, 1990), pp. 6-7.



體思想을 실천해야 할 지배계층의 腐敗와 懶怠는 主體思想의 비진리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라. 南韓의 對北政策 變化

南韓도 北韓과 마찬가지로 韓半島 내에서의 명실상부한 유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한때는 북한을 '傀儡'로 지칭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었고, 國內·外的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기도했다. 이러한 대결은 양국의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獨裁를 낳게 했고, 남한의 개발독재와 북한의 김일성 유일체제라는 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다. 쌍방 모두 이러한 강압체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한 것은 사실이었다.

第6共和國 政府는 국내적인 민주화 진전과 함께 舊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향적인 '북방외교'를 펼쳐, 사회주의 宗主國이던 蘇聯을 비롯해 東歐 國家들과 國交를 수립하였다(〈표 2-2-13〉 참조). 이를 발판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과감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7·7선언」을 발표하여, 外交的으로는 북한에 대한 거의 완전한 문호개방을 실시하였다.

北韓은 그동안 南韓을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여, 政府 뿐만 아니라 國家 自體로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韓半島內에서 그 存在 自體를 소멸시켜 버리기 위하여 '조선반도의 주체사상화'를 국시로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제 南韓의 전향적인 對北政策으로 인해

南韓을 新植民主義的 反統一國家로만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南韓 내의 혁명역량도 그만큼 약화되어 있어서, 南韓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1991년 12월 13일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sup>65)</sup>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의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변화의 조짐으로 보여지고, 향후 실질적인 합의 사항들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 2. 抑制要因

### 가. 主體思想의 強化

主體思想은 북한사회를 統制하는 中心價値體系로서 인민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이를 어기거나 지키지 못했을 경우 죄의식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北韓은 蘇·東歐의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차단하고, 사상적 토대의 강화를 위한 思想·教養事業에 주력하고 있다. 金日成은 수차례 걸쳐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고, 金正日도 1991년 5월 5일 黨 책임일군들의 모임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主體思想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표

---

65) 이 합의서의 내용은 서문과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등 4장 25조로 구성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991년 12월 13일자 각 일간지 참조.

명했다.

金正日은 또한 1991년 8월 26일 ‘첫 청년절 즈음 전국청년 및 사로청 일군들에게 보내는 金正日의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내부단속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나라를 내부적으로부터 분열 와해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 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유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썩어 빠진 부르조아적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여 그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sup>66)</sup>

金正日은 1989년 9월 20일 「우리민족 제일주의론」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첫째, 남의 것을 올려 보거나 본뜨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둘째, 黨員들과 勤勞人民大衆은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갖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主體思想의 實踐要綱이기도 한 이 내용은 각 인민반장과 군 정치지도원들을 통해 학생들과 군인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1991년 10월 28일자 「로동신문」사설에서는 벌써부터 金日成의 80회 생일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1982년 이후로 北韓이 「로동신문」사설을 통해 主體思想을 강조해 온 횟수는 <표 2-2-14>에서와 같이 증가해 왔다. 이는 金日

66) 「로동신문」, 1991.8.26.

成·金正日을 위시한 지배계급들이 체제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물론 金正日이 승계체제를 확실히 굳히게 되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穩健改革派의 테크노크라트, 官僚들의 建議과 經濟開發에 의한 정통성 확보의 필요성 등의 理由로 名分과 實利를 동시에 추구하고 더 나아가 ‘주체사상’을 ‘실정에 맞게’ 수정, 적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徵候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나. 軍部の 保守的 態度

北韓軍은 앞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최고지도자인 金日成을 비롯하여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총참모장 최광등의 빨치산 출신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이들은 北韓政權의 政治的 正統性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항일 빨치산운동에 대한 긍지와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억지로 북한 내의 어떤 다른 집단들보다도 金日成과 국가에 대한 忠誠心이 높고, ‘美帝’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 북한군은 당의 군대이자 金日成-金正日의 군대로서 부자 世襲체제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

〈표 2-2-14〉 主體思想에 대한 노동신문 사실 횟수

|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로 동<br>신 문<br>분 석 | 29   | 35   | 42   | 48   | 42   | 54   | 62   | 63   |

출처 :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 대비계획 연구」(통일원, 1990), p.

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北韓처럼 兵營國家化된 체제에서는 군의 對外的 葛藤에 대한 태도는 향후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군은 수차례 걸쳐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화에 따른 일체의 동요가 없을 것임을 천명했고, 당의 군대로서 ‘金日成-金正日의 主體思想’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다만 金正日의 등장 이래 軍內部에는 蘇聯 등지에서 留學을 했던 신진그룹들의 존재가 잠재적으로 변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군부의 주축세력이 혁명 1세대들이며, 이들은 신진그룹에 의한 변화의 촉진요인을 견제하고 蘇·東歐의 변화를 경계하면서 체제수호의 의지를 굳히고 있다.

결국 短期的으로 군의 쿠데타에 의한 정치체제 또는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에 변화를 시도하는 세력이 집단적 시위를 일으킬 경우,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서와 같이 군부가 體制守護를 위하여 鎮壓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 死後에 絶對的 指導者가 사라짐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政治的 空白期에 군부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현재의 軍部는 노간부와 청년장교와의 원만한 관계, 體制維持的 屬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별 무리없이 金正日을 支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과 같은 狀況이 展開될 때에는 例外일 수도 있다. 첫째로 金正日이 革命傳統을 무시하고 급격한 개혁을 시도할 경우, 둘째로 잠재되어 있던 청년장교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이다. 셋째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金日成의 동생 김영주의 추종자들이나, 金日成의 현

재의 妻인 김성애 계열의 장교들이 聯合하여 勢力을 형성했을 경우이다.

#### 다. 蘇·東歐 變化의 教訓

최근의 蘇·東歐의 變化는 북한을 더욱 고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의 體制가 崩壞되는 過程을 지켜 본 북한의 支配層은 반성하기보다는 사상교육, 社會統制 등을 통하여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지배층은 蘇·東歐式 開放이 체제붕괴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을 教訓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개혁·개방 정책과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조화시키고 있는 中國式 모델을 모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東歐의 붕괴원인이 각종 매스 미디어의 개방에 있다고 보고, 더욱 철저한 情報媒體統制와 住民들의 移動統制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차우세스쿠의 비극적 죽음과 蘇聯에서의 레닌동상 파괴, 호네커의 蘇聯 도피 등의 일련의 사태들은 金日成·金正日과 支配 官僚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부분적인 경제개방을 시도하면서도 내부체제를 더욱 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政治體制의 維持를 위한 개혁과 개방이 오히려 정치체제는 물론 體制自體를 崩壞시킬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 라. 中國과의 友好的 關係

蘇·東歐 사회주의국가들의 '背信'으로 북한은 이념·정치·경제적 지원국가로서 中國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중·소 양다리 외교를 펴 오면서도, 中國에 대한 相對的 偏向性을 유지해 왔고, 양국은 공히 '脣齒之間'임을 확인해 왔다. 金日成은 개인적으로도 빨치산 1세대라는 同質性에 의해 등소평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한 中國군의 사단장급 이상의 간부들 중 대부분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中國軍部도 북한에 대한 同志的 유대감이 높다.

이러한 관계로 북한은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당시 中國지도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고, 中國도 補償的 次元에서 세습체제에 대해 묵인을 해 왔고, 1991년 8월 31일자 「人民日報」는 金正日에 관한 기사를 실어 주어 사실상 後繼者로 認定하였다. 中國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에 대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和平演變'전술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結束強化를 주장해 온데다,<sup>67)</sup> 북한의 붕괴에 의한 資本主義式 統一은 그들의 안보를 위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실례로서 中國은 1991년 10월 金日成이 방문하여 요청한 원조 분야 중 식량, 석유, 석탄 등을 각각 100만톤씩 支援하기로 約束하였고,<sup>68)</sup> 이것은 金日成-金正日の 체제고수 路線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67) 鄧小平, "계엄군 지휘관 집견에서 행한 연설," 「人民日報」, 1989.6.2.

68) 「産經新聞」, 1991.11.27.

보인다.

### Ⅲ. 變化의 展望

여기에서는 위에서 導出한 變化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논거로 향후 북한 정치체제의 變化를 展望해 보려 한다. 크게 김일성 死亡 以前과 死亡 以後로 區分하여 전망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북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는 김일성이기 때문이다.

#### 1. 金日成 死亡 以前

##### 가. 權力移讓 問題

金正日是 이미 당·정·군 및 외교 부문에서 實質的인 統治權을 行使해 오고 있다. 즉, 權力의 승계체제는 정비되어 있으며 남은 것은 앞으로 어느 時期에 어떤 직책이 金日成으로부터 金正日에게 넘어 갈 것인가의 문제 뿐이다.

1992년은 김일성이 80회, 김정일이 50회 생일을 맞는 해이므로 그 동안의 역사적 관행으로 보아, 政治的 象徵造作이 매우 深化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最高사령관職이라는 權力의 移讓이 초헌법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의 합법화를 위해 最高인민회의를 통한 主席職 移讓이 후속조치로서 進行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美軍 核撤收와 1992년도 팀스피리트 訓練의 中止措置는 김일성의 일관된 정치적 목표였던 바, 이러한 문제의 解決은 김정일에 대한 법적·제도적 권력이양의 名分을 提供해 주어, 예상보다 急激한 速度로 권력이양이 進行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김일성의 肉體的 限界와도 有關한 것으로 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예방키 위한 예방조치로서 김정일의 실질적 통치수업기간의 충분한 확보가 고려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 頂上會談에 대비하여, 김정일로 하여금 이 회담에 임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김정일이 主席職을 承繼받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받을 경우 그 후속조치로서 김일성을 위해 名譽主席職을 신설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하거나, 혁명 1세대들을 위한 國家元老會議 등과 같은 權力機構를 신설할 가능성도 있다.

## 나. 政治體制의 多元化 問題

### (1) 概 要

金日成이 生存해 있는 기간 동안은 그들의 內在的 論理에 입각한 現狀維持政策과 빨치산식 '2重政策'을 통한 상황타개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金日成은 빨치산 시절에 생사의 기로에서도 살아 남았고, 6·25때도 국가패망 직전에 중공의 동지애적 지원으로 살아 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해 왔으므로 '결코 패배는 없다'는 사고방식이 生成되어 있다. 蘇·東歐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必勝不敗를 내세우면서 수령-당-인민이 하나가 될 것을 계속 強調하고, 힘의 優位만이 平和를 보장해 준다는 金日成의 논리에 따라 각종 在來式 武器의 增強과 軍人들에 대한 優待政策을 지속시킬 것이다.

金日成은 그의 독특한 카리스마인 對外的 葛藤을 이용하여 國民的 統合을 실시해 가는 방법을 향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한편,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조하고, 정보통제와 사회적 이동의 封鎖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령과 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黨·政合同會議를 활성화시켜 技術官僚의 立地를 높여주면서 경제의 침체에 대한 책임을 지워 경제각료들을 교체하고,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2년간의 국가사업 전반을 종합평가하게 될 1993년 7차 당대회에서는 官僚主義的 事業作風을 지닌 당·정 관료들을 퇴진시키고, 젊고 유능하면서 理念과 技術을 겸비한 ‘2중관료’들을 補強할 것이다. 이것은 金正日의 카리스마를 강화 시켜주는 효과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므로 金正日세대와 측근들이 더욱 補強될 것으로 예측된다.

## (2) 多黨制의 導入 與否

1972년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主體思想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북한은 철저한 1당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을 만들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당선시켜 多黨制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럼 偽裝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根本的인 役割은 노동당 규약 제9장 5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당의 외곽 조직’으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일 뿐이다. 이들은 ‘온 사회의 主體思想화를 위한 통일전선’사업에만 이용될 뿐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인민들의 多樣한 利益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金日成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일당우위의 통치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 (3) 政策決定過程의 多元化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은 形式的으로는 ‘민주적 집중주의’를 채택하여 논의만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헌법 제9조에 “...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實質的으로는 金日成과 당중앙위원회 決定을 ‘절대 복종’(당 규약 제2장 11조 2항)하도록 되어 있다. 각급 기관에는 당세포와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모든 事業의 企劃, 執行, 評價를 총괄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이버 민주주의인 민주적 집중주의마저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물론 기술관료들이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정책을 바꿀 만큼 意識化되어 있지는 못하고,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黨內 民主主義 문제도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오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만 強調되고 있다.<sup>69)</sup>

69) 1991년 5월 5일 金正日의 담화 참조.

관료들의 속성상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金日成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키 어려우며, 결국 金日成 시대에는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나 당내 민주화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 (4) 權力의 分散

북한은 憲法 構造上으로는 三權이 分立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이자 ‘립법권’을 갖고 있으며,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이고, 정무원은 ‘국가주권의 최고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裁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일적 체계를 이루워 중앙인민위원회는 사실상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세우고’, ‘정무원과 지방인민 위원회를 지도’하며, ‘사법, 검찰기관사업을 지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는 ‘주석’이고, 그는 ‘수령’인 金日成이다. 곧 모든 權限은 金日成에게 集中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주석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權限은 ‘神權’에 가깝다.

이러한 絶對權은 북한이 안고 있는 總體的 危機가 解決되지 않는 한 分化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金日成과 같은 절대권력자는 權力分散이 混亂과 滅亡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단순논리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

### (5) 軍의 中立化

북한군은 노동당규약 제7장 46조에 규정된 바대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군은 정권이 創立된 이후로 金日成과 黨의 目標을 충실히 實踐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해 왔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예산, 인력, 정보, 장비, 사회적 충원 등에서 最高의 待遇를 받아 왔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군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黨派性을 띄지 않을 수 없지만 특히 북한군은 金日成의 私兵化 現狀이 심하고, 사로청, 3대혁명소조 등 社會組織이 침투되어 있어 黨·軍關係가 密接하여 정치적 영향을 쉽게 받는다. 정부기구인 국방위원회나, 당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에 現役 장성들이 地位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군은 金日成 金正日 세습체제를 강력히 支持하고 있고, 보수화경향이 심해 체제도전세력이 되지 못한다. 金日成은 군의 이러한 屬性을 利用하여 체제유지의 전위대로 活用하려 할 것이므로, 군의 政治的 中立 내지는 반대파로의 변질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 (6) 社會集團의 自律化

북한에는 「여맹」, 「사로청」, 「직총」, 「농근맹」, 「문예총」 등 수많은 사회단체(외곽단체)들이 있다. 이들을 로동당 외곽단체라고 부르는 바, 그 이유는 ‘당의 외곽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충실한 보조자’이기 때문이다. 金日成은 “복숭아씨를 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붙은 살은 외곽단체”라고 비유하여 그 重要性을 強調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노동당의 指導下에 통일전선사업과 인민들에

대한 과도, 각종 선전선동대회에의 동원, 사회주의건설사업 등을 실시하여 金日成의 권력을 기층으로부터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직업의 이익을 위해 로비나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는 資本主義 社會와는 달리 이들은 세습체제나 다원주의 사회처럼 위장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合理化 器材로 사용된다. 金日成은 各種 人爲的인 사회집단을 이용한 政權強化 政策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대외관계가 어려울수록 이것들을 전면에 내세워 대남·대외 통일전선전략의 수단으로 使用할 것이다.

## 2. 金日成 死亡 以後

### 가. 權力構造 시나리오

金日成의 사망은 크게 자연사와 타살로 구분해<sup>70)</sup> 볼 수가 있겠다. 먼저 타살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쿠데타나 인민봉기 및 외부의 암살 등으로 나누워 볼 수 있는데, 金日成의 절대성정도에 비추어 보아 쿠데타나 인민봉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내에 反體制 勢力들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정도는 세력화하여 集團的이고 組織的인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外部勢力에 의한 암살의 가능성도 북한과 같은 통제체제 하에서는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군사적 공격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갈등기능주의에 입각하여 閉鎖體制를 強化시켜주는

70) 박한식·허동찬, 앞의 책, p. 8.

명분만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다음으로 自然死인 바,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일반적 전망으로는 金日成의 향후 수명은 5-10년인데, 이러한 전망에 근거한다면 자연스런 權力移讓은 1996년에서 2001년 사이가 된다. 여기서 金日成이 자연사할 경우 金日成이 死亡以前에 20여년 동안 준비해 온 대로 金正日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기에서는 몇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것은 金正日의 승계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相反된 見解 때문이다.

첫째, 安定的 承繼論이다. 金日成은 주석직을 비롯한 모든 권력을 김정일에게 合法的으로 이양하여 권력승계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혹시 약간의 反撥이 있을지라도 金日成은 승계확정 후에 20여년간의 準備期間을 통해 당-정-군에 걸쳐 광범위한 金正日의 지지기반을 確立해 놓았고, 金正日 또한 1970년대 이후 꾸준히 各分野에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金日成대학 동문, 3대혁명소조원 출신, 친인척 등을 登用해 놓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崩壞論이다. 金日成이 死亡하면 金日성장례위원장 선임문제부터 권력투쟁이 표면화되어, 장례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과 장례는 무사히 치루지만 金日成 사후 특별대책위원회(가칭) 비밀회의에서 金正日을 逐出하고 새로운 인물이 實權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거는 그동안의 세습체제에 대한 인정과 충성은 金日成으로부터 緣由된 것일 뿐으로 金正日과는 關聯이 없다는 것이다. 金正日카리스마는 ‘조작’된 ‘허위의식’으로서 金日成이라는 ‘實像’이 사

라짐으로서 ‘虛像’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고찰해 본 것처럼 실재로 金正日의 카리스마는 위로부터 강압적으로 조작되어진 부분이 많아 金日成 사후에 실질적 기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매우 강하다.

이러한 두가지의 相反된 主張에 따라 4가지의 시나리오, 즉 世襲에 의한 金正日 唯一體制, 당-정-군 集團指導體制, 쿠데타에 의한 軍事體制, 革命에 의한 多元主義 體制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첫번째의 시나리오가 有力하다.

#### 나. 시나리오別 變化展望

##### (1) 世襲에 의한 金正日 唯一體制

###### (가) 개 요

단기적으로는 金正日是 金日成式으로 1인 우위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징조작을 통해 카리스마를 강화해 갈 것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金日成 復活說’과 같은 상징조작을 통해 ‘首弟子’로서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복종을 강요할 것이다. 그는 초기에 공포정치를 실시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혁명 1세대 또는 잠재적 반항자들을 사대주의자, 수정주의자, 부르조아적 사교의 소유자 등 각종 죄목으로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黨·政·軍의 관료들을 정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조하면서 社會統制는 金日成 시대보다 더욱 強化할 것이다. 카리스마의 취약성에서 발로된 불안감은 사



회심리적으로 부하와 동료에 대한 불신감정으로 변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지도 모르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南韓과의 戰爭도 감행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政治的 통제는 계속되어질 것이나 이러한 통제체제가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침체와 인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불안을 느낀 金正日을 비롯한 당·정 관료들은 政治的 改革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고, 현재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변형시켜 형식적 다당제를 인정하고 건전한 야당을 육성하여 1과 1/2 정당정치를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개혁이 기초가 되어 결국에는 政治的 多元主義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 (나) 多黨制 수용여부

金正日是 당의 統治經驗이 많은 자로서 북한 내의 問題點을 잘 認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노동당의 人的·制度的 改革을 통해 당의 관료주의나 병폐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 등 親政府的 정당을 活性化시켜, 形式的 다당제를 고수할 것이나, 점진적으로는 건전한 野黨을 育成하여 1과 1/2 정당제도를 定着시켜 체제의 安定을 維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어 반체제인사나 집단적·조직적 반체제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군과 보수주의자들로부터 強한 挑戰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金正日이 이들과 타협·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失權할 可能性도 있다.

#### (다) 政策決定過程의 多元化

대체로 金正日은 參謀들의 判斷에 準據하여 政策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그는 참모들이 多樣한 政策적 검토를 하도록 保障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최종결정을 政策으로 採擇하는 통치스타일을 갖고 있다. 결국 金正日은 漸進的으로 사이비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민주적 집중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당이나 정부 내의 2-3세대 專門家 集團들의 參與機會를 넓혀 불만의 소지를 제거하고 政策에 대한 아이디어를 發掘해 넘으로써 政治體制를 強化하는 2중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보수파와 개혁파의 葛藤이 表面化될 것이고, 만일 急進的인 改革派가 등장하게 되면 軍이 介入하여 政權을 掌握, 金日成시대로 反動化할 수도 있다.

#### (라) 權力的 分散

현재 주석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는 단기적으로 계속 維持될 것이다. 金日成에게 미치지 못하는 카리스마를 보강하기 위해 강력한 動員體制를 維持하려 할 것이고, '대담하고 통이 큰' 정치에 대한 강박관념은 권력을 더욱 絶對化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적 난제들은 효율성보다는 慎重하고 전문적인 決定을 요하는 것들로써, 전문기술관료들을 動員, 機能主義的 역할 分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자체의 存立危機까지 이르게 된다. 핵개발문제, 대미·일 수교문제, 경제발전정책문제, 통일문제 등은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여야 정확한 방안이 도출될 문제들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기술관료들이 과감한 개혁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권력의 分散은 시간이 많

이 걸리고, 영역 간의 갈등이 나타나 逆機能的일 수 있는데,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강경파나 군개입의 所與가 되기도 한다. 만일 金正日의 統合能力이 전문관료들에게 浸透되지 못하면 危機가 올 것이다.

#### (마) 軍의 中立化

군부는 金正日세습에 대한 支持의 對價로 당·정 機構에 參與하게 되었고, 체제유지의 翹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保守主義的 정치성향이 강한 북한군은 당의 목표인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最高目標로 삼고 있다. 즉 金正日 정권의 세습적 목표는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인 바, 이것을 달성키 위한 最善의 정치가 可視化되지 않을 때는 군은 정치적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 金正日은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效果的인 說得이나 制御에 失敗할 경우 쿠데타에 의해 失脚할 가능성도 있다. 군은 체제유지기능도 하지만 金正日의 국가관리능력 여부에 따라서는 권력담당자가 될 수도 있다. 金正日은 군의 中立化를 위한 制度化에 착수할 것이나 南韓과 美國과의 관계 如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美國과 和解가 되고 남·북간에 緊張이 緩和된 상태라면 減軍과 함께 中立化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바) 社會集團의 自律化

강력한 동원체제 하에서 권력수업을 받았던 金正日은 외곽단체들을 利用한 권력강화방법을 채용할 것이다. 각종 사회단체들에 대한 統

制는 金正日의 카리스마가 취약해지면 질수록 比例的으로 강화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단체들이 당의 외곽단체로서 金正日의 권력 기반이 될 것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외국여행자, 유학생, 전후세대, 소외엘리트 등의 增加, 경제사정의 惡化와 당·정관료들의 腐敗와 무사안일에 대한 懷疑, 외국 물품유입의 增加로 사회가 弛緩되면서 사회단체들이 불만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들은 사회勢力化 내지는 勞動組合化되어 집단적 행동을 始作하고, 이들을 진압키 위한 軍隊와 衝突을 일으킬 것이나 오히려 民主革命의 계기가 되어 북한체제는 革命的 變革을 하게 될 것이다.

## (2) 黨-政-軍 集團指導體制

기술관료들은 金日成 생존시에는 架空의 충성을 해오다 金日成 사망 直後에 金正日에 대한 평소의 불만을 표출시킬 것이다. 즉 평소 불만을 품어 왔던 당-정-군의 실력자들이 金正日을 실각시키고,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는 金正日이 완전히 실각하는 경우와 金正日이 주석직을 유지하되, 중앙인민위원회장직, 국방위원회장직, 당총비서직등을 당·정과 군관료들이 掌握하여 수구적 또는 개혁적으로 나가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金正日은 여기에서 구금당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고 타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다. 이 체제는 일면으로는 國家體制를 強化해 가면서, 黨·政·軍을 2-3세대의 직업관료로 교체하여 신축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민주집중방식을 현실에 맞게 운용하여 집단지도체제의 효율성을 極大化시키고, 건전한 야당은 묵시적으로 認定할 것이다. 중·장

기적으로는 集團指導體制內에 權力變動이 일어나 기술관료 중심의 체제로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硬直性을 解消해야 한다는 認識을 하게 될 것이고, 다당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켜 民主社會主義的 政治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 (3) 쿠데타에 의한 軍事體制

北韓의 軍部는 당의 군대이고 보수적 속성을 지닌 것외에 金日成-金正日에 의해 꾸준히 충성과들로 조직되어져 왔기 때문에 정권탈취를 위한 쿠데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과도기에 金正日이 內·外的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아 실각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권력을 強化해 주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반대파들을 제거하여 金正日 政權을 安定시킨 후 군으로 돌아가든가, 金正日의 능력에 따라서는 쿠데타세력이 집정관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권력기구 및 지방자치기구까지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의 優越性을 계속 견지하면서 腐敗官僚들을 과감히 청산하여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開發獨裁를 實施할 가능성이 있다.

중기적으로는 社會的 統制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질 것이고 숙청되었던 黨·政官僚들이 선별적으로 복권되어질 것이나 政治的 統制는 계속되고 軍政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군사독재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발이 계속될 것인 바, 이 과정에서 군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할 수도 있으나 결국 실패하고 민간 혁명정부가 수립되어 문민정치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革命에 의한 多元主義 體制

金日成이 사망하면 즉시 인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시나리오이나可能性은 稀薄하다. 이러한 경우는 金正日체제나 집단지도체제가 점진적 개혁을 통해 인민들의 意識이 高揚된 후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革命的으로 정치체제를 개혁하여 共和制를 도입하고 金日成-金正日체제 하에서의 黨·政·軍의 관료들을 처형하고 과도정부를 구성, 국민 투표를 거쳐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을 선거한 다음, 經濟的 資本主義와 政治的 自由民主主義를 채택할 것이다.

### 3. 展 望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정치체제는 다른 어느 분야 보다 변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結論도 김일성 生死와 상관없이 정치체제의 급격한 變化 可能性은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強力한 理念體系를 國內外的 환경변화에 대한 防禦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군은 물론 이념·기술관료들까지도 現狀打破보다도 現狀維持的 체제를 選好한다는 점, 셋째, 이러한 체제유지정책에 대한 人民들의 組織的-集團的 항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김일성 死亡 以前에는 傳統的 統治方法, 즉 制반정책은 단지 정치체제 및 권력 強化의 手段으로만 사용해온 방

법에서 탈피치 못할 것이다. 김일성은 김정일에 대한 權力移讓을 지난 1991년 12월 24일 인민군최고사령관 任命을 계기로 주석직을 비롯한 各種 最高職位를 예상보다 빨리 이양시킬 것으로 展望되지만 그는 수렴첨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일성 死後의 정치체제 문제는 최고 권력은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김정일에게 이양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김정일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安定的-守舊的으로 진행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그의 性格과 周邊環境의 變化가 상호작용하여 김일성정권보다는 改革的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즉, 정책결정과정의 다원화, 다당제 수용, 권력 분산, 사회집단의 자율성 확대, 대외개방의 확대 등을 강화하여 체제유지 및 공고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신축적 정책은 중국적으로 유일지배체제를 무너뜨리게 되고 多元主義的 體制로 전환케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第 3 章 經濟體制

### I. 北韓經濟의 實相

#### 1. 經濟體制와 政策基調

##### 가. 經濟體制

北韓은 해방과 동시에 蘇聯으로부터 社會主義 理念과 體制를 移植하여 스탈린式的 강력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구축, 지금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東歐 諸國은 물론 社會주의 宗主國이었던 蘇聯에서도 社會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中國 또한 實用主義 路線에 입각하여 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 광범하게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마르크스(Karl Marx)는 경제체제 구분의 기준을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경제적 배분의 결정기구 등으로 보았다.

北韓에서는 “소유제도는 물질적 부의 점유를 둘러싸고 맺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저히 배제하여 “사회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



는 것은 사회의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유제도를 金日成 主體思想에까지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다.”

北韓의 所有制度는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하 북한 헌법으로 표기)과 「토지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北韓 헌법은 제2장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소유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제19조는 국가소유권의 한계와 대상을, 제20조는 협동단체의 소유 대상을, 제22조는 개인소유의 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北韓 헌법 제18조에서는北韓의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에서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향후北韓의 경제체제 개혁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條文은 제19조와 제21조이다. 제19조에서는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현재의 협동적 소유로 되어 있는 협동단체의 토지 및 생산수단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국유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서는 “국가는…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고 규정하여 共產主義의 理想

---

1) 북한 로동당 출판사, 「근로자」, 1991.8.,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 참조.

을 향한 로동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토지법」 제2장에 나열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조문들 중에서 제13조는 협동적 소유권의 한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이를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협동적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단지 그 사용권만 인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北韓의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과정을 살펴보면 분단 직후인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동년 3월 5일 土地改革에 관한 法令을 공포하고, 5정보 이상의 경작지 소유자와 부채지주의 경작지를 몰수하여 빈농이나 고용농에게 몰수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國有化하였다. 또한 5정보 이하의 개인소유 토지와 빈농이나 고용농이 분배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개혁 이후에는 매매나 저당권 설정, 상속 및 임대여를 금지함으로써 토지의 사유권을 사실상 제한하였다.

이어서 동년 8월 10일에는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 主要産業의 國有化 法令을 공포함으로써 토지와 함께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착수하였다.

1947년 9월부터는 개인 상공업에 대한 생산협동조합화에 착수하는 한편 동년 12월 21일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지하자원과 산림 및 수역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國有化政策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나 종전 직후인 1953년 8월부터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혼란을 역이용하

여 농업의 협동조합화에 착수하여 그때까지 명목상으로나마 개인소유로 되어있던 경작지를 협동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한편 1954년 6월 4일에는 내각에서 ‘생산협동조합사업 개선강화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개인상공업의 집단화를 단행하였다.

北韓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1958년 8월 농업의 협동화와 함께 개인상공업의 집단화를 통해 토지 및 생산수단 소유제도의 국공유화를 완료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화 이후에도 협동농장원들에게는 가구당 50평 정도의 터밭을 개인이 경작할 수 있도록 인정했는데 현재에는 「토지법」 제2장 제13조에 근거하여 농가 터밭은 20-30평으로 줄어들었다.

所有制度面에서 볼 때 농가 터밭은 개인소유의 토지는 아니나 협동농장의 규약에 의해 터밭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개인소유로 인정되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떠한 경제체제이든 모든 경제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공통적인 경제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함으로써 市場經濟體制 하에서의 ‘Price Mechanism’이라는 조정기능 대신 計劃(Planning)에 의존하게 된다.

윌친스키(J. Wilczynski)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의 공산국가들의 계획경제체제는 관리조직과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① 中央集權的 行政管理 模型 ② 計量計劃的 管理模型 ③ 制限的 中央集權模型 ④ 市場補充型的 4가지 模型으로 분류된다.<sup>9)</sup>

北韓은 1950년대 중반기까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지금까지도 이를 강화해 옴으로써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추세에 역행하는 경직된 노선을 걷고 있다.北韓의 經濟는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가 로동당의 지침을 받아 작성하는 소위 '인민경제계획'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北韓이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은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一元化와 細分化를 동시에 요구한다. '인민경제계획'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각 부문(농림, 수산 및 광공업 등)별 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상품유통계획, 수매양정계획, 무역계획, 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계획항목들은 수 없이 많은 계획 지표들로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부계획지표들은 다시 시간 단위에 따라서 장기전망계획,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일일계획 등으로 나누어 집행된다.

이와 같이北韓經濟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야기되는 계획·관리업무의 방대성 때문에 현실적이고 균형잡힌 합리적 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北韓은 1965년 9월 이후 省(지금의 政務院 各 部·委員會), 中央機關, 道人民委員會(지금의 道 行政

---

2)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82), p. 47.

및 經濟指導委員會), 道 農村經理委員會 등 각급 기관과 공장·기업소의 계획부서들을 국가계획위원회의 하부 계획단위로 개편하여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접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計劃의 一元化, 細部化를 역설해 왔다. 그러나 「계획화 사업에서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의 강조는 北韓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경제관리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민간기업 관리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경제관리의 성과는 각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의 計劃指標 遂行實績이 測度가 되며, 生産指標로는 現物指標와 함께 價値指標도 동시에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관리 및 지도원칙으로는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대안의 사업체계’에 바탕을 두고 ① 당 정치사업과 경제조직 사업의 밀접한 결합 ②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옳은 배합 ③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철저한 실현 ④ 獨立採算制의 올바른 실시 등이 강조되고 있다.<sup>3)</sup> 또한 北韓은 經濟管理體系가 “기업소로부터 전반적 인민경제에 이르기까지,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국가적인 경제관리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經濟管理가 당의 집

3) 1970년도에 발간된 「경제사전」에서는 1985년도 「경제사전」의 서술내용과는 달리 경제관리 원칙으로 ①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② 정치사업 우선 ③ 중앙집중제 ④ 독립채산제 ⑤ 군중노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4)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권(평양: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p.93.

체적 지도와 정치사업의 우선에 따라 각급 경제관리기관과 생산단위마다 조직되어 있는 해당급 당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의사결정기능도 당 및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부서나 하부단위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 나. 政策基調

분단 이후 현재까지 北韓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기조는 소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명제로 하는 자력갱생원칙 하에서의 ‘중공업우선책’과 ‘국방·경제병진책’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라 함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이 다양하고 부단히 성장하며,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나라의 自然賦源과 원료·자재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sup>

北韓의 이러한 기본 정책노선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에는 스탈린식의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여 아우타르키(Autarky)경제 구조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 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이 점차 자기 나름대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보완해 온 것과 달리 北韓은 이를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결합

---

5) 조선노동당출판사,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경험」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3.8).

시킴으로써 더욱 경직화되는 방향으로 전개해 왔다는 데 특징이 있다.

北韓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주요산업 국유화, 농업의 협동화, 개인상공업의 협동조합화를 조건으로 하고 중공업의 우선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그 방도로 하였다고 주장한다.<sup>6)</sup>

한편 金日成은 중공업 건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농업과 경공업 부분에서 중공업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sup>7)</sup> 전후복구 단계에서부터 중공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표 2-3-1〉 北韓의 중공업 대 경공업 투자비율(%)

| 구분 \ 기간 | 54-56 | 57-60 | 61-64 | 65-69 | 71-76 |
|---------|-------|-------|-------|-------|-------|
| 제조업     |       |       |       |       |       |
| 중공업     | 82.0  | 76.0  | 59.9  | 84.1  | 83.0  |
| 경공업     | 18.0  | 24.0  | 40.1  | 15.9  | 17.0  |

자료 : 연도별 「조선중앙년감」 및 예산안 분석으로 작성.

중공업 투자실적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北韓의 중공업 우선정책과 ‘국방·경제병진책’은 기계공업과 병기공업이 계열화되어

6) 앞의 책.

7) 앞의 책.

있으므로 사실상 별개의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방·경제병진책’은 1962년 로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표면화되었고 특히 中·蘇 理念紛爭이 격화되기 시작하자 金日成은 1966년 10월 로동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내세워 “...경제발전을 다소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본격화 되었다.<sup>8)</sup> 따라서 <표 2-3-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의 중공업 투자 비중은 ‘국방·경제병진책’이 본격화된 60년대 후반부터 더욱 높아졌다.

北韓이 자력갱생노선에 입각하여 중공업 우선정책과 국방·경제병진정책을 고수한 결과 北韓경제는 산업 간의 불균형은 물론 공업 내부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는 경제체제의 결합과 함께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둔화 및 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 2. 經濟發展 水準

### 가. 評價의 問題點

經濟發展은 일반적으로 경제의 量的 成長과 함께 質的인 面에서의 구조변화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목표도 시대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물량면에서의 성

---

8) 4大軍事路線은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발전과 더불어 계층 간의 균형있는 소득배분을 통하여 실질적인 국민후생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러므로 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인당 소득수준, 1인당 소득의 성장률, GNP 중 투자의 배분, 總雇傭이나 GNP의 산업별 구성 등에 의해 비교되거나 측정될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경제성장과 발전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것이 아니며 질적 발전은 규모면에서의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戰後 경제발전론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北韓의 경제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첫째는 北韓社會의 폐쇄성으로 인해 北韓이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라고 해야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예산 및 결산보고 자료에 불과할 정도로 北韓 스스로가 각종 경제통계 자료의 발표를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도 정치적 선전 목적에 따라 과장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는 經濟體制上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통계의 개념이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北韓이 발표하는 국민소득은 서방

---

9) 李承潤, 「비교경제체제하에서의 국민 후생의 계량적 비교」, (서울: 국토통일원, 1975. 11), p.3.

10) Morris Bornstein, "The Comparison of Economic Systems: An Integration," in Morris Bornstein ed.,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Models and Cases*(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79), p.5.

의 국민소득과 비교할 때 그 산출방법과 포괄범위가 전혀 다르며 식량생산 통계에 있어서도 北韓은 소위 ‘알곡’이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남한 통계가 精穀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粗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관이나 연구소들의 北韓經濟力 평가에서 가장 많은 편차를 나타내는 부문도 국민소득수준과 식량생산 부문이다.

셋째는 北韓貨幣와 외국화폐 간의 환율 문제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北韓과 같은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中央의 國家價格委員會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과 역할이 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환율의 결정방법은 이론상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국의 화폐가 대표하는 金의 量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각국의 상품가격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北韓 원화의 대서방 환율에는 公定換率(北韓은 이를 ‘공식환산비율’이라고 함)과 商業換率(北韓은 이를 ‘특별첨가금을 붙인 환산비율’이라고 함)의 두가지가 있다. 공정환율은 北韓 주민에 대한 외화 환전(외화벌이에 대한 수매, 해외송금 등)이나 北韓 經濟力의 외화표시 평가, 수출입 상품의 대내가격 환산시 적용하는 환율이다. 한편 상업환율은 공정환율에 特別添加金을 붙인 환율로서 무역결제, 北韓 방문 외국인에 대한 환전 등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공정환율과 상업환율 간에는 통상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공정환율이 北韓 원화를 고평가하고 있음) 北韓 경제규모를 외국 화폐기준으로 평가할 때 두가지 환율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2배 이상의 편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北韓의 경제규모가 北韓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비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생산물의 배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정치·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문으로 투입되는 데에 기인한다. 최근 北韓을 방문한 사람들이 1인당 GNP가 1,000불 이상인 北韓住民들의 생활 수준이 400불 수준인 중국보다 낮다고 한 것이나 北韓의 군사력이 GNP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견해들은 바로 이러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國內外 主要機關의 北韓經濟力 評價

한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거나 국가 간의 경제력을 서로 비교하는 일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다. 이는 경제력이 한 나라의 전체적인 經濟的 成就에 대한 광범한 인식에 기초하여 경제생활의 서로 다른 국면을 여러 관점에서 폭넓게 고찰함으로써만 측정이 가능한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sup>11)</sup>

로리머(Lorimer)는 한 나라의 軍事力量과 經濟的 潛在力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나라의 1인당 소득에서 1인당 년평균 생계비를 뺀 후 이를 인구수로 곱한’ 경제력지수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國民總生産(GNP)이 경제력의 평가지표로 이용되고 있는데

---

11) Ray S. Cline, 「국력분석론」 (서울: 국방대학원, 1981.12), p.57.

이는 GNP가 물질적 생산은 물론이고 生活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용역, 경제조직, 기술능력 그리고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두뇌의 힘까지도 포함하는 綜合的인 指標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GNP는 총량개념에 의한 측정방법임으로 한 나라의 경제적인 특성이나 구조까지는 감안될 수 없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크라인(Ray S. Cline)은 그의 「국력분석론」에서 이러한 GNP의 본질적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에너지의 자급도, 비연료 광물자원, 공업생산력, 식량생산 및 대외무역 등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과 달리 국민계정통계지표로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입각한 사회총생산(GSP), 국민소득(MPS) 개념을 사용해 왔으며 北韓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국내외의 北韓問題 研究機關들은 대부분이 각각 독자적인 추계방식을 개발하여 서방 개념에 입각한 北韓 GNP(혹은 GDP)를 추정하여 발표함으로써 北韓의 실제적인 경제규모 평가에 혼란과 논란을 초래해 왔다.

지금까지 北韓의 GNP나 1인당 GNP를 추계해 온 대표적인 해외 전문연구기관으로는 미국의 중앙정보국(USCIA),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Y),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이 北韓 GNP 추계에 이용한 기초자료는 대부분 지금까지 北韓이 간헐적으로 발표하였던 사회주의 개념의 국민소득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기본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계 결과가 각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사회주의 개념의

---

12) 위 책, p.60.

국민소득(MPS)과 서방 GNP 간의 개념 차이, 北韓화폐의 대미불 환율을 적용상의 차이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北韓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발표한 北韓의 1인당 국민소득(MPS)을 표로 정리하면 <표 2-3-2>와 같은데 1989년 평양 「세계 청년학생축전」 당시 北韓 관리들이 서방 기자들에게 언급한 1988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30불이었다.

<표 2-3-2> 北韓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 년 도  | 1인당 국민소득 | 근 거   |
|------|----------|---|
| 1946 | 64.4원    | “1967년도 1인당 국민소득 580원은 1946년의 9배”에서 역산                        |
| 1949 | 131.8원   | “1967년도 1인당 국민소득 580원은 1949년의 4.4배”에서 역산                      |
| 1962 | 416.7원   | “1966년도 1인당 국민소득 500원은 1962년의 1.2배”에서 역산                      |
| 1966 | 500원     |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 보고 (1967. 12. 16)                            |
| 1967 | 580원     | 조선중앙방송보도(1970.9.17)   |
| 1970 | 605.7원   | “1974년 국민소득은 1946년의 9.4배”에서 산출                                |
| 1974 | 1,029.8원 | 1974년 국민소득은 1970년의 1.7배“ 산출                                   |
| 1979 | 1,920달러  | 金日成 신년사(1980.1.1)   |
| 1982 | 2,200달러  | 김우중 北韓 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br>일본 마이니찌 신문기자 회견(1983.9.13<br>마이니찌 신문) |
| 1986 | 2,400달러  | 방환주, 「조선개관」(평양:외국문출판사, 1987)                                  |

자료: 統一院, 「北韓概要」(서울: 統一院, 1991), p. 143.

北韓 경제발전수준 평가의 문제점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北韓은北韓 원화로 표시된 국민소득을美弗貨로 환산할 때에는公定換率을 적용하고 있기에北韓이 주장한 1988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30불을 同年의 商業換率을 적용하여 수정할 경우에 1,205불로 낮아진다.<sup>13)</sup>

한편 국내의北韓問題 전문연구기관들이 추계한北韓의 GNP를 보면 <표 2-3-3>과 같은데 외국기관들의 추계치가 통일원의 추계 결과보다 대부분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내의 일부 학자들은北韓이 발표하는 기초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유럽 경제위원회’를 비롯하여 베커만(Beckerman), 에이리히(Ehrlich) 등에 의해 활용된 바 있는 ‘실물지표에 의한 GNP 추정방법(Method of Physical Indicators)’에 의한北韓의 GNP 추정을 시도하고 있다.<sup>14)</sup> 이 방법은 보다 적은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간편하게北韓 GNP를 추정할 수 있고,北韓 貨幣의對美弗 환산시의 偏奇要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나北韓이 발표하는 實物指標 자체의 신뢰성이 낮은 까닭에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사용한 추계방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北韓의 광공업이나 농업 등 實物經濟 部門의 生産力에 대해서는 FAO, IEA, 미국 CIA 등 전문기관들이 식량생산, 전력, 석탄 등의 통계를 추적하고 있으나 대부분北韓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서北韓經濟 實相과 괴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13) 1988년北韓의對美換率은公定換率 1.02원, 商業換率은 2.15원이었다.

14) MPI 방법에 의한北韓 GNP 추정은 1991년중 한국개발연구원의 전홍택, 연세대학교 수정갑영 등이 각각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표 2-3-3〉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이 추계한 北韓 GNP 및 1인당 GNP  
(단위 : 경상가격, 억불, 불)

|      | 통일원 <sup>1)</sup>   |                     | CIA <sup>2)</sup> |         | IISS <sup>3)</sup> |         | SIPRI <sup>4)</sup> |         |
|------|---------------------|---------------------|-------------------|---------|--------------------|---------|---------------------|---------|
|      | GNP                 | 1인당 GNP             | GNP               | 1인당 GNP | GNP                | 1인당 GNP | GNP                 | 1인당 GNP |
| 1975 | 65                  | 402                 |                   |         | 35                 | 215     | 202.3               |         |
| 1976 | 77                  | 465                 |                   |         | -                  | -       | 216.8               |         |
| 1977 | 86                  | 507                 |                   |         | -                  | -       | 232.3               |         |
| 1978 | 105                 | 604                 |                   |         | 105.0              | 597     | 246.9               |         |
| 1979 | 124                 | 698                 | 141               | 750     | 141.0              | 707     | 262.2               |         |
| 1980 | 135                 | 743                 | -                 | -       | 105.0              | 597     | 273.4               |         |
| 1981 | 135.6               | 732                 | -                 | -       | 188.0              | 1,011   | 278.4               |         |
| 1982 | 136.0               | 720                 | 162               | 786     | 187.7              | 998     | 292.3               |         |
| 1983 | 144.7               | 751                 | -                 | -       | 383.2              | 1,906   | 305.3               |         |
| 1984 | 147.2               | 750                 | 196               | 998     | 399.7              | 1,889   | -                   |         |
| 1985 | 151.4               | 757                 | 240               | 1,180   | 423.6              | 1,953   | -                   |         |
| 1986 | 173.5               | 853                 | 190               | 910     | -                  | -       | -                   |         |
| 1987 | 193.7               | 936                 | -                 | -       | 452.5              | 1,985   |                     |         |
| 1988 | 206.0               | 980                 | 200               | 910     | 471.3              | 2,068   |                     |         |
| 1989 | 210.9               | 987                 | 280               | 1,240   | 489.1              | 2,101   |                     |         |
| 1990 | 231.0 <sup>a)</sup> | 1,064 <sup>a)</sup> | -                 | -       | 477.4              | 2,060   |                     |         |

자료: 1) 통일원 정보분석실.

2)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해당년도.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0-1990).

3)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해당년도판(London: 1976 / 77-1990 / 91).

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87 :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주: a) 신모형체계에 의한 추정치.

b) 1984년 이후는 北韓의 GDP 및 1인당 GDP로 평가된 것임.

c) 동책자에서의 군사비와 군사비/GNP를 이용하여 역산출하였으며 환율은 北韓 공식환율(1\$: 0.94원)을 적용하였음.

〈표 2-3-4〉 北韓의 알곡생산량 추정<sup>1)</sup>(粗穀기준)

(단위: 1000M / T)

| 年 度  | 北韓發表 <sup>2)</sup> | F A O <sup>3)</sup> | 美國 CIA <sup>4)</sup> | 農經研 <sup>5)</sup> | 國土統一院 <sup>6)</sup> |
|------|--------------------|---------------------|----------------------|-------------------|---------------------|
| 1946 | 1,898              | -                   | -                    | 1,898             | -                   |
| 1949 | 2,654              | -                   | -                    | 2,654             | -                   |
| 1953 | 2,327              | -                   | -                    | 2,327             | -                   |
| 1957 | 3,201              | -                   | -                    | 3,201             | -                   |
| 1961 | 4,830              | -                   | -                    | 3,083             | -                   |
| 1965 | 4,526              | -                   | 3,150                | 3,788             | -                   |
| 1970 | -                  | 5,141               | 3,500                | 4,374             | 4,644               |
| 1975 | 7,700              | 7,035               | 5,400                | 4,869             | 4,953               |
| 1976 | 8,000              | 5,629               | 5,600                | 4,962             | 5,032               |
| 1977 | 8,500              | 8,100               | 5,900                | 5,080             | 5,029               |
| 1978 | 7,870              | 8,100               | 6,000                | 5,208             | 4,988               |
| 1979 | 9,000              | 8,585               | 6,300                | 5,331             | 5,177               |
| 1980 | -                  | 8,850               | 6,300                | 5,460             | 3,982               |
| 1981 | -                  | 8,945               | 6,300                | 5,585             | 5,639               |
| 1982 | 9,500              | 8,985               | 6,700                | 5,715             | 5,996               |
| 1983 | -                  | 9,858               | 6,400                | 5,841             | 5,785               |
| 1984 | 10,000             | 10,183              | 6,600                | -                 | 6,267               |

자료 : 최민호, 「北韓의 농업생산에 관한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89).

주 1) 쌀, 옥수수, 맥류, 두류, 잡곡을 합한 수치임.

2) 년도별 金日成신년사, 조선중앙년감 및 김일보고(국토통일원, 「北韓經濟統計集」에서 재인용).

3) FAO의 *Production Yearbook*과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단 1970년 자료는 1969-71년의 평균치임.

4)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국토통일원, 「北韓經濟統計集」에서 재인용).

5) 農經研, 「北韓의 농업생산능력평가」, 1983.

6) 1976년까지의 자료는 국토통일원의 「南北韓 영농기반분석과 생산능력비교」(1977) p.105에 있는 자료에서 조곡으로 역산한 것이고 1977년 이후에는 국토통일원의 「南北韓經濟現況比較」에 나오는 자료를 역산했음.



#### 다. 主要 經濟計劃 目標와 遂行 實績

北韓은 남북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단계는 사회주의 경제의 土臺築城段階로 1947년부터 1960년까지, 제2단계는 체제확립단계로 1961년부터 1970년까지, 그리고 제3단계는 강화발전단계로 1971년 이후 현재까지이다.<sup>15)</sup>

각 단계별 경제계획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제1단계 기간 동안 총 5차례의 단기 및 중기계획이 실시되었는데 1947년과 1948년에 각각 1개년계획을 실시한 후 1949년~1950년에는 2개년계획에 들어갔으나 이 기간은 사실상 6.25전쟁 준비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 3차례의 단기계획들은北韓의 경제가 사회주의체제를 미처 확립하지 못한 상태 하에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전쟁으로 인해北韓 산업시설이 거의 완파됨으로써 현재의北韓經濟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전후 실시된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과 5개년계획(1957~1960)은北韓이 추진한 경제계획 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된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시北韓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후복구 3개년계획 기간에는 국민소득 성장율이 연평균 17%였으며, 5개년계획 기간에는 연평균 22%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同計劃은 당초 1961년에 끝내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기간을 1년 단축하여 4년만에 끝을 내고 1961년부터는 제2단계

---

15) 국토통일원,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북한상황변화예측”(1986.1), pp.82-86.

건설로 넘어가게 되었다.

체계확립단계로 규정된 제2단계에서는 北韓이 소유제도의 사회화를 완료(1958년 8월)한 기반 위에서 명실공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방식에 입각하여 장기계획인 제1차7개년계획(1961-1967년)이 추진되었다.<sup>16)</sup>

同 計劃은 기본과업을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 재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sup>17)</sup> 기간 중 국민소득은 2.7배(연평균 15.3%), 공업생산은 3.2배, 곡물생산은 600-700만톤으로 끌어 올릴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同 計劃은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北韓은 제 5차당대회의 총회보고에서도 국민소득 성장을 등 주요실적 지표는 발표하지 못했다. 제1차 7개년계획의 실패는 전후복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원조가 감소하고, 특히 1961년 쿠바위기의 발생과 중소 이념분쟁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 기인한다고 하겠으나 이와 아울러 대내적으로 중공업우선책의 강화, 4대군사노선의 채택 등 무리한 정책추진에도 원인이 있었다.

제3단계인 1971년 이후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강화발전단계에 들어와 北韓은 6개년계획과 제2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1987년부터는

---

16) 제1차 7개년계획은 당초 1967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실적부진으로 3년간 연장되어 1970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17)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 대회 자료집」 제2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41.

제3차 7개년계획에 착수하여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다.

6개년계획(1971~1976)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하게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할 것”으로 설정하고<sup>18)</sup> 기간 중 국민소득은 1.8배(연평균 10.3%), 공업총생산은 2.2배, 곡물생산량은 700~750만톤 등으로 계획목표를 제시하였다.

同 計劃의 수행을 위해 北韓이 선택한 대외정책상의 특징은 그 당시까지 추구했던 사회주의 일변도의 경제협력관계를 벗어나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 설비, 기술 도입을 시도한 점이다. 그 결과 北韓의 발표에 의할 경우 6개년계획 실적은 당초 계획했던 성장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연평균 국민소득 성장률이 9.2%에 달하였다. 그러나 同 計劃을 수행하기 위해 서방으로 부터 도입했던 借款과 延拂輸入貸金の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부터 연체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北韓은 동년 8월에 이르러 同 計劃의 1년6개월 조기 완수 발표와 함께 사실상 중단하였다. 따라서 계획 완수를 발표한 이후 2년간의 완충기를 거쳐서야 제2차 7개년계획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

---

18)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 대회 자료집」 제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117.

활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고<sup>19)</sup> 계획기간 중 국민소득 성장 목표는 1.9배(연평균 9.6%), 공업총생산 2.2배, 곡물생산량 1,000만톤 등을 목표로 하였다.

北韓은 1985년 2월 16일 중앙통계국을 통해 同 計劃이 1984년 말을 기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고 국민소득 성장율은 연평균 8.8%(기간중 1.8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2차 7개년계획의 분석결과는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율이 4.5%에 불과하여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제2차 7개년계획기간 경제성장율

| 년 도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
| 성장율 (%) | 5.6  | 6.9  | 3.8  | 2.0  | 4.8  | 4.4  | 3.9  |

자료 : 통일원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각년도판에서 작성.

제2차 7개년계획의 실패 이후 北韓은 또다시 2년 간의 조정기를 거쳐 1987년부터 제3차 7개년계획에 착수하여 현재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제2차 7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두고 있으며 기간 중 국민소득 1.

19) 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4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107.

〈표 2-3-6〉 주요 경제계획 목표

| 구 분               | 제2차 7개년계획    |                | 10대전망<br>계 획 | 제3차 7개년<br>계 획 | 제2차 7개년<br>계획목표<br>대비(%) |
|-------------------|--------------|----------------|--------------|----------------|--------------------------|
|                   | 목 표          | 실 적<br>(北韓발표)  | 목 표          | 목 표            |                          |
| 전력(억kwh)          | 560-600      | -              | 1,000        | 1,000          | 167-179                  |
| 석탄(만t)            | 7,000-8,000  | 7,000          | 12,000       | 12,000         | 150-170                  |
| 철강(만t)            | 740-800      | -              | 1,500        | 1,000          | 125-135                  |
| 비철금속(만t)          | 100          | -              | 150          | 170            | 170                      |
| 기계(배)             | (5만톤)        | 2.3            | -            | 2.5            | -                        |
| 화학비료(만t)          | 500(1.6배)    | 500            | 700          | 720            | 144                      |
| 화학섬유(만t)          | (1.8배)       | (1.8배)         | -            | 22.5           | -                        |
| 합성수지(만t)          | (합성수지<br>2배) | (합성수지<br>2.4배) | -            | 50             | -                        |
| 탄산소다(배)           | 3.4          | -              | -            | 4.5            | -                        |
| 가성소다(배)           | 1.8          | -              | -            | 2.1            | -                        |
| 유산(배)             | 1.9          | -              | -            | 3              | -                        |
| 시멘트(만t)           | 1,200-1,300  | -              | 2,000        | 2,200          | 169-183                  |
| 직물(억m)            | 8            | 8              | 15           | 15             | 188                      |
| 곡물(만t)            | 1,000        | 1,000          | 1,500        | 1,500          | 150                      |
| 쌀(만t)             | -            | -              | -            | 700            | -                        |
| 간척지개간(만ha)        | 10           | -              | 30           | 30             | 300                      |
| 육류(만t)            | 80-90        | -              | -            | 170            | 189-213                  |
| 계란(억개)            | -            | -              | -            | 70             | -                        |
| 과일(만t)            | 150          | -              | -            | 200            | 133                      |
| 수산물(만t)           | 350          | 350            | 500          | 1,100          | 314                      |
| 주택건설(만세대)         | 매년 20-30     | 기간중<br>수십만세대   | -            | 매년 15-20       | -                        |
| 기술자전문가 양성<br>(만인) | -            | 125            | -            | 200            | -                        |
| 병원침대류(배)          | 1.2          | -              | -            | 1.3            | -                        |

출처 : 北韓의 로동당대회 보고서 및 최고인민회의 자료에서 작성.

7배(연평균 7.9%), 공업총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등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목표 설정상의 특징은 제2차 7개년계획 기간 중인 1980년 10월 로동당 제 6차대회에서 金日成이 제시하였던 소위 '80년대 10대 전망목표'를 일부 수정하여 이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北韓이 제시했던 '10대 전망목표'와 제2차 7개년계획 및 제3차 7개년계획의 목표를 비교해 보면 <표 2-3-6>과 같은데 현행 제3차 7개년계획의 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됨으로써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91년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제5차년도에 해당한다. 현재의 北韓經濟 실정을 기준으로 계획의 수행실적을 중간평가해 보면 과거에 추진하였던 어떠한 계획보다 그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7> 제3차 7개년계획기간 경제성장률

| 년 도    | 1987 | 1988 | 1989 | 1990 | 년평균  |
|--------|------|------|------|------|------|
| 성장률(%) | 3.3  | 3.0  | 2.4  | -3.7 | 1.21 |

자료: 통일원,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각 년도판 및 년도별 「北韓經濟 綜合 評價」에서 작성.

총체적인 면에서의 경제성장 실적을 보면 199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1.2%에 불과하여 연평균 7.9%의 계획목표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1990년의 경우 東歐 諸國 및 蘇聯의 정세급변에 따른 대외경제협력 여건의 악화와 농업생산의

부진 등으로 실질경제성장율이 -3.7%를 기록하는 극도의 침체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2-3-7〉 참조).

農業部門에서는 관개수로의 확장, 간척지 개간 등 영농기반의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는 기상조건의 불순 등으로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548.2만톤 보다 오히려 줄어든 481.2만톤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를 北韓의 통계기준인 알곡으로 환산하더라도 600만톤 수준을 넘지 못하며 계획기간 중 가장 풍작을 기록한 1989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알곡 기준 700만톤 수준) 계획 목표의 47% 달성에 그치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전력 생산목표는 1,000억kwh로 되어 있으나 1990년 현재 생산실적은 277.4억kwh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계획목표 달성률은 30% 미만으로 볼 수 있으며, 석탄 생산능력은 계획목표가 1억 2,000만톤인데 반해 실제 생산능력은 4,300만톤으로 목표의 36% 수준이다.

鐵鋼 生産能力은 계획목표가 1,000만톤인데 비해 생산능력은 594만톤으로 계획목표 수행률은 약 60%이며, 시멘트는 계획목표 2,200만톤에 실제 생산능력은 1,202만톤으로 계획목표 수행률은 54.6%로 철강과 함께 타부문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北韓은 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후 30만정보의 간척지 개간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제3차 7개년계획에서도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간척지 개간 사업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10여년 간의 실적은 6만여 정보에 불과하며, 계획기간 중 주택은 매년 15-20만세대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990년의 실적은 평양시내에

3만세대가 건설되었고 지방에서의 건설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건설 역시 전반적인 목표 수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對外貿易은 계획기간 중 무역총액을 3.2배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986년의 무역 총액 36억불에 비해 1990년에는 1.3배 증가된 46.4억불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北韓의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90년 현재 南北韓 主要 經濟指標를 비교하면 <표 2-3-8>과 같다.

<표 2-3-8> 南北韓의 主要 經濟指標

| (1) 총량부문 |   |     | (90년말 현재)         |        |        |
|----------|---|-----|-------------------|--------|--------|
| 구        | 분 |     | 단 위               | 한 국    | 북 한    |
| 인        | 구 | 구   | 천 명               | 42,793 | 21,720 |
| 인        | 구 | 증 가 | %                 | 0.97   | 1.61   |
| 면        |   | 적   | 천 Km <sup>2</sup> | 99.3   | 122.1  |
| G        | N | P   | 억 불               | 2,379  | 231    |
| 1        | 인 | 당   | 불                 | 5,569  | 1,064  |
| 경        | 제 | 성   | %                 | 9.0    | -3.7   |
| 군        | 사 | 비   | %                 | 4.1    | 21.5   |
| 대        | 미 | 환   | 원                 | 707.97 | 2.14   |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2) 재정

| 구 분             | 단 위 | 한 국  | 북 한  |
|-----------------|-----|------|------|
| 재 정 규 모         | 억 불 | 388  | 166  |
| 예 산 / G N P     | %   | 16.3 | 71.9 |
| 군 사 비 지 출       | 억 불 | 97.3 | 49.6 |
| 군 사 비 / 재 정 규 모 | %   | 25.1 | 29.9 |
| 재 정 증 가 율       | %   | 26.7 | 6.4  |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3) 농수산

| 구 분           | 단 위    | 한 국     | 북 전 한   |
|---------------|--------|---------|---------|
| 경 지 면 적       | 만 ha   | 210.9   | 214.0   |
| ( 그 중 논 )     | ( " )  | (134.5) | (65.0)  |
| 곡 물 생 산 량     | 만 톤    | 663.5   | 481.2   |
| ( 그 중 쌀 )     | ( " )  | (560.6) | (193.2) |
| ( 그 중 옥수수 )   | ( " )  | (12.0)  | (238.0) |
| 단 보 당 쌀 생 산 량 | kg/10a | 485     | 297     |
| 수 산 물 생 산 량   | 만 톤    | 327.4   | 145.5   |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4) 에너지

| 구 분    | 단 위     | 한 국                | 북 한     |
|--------|---------|--------------------|---------|
| 석탄생산능력 | 만 톤     | 1,722 <sup>b</sup> | 4,330   |
| 발전설비용량 | 만 kw    | 2,102.1            | 714.2   |
| (수 력)  | ( " )   | (234.0)            | (429.2) |
| (화 력)  | ( " )   | (1,106.5)          | (285.0) |
| (원자력)  | ( " )   | (761.6)            | ( - )   |
| 발 전 량  | 억 kwh   | 1,076.7            | 277.4   |
| (수 력)  | (백만kwh) | (6,316)            | ( - )   |
| (화 력)  | ( " )   | (48,422)           | ( - )   |
| (원자력)  | ( " )   | (52,887)           | ( - )   |
| 정유능력   | 천 BPSD  | 840                | 70      |
| 원유도입량  | 천 톤     | 42,639.4           | 2,520   |

주 : 1) 90년도 석탄생산량.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5) 주요 공업생산능력

| 구 분     | 단 위   | 한 국                 | 북 한   |
|---------|-------|---------------------|-------|
| 철광석(精鑛) | 만 톤   | 29.8 <sup>1)</sup>  | 1,030 |
| 製 銑     | "     | 1,797.7             | 517   |
| 製 鋼     | "     | 2,540.6             | 594   |
| 壓延鋼材    | "     | 3,283.6             | 404   |
| 鉛       | 천 톤   | 130.0               | 87.5  |
| 亞 鉛     | "     | 265.0               | 295.0 |
| 銅       | "     | 225.0               | 90.4  |
| 알루미늄    | "     | 17.0                | 20    |
| 자 동 차   | 만 대   | 190.0               | 3.3   |
| 造 船     | 만 G/T | 342.2               | 21.4  |
| 공작기계    | 만 대   | 26.3                | 3.5   |
| 化學肥料    | 만 톤   | 403.2               | 351.4 |
| 주요합성수지  | "     | 302.2 <sup>2)</sup> | 1.0   |
| 시 멘 트   | "     | 4,210.4             | 1,202 |
| TV 수상기  | 만 대   | 1,450               | 24    |
| 섬 유     | 만 톤   | 1,800 <sup>1)</sup> | 176.8 |
| 직 물     | 억 m   | 67.3                | 6.7   |

주 : 1) 철광석 및 섬유는 생산실적 기준.

2) LDPE, HDPE, PP, PVC, PS 등 5대 합성수지 기준.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6) 수송·통신

| 구 분      | 단 위   | 한 국      | 북 한     |
|----------|-------|----------|---------|
| 철도 총연장   | km    | 6,435    | 5,045   |
| (전 철)    | ( " ) | (524)    | (3,194) |
| 도로 총연장   | km    | 56,715   | 23,000  |
| (포장도로)   | ( " ) | (40,545) | (1,717) |
| (고속도로)   | ( " ) | (1,551)  | (354)   |
| 자동차 보유대수 | 천 대   | 3,395    | 264     |
| 항만하역능력   | 천톤/년  | 224,353  | 34,900  |
| 전화회선     | 만회선   | 1,534    | -       |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7) 무역 및 외채

| 구 분   | 단 위   | 한 국     | 북 한    |
|-------|-------|---------|--------|
| 무역총액  | 억 불   | 1,348.6 | 46.4   |
| (수 출) | ( " ) | (650.2) | (20.2) |
| (수 입) | ( " ) | (698.4) | (26.2) |
| 외채    | 억 불   | 317     | 78.6   |
| (순외채) | 억 불   | (48.5)  | (-)    |

자료 : 통일원, 정보분석실.

### 3. 經濟沈滯 要因과 變化의 不可避性

#### 가. 經濟沈滯의 要因

현재 北韓經濟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여러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①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 ②산업설비의 노후와 기술수준의 낙후 ③인센티브제도의 결여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④사회간접시설의 미비 ⑤자체자본·자원의 절대부족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함과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는데 北韓은 전술한 바와 같이 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한계 ② 중공업과 군사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 ③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내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결과라고 하겠다.

1990년 北韓 GNP 추계과정에서 분석된 北韓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부문이 전체 산업생산의 26.8%, 건설을 포함한 광·공업부문이 56.0%, 기타 서비스부문이 17.2%로 나타나 2차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3차산업은 극히 취약한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었다.<sup>20)</sup>

특히 광·공업부문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중공업 우선정책의 결과 주민소비생활과 직결된 경공업이 낙후됨으로써 최근 北韓의 소비재 부족현상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北韓을 관측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北韓의 주요산업시설은 대부분 1970년대 이전에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대부분의 기계설비가 20~30년 전의 것이며, 이러한 시설의 노후화로 고장률이 높아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경제협력 대상이 서방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주의 국가 위주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자의 부족으로 일부 신설되는 공장의 설비도 상당부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준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北韓의 사회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창의성이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北韓은 이러한 결함을 이념적인 자극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끝없이 전개되는 노력경쟁운동으로 인하여 그 효력은 이미 197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소

---

20) 통일원, 「90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1991.9).

진된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구조의 불균형 문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은 1·2차산업에 비해 3차산업이 극히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도로·항만·철도·통신시설 등 산업생산과 직결된 사회간접시설이 극도로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수송의 병목현상은 원자재 및 최종 생산물의 적기 공급을 가로막음으로써 물자부족을 가속화시키고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

北韓은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원료·연료의 70% 이상을 自給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왔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일반적인 특징인 자체자본 형성이 어렵고,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소위 비생산적인 '기념비적 건설' 산업에 재정의 낭비가 심하였고 무역수지 적자 누적 ⇒ 외화고갈 및 외채 증가 ⇒ 연체 발생 및 대외신용 실추 ⇒ 외자도입 부진의 악순환 등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본부족 및 원자재 공급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蘇聯의 정세변화로 인해 무역의 50% 이상을 蘇聯에 의존해 왔던 北韓은 원유, 코크스, 원면 등 주요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량이 격감됨으로써 경제위기가 절박한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蘇聯 대외무역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0년의 北·蘇 貿易總額은 14억 9,900만루블(北韓의 수입 8억 8,700만루블, 北韓의 수출 6억 1,200만루블)에 달했으나, 199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무역액은 2억 800만루블(北韓의 수입 1,100만루블, 北韓의 수출 1억 9,700만루블)로 격감하였으며 특히 蘇聯의 8월사태로 인해 北·蘇貿易은 더욱 감소될 것

으로 보인다.

#### 나. 改革·開放의 不可避性

앞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분단 이후 지금까지 北韓이 추진하였던 각종 장·단기 계획 중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확립된 1960년대 이후의 장기계획들은 대부분 당초 설정했던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실패로 끝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전후복구 단계로부터 1970년대 중반기에 이르기까지는 전반적인 경제성장 속도면에서 南韓이나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

北韓은 이를 시종일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로 사회주의 이념은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北韓을 비롯한 舊社會主義 國家들이 경제건설 초기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보다 성장속도가 빨랐던 요인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정치적·경제적 독재 수단을 통한 자원의 강제동원 방식을 가능케 했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생산이론상 물질·기술적 기반이 되는 노동의 사회화 정도가 낮은 수준에 있었고 산업화 정도도 낮았기 때문에 각 경제부문·지역·기업 간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여 시

장기능을 중앙계획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었다. 또한 공업노동자의 대부분은 개인의 권리의식이 미약하고 직장선택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잠재적·구조적 잉여노동력이 풍부하여 失業에 대한 두려움, 주택의 부족, 거주이전의 제한 등으로 당시의 사회적 여건은 필요한 노동력을 최저생계비의 지급만으로도 동원이 가능했으며 관리도 용이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증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되고 생산단위 간의 경제적 연계가 복잡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생산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경제의 발전은 생산관계의 발전과 생산력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생산관계의 발전과 생산력 발전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며, 둘째 생산관계는 생산력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조건으로 되며, 셋째 생산관계의 발전 속도가 생산력의 발전속도보다 뒤떨어져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되면 생산위기가 발생하게 된다.<sup>21)</sup>

지금까지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진행되어 온 실험의 결과는 사회주의 경제는 초기의 경제건설 단계를 거쳐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관계 발전의 정체가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산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현재 北韓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

21) 김윤환 편역, 「정치경제학(3)」, 1986, pp.148-49.

수밖에 없다.

또한 北韓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한 결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 현재 北韓貿易의 對GNP 비율은 20% 수준으로 같은 해 韓國의 56.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北韓經濟는 국제분업의 이점을 국제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성도 상실하고 있다.

한편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낮으나 지역별 국별 무역현황을 분석해보면 무역의 對中·蘇依存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89년 현재 北韓의 무역총액에서 蘇聯과의 무역구성비는 58.4%, 中國과의 무역구성비는 13.8% 였으며 동구를 포함한 社會主義圈 전체의 貿易比重은 北韓貿易 總額의 73.5%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東歐 및 蘇聯에서의 공산정권 몰락과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 등으로 北韓의 대외무역과 경제협력 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적 혼란의 가중은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실리가 없는 對北韓 經濟關係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中國은 北韓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나 鄧小平 집권 이후 이미 자국의 현대화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對北韓 支援能力이 제한적이며, 실리위주의 정책노선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 하에서의 경제협력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변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외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北韓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서방 제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개척하는 길이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협력 여건을 먼저 조성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 II. 社會主義 諸國의 變化過程

### 1. 經濟改革의 動機와 主要內容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東歐 諸國에서는 각국의 국내여건에 따라 상이한 점은 있었으나 1950년대까지 사회주의 경제의 모델로 인정되어 왔던 蘇聯型的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제2차세계대전 이후 東歐 國家들은 蘇聯式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체제를 도입한 외연적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 1950년대에는 대체로 전후의 경제복구와 사회주의 공업화를 일단 마무리짓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오면서 이들 국가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는 外延的 成長戰略을 추진한 결과 불가피하게 대두하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생산방법 및 생산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초를 둔 集約的 成長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는 외연적 성장에 따른 자원의 낭비로 내부축적에 의한 개발 자본의 확대공급이 한계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강제 동원으로 인하여 소비생활의 향상과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졌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東·西貿易의 급격한 증대가 요구되었다.<sup>22)</sup>

1960년대 東歐諸國의 經濟改革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내용은 ①경제계획에 신축성 도입 ②기업의 獨立性和 管理制度의 개선 ③利潤制度和 勞動에 대한 物質的 誘引의 제공 ④價格體系의 改革 ⑤東·西貿易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계획의 신축성은 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지령적인 물량기준보다는 가치의 기준으로 다양한 목표액을 제시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계획보다 장기계획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당국과 하부 생산단위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화되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생산공장이나 상업기업소들은 계획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되었으며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의 경제관계도 보다 완화되고, 공장·기업소간의 횡적관계도 계약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도되었다.

東獨의 경우를 보면 1963년에 '신경제계획과 경영관계를 위한 지침'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가격의 결정권을 중앙당국에 유보시킨다는 조건 하에 생산계획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각 공업'트러스트'에 위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 공업트러스트는 가격의 결정권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제단위가 되어 중앙계획당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지표만을 하달받아 그 범위 안에서 산하의 각 기업에 대하여 생산과제를 설정해 주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東獨의 경

---

22) 李承潤, 「공산제국 경제체제의 변천과정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77. 12), pp.7-8.

우 이러한 自律性은 공업트러스트의 수준에 머물고 개별 기업단위의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개혁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하달되는 행정명령이 엄청나게 많았으나 개혁과 더불어 이러한 행정명령이 줄어들고 利潤率이 공장·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社會主義 道德과 思想的인 誘引보다는 노동에 대한 物質的 誘引을 중요시하였으며, 따라서 기업이윤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 노동자 개인에게 분배되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분배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勞動의 生産性이 이러한 분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이었다.

가격체계의 개혁에 있어서는 생산가격을 가급적 生産量과 연계시켜 국가의 보조금 지불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기업 경영이 평균 수준인 보통의 기업도 이윤을 남기게 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협동농장에 대하여 지불하는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공산품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힘으로써 농업생산을 刺戟시키고 농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는 일부 상품을 제외한 많은 부분의 상품가격을 市場의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개혁하였다. 예를 들면 체코슬로바키아의 '신경제모델'은 당시 改革派의 領袖였으며 두브체크정권에서 副首相을 역임한 오타 시크(Ota Sik)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인데, 이 모델은 數量指標의 폐지, 市場價格의 적용 등을 통하여 기업의 獨立性和 市場價格制度의 도입을 대폭적으로 인정하는 보다 급진적인 개혁안이었다.

한편 경제체제의 개혁과 함께 이들 東歐國家들은 西方先進國과의 무역확대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공산국가에서의 무역은 國家貿易으로 貿易省이나 국영 무역상사에 의하여 독점되어 왔으나 이를 크게 완화하여 貿易省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나 하부 기업에도 무역의 기능을 이관하여 필요에 따라 직접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4년에 창설한 ‘코메콘(COMECON)’의 주요 목표는 東歐圈의 域內 分業을 촉진시킴으로써 역내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西方圈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메콘에 가입하지 못한 유고슬라비아는 물론이고 코메콘국가인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도 서방과의 무역확대에 관심을 가져 왔다. 그 이유는 對西方貿易의 확대는 코메콘의 역내 분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자원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성에 따른 이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技術進步를 가속화시켜 그들의 경제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東歐 諸國의 계획경제는 國內 價格構造의 不合理性, 自意的인 換率構造 등의 제도적인 장애와 수출상품의 부족, 품질과 서비스면에서의 對西方 競爭力 不足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서방 무역확대를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의 개방이 필연적으로 무역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經濟改革의 促進要因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대 東歐에서 시작된 개혁과 개방의 움직임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市民運動으로 진전되었으나 1968년 8월 ‘바르샤바’조약군의 체코 침공이 단행됨으로써 보수파가 집권하게 되어

경제개혁은 일시적으로 停滯狀態에 빠져들었다.

## 2. 經濟改革의 過程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정은 80년대 중반에 시작된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전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비판은 곧 레닌 더 나아가 맑스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누적된 체제모순이 폭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전기는 아래와 같이 다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제2기는 1964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제3기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이다. 아래에서 社會主義 國家들의 개혁과정을 4개의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 가. 第 1 期

첫번째 물결은 196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1950~1952), 헝가리(1953~1954), 체코슬로바키아(1953~1954), 東獨(1954~1955), 폴란드(1960) 그리고 루마니아(1963) 등에서 차례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중에서 유고슬라비아만이 命令型 計劃管理에서 벗어나 ‘가격 메카니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勞動者 自主管理制度(Workers Self Management)가 도입되고 토지소유의 집단화가 완화된 것이다. 그 외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自由主義的 傾向으로 기울었고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매우 적극적인 개혁안이 수립되긴 했으나 스탈린주의의 강경파들의 정치적인 반대로 인하여 개혁안은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1956년에 勞動者評議會(Workers Councils)가 합법화되었고 工業協會(Industrial Associations)들이 경제적 행정과 관리에 참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었으며, 대부분의 토지소유도 1956~1957년에 分散化되었다. 또한 ‘시장 메카니즘’을 통한 몇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헝가리에서는 1957~1959년에 計劃樹立과 價格決定에 있어서 일부 분권화가 실시되었고 蘇聯에서도 1957년에 地方에 대한 分權化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이들 국가에서 가격제도의 수립과 경제운영 등 제도면에서의 일부 조정이 있긴 하였으나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 사실상 경제개혁이라고 할만한 변화는 없었다.<sup>23)</sup>

## 나. 第 2 期

두번째 물결은 蘇聯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經濟的 意思決定을 분권화하고 ‘시장 메카니즘’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1965년 후르쉴초프가 실각한 후 코쉬킨의 經濟改革案은 리베르만(E. G. Liberman)의 아이디어를 승인하여 수많은 강제적인 계획지표들을 폐지하고 기업의 성과와 기업운영에

---

23) 朴春三, 「사회주의제국의 경제상황 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서울: 국토통일원, 1986. 12), pp. 18-19.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利潤率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蘇聯의 이러한 개혁은 1965년 당시 실제 개혁원칙에서는 후퇴되고 말았다.

東獨은 1958년초 일종의 부분적인 行政的 分權化와 垂直的 統合制度를 도입하였는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1970년대에는 企業의 統合과 企業聯合(VVB)의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통상 기업연합 안에는 콤비나트(Kombinat)라고 하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체를 조직하고 콤비나트에 산하 기업의 생산능력 재편성 권한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東獨의 모델은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및 소련 등에서 일부 모방하였다.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의 기업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1967년 루마니아의 부분적 분권화의 동기였으며, 헝가리는 1968년에 중앙당국에 의한 구체적이고 물량적인 계획체제를 철폐하는 주요한 개혁에 착수하였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제무역의 特化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빈곤국가인 헝가리에서의 경제개혁은 수 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實用主義的 反應으로 나타났다. 즉 헝가리는 1960년대 초에 빈번한 무역수지의 적자, 노동력의 부족, 商品의 質과 多樣性을 포함하여 需給의 不一致, 投資財에 대한 과잉수요, 증가하는 資本-産出量 比率, 勞動生産性의 저조, 技術革命과 進歩의 지연 등 많은 경제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헝가리는 무엇보다도 수출의 3/4을 차지하는 工産品과 加工農産物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국내생산기업과 해외시장간에 직접 교역을 할 수 있

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관료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관리자와 노동자들에게 정부로부터의 補助金을 없애고 대신 輸出需要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物質的 補償制度를 실시하였다.

한편 유고슬라비아에서의 1965년 경제개혁(실제로는 1964~1967년에 실시되었음)은 기업에 보다 많은 自律權의 부여, 국민경제에서 계획기관과 국가의 역할제한, 相對價格의 왜곡현상 개선, 對外貿易의 自由化 등을 통해 유고의 국민경제 전체를 세계경제와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와같이 유고는 資源配分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메카니즘의 활용도를 점차 확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알바니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이 공식적으로는 경제개혁을 위한 계획들을 채택하긴 했으나 유고와 헝가리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傳統的인 中央計劃體制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으며, 개혁의 열기가 식었거나 다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로 후퇴하였다.

### 다. 第 3 期

세번째 개혁의 물결은 東歐와 蘇聯외에 理念的으로 가장 保守的이었던 中國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東歐國家들은 1970년대부터 蘇聯으로부터의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이 감소됨으로써 西歐로부터의 석유도입이 불가피하였고 그 결과 제2차 석유과동 이후 무역적자가 증가됨으로써 西歐의 借款을 본격



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1년 폴란드가 借款에 대한 元利金 償還을 연기하게 되고, 1982년에는 루마니아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1982년 말에는 유고, 루마니아, 헝가리가 IMF의 Standby Credits를 교섭하기에 이르렀으나 당시 IMF에 의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들 국가들이 부진한 경제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메카니즘’은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일이었으며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가 이미 1970년대 말에 새로운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한편 蘇聯에서도 당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투자율도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즈네프 이후 새로운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고슬라비아도 기업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國際市場價格, ‘시장 메카니즘’ 및 金融의 役割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동독, 체코, 불가리아도 새로운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第 3 期에 있어서는 中國이 대폭적인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鄧小平 執權 이후 實用主義 路線에 따라 수립된 中國의 現代化 計劃에서는 사회주의 변화에 큰 충격을 가한 경제개혁과 개방이 중요한 수단으로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12월 中國共產黨 第11期 3中全會에서는 중국공산당의 활동중심을 경제건설에 두고 대외개방, 대내경제 활성화 및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책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 7월에는 中外合資 經營企業法을 제정하여 外債의 活用을 통해 중국경제를 현대화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종래의 독립, 자주, 자력갱생으로부터의 일

탈이었다. 지금까지 中國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의 특징은 개방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서두름이 없이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주의 경제원칙과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 라. 第 4 期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蘇聯에서의 급진적 개혁·개방이 추진됨으로써 이제 그 종결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대변되는 개혁·개방은 이전의 변화가 경제문제 위주로 추진된 것과는 달리 정치개혁을 수반함으로써 국제질서를 평화공존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체제모순을 사회주의 ‘조국’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개혁정책이다.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로 비유하면서 스탈린주의를 맹렬히 비난하고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선언하였다.<sup>24)</sup> 이는 제 1기 개혁 기간 동안의 1956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스탈린비판 및 ‘사회주의 이행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 몰고 온 파급효과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즉 東歐에서는 蘇聯의 외압으로 그동안 억제되어 오던 체제모순이 蘇聯의 방향선회로 일시에 폭

---

24) 고르바초프,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Pravda* (Nov 26, 1989.)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서울: 풀빛, 1990).

발하고 말았으며, 北韓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기들의 '조국'이 조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자 내적인 체제모순의 노정과 강력한 지지세력의 상실이란 이중의 부담을 안아야만 했다.

이러한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는 東歐의 급진적인 변화를 촉발함으로써 1989년 이후 東歐 共產政權이 차례로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세계의 관심은 이제 北韓과 中國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폐쇄적 노선을 걷고 있는 北韓의 變化는 社會主義 諸國에서의 變化에 大尾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Ⅲ. 北韓의 經濟政策 變化 徵候

#### 1. 對內政策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연구하여 온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연구결과는 北韓이 알바니아, 쿠바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46년간 北韓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경제관리 방법의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1971년 6개년 계획의 착수 이전과 이후가 부분적으로 상이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7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전에는 모든 정책의 변화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직화되는 추세를 보인 데 반하여 1970년대부터는 표면상으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관리의 개선을 위해 의사결정기능의

제한적인 분권화와 함께 경제유인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명분 하에 임금, 가격, 원가와 같은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北韓은 1960년대의 제1차 7개년 계획 기간 중 중공업우선정책과 국방·경제병진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부문이 크게 낙후됨으로써 1970년 2월에는 ‘전국 지방산업 일꾼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산업의 진흥과 이를 통한 소비물자의 생산증대를 모색하는 한편 같은 해 9월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31.5% 인상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또한 1973년부터는 지방으로부터의 세원확보와 예산절약을 목적으로 ‘地方豫算制’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방행정기관의 예산 집행 권한이 강화됨은 물론 지방산업과 편의봉사시설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도 향상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1978년 12월을 기해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 강화되었다.

공장·기업소 관리면에서는 1978년부터 이전에는 주요 공장·기업소에서만 실시되던 독립채산제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예산제에 의해 운영되던 국토관리, 도시경영, 수매부분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고, 1990년 6월에는 작은 규모의 지방산업공장에 이르기까지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984년 6월부터는 사무기관을 제외한 비생산부문의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에도 完全獨立採算制 또는 半獨立採算制를 적용하도록 조치하였다.

市場과 價格決定體系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北韓은 초기의 농민시장이 부활되어 도시 지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1개월에 2-4회 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교적 다양한 상품이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0년 6월에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지방산업공장의 일부 생산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체로 국정가격 체계내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北韓은 1985년부터 국영기업의 재편에 착수하여 기존의 국영공장·기업소를 집단화한 ‘연합기업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北韓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9월에 이미 연합기업소의 수는 120개소에 달하고 있다.<sup>25)</sup>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주로 중화학공업 공장·기업소를 母企業으로 하여 이 공장·기업소의 생산에 밀접히 관련된 공장이나 기업소를 하나로 묶은 연합기업소 ②채취공업 기업소를 母企業으로 하여 母企業과 밀접히 관련된 공장·기업소를 하나로 묶은 연합기업소 ③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전문업종의 공장·기업소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하나로 묶은 연합기업소 등이 있다.

이러한 연합기업소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지도관리 하에 스스로가 생산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해나감은 물론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자재를 산하기업에서 공급 받으며 연합기업소가 자체조달할 수 없는 원자재

---

25) 강인천, “조선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독립채산제 강화에 관하여 (하),” 「조선자료」(1987.7).

는 연합기업소가 각기 독자적인 '자재상사'를 설립하고 이 상사를 통해 다른 연합기업소와 수급계약을 맺어 조달하는 등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北韓의 기업경영 단위는 총국,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공장·기업소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총국은 각 지방의 석탄공업총국과 함께 제조업 부문에서는 1990년부터 '용성기계총국'이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영·관리방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과거와는 달리 외화의 사용권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이나 공장·기업소 단위에서도 제한적이긴 하나 외화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이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항은 1985년 8월 로동신문 사설이다. 당시 사설에서는 공장·기업소의 경영, 관리에 있어서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함께 가치, 가격기능, 물질적 자극 등 소위 경제적 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①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기업소가 주동이 되고 자체계획 지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소의 역할을 증대시키며 ②원료·자재 공급에 있어서 가격기능과 계약제도 등 시장기능을 활용하고 ③기업소의 순소득 중 일정액의 처분권을 기업소에 부여하며 ④평균임금제를 배제, 도급제임금 적용의 확대와 생활비 지급의 차등 실시 ⑤계획수행, 품질향상, 절약,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에 상금 및 장려금의 활용여건을 개선하고 ⑥가격결정 방법에 있어서 소요시기에 형성된 원가를 기초로 하여 도매가격을 조정하며 제품의 질에 따라 적절한 차등가격을 제정함은 물론 신제품에 유리한 가격을 제정하고 특히 수요와 공

급관계를 타산하여 기업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價格의 一元化 體系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北韓은 이상과 같은 경제관리개선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기업소 창설과 같은 경영단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2. 對外政策

### 가. 貿易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징후는 1971년부터 추진된 6개년계획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보다 앞서 60년대에 추진되었던 제1차 7개년계획은 中·蘇의 경제지원 감소가 요인이 되어 실패로 끝났는데 특히 60년대 중반에 있었던 中·蘇 理念紛爭의 와중에서 北韓은 대외경제협력 대상의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 향상과 경제건설을 위해서 서방의 선진설비도입이 절실함을 인식하였다.

金日成은 1975년 3월에 열린 ‘공업열성자대회’의 연설을 통해 “...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만 무역을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신생독립국가들과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무역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새로운 경제부분이 생겨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시장에만 의거하여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에 계속 의거하면

서 자본주의 시장에도 적극 나아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재와 기계설비를 사와야 합니다...” 라고 대외무역과 대서방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의 결과 70년대 중반 對西方圈 貿易이 北韓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의 11.1%에서 1975년에는 40.6%로 급증하였다.

〈표 2-3-9〉 北韓의 圈域別 貿易構造

(단위 : %)

| 연도<br>구분          | 1960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89  |
|-------------------|-------|-------|-------|-------|-------|-------|-------|
| 공 산 권             | 96.3  | 88.9  | 79.0  | 59.4  | 54.8  | 69.5  | 69.2  |
| 서방권 <sup>1)</sup> | 3.7   | 11.1  | 21.0  | 40.6  | 45.2  | 30.5  | 30.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 西方圈에는 開途國 포함.

자료 : 통일원, IMF, JETRO.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대외무역정책에 더욱 적극성을 나타내어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는 우호적인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당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정하였으며,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에서도 「남남협조와 대외무역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北韓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對西方 債務償還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서방과의 무역비중이 다시 감소하였다.



따라서 北韓은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 수출상품 생산에 우선을 두고 수출상품 전문생산공장을 더 많이 설치하는 한편 해운수송망 강화와 貿易港의 능력확장, 신용제일주의의 관철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나. 合營法의 制定

北韓의 對西方 經濟協力은 1970년에 300만불의 차관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된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72년에는 대서방 차관도입이 공산권으로부터의 차관규모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74년 외채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76년부터 西方에서의 자본도입이 어렵게 되자 제2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일부 선진기술은 도입하지만 기본적으로 외자의 도입없이 同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金日成은 1983년의 한 연설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예측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對西方 資本導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sup>26)</sup>

金日成의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北韓의 指導層은 1982년 이후 中國의 經濟特區를 방문하여 中國이 1979년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의 발표를 통해 달성한 경제개발 성과에 관심을 나타내었다.<sup>27)</sup> 1984년 9월

26) 조선노동당출판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4), p. 71.

27) 김일성은 1982년 9월, 김정일은 1983년 6월, 강성산(당시 정무원총리)은 1983년 8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특구를 시찰하였다.

8일 공포된 北韓의 ‘合營法’은 이러한 일련의 배경 속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적인 전략은 외채상환의 부담을 지지않고 外資와 先進技術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에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3-10〉 年度別 借款導入 推移

(단위: 萬 달러)

| 期 間        | 合 計     | 蘇 聯     | 中 國    | 其他<br>共 産 國 | OECD 國  |
|------------|---------|---------|--------|-------------|---------|
| 1949년 이전   | 5,300   | 5,300   | -      | -           | -       |
| 1950 - 60년 | 165,336 | 71,325  | 50,850 | 43,161      | -       |
| 1961 - 69년 | 33,668  | 19,668  | 10,500 | 3,500       | -       |
| 1970년      | 9,000   | 8,700   | -      | -           | 300     |
| 1971년      | 26,700  | 25,000  | -      | -           | 1,700   |
| 1972년      | 35,400  | 15,000  | -      | -           | 20,400  |
| 1973년      | 48,400  | 10,900  | -      | -           | 37,500  |
| 1974년      | 52,000  | 12,000  | -      | -           | 40,000  |
| 1975년      | 42,900  | 18,600  | -      | -           | 24,300  |
| 1976년      | 560     | 400     | 160    | -           | -       |
| 1978 - 84년 | 55,585  | 29,625  | 25,870 | -           | -       |
| 總 計        | 478,849 | 216,518 | 87,380 | 46,661      | 124,200 |

자료: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서울: 國土統一院, 1986), pp. 809~10.

그러나 당초 北韓의 의도와는 달리 경제적 여건의 불비와 정치·사회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합영법’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84년 9월 ‘합영법’이 발표된 이후 1990년말까지 합작유치 실적은 135건으로 그 중 57%에 해당하는 77건이 朝總聯 商工人들과의 合作이었다.<sup>28)</sup>

28) 통일원, 「'90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1991. 9).

#### 다. 經濟特區 設置計劃

北韓이 1984년 '습營法'을 발표한 이후 국내의 언론들은 北韓도 中國의 經濟特區와 유사한 개방지구를 설치할 것이라는 보도를 자주 해왔으나 그러한 보도내용이 北韓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들 언론이 개방가능지역으로 거론한 곳은 南浦, 淸津, 羅津 등 주로 北韓의 主要 港口都市들이었다.

1989년 7월 이후 日本의 아사히신문, 中國의 黑龍江省 放送, 英國의 파이넨셜타임즈 등이 보도한 豆滿江 河口的 經濟特區 開發說은 中國·蘇聯 등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豆滿江 河口的 개발문제는 北韓보다는 오히려 中國이 더 큰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는 東北3省의 경제개발과 관련, 이 지역의 생산물을 豆滿江 水路를 이용하여 東海로 연결할 수 있는 수송로 확보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同 計劃에 대한 北韓의 반응은 1991년 UNDP의 주관으로 개최된 '동북아지역 경제기술 협조' 국제학술회의(1991. 7. 6~7,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나타났으며, 이어서 개최된 中國 遼寧省, 長春會議(1991. 8. 27~9. 1)에서는 '先鋒地區 經濟貿易地帶'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동해안 북부지역의 淸津, 羅津, 先鋒(雄基) 등의 항만시설을 확장하고 이 지역에서 中國과 蘇聯 등지로 이어지는 기존 철도망과 도로를 정비 보완함은 물론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북아 경제협력과 수송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개발에는 주변국가들의 공동투자와 기술교류, 합영·합작을 받

아 들이고 특히 수산물가공, 피복가공,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의 합작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물론 北韓이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동 계획은 北韓의 대외경제정책이 개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은 완만하나마 개혁·개방을 위한 변화의 징후를 보여 왔으며, 특히 北韓이 韓國과 함께 UN회원국으로 동시가입한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IV. 變化의 展望

### 1. 促進要因과 抑制要因

이상에서 北韓經濟의 實相과 政策變化의 徵候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變化過程 등을 살펴 본 결과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이념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아직 얼어붙은 상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완만하나마 이미 정책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변화속도나 범위, 심도 등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치·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좌우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 가. 促進要因

北韓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경제침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촉진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인도 北韓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北韓經濟가 현재와 같은 침체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개발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北韓의 工業은 금속, 기계, 설비, 시멘트 등 일부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국내수요를 자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데 중·소규모의 발전설비, 대형공작기계 및 화학공장 건설에 필요한 일부 설비 등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질이나 기술수준, 생산비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북한경제가 현재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연적 성장단계를 벗어나 집약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및 설비도입이 불가피하므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北韓은 1986년 2월에 개최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1차회의 및 1988년 11월의 제6기 14차회의 등에서 기술혁신 대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전자·자동화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 1988년 3월부터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이 추진된데 이어 금년부터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北韓의 경제개발이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던 蘇聯 및 東歐諸國의 최근 정세변화와 경제사정 악화는 北韓으로

하여금 개방의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제질서는 경제적 실리를 위주로 地域經濟圈을 형성하여 域內國家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추세에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움직임도 아시아·태평양경제권, 環東海經濟圈, 東北亞經濟圈 등 다양한 협력체 구상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北韓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게 될 것인 바, UNDP 주관 하에 논의되고 있는 豆滿江 河口 開發計劃과 관련하여 北韓이 '先鋒地域 經濟貿易地帶'의 설치구상을 발표하게 된 것은 좋은 시사점이 되고 있다.

1991년 9월 北韓이 韓國과 함께 UN에 동시가입하게 된 점도 北韓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요인이다. 北韓이 UN에 가입함으로써 앞으로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UN 산하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증대는 北韓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1989년 7·7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물자교역은 아직 규모는 크지 않으나 이를 통해 北韓은 경제적 실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남북교역 추세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北韓은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게 될 것이다.

#### 나. 抑制要因

반면 北韓의 개혁·개방을 억제하는 요인은 理念의 硬直性和 體制

崩壞에 대한 不安을 들 수 있다.

北韓은 東歐諸國의 공산정권이 붕괴된 이후 ‘우리식 대로의 사회주의’를 구호로 내세워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선언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해서는 金日成 主體思想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비록 北韓이 경제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정책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폭과 심도를 제약함으로써 본질적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한편 權力構造面에서 金日成·金正日 父子世襲體制의 構築은 北韓의 개혁·개방을 억제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변화는 권력구조의 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鄧小平 등장 이후 中國의 변화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蘇聯의 변화는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와 개혁·개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례이다. 따라서 金正日이 권력을 완전히 이양받겠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金日成 主體思想이나 體制固守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므로 급진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南北間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北韓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은 이미 변화의 促進要因에서 언급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北韓은 東歐國家들과는 달리 自由民主主義나 市場經濟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역사적인 배경도 北韓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점은 지금까지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내면으로만 잠재되어 있을 뿐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개방이 상당 기간 진

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나 급진적인 요구로 발전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展 望

北韓經濟는 경제체제상의 결함과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약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됨으로써 70년대 중반부터 그 성장율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산정권 붕괴와 경제침체로 인하여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北韓의 대외경제협력 기반이 완전히 붕괴됨으로써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의 부족이 심화되는 등 분단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節約과 增産을 독려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對日修交會談의 적극추진, 對美關係改善 노력, UN加入 등 西方先進國들과의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정책 전환을 통한 自救策을 강화하고 있다.

南北關係에 있어서도北韓의 태도는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北韓은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과거와는 달리 상당한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남북사이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北韓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그들이 추진 중인 핵무기 개발의 포기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상반된 두가지의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나는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실질적으



로 포기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전술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1992년 이후의 北韓經濟는 그들의 핵무기 개발정책 포기여부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만약 北韓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질 것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北韓의 변화가 강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北韓은 1992년 중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며, 이어서 日本과의 修交, 美國과의 關係改善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1993년부터는 北韓經濟가 일시적으로 성장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北韓은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韓國보다 오히려 주변국가나 국제기구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개혁·개방의 모형은 東歐 및 蘇聯과 달리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中國의 경험을 살려 시장경제의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改革指向的(reform-oriented)開放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體制守護를 위한 開放(system-defending opening)이 될 것이다.<sup>29)</sup>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체제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개방하에서는 西方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北韓의 의도와는 달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

---

29) 鄭甲泳, 「주변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개방」, '91년도 북한경제의 평가를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통일원, 1991.12).

나라 개방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변화가 보다 많은 개방과 개혁을 요구하는 내부압력으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東歐諸國이나 蘇聯의 變化經路를 답습하게 될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 될 것이다.

특히 中國의 革命元老들이 은퇴한 이후 나타날 새로운 變化는 北韓의 進路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第 4 章 對外政策 및 對外關係

### I. 北韓 對外政策의 基本性格

北韓의 대외관계는 資本主義 陣營 및 南韓에 대한 철저한 斷絶로 특징지워졌다. 이것은 선진 자본주의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追擊發展하겠다는 社會主義的 發展의 전략, 소위 ‘자력갱생’ 전략에 의해 규정된 것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진영 및 남한의 孤立化 戰略에 의해서 강요된 결과이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斷絶의 전략을 남한, 미국, 일본에 대한 敵對感으로 연결시켜 體制維持와 內部統合을 위한 政治的인 수단으로도 이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단절의 追擊發展 전략의 限界를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본주의 진영과의 관계개선에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經濟優先主義의 路線에 입각한 對外政策, ‘現實主義的 實利追求’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對美·日 接近, 남한과의 경제협력,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양상은 앞으로 蘇聯邦의 해체로 탄생한 독립국가연합과는 물론 북한이 아직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中國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가속될 것이다.

國際環境의 變化와 北韓의 經濟的 困難은 북한의 전통적인 對外政

策과 對外關係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최근까지 維持해 온 對外政策의 기본 목표 및 노선에도 부분적으로 變化의 徵候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開放·改革 政策과 東歐의 변화 및 소련의 解體에 의한 독립국가연합(CIS)의 탄생 등으로 對外關係의 改編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中國·蘇聯과의 同盟關係가 崩壞 또는 變質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北韓은 이들 兩國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에 기초했던 북한과 제3세계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앞으로 더욱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美國·日本을 비롯한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 및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對外政策 및 戰略·戰術을 변경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對外政策 및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變化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北韓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北韓과 주변 4大強國과의 관계변화를 분석·전망해 본다.

## II. 北韓과 周邊 4強 關係

北韓 대외정책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對外關係는 周邊 4強과의 관계임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이제까지 北韓은 冷戰의 이중삼각체제 및 中·蘇의 葛藤關係 속에서 안주해 오면서 비교적 용

이하계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 결과 北韓은 ‘자급자족적 경제’를 바탕으로 한 金日成 일인 독재체제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지탱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체제와 함께 동북아 질서를 크게 뒤흔드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즉, 脫冷戰時代의 도래와 多極化, 주변 4강의 변화로 인한 동북아 질서의 재편 등은 北韓의 대외관계에도 커다란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시작된 미·소간의 탈냉전·신데탕트, 중·소 和解는 이미 北韓으로 하여금 북방삼각체제나 중·소 양국 사이의 ‘兩다리 외교’를 통한 이익추구에 안주할 수 없게 하였다. 더욱이 1991년 8월 보수파 쿠데타 이후, 蘇聯邦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옐친의 러시아 연방,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삼국 주도하의 독립국가연합의 결성은 고르바초프의 퇴진(12.26)과 함께 지구상에서 소련을 소멸시키는 ‘혁명적’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국제질서 및 동북아 질서는 물론 北韓體制에도 거대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신사고 외교 등도 한 시대의 유물로 되어 역사 속으로 묻힐 지경이며, 동북아에서의 북방삼각체제는 더 이상 존재이유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北韓은 中國과의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기존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北韓은 실제로 80년대 후반부터 日本 및 美國과 관계정상화 내지는 관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南韓의 ‘北方外交’에 대해서 소위 ‘南方外交’로 맞서 오고 있으며

앞으로의 國際環境의 變化는 이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여기서 北韓과 주변 4강과의 關係變化를 分析하고 展望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해 본다. 北韓과 中·蘇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종주국이 된 中國 및 蘇聯을 대신하여 들어선 독립국가연합과 어떠한 관계를 수립해 갈 것인가. 美·日과의 관계개선, 국교정상화 문제에 있어서 北韓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에 대한 美國과 日本의 대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北·美관계개선과 北·日수교교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1. 北韓과 中國·蘇聯 關係

### 가. 關係의 展開 및 特徵

國內外 많은 北韓 전문가들은 기왕의 北韓과 中·蘇와의 관계를 ‘等距離 外交’로 특징지어 왔다. 과거 北韓은 中國 혹은 蘇聯과의 관계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中立’, ‘疎遠’ 혹은 ‘密着’의 행태를 보이면서 ‘불안한 均衡外交’를 구사해 왔다.” 1950년 이후 부터 1980년 까지 北韓의 對中·蘇關係 推移를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도표를 보면 北韓과 中國·蘇聯과의 關係는 2-5년을 주기로 變化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北韓은 주요 쟁점요소들에 따라 ‘親蘇’, ‘親中’ 또는 ‘中立’의 態度를 취해 왔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中國과 蘇聯의 對內外的 政策변화에 대한 北韓의 적응이기도 했다.

1) 유석렬, 「북한 정책론」(서울 : 법문사, 1988), pp.167-223.

〈표 2-4-1〉

|      | 수<br>원←→착            | 주요쟁점요소  |
|------|----------------------|---|
| 1950 | 실선:북한·소련<br>점선:북한·중국 | ○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br>○ 서방과의 평화공존 옹호정책<br>○ 주체이론 모방 |
| 1958 |                      | ○ 중국의 대 서방 강경 정책                                      |
| 59   |                      |   |
| 60   |                      |   |
| 61   |                      |   |
| 62   |                      | ○ 중·소 국경분쟁의 심각화                                       |
| 63   |                      | ○ 중국·인도 국경분쟁,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말)                       |
| 64   |                      | ○ 소련의 북한 자립정책 포기강요와 코메콘 가입요청                          |
| 65   |                      | ○ 브레즈네프 코시긴의 등장으로 소련의 대 북한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 강화             |
| 66   |                      | ○ 북한·중국 국경분쟁  |
| 67   |                      | ○ 미국의 월맹 복격개시와 한일국교 정상화                               |
| 68   |                      | ○ 중국의 포물레타리아 문화대혁명, 홍위병운동                             |
|      |                      | ○ 월맹지원율 위한 소련의 연합진신 결정 지지                             |
| 69   |                      | ○ 중·소분쟁의 약화   |
| 70   |                      | ○ 북한의 후에블로호 남침(1968년 1월) 북한의 미국정찰기 격추사건(69년 4월)       |
| 71   |                      | ○ 미국 닉슨행정부의 소련과 긴장완화시도 및 닉슨북트린 표방                     |
| 72   |                      | ○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는 닉슨 사도 공동성명                  |
| 73   |                      | ○ 중국의 문화혁명 종결   |
| 74   |                      | ○ 북한의 판문점 미군병 사살해(1976. 8)                            |
| 75   |                      | ○ 북한에 의한 50마일 군사해역신포(1977)                            |
| 76   |                      | ○ 미·중 화해와 일·중 평화협정 체결(1978년 후반)                       |
| 77   |                      |   |
| 78   |                      |   |
| 79   |                      | ○ 중국의 베트남 침공(1979.2)                                  |
| 80   |                      | ○ 중국의 대 한구간침투상  |
| 81   |                      | ○ 소련의 주한미군철수 등을 포함한 북한 통일정책 적극지지                      |
| 82   |                      | ○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 중단                                     |
| 83   |                      | ○ 중국의 군사·경제 지원강화                                      |

자료 : Helen Louise Hunter, "North Korea and the Myth of Equidistance", T.H. Huak, et al., The Two Korea in World Politics(Kyungnu University, 1983) pp.75~209 참조.

北韓은 中國·蘇聯에 비해서 아주 小國(small state)이다. 傳統的인 權力理論(power theory)에 의하면 소국은 政策에 있어서는 ‘守勢的’이며, 體制上에 있어서는 ‘體制 受容者’로서 권력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전무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北韓은 자체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단위가 아니라 中國이나 蘇聯의 縮小版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러나 北韓은 사회주의권이나 세계체제 내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해 왔다. 특히 北韓은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상호이익에 호소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이다. 한편, 北韓은 60년대 이래 지속되었던 中·蘇 이념분쟁에 대하여 自主路線을 견지하면서 이들 사회주의 양 강대국들로부터 원조 및 정책적 양보를 유도해 왔다.

이러한 北韓의 中國·蘇聯 관계의 변화형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주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北韓과 蘇聯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84년 5월 金日成의 訪蘇는 北·蘇 관계를 再設定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1986년에 들어 세바르드나제 외상의 訪北(1.19-23), 金日成의 訪蘇(10.22-26)와 각종 대표단의 교환 등은 兩國關係의 緊密化 추세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蜜月’ 관계는 고르바초프의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對韓國 경제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얼마후 蘇聯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자 평양-모스크바 간의 ‘蜜月’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sup>2)</sup> 그 이래로 2년 간

2) 「內外通信」, 제 758號, B 4.



의 ‘冷却期’를 거친 후 韓·蘇 국교정상화(90.9.30)는 양국관계를 결정적으로 ‘惡化’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北韓은 蘇聯에 대해서 ‘해방의 은인’에서 ‘한반도 분열의 책임자’로 비난하는 태도로 까지 나오게 되었다.<sup>3)</sup>

또한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 路線을 표방한 이래, 90년대에는 독일 통일(90.10.3)이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東歐國家의 民主化·改革運動도 급진전되었다. 특히 1991년 8월 보수파 쿠데타 실패를 계기로 蘇聯은 공산당해체와 새로운 연방 창출의 실패 등으로 사회주의의 이념 및 패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앞서 蘇聯은 이미 北韓을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즉 쿠데타 발생 직전인 1991년 8월 15일 北·蘇 군사동맹조약 체결 30주년을 기념하여 고르바초프가 金日成에게 보낸 축전에는 이전과 같은 양국의 ‘傳統的인 友好協力關係’, ‘社會主義’ 등의 표현이 이미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한편 北韓과 中國의 관계도 1988년 까지의 긴밀하였던 北·蘇 관계 못지 않게 견고하게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北·中關係는 앞의 도표가 나타내 주는 바와 같이 문화대혁명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비교적 친선유대가 지속되었다. 1983년 6월 金正日의 비공식 訪中, 金日成의 비공식 中國訪問, 84·85년 호요방의 비공식 방북, 李先念 국가주석의 방북 등을 통해 北韓·中國은 상호유대 공고화를 비공식적으로 과시하면서 상호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협의해 왔다.<sup>4)</sup>

---

3) 韓·蘇修交에 대해 북한은 “딸라로 팔고사는 <외교관계>”라는 題下의 논설을 통해 이를 소련의 ‘배신’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로동신문』, 1990.10.5.

1990년대에 들어서 北·蘇 兩國이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는 단계에 까지 惡化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北韓과 中國은 빈번한 접촉을 가지면서 그들 쌍방의 이념 및 체제의 일체성과 제반 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해 나갔다. 즉, 천안문 사태 이후 中國 공산당 총서기가 된 江澤民의 평양방문(90.4)에 和答하여 金日成의 瀋陽 비밀방문(90.7)과 연형묵 총리의 첫 中國 방문(90.10)이 이루어졌고, 91년 10월에는 金日成의 中國 공식방문 등으로 北韓과 中國은 긴밀한 親分關係를 과시해 왔다. 그러나 中國도 北韓에 대해서 명분상의 정치적 우호를 강조할 뿐 이전과 같은 ‘血盟關係’는 부정하고 있는 듯 하다. 실제로 江澤民 당 총서기는 1991년 10월 8일 中國과 北韓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血盟關係’를 부정하고 ‘友情關係’로 못박았다.<sup>5)</sup>

다른 한편으로,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방문 이래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자 中國과 蘇聯의 對北韓 태도는 크게 달라졌다. 즉, 中·蘇 和解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양국은 對北韓關係를 정치적 유대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경제적 분야의 실리를 중시하고 더 나아가 南北韓 사이의 경쟁관계를 정치·외교 및 경제적 실리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蘇聯, 특히 中國은 北韓에게 改革·開放을 要求했던 것이다. 예컨대 91년 10월에 中國을 방문한 金日成에게 中國 공산당 총서기 江澤民은 “國際秩序는 平和에 대한 갈망으로 점차 變貌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北韓의

4)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87년도 동북아 환경」(서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87), p.112.

5) 「한국일보」, 1991.10.13.

대내외정책의 개혁·개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홍콩 중국계 신문인 「大公報」는 中國 당국이 金日成에게 ‘改革·開放을 통한 自立’을 권고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sup>6)</sup>

蘇聯의 경우 80년대말부터 90년대에 접어들면서 北韓의 소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에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美國이나 日本에게도 정상회담이나 외상회담을 통해서 北韓의 개혁·개방화 정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까지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을 주도하는 열친의 러시아 연방이 北韓의 改革과 開放政策의 加速化를 促求할 것은 自명한 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나. 關係變化의 樣相

### (1) 經濟關係

北韓은 ‘자립갱생’<sup>7)</sup>의 바탕 위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팽창으로 초래되는 帝國主義 威脅으로 부터 北韓 스스로를 保護하기 위한 기본적인 經濟戰略으로 判斷되고 있다. 원래 自立經濟라 함은 대외경제 거래를 완전 부정하는 自給自足(autarky)經濟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과 경제협력은 추진해 나가되 대내외 균형유지로 경제의 자

6) 「大公報」, 1991.10.13.

7) 김일성은 자립갱생에 대해서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나라 건설은 자기인민의 로동과 자기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 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 저작 선집」, 4권, p.537

립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sup>8)</sup> 그러나 北韓이 추구해 온 자립 경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급자족경제체제’의 確立을 目標로 하고 있음으로 해서<sup>9)</sup> 閉鎖經濟(closed economy)의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北韓의 경제는 여타 사회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며 그것조차도 地域的으로 多邊化되어 있지 못하고, 몇몇 지역 특히 蘇聯과 中國에 크게 偏重되어 있었다. 蘇聯과 中國은 北韓의 對外貿易에서 뿐만 아니라 經濟協力 部門-예컨대 무상원조와 차관도입(외채)-에서도 比較優位的으로 거의 絶對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合營事業의 경우 1990년 6월까지 밝혀진 合營실적은 국내 66건, 해외진출 21건 합쳐 총 87건인데, 北韓 내에 유치한 合營기업중 77%(50건)가 조총련계이며, 반면에 해외진출 중 62%(13건)가 소련에의 진출로 나타나고 있다(中國진출은 3건에 불과함).<sup>10)</sup> 그리고 소련측의 주장에 따르면 54년부터 진행되어 온 對北경제지원은 전력부문 65%, 강철부문 33%, 철금속 압연재부문 38% 석유제품생산부문 50%, 직물부문 20%, 화학비료부문 14%, 철광석부문 42% 등 거의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sup>11)</sup>

이상을 종합해 보면 비록 北韓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하고 있

8) 이태욱, “북한 경제 개혁과 전망,” 이태욱(편), 「북한의 경제」(서울: 을유문화사, 1990), p.245

9) 주체사상에서 「자립」이란 뜻은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는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조달하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내에서 해결하여 경제 구성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자급자족경제(*autarky*)이다. 앞의 글, p.245.

10) 「내외통신」, 제657호(89.9.15) 참조.

11) 「내외통신」 709호(90.9.14) 참조.

다고 강조하나 실제로는 소련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中國과의 경제관계는 소련에 비해 비교적 한정된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90년대부터 惡化되기 시작한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는 기존의 경제관계에도 과급되었다. 예컨대 모스크바 방송(91.4.29)은 북한의 채무액이 약 46억달러(26억루블)이라 하고 평양에서 조인(91.4.28)된 ‘무역·경제협정’이 “연차 무역의정서와는 달리 금년부터 그 결제와 지불이 태환성 화폐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있다”고 강조, 硬貨決濟方式이 취해지고 있음을 밝혔다.<sup>12)</sup> 더욱이 1991년 8월 보수파 쿠데타 이후 소연방의 붕괴는 北韓과 소련과의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시켰다. 蘇·東歐라는 사회주의권이 消滅된 이상 이들과의 사회주의 교역관계는 완전히 崩壞되고 만 것이다.

이제 北韓의 경제를 원조할 수 있는 나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中國 밖에 남아 있지 않다. 中國은 북한과의 ‘상품교류의 정서’와 ‘경제원조협정’에 따라 原油·食料品 등의 供與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소련 및 동구국가들의 지원 부진에 따라, 북한 과학기술협조 대표단(단장:국가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김응호)을 파견하고(91.8) 중국 국무위원 겸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 주임 宋健과 만나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91년 10월 金日成의 공식 訪中시 석유·석탄·식량 각각 1백만톤 씩을 긴급 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sup>13)</sup> 그러나 中國도 이미 92년부터의 對北貿易에 硬貨決濟의 도입을 천명하였

12) 「내외통신」 보도판 7266호(91.5.1)

13) 「産經新聞」 1991.11.27.

으며 이것이 실행된다면 비록 양국의 교역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북한경제에는 致命的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 (2) 軍事關係

北韓은 그들의 周邊與件이 軍事的으로 매우 不利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認識하여 왔다.<sup>14)</sup> 즉 '미제국주의자'들과 남한은 언제든지 북침할 의사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은 美國을 남한 및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끌고 있는 최대의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國際環境에 對應하여 북한은 1961년 이래, 역시 '미제국주의' 방어와 對美 軍事戰略의 필요성이라는 냉전적 사고를 공유했던 中國·蘇聯과 軍事同盟 關係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관계는 냉전시대의 산물이었으나 中·蘇의 이념분쟁, 美·中 관계개선,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의 탈냉전·신데탕트의 움직임 등을 거치면서도 존속해 왔다.

예컨대, 中國은 소련을 견제함과 동시에 美國과의 關係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北韓의 軍事的 要求를 어느정도 受容하여 왔다.<sup>15)</sup> 반면 蘇聯은 미·소냉전과 미·일·중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협

---

14) 남·북한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때 상비군사력은 북한이 병력면에서 1.5배, 주요장비(전차, 야포, 함정, 항공기)면에서 약 2배 정도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원 군사력면에 있어서도 단기전 상황을 위한 동원능력은 북한이 우세하나 전반적으로는 남북한이 대등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쟁수행 잠재력을 의미하는 종합적 역량은 한국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p.142.

15) 차영구, "북한과 중·소간의 군사협력 - 북한의 대중·소 군사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이홍구, 스칼라피노(共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 80년대의 대외적응」(서울: 법문사), 1986.

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북군사지원을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1954년부터 1980년 까지 中·蘇의 對北 군사원조는 각각 561백만 달러, 1796백만 달러이며, 소련의 對北 군사원조가 中國의 약 3배 정도였다.<sup>16)</sup> 내용면에서도 최신 군사장비를 비롯한 고성능 무기는 주로 소련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특히 80년대 들어와서 소련의 對北 高性能武器 提供이 增加하였는데 이는 소련의 對北 군사적 이용이 증대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1984년 소련 외무차관 카피차는 청진항의 對蘇開放을 要求하였고 그 후 합동군사훈련도 제의하는 동시에 자국함정의 남포항(서해안) 기항과 항공기의 北韓領空 통과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北韓은 무기이전의 댓가로 蘇聯의 요구를 대부분 수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80년대 소련의 對北 무기이전 현황과 對北 요구의 수락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 나아가 北韓·蘇聯 兩國軍은 상호방문 및 연합훈련도 실시하였다. 소련함대 및 비행단의 방북(85.8, 86.7, 87.5 등)과 北韓 艦隊 및 비행단의 방소(85.5, 86.7 등) 그리고 1986년 10월이후 세차례의 해·공군 연합기동훈련 실시 등이 그것이다. 현재 北·蘇 間의 전략무기 체계는 거의 통일되어 있으며 <표2-4-2>에서와 같이 소련으로 부터의 무기이전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16)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p.449; 「북한외교론」(경남대학극동문제연구소, 1977), p.33 참조.

17) 대한민국 국방부, “1990년대 북한-소련관계연구”(3차평가회의 자료, 1988.12), pp.20-22.

〈표 2-4-2〉

| 연 도  | 이 전 무 기 명                                     | 수 량            | 소련의 요구수락사항                                   |
|------|---|----------------|--|
| 1981 | Frog-5 / -7<br>지대공미사일                         | 15             |  |
| 1982 | MIG-21 전투기<br>MI-4 헬기                         | 40<br>20       |  |
| 1983 | IL-62 수송기<br>Osa-1급 고속공격정                     | 1<br>2         |  |
| 1984 | SA-2 지대공미사일                                   | 550            | TU-16 / 95정찰 및 폭격기의 북한내륙통과비행 및 기착권인정 (84.12) |
| 1985 | MIG-23 전투기<br>SCUD-B<br>지대공미사일<br>SA-3 지대공미사일 | 50<br>15<br>30 | 나진항에 이어 원산항 기항권 인정(85.8)                     |
| 1986 | SU-7 전투기<br>MI-24 헬기                          | 10<br>50       | 남포항 기항권 인정(86.7)                             |
| 1987 | SU-25 근접지원기<br>SA-5 지대지미사일                    | 10<br>미상       |  |

(자료: Military Balance, 1980-81 / 81-82 / 82-83 / 83-84 / 84-85 / 85-86 / 87-88 / 88-89)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시작된 신사고 외교정책에도 불구하고 1990년 한·소 수교 이전까지, 소련과 북한 간의 군사적 우호관계는 계속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군사대표단의 상호방문은 계속되었다. 더욱이 소련 軍事力의 極東에서의 질적·양적 강화는 세계적인 탈냉전·신데탕트에 반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역량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對北 軍事援助는 한·

18) 「국방백서」 1990, pp.47-8 참조.



소수교 및 소련 내부의 '혁명적' 변동으로 인하여 급속히 감소되었다. 1990년의 한·소수교, 그리고 1991년 8월 보수강경파의 쿠데타 실패에 이은 共産黨과 軍部 保守派의 沒落은 북·소군사동맹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에 의하면 “지난 89년 한·소 양국이 상호 영사처를 개설한 직후부터 북·소군사협력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한·소수교 후 한국이 경험자금 30억불을 제공키로 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용 무기판매의 중지를 요청해 소련이 이를 받아 들인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sup>19)</sup> 이로써, 소련이 지난 1988년 북한에 미그-29 5대를 비롯, SU(수호이)25 프로구프트 10대 등을 제공한 이후 첨단무기의 제공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89년 9월 동해에서의 합동훈련 실시 후 지난해부터 합동군사훈련도 중단되는 등 군사협력이 단절되었다.

더욱이 소련 개혁파들에 의한 경제발전 노력은 군축을 가속시켰다. 이러한 조치가 가장 가시적으로 표출된 것이 1991년 9월 28일 부시 美대통령이 일방적인 전술핵 감축 선언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군비감축선언(10.5)이다. 소련은 미국과 같이 지상발사 전술핵 완전폐기, 해상 및 잠수함발사 순항 미사일의 본국회수, ICBM의 단탄두화 추진, 잠수함 발사 전략핵 위주의 核抑止 戰略 중시 등에 더하여 일부 공중발사 핵무기의 회수, 1년간 핵실험 중지, 새로운 핵무기 개발중단, 兵力70만명(전체 병력 3,988,000명의 17.5%)의 減縮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1991년 11월 5일 노보질로프 소련 극동군관구 사령관은 아시

---

19) 「중앙일보」, 1991.10.30.

아 주둔병력 20만명의 추가감축을 표명함으로써 극동군사력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련의 이러한 군비감축은 그들의 경제난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軍再編과 戰略의 轉換을 의미한다. 1991년 10월 4일 미국방부가 발표한 「過渡期の 軍事力」이라는 題下의 소련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 이래의 심각한 景氣沈滯(1991년 들어 90년 同期 對比 GNP 성장률이 -2%에 이어 1/4 분기 -8%, 상반기 -10%, 1-9월간 -12% 로 急落 추세에 있음)에 따라 소련의 90년도 군사비 지출은 89년 對比 6% 감소했고, 88년 對比 12%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련의 전반적인 군비감축은 대외군사원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연결되어 冷戰構造와 中·蘇 葛藤關係를 전제했던 對北 軍事協力關係까지도 변질시켰다. 즉, 既存의 冷戰構造가 해체되고 中·蘇 葛藤關係가 화해관계로 代置되어 감에 따라 자연히 北·蘇 軍事同盟 역시 有名無實하게 되고 있다. 소련과 북한 간의 軍事同盟은 쌍방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며 군사적 相互紐帶는 상황에 따라 廢棄되거나 再編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소련과의 군사동맹의 變質을 補完시켜 나가기 위하여 중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보다 더 강화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도 안으로는 소련과 동구권의 민주화 대변혁에서 비롯된 민주화 압력과 민심동요를 막고, 밖으로는 서방국가들의 ‘평화적 이행’(‘和平演變’)전략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軍事費 支出을 확대시키고 있다. 중국 측의 입장에서든 북한과 같은 隣近 社會主義 國家와의 既存關係를 유지·강화하기위하여 對北 軍事支援을 떠맡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양국의 의도와 필요성이 부합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기술 및 장비의 對北 원조가 소련의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 (3) 政治·外交關係

北韓은 대외관계에서, 국제공산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결속을 추구하면서도 蘇聯과 中國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들의 지배도 받지 않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北韓의 자주노선이 主體思想의 정치적 구현과 체제유지에는 편리하고 유용했을 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형제국이던 中國이나 蘇聯과의 政治·外交關係마저도 폐쇄적으로 만들었다. 물론 북한의 정치·외교적 閉鎖性이 소련의 ‘혁명적’ 변화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順機能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中國과 蘇聯이 ‘實用的 國家利益’을 추구하는 現實에의 적응에 오히려 보다 커다란 逆機能으로 작용할 것이다.

金日成은 北韓 사회를 外部와 격리시키고 주민을 조정(manipulation) 함으로써 자신의 主體思想에 의한 국가통치를 正當化시킬 수 있었다. 北韓사회와 주민은 서방세계 뿐만 아니라 中國이나 蘇聯 지역의 韓人들로부터도 격리되어 왔다. 이러한 폐쇄적 北韓社會가 조금이라도 開放되면 그 政治的 結果(환상에서 깨어난 후의 정치적 반응)는 金日成 體制(金正日 指導體制)에 매우 큰 打擊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北韓의 이러한 閉鎖社會的 特성은 改革·開放을 추진하고 있는 中國·蘇聯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金日成은 獨立鬪爭에서의 ‘영웅적’인 공로와 主體思想에 기초한 社會主義國家의 建設로 카리스마적 존재가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家父長的 體制’를 유지해 왔으며, 나아가 金日成의 카리스마를 그의 아들 金正日에게 계승시켜 ‘世襲王國’을 세우려 하고 있다. 北韓의 이러한 노력은 이미 모택동 비판과 스탈린 격하를 거친 中國 및 蘇聯의 指導者로 하여금 親北韓 태도에 대한 懷疑를 품게 했으며, 앞으로 이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현재 中國 首腦部는 표면적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지속 여부나 김정일 체제가 등장한 이후의 태도 변화를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蘇聯의 태도 변화이다. 보수강경파의 쿠데타가 실패한 후 모스크바 방송(91.8.28)은 김정일이 사회주의 수호를 호소한 서한을 논평없이 보도하면서 그의 공식 직책을 무시한 채 ‘김일성의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나섰던 것이다.

‘자주’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主體思想은 이념적 배타주의에서 연유된 측면이 강하다.<sup>20)</sup> 본래 北韓의 정치문화는 主體思想이 적극적인 이념운동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도 2가지의 排他主義, 즉 ‘반미제국주의’와 ‘반일식민지주의’에 근거를 두고 형성, 발전되어 왔다. 특히 北韓에게 있어서는 “美帝國主義에 대한 태도가 革命的인 자세와 機會主義的인 자세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고”<sup>21)</sup> 있다. 北韓이 오랫동안 中國이나 蘇聯을 동맹 세력으로 인식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념을

20) Robert Charvin, Albert Marouani,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Etats Socialistes*, (PARIS: PUF, 1981), pp.518-20.

21) Ibid., p.520.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도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 받는 당은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상의 자기防禦線을 구축하려 했으며, “공산주의 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심을 필요로 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세계혁명운동의 ‘중심’을 거부하였다.<sup>22)</sup> 결국 北韓은 中國·蘇聯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의 배타주의적 특성을 표출시켜 왔다. 이러한 특성은 앞으로 옐친 등 改革勢力이 이끄는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는 물론 社會主義 體制를 공유하는 중국과의 관계의 전도마저도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 다. 關係變化의 要因

##### (1) 促進要因

이제까지 北韓과 蘇聯, 北韓과 中國과의 관계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한 수직적인 동맹관계, 소위 ‘북방삼각체제’를 형성시켜 왔다. 그러나 두개의 동맹관계는 이해 상충점을 기초로 한 여러 異質性을 노정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북방삼각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고르바초프 소연방 대통령이 사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소련은 해체되어 옐친의 러시아 연방이 주도하는 독립국가연합으로 變貌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중국과 소련은 美國에 대한 ‘公敵’ 規定을 拋棄하였으며,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소련은 이미 韓國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독

22) 「김일성 저작선집」 4권, pp.346-47.

립국가연합 탄생이후 러시아 연방이 양국의 대사관계를 계승하고 있다. 中國은 韓國과의 수교를 아직은 보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이 中國 및 소련 또는 이를 계승한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변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가) 蘇聯의 崩壞와 獨立國家聯合의 誕生

고르바초프는 1991년 7월 26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계급투쟁이념 등 마르크스주의의 원리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새 黨綱領’과 ‘사회민주주의 이념’<sup>23)</sup>을 채택하고 이를 위하여 8월 20일에는 ‘신연방 조약’을 조인할 예정이었다. 이에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만과 共產黨·軍部·KGB 내부 기득권 계층의 危機意識이 보수파의 쿠데타(8.19)를 불렀던 것이다. 부통령 야나예프 권한대행, 보리스 푸코 내무장관, 야조프 국방장관 등 8인은 ‘국가 비상사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옐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등 개혁세력과 시민들의 항거로 사흘 만에 실패(8.21)하고 말았다. 北韓은 이 기간 동안 사태의 발생 사실과 ‘국가 비상사태 위원회’의 聲名, 呼訴文 등 제반 조치를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더욱이 야조프는 1985년 8월 15일 北韓 해방 45周의 축하사절로 파견된 대규모 군사대표단의 일원(당시 그는 극동군관구 사령관)이었으며 북한 군부와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다.

23) 그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급진 개혁, 혼합경제로의 이행, 민주적인 연방으로의 변혁, 3권분립과 국민의 자유 보장, 복수정당과 의회 민주주의의 채택 등이었다.

쿠데타 실패 후 고르바초프는 복귀했으나 공산당 서기장을 사임(8.24)함으로써 공산당을 해체시켰고, 옐친은 발트 3국의 독립선언을 승인(8.24)하였다. 연방해체의 위기를 느낀 고르바초프는 '과도 3원체 제'<sup>24)</sup>조치(9.2)를 취했으나 미국도 승인한 발트 3국을 제외한 12개 공화국의 同調를 얻었을 뿐이었다. 이후 공화국들의 독자노선과 옐친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면서 연방 대통령인 고르바초프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갔다. 1991년 12월 21일 러시아 연방과 10개 공화국 정상들이 알마아타 회의에서 독립국가연합 창설을 합의하자 그는 연방 대통령직을 사임(12.26)하고말았다. 이로써 고르바초프 시대의 終焉과 함께 소련은 崩壞되고 독립국가연합이 誕生한 것이다.

독립국가연합의 11개국-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 키르기스, 몰도바, 타지크, 투르크멘, 우즈베크의 10개 공화국-은 소련군의 統一軍 再編問題를 둘러싼 모스크바 국방장관 회의(12.26-7)에서 이들의 군사동맹은 NATO에 지극히 가까운 집단안전보장기구가 될 것이며 통일군의 규모는 현재의 37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減縮할 것으로 合意했다.<sup>25)</sup> 또한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 정상회담에서는 核武器의 單一統制에 署名(91.12.30)하였다.

그러나, 독립국가연합은 民族紛糾와 공화국 간의 國境紛爭, 軍統帥權, 經濟改革, 食糧·物資不足 등 문제와 옐친의 정책에 反對하는 勢

24) 이는 15개 공화국 지도자의 '국가 위원회', 대표위원의 '인민 대표위원회', 공화국 간의 '경제 위원회'의 3원 체제를 의미한다.

25) 「時事通信」, 1991.12.28.

력의 존재<sup>26)</sup>로 초반부터 그 前途를 예측하기 어렵다. 民族紛糾은 아직 크게 表面化되고 있지 않으나, 독립국가연합의 構成國 間에는 민족의 分布와 政治的 領域이 不一致하는 지역이 많아서 앞으로 국경선의 再調整을 비롯해 해양과 호수의 資源主權, 水利 및 灌溉權, 자국 내 소수민족의 權利認定 등을 둘러싸고 紛爭이 激化될 것이다. 軍統帥權問題를 둘러싸고 모스크바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3국은 새로운 군사동맹에의 參與를 反對하고 나선 바 있으며, 러시아 연방은 흑해 함대의 統制權 問題로 우크라이나와 葛藤을 겪었다.

또한 독립국가연합은 경제개혁을 둘러싼 구성국간의 摩擦과 改革을 위한 資金 不足 및 推進方式에 대한 無經驗 등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경제개혁의 성패야말로 독립국가연합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關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은 1991년 12월 27일 92년도 민영화 계획을 채택하고 1992년 1월 2일부터 가격통제를 해제함으로써 민영화, 가격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어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투르크멘 등도 이를 따르고 있다.<sup>27)</sup> 이 조치는 엘친의 정치생명까지 걸린 대도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그 성패가 주목된다.

소련의 消滅로 북한과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변화해 나갈 것은 자명한 일이나 문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

26) 엘친의 獨走를 비판하는 유력한 政敵으로 예컨대 루츠코이 러시아 부통령, 소브차크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장, 91년 6월 러시아 대통령 후보였던 지로노브스키,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있다.

27) 「중앙일보」, 1992.1.3.



북한·독립국가연합 관계의 향후 변화를 展望하기는 이들 국가들의 장래를 짐치는 것 만큼이나 어렵고 불투명하다. 北韓은 독립국가연합이 탄생하자 남한보다도 빨리 그 構成國들을 과거 동맹국이었던 소련의 承繼者로 承認하였다.<sup>28)</sup> 북한은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를 신속히 再定立하고 싶은 것이다. 다만, 아직도 국내문제의 解決과 安定이 시급한 독립국가연합은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나) 美國에 대한 '公敵' 規定의 拋棄

소련이 붕괴되고 中國이 社會主義를 고수하면서도 變化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北韓은 더 이상 美國을 '제국주의' 勢力 또는 이들 국가와 더불어 社會주의 국가들에 대한 '公敵'으로 규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새롭게 誕生한 독립국가연합은 소련보다 더욱 더 市場經濟의 實質的인 受容을 위하여 美國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원조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립국가연합은 미국과 서방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외교적으로도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中國의 경우, 70년대의 對美 관계개선으로 共存關係를 수립하였고 80년대에는 協力關係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천안문 사태 이후, 美國이 中國의 인권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내 문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 中國은 이러한 압력에 대항하여 北韓을 포함한 인접국가 및 제3세계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日本과 서유럽의 호의를 구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葛藤要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상호의존성은 가중될 것이다.

28) 「관영중앙통신」, 1991.12.27.

北韓은 현재 美國과의 관계개선을 圖謀하고 있으나 아직 ‘美帝’에 대한 敵對感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北韓은 ‘和平演變’을 우려하는 中國과 함께 對美國 ‘공동방어전선’을 構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美國의 資本과 技術 그리고 市場이 필요한 中國이 美國과 적대관계로 轉換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北韓 또한 이러한 中國의 對美 태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대미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반미제’를 고집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中國과 蘇聯은 이미 對美 ‘公敵’ 규정을 오래 전부터 포기한 상태이며 北韓 역시 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다) 中國·蘇聯의 對韓國 關係改善

北韓은 蘇聯의 對韓 국교정상화와 中國의 점진적인 對韓接近政策, 즉 여러 차원의 교류(특히 경제적 교류)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여 왔다. 그러나 소련은 노골적으로 남한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하였고 이에 반비례하여 대북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보수파 쿠데타 이후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관계수립 이래 最惡의 상태에 빠졌다. 한편 독립국가연합이 탄생한 후 한국정부는 사태를 관망하다가 러시아 연방이 소련을 계승한 것으로 承認한데 이어 나머지 10개 공화국을 승인함으로써 독립국가연합의 11개국을 모두 承認하였다.

中國은 대외개방정책 추구하고 더불어 對‘남조선’ 태도를 修正해 오다가 90년대에들어 南韓을 경제발전에 있어서 驚異的인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재정의 하였다. 中國은 韓國의 駐北京 무역대표부 개설(91.1.30)에 和答하여 서울에 무역대표부를 개설(91.4.9)하였으며 南韓에

대한 소위 '16字 방침'-化敵爲友·政經分離·經濟先行·政治後行-을 수립하였다. 1991년 11월 14일 APEC에 참가한 中國 외교부장 錢其琛은 일본과 미국의 北韓 승인이전의 南韓과의 수교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무역대표부의 準公館 昇格에 合意한 바 있다. 또 韓·中 양국은 북경에서 무역협정에 정식서명(91.12.31)하였다.

#### (라) 中國의 改革·開放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이 소연방의 붕괴를 부를 정도로 과격한 것이었다면 엘친의 러시아 연방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은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政策을 推進해 나가고 있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한편, 中國은 정치적 개혁에 있어서는 별다른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경제의 개혁·개방 정책은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다. 즉 中國은 理念과 體制에 구애됨이 없이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벌이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資本主義 市場經濟原理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경제체제의 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최근 北韓은 폐쇄사회를 개방하고 침체된 국내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외개방화 정책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경직된 내부체제적 문제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경제 사유화, 서구식 복수정당제 및 이데올로기의 다원화 만은 “당·국가의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성과를 사장시키는 결

과를 초래한다”<sup>29)</sup>고 拒否하는 중국식 모델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北韓은 독립채산제의 도입과 합영법의 채택, 그리고 경제특구 설립 등을 통하여 중국과의 정책적 친밀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抑制要因

### (가) 中國의 傳統的 支援

北韓은 軍事·經濟的 부문에서 蘇聯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였으나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中國에 의존해 왔다. 특히 소련이 붕괴된 현 시점에서 아시아 社會主義의 宗主國인 中國도 北韓에 대한 군사·경제적 支援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政治 및 體制維持의 차원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비록 北韓이 中國의 모택동 비판과는 달리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와 주체사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兩國은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공통이념 및 체제의 추구로 동맹관계를 과시해 왔던 것이다. 外交面에서도 中國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北韓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孤立되어 있는 북한의 입지강화를 위한 支援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北韓과 中國의 相互依存은 北韓으로 하여금 기존의 對中 善隣關係 및 同盟關係를 유지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中國은 궁극적으로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원

---

29) 「人民日報」, 1991.9.2.

하고 있다. 즉 중국은 對北韓 關係악화 또는 단절로 南北韓의 세력 균형이 깨짐으로써 야기되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미 그들이 北韓에 구축하여 놓은 既得權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北韓은 對韓協商이나 동북아 군사 전략에 있어서의 對美協商의 ‘카드’로서도 가치가 높은 것이다.

#### (나) 獨立國家聯合의 向方

소연방이 해체되어 독립국가연합이 誕生하였으나 아직도 그 向方을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이 散在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그 主導勢力인 러시아 연방은 옐친의 개혁의 성패에 따라 保守派나 軍部の 再登場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北韓은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 독립국가연합의 변화방향에 맞추어 행동하면서 새로운 우호관계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북한과 소련과의 반세기에 가까운 우호동맹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다.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나 軍事的 側面에 있어서 北韓은 蘇聯에 가장 의존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과 독립국가연합, 특히 러시아 연방과의 관계를 일시에 단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 연방으로서도 北韓이 급격히 붕괴되는 현상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여러가지 내부분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 연방은 북한과의 우호동맹관계를 再考한다 하더라도, 북한이라는 隣接國家와의 기존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緩衝地帶’ 또는 韓·中·美·日에 대한 協商과 牽制를 위한 ‘카드’로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

다.

(다) 主體思想에 의한 閉鎖體制

北韓의 體制는 최근의 國際環境에 대한 適應努力이나 對外開放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탄력성으로 말미암아 北韓의 改革을 沮害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北韓으로 하여금 변화하고 있는 中國 및 독립국가연합과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수직적 동맹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의 樹立을 어렵게 하고 있다.

北韓은 中國과 독립국가연합 특히 러시아 연방에 대해서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로부터 실리추구의 外交關係에로의 變化를 시도하면서도 극히 制限的인 變化만을 고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즉, 북한의 對中, 對獨立國家聯合과의 관계변화는 어디까지나 주체사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2. 北韓과 美國·日本 關係

### 가. 關係의 展開 및 特徵

#### (1) 1980年代 後半까지

北·美 關係는 적대관계기(1948-69), 인민외교 추진기(69-74), 정부간 접근교섭기(74-80), 인민외교 및 정부간 접근교섭병행기(81-88)로 구분되고, 北·日 關係는 접근시도기(1954-50년대말), 대일적대와 소극적 접근기(50년대말-70), 정당·인민외교 및 경제교류추진기(70-

〈표 2-4-3〉

| 해방과 분단<br>1950 | 적대 소원 접촉(비정부간)(정부간) | 주요요인   |
|----------------|---------------------|--|
| 195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에의 미군전임파북한에의 소련군입, 미·소냉전의 시작</li> <li>○ 남한정부 수립(1948.8.15), 북한정부수립(1948.9.9)</li> </ul>   |
| 195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1950.6.25-1953.7.27)</li> <li>○ 중공군 참전(1950.11)</li> <li>○ 일본에 대한 미군정종식(1951.9)</li> </ul>   |
| 196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외외상의 대외관계정상화와 경제·문화교류 제의(1955.2.25), 조총련결성(1955.5)</li> <li>○ 일본의 4대상사 대표의 평양방문(1956.6)</li> <li>○ 김일성의 북미관계정상화 연설(「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회의」, 1957.9.20).</li> <li>○ 미·일상호방위조약(1961)개신, 박정희정권 발족(1961.5.16)</li> <li>○ 「四大軍事路線」, 「3대혁명역람」, 중·소분쟁</li> <li>○ 121사태, 프예블로호나포사건(1968.1.23), EC-121 격추사건(1969.4.16)</li> <li>○ 한·일국교정상화(1965.6.22)</li> </ul>  |
| 197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닉슨독트린(1969), 미 공산당의원 프리드맨(J. Friedman)의 평양방문</li> <li>○ 「일·조우호추진연맹」(1971.11), 코노(久野忠治)의원 등 방북(1972.1)</li> <li>○ 「7·4공동성명」</li> <li>○ 김일성의 대일국교수립과 교류강조(1972년 일본기자단 및 대표단과의 담화)</li> <li>○ 「6·23선언」</li> <li>○ 사회당대표단의 방북(10월)</li> <li>○ 북미평화협정 제의(「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1974.3.25), 하비브국무차관의 남북유엔동기입안, 사강의 교차승인안 제의(1974.10).</li> <li>○ 키신저국무장관의 4차회담 제의(30자 유엔총회)</li> <li>○ 「일·중 평화우호조약」(8월), 미·중국교정상화(12월)</li> <li>○ 소노다(園田直)의상의 대북유화 발언(1978.10)</li> <li>○ 「10·26」사태</li> </ul>   |
| 198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솔라즈 하원의원(7·14), 레스틴 전국무성대변인 방북(9.2)</li> <li>○ 레이건 행정부 출범(1981.1)</li> <li>○ 사회당대표와 북한간 「동북아비핵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성명」(3.16)</li> <li>○ 스키(鈴木實幸)수상의 방인(11.20)</li> <li>○ 「일·조우호추진의원 연맹」(3.11-18)방북</li> <li>○ 미국부정 「북한의교관 미공식접촉허용」(1983.3), &lt;행구문사태&gt;(1983.10.9)</li> <li>○ 中何把수상의 「장의외교, 합영범 제정」(9.8)</li> <li>○ 루리스 ABC-New동경지구장(85.5.11), 버언즈 「New York Times」부경특파원 방북(6.8-11), 외교부장 김영남 訪美(10월)</li> <li>○ 미 국무부 「북한외교관과의 접촉허용」(1987.3.9)</li> <li>○ 330명 규모의 사회당 친선참관단 방북(1987.7)</li> <li>○ KAL858편 폭파사건(11월)</li> <li>○ 「7·7선언」, 레이건 행정부 「대북한화해조치」(10.31), 북경에서의 북·미참사관 1차접촉(12.6)</li> </ul> |
| 81             |                     |  |
| 82             |                     |  |
| 83             |                     |  |
| 84             |                     |  |
| 85             |                     |  |
| 86             |                     |  |
| 87             |                     |  |
| 88             |                     |  |

실선:북한·미국 접선;북한·일본

78), 정부간 교섭타진기(78-88)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의 北·美, 北·日 關係를 개관하면,<sup>30)</sup>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로, 北韓은 대미·일 접촉 또는 관계개선에 노력하여, 때때로 주도권을 행사하여 왔다. 美國과는 닉슨독트린까지 적대관계가 主流였으나, 그후 인민외교 및 미정부와의 교섭에 힘썼다. 美國은 휴전당사국, 주한미군 주둔국이자 서방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나라로서 北韓의 비난대상임과 동시에 교섭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은 日本과 敵對와 友好의 關係變化속에서도 人民·政黨外交를 추진, 끊임없이 關係改善을 강조해 왔다. 日本은 在日同胞의 居住地, 親北團體·政黨이 있는 나라이자, 西方世界에의 窓口, 經濟交流·協力の 有力國이기도 하다.

---

30)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개관은 아래의 업적을 참조.

朴在圭, “북한의 대미국정책”, 고병철(편저), 「북한외교론」(서울: 극동문제 연구소, 1978), 柳錫烈, 「남북한 관계론」(서울: 正音社, 1985), 제4부.

金甲喆, 「북한 공산권 이론과 실제」(서울: 文佑社, 1986), 제3판, 제8장 제4절.

랄프 클라프, “북한과 미국”, 朴在圭(편), 「북한의 대외정책」(극동문제 연구소, 1986).

俞光震, “북한의 대미외교정책”, 閔丙天(편저), 「북한의 대외관계」(서울: 大旺社, 1987).

盧明濬, “북한의 대미·일외교”, 金昌順(편), 「북한외교론」, 북한연구소, 1978. 김세진, “북한의 대일본정책”, 고병철(편저), 앞의 책.

스칼라피노, “대미·대일관계”, 김준협·스칼라피노(공저),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 법문사, 1985), 증보판.

신정현, “북한과 일본간의 화해가능성”, 이홍구·스칼라피노(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서울: 법문사, 1986)

신정현, “북한의 대일본 정책: 인식·목표·추세”, 박재규(편), 앞의 책.

강성운, “북한의 대일외교정책과 전망”, 민병천(편), 앞의 책.

柳錫烈, “북한과 일본관계”, 「북한정책론」(서울: 법문사, 1989), 재판.



한·미·일 삼각관계는 北韓에의 威脅이고, 따라서 北韓이 대미·일 관계개선을 노리는 것은 對南政策과 對外政策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로, 美國의 대한반도 정책의 주요목표는 ‘戰爭抑止·對蘇牽制·現狀維持’였다. 蘇聯을 중심한 社會主義陣營과 對峙하고 있던 美國에게 한반도는 세계전략상, 부차적 의의 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美國은 北韓의 무력도발, 직접대화의 제의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접촉하는 외에, 관계개선을 시도할 적극적인 필요성은 지니고 있지 않았다.

세째로, 日本의 대한반도 정책도 美國의 목표를 基調로 하면서 韓國과의 親善關係를 優先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日本의 대북관계는 美國보다 밀접했다. 日本에는 在日朝鮮人, 親北團體·政黨이 존재한다. 북·일 양국은 경제교류 및 인민·정당외교를 지속시켜 왔다.

네째로, 北韓의 武力挑發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三國間의 接觸은 빈번해지고 또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특히, 70년대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며, 80년대에는 政府間 직접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북·미 보다 북·일 間에 더욱 뚜렷하다.

## (2) 1980年代 後半以後의 展開

「7·7선언」후, 레이건 행정부는 ‘對北韓 緩和措置’로서 ① 비자규정 내에서의 北韓 체육인, 학자, 문화인의 민간차원의 美國訪問 허용 ② 美國人의 北韓訪問 제한완화 ③ 人道的 次元에서의 美國의 對北韓 交

易許容 ④ 美國外交團과 북한의교관의 접촉완화 등 4개항목을 발표(88.10.31)하였다.<sup>31)</sup>

이후, 북·미 양국은 북경에서 參事官級 접촉을 가져 왔다(그 일정과 내용, 양측의 제기조건등은 <부록2-4-1> 참조). 참서관급 접촉과 더불어 북·미 간에는 상호교류 및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美國의 대북수출과 스포츠교류, 재미교포와의 경제교류도 진전되기 시작했다(<부록2-4-2> 참조).

한편 北韓과의 관계개선에 美國보다 적극적이었던 日本정부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韓國의 대북정책의 轉換이었다. 1988년 노대통령의 「7.7선언」과 UN총회연설이, 日本정부에게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7.7선언」과 관련하여, 같은 날 日本정부는 제18후지산마루사건의 해결을 전제로 “日朝間 懸案의 모든 측면에 관하여 北朝鮮과 對話할 用意가 있다”고 성명하고,<sup>32)</sup> 올림픽 개막 직전인 9월 16일에는 KAL 858편 폭파사건 이래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등, 술선하여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2월 슈바르나제 蘇聯 外相을 통하여 日本의 견해를 金日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sup>33)</sup>

1989년 1월에는 사회당 정기당대회에 출석할 北韓 로동당 대표단(金養健 국제사업부 副부장)의 입국을 허가했다. 더욱이, 3월 30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다케시타(竹下登)수상은 北韓과의 불행한 과

31) 「동아일보」, 1988.11.1.

32) 「朝日新聞」등 일본의 주요 일간지, 1988.7.7.

33) 金丸信의 방북까지의 서술은, 동일자의 일본의 주요 일간지 또는 小此木政夫, 『日本と朝鮮-これから五年』(東京: PHP연구소, 1991). pp.120-3참조.

거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새로운 결의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의 메시지는 평양방문 도중에 북경에 도착한 타나베(田邊誠)사회당 전 서기장에 의하여 같은날 中國駐在 北韓大使에게 전달되었다. 이때, 타나베는 金日成 앞으로 보낸 자민당의 카네마루(金丸信)전부총리의 서한을 지니고 있었다.

타나베와의 두번에 걸친 정치회담에서, 허담은 다케시다의 사죄발언에 주목하면서, 제18후지산마루문제의 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고, 카네마루를 포함한 국회의원 대표단의 영접을 표명하였다. 金日成 또한 카네마루와 평양방문을 환영한다는 의향을 표했다.

그러나 그후 日·北韓 쌍방의 국내사정이 카네마루의 평양방문을 곤란하게 했다. 北韓側은 89년 6월의 천안문사건, 11월의 호네커 失脚, 12월 차우세스크 처형에 직면하여 국내단속을 우선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日本國內에서는 다케시타가 리쿠르트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고, 6월초 우노(宇野宗佑)정권이 발족했지만, 7월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자 겨우 2개월만에 끝났다. 그후, 소수파벌의 카이후(海部後樹)가 최대파벌 竹下派의 지지로 수상에 취임했으나, 그 안정성이 확인된 것은 자민당이 90년 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부터이다. 또한 그 사이에 사회당과 조총련이 휘말려든 ‘파칭코 疑惑’이 표면화 되어, 北韓의 대일 태도를 경화시켰다.

1990년 3월 김영삼-고르바초프 회담이 실현되고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이 가시화되자, 비공식 접촉이 부활하여,<sup>34)</sup> 6월의 盧-고르바초프 회담이 이를 가속화시켰다. 타나베가 5월초 후카다(深田) 국민운

동국장을 평양에 파견, “金丸을 단장으로 한 자민당 대표단을 받아들여, 富士山丸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다”는 北韓側의 意向을 確認했던 것이다.

이후 參議院豫算委 질의에 대한 나카야마(中山太郎)외상의 對北韓 수교용의의 표명(90.6.4), 중의원 외무위에서의 카이후 수상의 北韓정부의 존재승인(6.15)에 이어, 7월 중순에 사회당 쿠보(久保) 부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자민당과 사회당과 조선 로동당 삼당이 우선 교섭하여, 그 후에 정부간으로 무대를 옮긴다”고 하는 방식에 合意하였다. 또한 카네마루·타나베의 평양방문 전에, 自民·社會 兩黨의 선발대가 派遣되어(9.4 평양착), 謝罪와 補償, 통신위성·직행항공 이용, 日本旅券으로부터의 北韓 제외조항의 削除, 연락사무소의 相互設置 등을 協議하여, 현안인 제18富士山丸問題의 해결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회답을 가지고 귀국했다.

1990년 9월 24일 자민당(단장: 金丸) 및 사회당(단장: 田邊) 대표단의 방문이 행해졌다. 金日成은 그들과 접견, 28일 로동당은 그들과 함께 ‘北·日관계에 관한 三黨共同宣言’ 8개항을 발표했다. 이 선언의 제2항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국교관계를 수립해야함을 認定”하였다. 그후 3회의 예비회담을 거쳐, 1991년에 들어서만도 제5차 본회담(11월 18-20일)이 진행되었다(修交交渉의 展開는 <부록2-4-3> 참조). 이와는 별도로 양국간의 상호교류 및 방문, 실질적 교류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다(<부록2-4-4> 참조).

---

34) 이즈음 일본외무성은 성명을 통하여, “앞으로 북한외교관과의 접촉을 개시하기로 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주요일간지, 1990.2.10.

〈표 2-4-4〉 北韓의 주요국·지역별 무역

(단위: 1,000달러, %)

| 국·지역명          | 수 출       |           |       | 수 입       |           |       | 총 액       |           |       |
|----------------|-----------|-----------|-------|-----------|-----------|-------|-----------|-----------|-------|
|                | 89년       | 90년       | 증감율   | 89년       | 90년       | 증감율   | 89년       | 90년       | 증감율   |
| 舊소련            | 891,171   | 1,045,108 | 17.3  | 1,495,144 | 1,517,756 | 1.5   | 2,386,316 | 2,562,863 | 7.4   |
| 중 국            | 185,165   | 124,455   | -32.8 | 377,747   | 358,518   | - 5.1 | 562,912   | 482,974   | -14.2 |
| 일 본            | 283,744   | 285,268   | 0.5   | 206,851   | 184,695   | -10.7 | 490,595   | 469,963   | - 4.2 |
| 독 일            | 36,061    | 61,099    | 69.4  | 135,646   | 87,042    | -35.8 | 171,707   | 148,141   | -13.7 |
| 항 권            | 35,722    | 26,885    | -24.7 | 139,285   | 112,906   | -18.9 | 175,007   | 139,791   | -20.1 |
| 39개 국·지역<br>합계 | 1,609,791 | 1,715,631 | 6.6   | 2,560,533 | 2,535,076 | - 1.0 | 4,170,324 | 4,250,707 | 1.9   |

(출처: 각국무역통계에 근거한 日本 제트로의 추정 통계)

## 나. 關係變化에 있어서의 兩國 意圖

### (1) 北·美 兩國의 意圖

#### (가) 北韓의 對美政策

北韓의 대미정책은 역사적으로 冷戰의 산물이었는데, 동북아 냉전 체제의 재편가능성에 따라 和解와 共存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北韓은 1차적으로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및 한·미동맹관계의 약화, 2차적으로 北韓의 국제정치적 지위향상 및 경제적 실익추구를 극대화시키고자 대미관계개선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北韓의 對美政策의 최고 목표는 전통적으로 對南赤化統一의 장애물 제거, 즉 주한미군철수였다. 그러나 현 정세하에서는 이 목표가 攻勢的 측면에서 守勢的 측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北方三角體制'가 崩壞되어 蘇聯 및 中國의 軍事援助의 限界가 노출된 반면, 韓·美軍事協體制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北韓의 대미정책목표는 韓·美軍事同盟의 威脅을 除去하기 위한 주한미군 撤收와 한반도 非核地帶化 등의 平和·軍縮攻勢로 轉換한 듯하다. 즉 北韓은 對美和解 제스처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핵무기 철거 및 대미직접협상에 의한 평화협정체결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기도하고 있다.

한편 東歐事態와 소연방의 붕괴 및 공산당 해체 그리고 이어진 독립국가연합의 탄생으로, 北韓은 主體思想에 의거한 폐쇄체제유지나 金正日 승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함께 外交的 孤立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北韓의 대미관계개선은 한·미우호관계의 약화 및 자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책임과 동시에, 체제 유지의 사활 또는 개혁을 위한 시간 확보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北韓은 金正日 승계체제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승계체제의 후견자였던 蘇聯邦이 崩壞된 狀況 下에서, 美國과의 關係改善이 없이는 그 體制維持가 困境과 不安에 直面할 것을 豫想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대미관계개선을 통한 군사위협 제거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90년 49.6억달러, GNP對比 21.5%)에 시달리고 있는 北韓의 경제곤란을 덜기 위한 方便이기도 하다. 美國과의 關係改善은 日本을 비롯

한 서방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美國은 貿易敵國條項 (Trading with Enemy Act)에 의해 北韓과의 공식적 통상관계를 회피하고 있으며, 대공산권 무역금지조치 (COCOM)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美國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北韓측의 實質的 姿勢 變化가 필요하다.

#### (나) 美國의 對北政策

美國의 對北정책은 한반도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전략의 하나로 전개되어 왔다. 즉 美國의 기본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 對蘇견제를 통한 현상유지 등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國際環境의 變化에 따라 1차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냉전상태의 해소, 2차적으로는 軍事優位 및 안정된 經濟關係의 維持를 위하여 對北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北韓의 核武器開發 阻止가 거의 1차적 목표로 부상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美國은 경제적 곤궁과 체제유지 및 권력승계문제를 안고 있는 北韓이 더이상 對南 武力革命勢力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北韓은 한·미양국과의 平和共存을 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困境에 빠진 北韓이 거꾸로 強硬策을 도모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美國은 北韓에 대한 敵對關係의 持續이 오히려 東北亞 安定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美國은 韓·蘇 修交 및 韓·中 關係改善이 韓國 내에서의 反美運

동이 高潮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질서유지 및 자국의 전략적 우위의 유지에 沮害要素로 작용할 것을 憂慮한다. 따라서 美國은 韓國과 獨立國家聯合, 특히 러시아 聯邦과의 紐帶強化 및 韓·中修交에 대한 統制手段으로 ‘北韓카드’를 확보하고자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美國 내의 여론의 일부 및 정치인, 학자들 가운데는 軍縮과 世界平和를 주장하면서 北韓을 同情하고 대북관계개선을 요구하는 勢力이 존재하고 있다.

軍事的으로 美國의 世界戰略은 對蘇 핵전략, 유럽 및 NATO방위, 중동방위, 아·태방위 順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동북아지역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데탕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美國의 군사전략이 北韓의 위협이라는 枝葉的 關心事에 구애받지 않은 채 維持·強化되기 위해서는 北韓의 평화·군축공세를 약화 내지 무산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주한미군의 존재나 美國의 동북아 전략은 北韓에 대한 위협이기보다는 동북아 질서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한 防波堤이기도 하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美國은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한다.

經濟的 次元에서 北韓과의 交流가 短期的으로 美國에게 利益을 가져다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두만강유역 특구개발 등 경제개방을 시도하는 北韓과의 경제협력이 長期的으로는 美國에게도 ‘東北亞 經濟圈’에 참여할 수 있는 橋頭堡가 될 수 있다. 이는 한·미, 미·일 通商摩擦이 深化된 현 시점에서 韓國에 대한 經濟的 要求를 強化시킬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經濟的 霸權을 노리고 있는 日本을 牽



制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경제력 감소를 겪고 있는 美國은 대북관계개선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軍事的 安定을 誘導하여 군사비를 덜 수 있으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韓國側 分擔金을 보다 크게 요구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는 길이 기도 하다.

## (2) 北·日 兩國의 意圖

### (가) 北韓의 對日政策

80년대 후반 이래 韓國이 ‘北方外交’에 힘쓰자, 北韓은 이에 대응한 ‘南方外交’의 일환으로 90년 9월부터 日本政府와의 修交交渉 段階에 進入하였다. 目標은 傳統的 盟邦인 中國과 蘇聯(그리고 새로이 탄생한 독립국가연합)과의 關係變化에서 발생한 外交的 損失을 보상하고, 日本의 資本 및 技術導入을 통하여 經濟難을 克服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1차적으로는 日本의 자본·기술도입을 통한 경제난 극복, 2차적으로는 ‘남방외교’의 추진으로 중국과 소련 및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변화로 인한 외교적 손실보상과 한·미·일 三角관계에의 침투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北韓은 經濟政策(‘자력갱생’ 路線)의 失敗(90년에는 최초의 마이너스(-3.7%) 성장, 91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와 食糧難, 70년대 중반 이래의 대외채무누적(90년까지 78억달러)과 과중한 軍事費 負擔, 對外貿易의 不振(89년의 전년比減少 -10.1%, 90년 1.9%증가)등의 經濟難에 처해 있다.

中國 및 蘇·東歐의 開放·改革政策으로 社會主義 貿易關係는 崩壞되었다. 예컨대 蘇聯은 91년부터 硬貨決濟를 요구했으나 1년간 유예되었고, 中國마저도 92년부터는 硬貨決濟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蘇聯의 보수파 쿠데타 실패와 독립국가연합의 탄생으로 北·蘇 동맹 관계는 사실상 崩壞되었다. 蘇聯은 北韓에 대한 經濟支援을 중단하고 47억 6천 5백만달러(1991년 8월 말)의 債務支拂을 要求하였으며 러시아 연방이 이 요구를 繼承하고 있는 상태이다.

北韓 대외무역액의 약 60%를 점해 온 최대무역국 蘇聯과의 무역은 1991년에 들어 전년비 1/5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제2의 무역상대국 中國(작년 약 20%)도 蘇聯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 日本은 北韓의 무역상대국 중 제3위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그 대부분이 조총련과의 무역(朝朝貿易)에 지나지 않는다. 대일수교로 北韓은 보상금과 경협에 의한 경제회복을 꾀하고, 日本을 제1무역상대국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日本과의 수교는 朝總聯系 資産의 合法的 이용의 길을 열 수 있다. 북한은 90년 9월 金丸, 田邊의 방북 전에 이미 최수길 재무부장(대성은행 은행장, 당 중앙위 소속)을 일본에 파견, 조총련의 기본조직과 산하단체 등의 토지, 건물 및 개인보유자산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총련계자산은 최소한 약 48조엔(2백 54조 4천억원, 3천 6백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재 일본 한국·조선인 민주통일연맹의 李光의장은 “최근 日·朝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北韓의 진의는 이처럼 막대한 재산의 합법적 입수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수길은 北·日修交交渉의 본회담을 앞둔 작년 11월에 방일,

〈표 2-4-5〉

(통일연맹 발표)

| 조총련 관계 및 산하단체, 조직의 공유토지·건물의 평가액 |                         |                       |
|---------------------------------|-------------------------|-----------------------|
| 조총련 기본조직사무소 총계                  | 약 6조엔                   | 합 계<br><br>20조 2700억엔 |
| 조총련 각급 조선학교                     | 약 11조5000억엔             |                       |
| 조은 신용조합                         | 약 2조 4000억엔<br>(예금량4조엔) |                       |
| 상공회 재산                          | 약 3000억엔                |                       |
| 금강보험                            | 약 300억엔                 |                       |
| 조선신보사                           | 약 100억엔                 |                       |
| 기타 관련단체                         | 약 300억엔                 |                       |
| 개인 보유자산                         |                         |                       |
| 유흥업체관계자                         | 약 15조엔                  | 합 계<br>28조엔           |
| 유흥업체                            | 약 5조엔                   |                       |
| 부동산업체                           | 약 5조엔                   |                       |
| 기타                              | 약 3조엔                   |                       |

조총련 재정국에게 일본 국내의 조총련계 자산의 전모를 산출하도록 지시했다(〈표 2-4-5〉 참조).

조총련의 공유자산(20조 2700엔, 약 1500억불)의 국유화 내지 합법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엄청나게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적어도 10조엔의 자산을 입수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李光의장은 “김정일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 돈을 위하여 웬만한 것을 일본에 양보하고 일·조교섭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 “북한의 장래는 일·조 정상화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政治·外交的으로 동북아 역학관계의 變化에의 適應과 이미 개어진 북방삼각관계의 보완을 위한 方便으로 北韓으로서는 ‘南方外交’의

창구인 日本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하다. 동서 신데탕트의 세계는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로 전환되어 있으며, 南韓의 ‘북방외교’의 성과는 北韓의 ‘남방외교’를 촉진시켰다. 대일관계개선은 ‘남방외교’ 성패의 갈림길이자 남방 삼각동맹체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방편이기도 하다.

한편 日本은 北韓에 대해 직접적으로 軍事的 威脅을 가하지는 않으나, 駐日美軍의 存在와 자체 防衛力 增強으로 潛在的 威脅勢力이 된다. 日本의 방위력 증강은 ‘軍國主義復活’을 우려해 온 北韓이 日本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주변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구실을 제공한다. 역설적이거나 北韓은 日本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對美·對日 평화·군축공세를 주변국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할 수도 있다. 거꾸로 北韓은 대일수교에 의한 日本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이용하여, 北韓의 軍事力의 質的 向上을 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나) 日本의 對北政策

戰後 日本의 대한반도 정책은 美國의 한반도 정책의 틀 속에 묶여 있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獨自外交路線을 標榜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로 北韓과의 ‘戰後清算’이라는 名分 下에 南北韓의 均衡과 現狀을 維持시키면서 자국의 최대이익을 보장하는 實利外交追求를 目標로 하고 있다. 日本은 經濟大國에 걸맞는 政治·軍事的 역할을 확대할 의도로 동북아질서 再編過程과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 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北韓과의 關係正常化를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政治的 影響力을 擴大시키고, 2차적으로는 資本과 技術에 의거한 대

북 經濟浸透를 圖謀함으로써 ‘環日本海 經濟圈’에서의 hegemon 를 쥐려고 한다.

美·日 安保協力體制 안에서 ‘全方位外交’를 表明하던 日本은 80년 代 中盤 이후 戰後清算을 바탕으로 한 ‘創意外交’를 標榜하고 나섰다. 日本이 最後로 남은 戰後청산의 對象地로 보고 있는 北韓과의 關係 개선은 독자외교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 1988년 후반의 리쿠르트 疑惑事件, 소비세(賣上稅) 制度의 導入 등으로 自民黨 政權에 대한 不信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韓·蘇 國交樹立, 韓·中 關係改善, 中·蘇 關係正常化, 美·蘇의 和解 등은 內部 不安要因을 對外政策 으로 풀 수 있는 環境을 조성했다.

1991년에 들어 日本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積極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大國化, 軍事大國化 目標을 착 실히 實現시켜 나가고 있다. 예컨대 蘇聯과의 平和條約再協議,<sup>35)</sup> 유엔 安保理 非常任理事國 被選,<sup>36)</sup> 유엔 평화유지활동 參與,<sup>37)</sup> 美國과의 新

---

35) 모스크바를 방문(1991.10.13-18)한 나카야마 외상은 15일 고르바초프, 엘친과의 잇따른 회담에서 지난 56년의 일·소공동선언에서 합의한 2도반환(하바마이, 시코탄)을 확인하고 그 댓가로 25억달러의 긴급지원 외에 일본기업들의 소련극동지역개발 참여의 길을 열었다. 또한 지난 40년간 유지해 온 대미안보의존체제를 시정하는 작업에 돌입, 가상적국 소련과의 안보협약체를 설치, 미국중심의 동북아안보체제를 일본중심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36) 일본은 지난 10월17일 유엔총회에서 사실상의 만장일치(161개국 중 158개국 찬성)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7번째)되었다. 걸프전후 국제정치에서 유엔의 역할이 강화된 상황에서 일본은 ‘사상유례 없는 득표활동’을 펼친 결과인 점이 주목된다. 선임 직후 주요신문은 일본의 유엔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주장했다. 朝日新聞은 “일본정부는 4년 후 유엔창설 50주년때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 한다”고 밝혔으며,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선출에 앞서 구적국 조항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37) 일본정계는 12월의 임시국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파견을 법제화, 캄보디아 지역부터 그 파병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同盟締結<sup>38)</sup> 등이 그것이다.

다른 서방국가들에 앞선 北韓과의 修交는 韓半島 및 東北亞에서의 日本의 位相을 上昇시키고, 大북 先占效果에 의한 이니셔티브와 동북아시아의 海峽모니 掌握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北韓과의 修交는 그 ‘補償原則’의 妥結方式에 따라 日本에 커다란 經濟的 利益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日本은 소위 ‘環日本海 經濟圈’의 中心을 占有하는 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北韓과의 경제교류가 活性化되면, 이를 통하여 中國의 東三省 및 러시아 共和國의 시베리아 開發에도 進出할 수 있는 橋頭堡를 確保하게 된다.

北韓은 현재 蘇聯을 대신해 줄 經濟交流의 相對國을 찾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 편승, 日本은 자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北韓의 第1 貿易相對國이 될 수 있다. 日本은 北韓의 값싸고 양질의 勞動力과 풍부한 資源이 自國의 資本·技術과 結合되면 北韓의 潛在力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39)</sup>

日本은 美國의 防衛分擔要求에 따라 동아시아의 秩序安定이란 名分을 내걸고 軍備를 增強하고 있다. 그 주된 목표가 동북아질서 개

---

38) 10월 29-30일에 외무성 마쓰우라(松浦晃一) 북미국장과 방위청 히타케야마(畑山蕃) 방위국장을 파견, 두나라 안전보장에 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93년 이후 추진될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 따른 동아시아주둔 미군감축계획에 관하여 탐문하였다. 이와 함께 11월 17일 한국 방문길에 동경에 들른 과월美합참의장, 20-22일까지 진행된 한-미안보회의에 참석한 후 방일한 체니국방장관과 아시아안보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나름대로 동북아시아 안보유지에 있어 일본과 한국의 방위분담을 늘려 나가면서, 미국주도 안보체제의 구축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차세대 전투기(FSX)계획(한국과는 KFP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39) 小牧輝夫, 小川和男編, 「環日本海經濟圈」(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1)의 “北朝鮮”編 참조.

편과정에서의 힘의 空白을 日本이 代身하려는 것이다. 日本은 北韓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분쟁해소 및 동북아 지역질서의 안정유지라는 목표에 貢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목표를 軍事的 側面으로 連結시켜보면 日本의 군사력 증강은 南北 武力衝突 可能性에 대한 防波堤라는 論理가 된다. 日本은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자국의 방위력 증강이 北韓에 대한 威脅이 아니라 동북아 秩序安定을 위한 것이라는 說得工作을 펴나갈 것으로 豫想된다.

#### 다. 關係變化의 推移와 要因

##### (1) 北·美 關係

###### (가) 關係變化의 推移

美國側의 前提條件과 그 條件들의 進展 狀況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對話의 進展은 北韓이 蘇聯의 보수파 쿠데타 기간 中 1991년 8월말로 예정된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연기시켰으나, 9월의 南北 유엔동시가입과 '부시선언', 10월의 '고르바초프선언'이 있은 후 再開(10월22-25)되었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2월11-13)에서는 核問題를 남겨 두었으나, 歷史的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略稱 '남북합의서')의 妥結을 보는 成果를 올렸다.

둘째, 비무장지대에서의 신뢰구축 조치는 南北韓과 美國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남북합의서' 제12조의 후속조치와 北·

美간의 和解에 따라 커다란 進展이 있을 것이다. 셋째, 테러리즘의 포기는 87년 11월의 KAL기 사건이후 北韓은 테러행위를 自制하고 있다. 다만 美國은 아직도 北韓을 테러국가로 指目하고 있다. 넷째, 韓國戰 參전 미군유해의 반환문제는 1991년 6월 24일 두번째 美軍遺骸(11구)의 送還시, 강석주와 스미드의원이 ‘共同委員會’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관측이 있다. 또한 제18차 參사관 접촉에서는 그 定例化에 同意하였다.

다섯째, 핵사찰 수용문제는 美國측이 내건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근 北韓은 ‘부시선언’과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1991. 11.8) 및 주변국의 압력조치에 承服하기 시작했다.<sup>40)</sup> ‘남북합의서’가 채택(12.13)된 후, 노태우 대통령은 ‘核不在’를 선언(12.19)했고 이에 和答하여 북한 외교부는 남북동시 핵사찰과 미국과의 협상을 주장하면서도 핵안전협정에의 서명과 핵사찰 수용을 聲明(12.23)하였다. 제3차 관문점 핵관련 대표회담(12.31)을 통하여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공동선언’(略稱 ‘비핵화 공동선언’)에 同意함으로써 이제 는 이의 성실한 이행과 북한의 핵사찰 서명 및 비준<sup>41)</sup> 그리고 그 實行이 남아 있을 뿐이다.

---

40) 제23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11.20-21)가 진행되던 21일 北韓을 방문하고 서울에 들른 美전략문제연구소(CSIS) 副소장 윌리엄 테일러를 통해, 北韓은 ‘南北韓의 핵무기에 대한 동시사찰’ 만을 條件으로 核査察受容의 意思를 傳達한 것이다. 그후 25일 北韓 외교부는 “주한 미군 핵무기를 시작하면” 핵안전협정을 署名하겠다고 聲明하였다.

41) 북한 외교부는 1992년 1월 7일 가까운 시일 안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성명하였다. 이미, IAEA는 북한이 1월 6일에 전인찬 오스트리아 駐在 북한대사가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곧 비준할 것”이라고 통고했다고 밝혔다.



北韓側의 前提條件과 그 條件들의 解決狀況은 다음과 같다.

첫째, 北·美間의 직접대화(대사급 회담 등) 및 관계개선은 北韓의 유엔가입이 이루어진 만큼 그 핵사찰 수용문제의 實質的 進展에 따라 가속될 것이다. 이미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사찰을 앞당기기 위하여 북·미 관계의 개선을 合意하였고, 실제로 1991年 末 드세이 앤더슨 美 국무부 亞·太 담당 副 차관보와 허종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間에 이를 위한 두차례의 비밀접촉을 가진 바 있다.<sup>42)</sup> 미국은 북경에서의 참사관 접촉과는 별도로 핵문제 등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북한측과의 大使級 接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43)</sup> 1992년 1월 7일 미국은 북한과의 차관보급 고위접촉(뉴욕)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sup>44)</sup>

둘째,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선언’ 問題에 대해 美國은 아직 카터 대통령이 표명한 바 있는 ‘일반적 핵불사용’을 固執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非核地帶化’는 南北韓 및 주변강대국의 보장조치가 필요한 난제로서 이에 대해 美國은 한반도 ‘非核化’로 맞서 왔으며 ‘비핵화 공동선언’의 타결로 일단 북한이 讓步한 셈이다.

넷째,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문제로 전자에 대해서는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收措置가 내려져 있으며, 후자는 노태우 대통령의 ‘核不在’ 선언으로 이미 解決된 상태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철수는 90년 年-위너수정안 決議에 따라 90-2년까지의 1단계철수(약 7천명감축)가 進

---

42) 「중앙일보」, 1992.1.9.

43) 「중앙일보」, 1992.1.4. 이는 부시의 방한시 한·미 회담에서도 거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4) 「동아일보」, 1992.1.8.

行中이며, 93-5년까지의 減縮規模는 協議 중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對北安保뿐만이 아니라 蘇聯과 中國, 나아가서는 日本을 포함한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安保와도 聯關되어 있는 問題로서, 완전철수는 상당히 요원한 實情이다.

다섯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대체 및 3자회담의 실현은 제5차 남북총리회담의 가시적 성과에 따라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남북간의 合意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3자회담은 美國의 同意가 이루어지면 그와 함께 成事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팀스피리트 훈련의 中止問題는 제5차 고위급 회담의 成果 및 北韓의 핵사찰 수용의 進展에 따라 부시의 방한시(92년 1월6-8) 팀스피리트 92의 중지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76년 이래 실시되어 온 팀스피리트 훈련은 16년만에 중지되었고 북한의 태도 여부에 따라 완전히 폐기될 可能性도 있다. 일곱째,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쌍방정부 간의 合意問題는 北韓의 유엔가입으로 머지않아 관문점 뿐만 아니라 뉴욕 등지에서의 論議가 이루어질 때, 양정부 간의 合意可能性이 가장 높은 懸案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나) 關係變化의 要因

北·美관계개선의 促進要因으로 우선 國際政治的 要因을 살펴 본다.

첫째는 脫冷戰이다. 즉, 동북아지역으로 擴散된 탈냉전은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중에서도 가장 閉鎖적이고 硬直된 北韓에까지 影響을 미치고 있다. 北韓도 變化의 兆朕을 보이고 있으며, 北·美 間의 관계

개선 交渉自體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北·美 관계개선의 최대의 걸림돌은 北韓의 핵사찰 全面受容이었다. 北韓은 國際的壓力<sup>45)</sup>에 屈服하고 IAEA에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사찰 수용을 통보하였다. 이제 는 실질적인 핵사찰의 實行問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셋째, 1990년 9월 말 한·소수교, 특히 1991년 8월 보수파 쿠데타 이후, 蘇聯의 대 북 정치·군사·경제적 지원은 거의 斷絶된 상태이며 독립국가연합의 탄생으로 이러한 단절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넷째, 中國은 전통적 우방인 北韓의 고립 탈피에도 노력하여 이미 북·미관계개선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할 것이다. 中國은 韓國과의 국교수립을 원하고 있으나 北韓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의식하여 지연시키고 있다. 금년 10월(4-15일) 訪中한 金日成에게 中國은 국내경제의 개혁·개방, 긴장완화추세로 나가는 世界潮流에 따를 것을 충고하였다.

---

45) 예컨대, 10월21~22일의 IAEA연차보고서를 심의한 제46차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핵사찰을 촉구(24개국중 12개국이 북한의 핵사찰수용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10월30일 美上院外交委員會 亞,太소위원회 앨런 크랜스톤 위원장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아시아안보협력회의」 구상은 북한과 중국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기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베이커 국무장관이 최근 *Foreign Affairs* 울호에서 제의한 「2+4」구상은 이를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 삼국은 제1차 한미일 정책기획협의회(11.2)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공동 대응을 합의하고 일본은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포기를 포함하는 핵사찰수용을 북일수교교섭의 조건으로 삼기로 했다. 서울 제3차 亞太자료회의(APEC) 기간(11.12~14)중에는 중국의 錢其琛 외교부장도 북한의 핵사찰수용에 협력할 뜻을 표명했으며, 베이커국무장관은 「2+4」 구상이 주변국 협조에 의한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11월 20일부터 열린 SCM에서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제재조치가 협의 되었다. 한편, IAEA는 내년 2월 비인에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제핵사찰 실시를 결의할 예정이었다.

다섯째는 南韓의 對北柔軟外交이다. 노대통령의 <7.7선언>은 북·미관계개선을 誘發시킨 요인이 된 바 있으나, 그의 유엔加入演說(1991.9.24)에서의 평화통일 3원칙 제시와 남북총리회담 등에서 表明되고 있는 南韓의 對北유연외교는 加速되고 있다. 北韓은 南韓과의 體制競爭에서 敗北하지 않고, 長期共存體制를 定立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핵사찰 전면수용을 단행하고 대미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지난 제5차 수교교섭(11.18-20)까지 日本측은 핵재처리시설의 포기를 포함한 핵사찰수용문제를 조건으로 北韓과의 수교를 지연시켜 왔다. 그러나 北韓은 핵사찰수용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를 기회로 日本이 完全한 査察 以前에 北韓과의 修交를 서두른다면 美國도 對北관계개선에 積極적으로 나올 可能性이 있다. 한편 美國은 對北관계개선에서 얻을 수 있는 利益을 追求하면서, 韓國에 대해서 安保分擔이나 貿易摩擦등의 問題解決에 이용할 ‘北韓카드’를 確保하고자 한다. 美國은 요즘 對北관계에 있어서 핵사찰전면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었으나 이 문제의 進展에 따라 美國도 80년도 후반 이후 보여준 對北유연외교에 復歸하게 될 것이다.

北韓으로서도 現實主義 政策 및 ‘南方外交’에 있어서의 實利를 追求하기 위하여, 美國과의 平和共存을 위한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北韓은 대미수교교섭을 對內的인 體制維持 및 強化를 위한 宣傳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즉 ‘미제국주의자가 백기를 들고’ 北韓을 국가로 承認하고 平和共存과 親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평화·친선’이라는 北韓外交理念의 勝利라고 宣傳될 수 있는 것이다.

北·美 관계개선의 遲延要因으로서는 우선 國際的 要因과 北韓의 核査察 實行이 가장 중요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의 대미강경정책의 배경이 되는 韓·美·日 軍事協力體制는 최근 더욱 強化되고 있다. 예컨대, 11월 1일 워싱턴에서의 미·일국가안보협의회의(NSC)에서는 美國이 日本의 자위대증강을 위한 차세대전투기(FSX)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키로 合意하였고, 같은 날 발표된 92년도 美國방예산(2910억달러)의 내용에는 SDI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시스템의 개발과 실전배치를 認定하였다. 1991년 11월 제23차 韓美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北韓의 핵개발 문제에 대비하여, 21일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에 걸프戰 武器를 투입하는 대규모 作戰을 合意하기도 하였었다.<sup>46)</sup>

둘째, 북방삼각동맹구조의 弱化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소, 북·중 우호동맹조약은 유효하다. 더욱이 독립국가연합의 러시아 연방이 北韓과의 우호동맹조약의 更新을 再檢討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中國은 아시아 사회주의의 宗主國으로서 政經分離原則을 내걸고 北韓과의 連帶를 優先시켜 北韓의 입장을 強化시켜줄 수 있다. 中國은 美國을 위시한 서방국들의 인권문제제기나 경제제재 위협 등을 서방측의 ‘和平演變’=‘평화적 이행’전략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는 점에서 北韓과 동병상련하고 있다. 金日成의 방중시에도 中國은 전통적

---

46) 이러한 韓·美, 美·日 間의 軍事協力은 北韓의 태도를 強硬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遲延要因으로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北韓을 柔軟하게 하여 관계개선의 促進要因으로 작용했다. 즉 北韓의 핵사찰 수용의사 표명 등 유연한 자세로 팀스피리트 92는 중지된 것이다. 이 같은 現象은 促進·遲延 요인을 나누는 일이 恣意的일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사실 요인분석에서는 이러한 現狀을 念頭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호협력관계를 과시하였고,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셋째, 남북관계개선에서의 성과를 바라는 韓國은 북·미관계개선이 필요 이상으로 진전되는 것을 牽制해 왔다. 넷째, 한·미·일 군사협조체제가 공고한 반면, 북한과 소련과의 군사동맹이 사실상 崩壞되어 있는 시점에서 北韓은 대남·대미 군사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한 核武器開發을 시도한 듯하다. 北韓은 핵사찰 전면수용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 및 남북동시핵사찰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韓國이 美國의 공중·해상핵 등 핵우산 보호 하에 있는 한, 핵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強硬한 主張도 내세웠었다.<sup>47)</sup> 이제 北韓이 핵사찰수용 의사를 표명하긴 했으나, 이의 實質的 實行段階에서 여러 가지 難點이 發生할 素地가 있다. 즉 핵안전협정의 서명 이후에도 그 비준문제, 사찰단의 활동규제, 비밀리의 핵무기개발 등으로 嚴格하고도 實效性있는 現場查察 및 核再處理施設의 拋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時日과 難關이 存在한다.

한편 國際的 要因과 北韓의 核查察 實行이외에도 兩國의 관계개선을 위한 前提條件의 解決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北韓側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대북 핵불사용,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 대미평화협정의 체결, 팀스피리트 훈련의 완전 중지 등과 美國側의 제기조건과의 사이에는 折衝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 散在해 있다. 兩側의 主導權 다툼도 이들 조건의 讓步와 妥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

47) 「중앙통신」, 1991.11.1.

상기한 전제조건 외에도 北韓의 對美關係改善을 阻害하는 要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는 兩國 外交理念의 衝突이다. 北韓은 '우리식 社會主義'를 고집하는 나라이며, 아직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 반제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美國은 自由民主主義를 신봉하고 자유·인권 등의 이념에 충실하는 외교전통을 고수하는 나라이다.

둘째는 北韓의 內部團束과 關係改善의 딜렘마이다. 北韓은 傳統的으로 '美帝國主義'에 대한 敵對意識을 지녀왔으며 대미관계개선을 추진중인 現時點에서도 이러한 의식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北韓은 대미관계개선으로부터 유발될 資本主義 文化流入 등 '平和的 移行戰略'을 憂慮하고 있다. 北韓의 現정권은 正當性的의 2대지주로 볼 수 있는 主體思想과 反美·反帝路線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대미관계개선 자체 또는 그 개선의 노력은 後者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主體思想과 正當性的의 危機로 이어질 수가 있다.

## (2) 北·日 關係

### (가) 關係變化의 推移

日本側의 對北 修交條件은 핵사찰 수용 문제, 유엔동시가입, 남북 대화의 進展 등이 주요 조건이었으나, 제5차 북·일수교회담에서 핵사찰 수용의 조건에 핵재처리시설의 포기가 追加되었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조건은 거의 충족된 상태이다. 즉, 핵사찰 수용은 그 實行過

程에서의 문제를 제외하면 해결상태이며, 남북한이 이미 유엔에 가입해 있고 남북대화는 앞으로 보다 큰 진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외에도 북·일수교 과정에는 첫째, 補償金 額數 및 ‘補償方式’ 問題 둘째, 北韓의 管轄權 確定問題와 韓·日合併條約 등 舊조약의 有·無效問題 셋째, 在日朝鮮人 問題(北韓측)와 ‘李恩惠’ 問題(日本측) 등 주요의제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첫째가 가장 중요한 議題이며 둘째는 첫째의 타결 여하에 달린 문제이다. 셋째는 북·일수교를 좌우하는 주요의제에서 일단 除外되어 있다. 결국 북·일수교 과정에는 北韓의 핵사찰 實行問題와 ‘補償原則’의 合意가 주요 의제로 남아있을 뿐이다.

#### (나) 關係變化의 要因

兩國 關係改善의 促進要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역시 脫冷戰이다. 蘇·東歐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부시 선언’과 ‘고르바초프 선언’ 등은 동북아에서의 탈냉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은 앞으로 그 장래를 예측하기 힘든 여러가지 難題들을 안고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는 없다고 보며 오히려 그 개혁의 성과에 따라서는 이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둘째는 南韓의 對北柔軟政策과 北方外交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7. 7선언」이 북·일국교교섭의 계기로 작용한 바가 있으며, 南北韓의 UN 가입 이후 南韓은 北韓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북·



일관계의 進展을 不可避한 하나의 과정으로 認定하고 있다. 南韓의 북방외교성과는 北韓의 ‘南方外交’를 가속시킴과 동시에 日本의 대북 수교 의지도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日本은 韓國의 북방외교를 南北韓 등거리외교의 契機로 삼고 있는 것이다.

셋째, 中國은 韓國과의 경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그 수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외교적 고립과 경제곤란에 시달리고 있는 北韓을 의식하고 있다. 즉 북·일수교와 한·중수교를 연계시켜 놓고 북·일수교를 측면에서 支援, 協助하고 있다. 1991년 8월 李鵬首相은 海部首相과의 회담시 “北韓을 너무 곤궁에 몰지말고, 日本이 빨리 經濟支援, 外交關係樹立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고, 10월에 訪中한 金日成은 江澤民과의 회담에서 ‘북·일수교 타결까지 한·중수교 연기’에 同意하였다.

넷째, 北·美關係改善의 速度는 아직 북·일수교의 진행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속도가 빨라지면 日本도 수교교섭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즉 남·북, 북·미관계의 進展보다 한발 앞서 北韓과의 國交交渉을 進行시켜 왔던 日本은 최근의 남·북, 북·미관계의 和解 분위기를 대북수교교섭에 연계시켜 이들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北韓과의 수교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우선 첫째로, ‘三黨共同宣言’은 日本의 외무성을 포함한 정부당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이같은 政黨外交의 成果가 內閣責任制의 日本政府에 지대한 影響을 끼칠 可能性은 항상 存在하고 있다. 이 선언을 주도한 카네마루·타나베는 각각 자민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의

최고실력자들이다.

카네마루는 자민당의 최대파벌인 타케시타(竹下)파의 ‘經世會’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리더로서, 1991년 10월말 당선된 미야자와(宮澤喜一)를 총리후보로 추대한 막후조정자이다. 그는 11월5일 출범한 미야자와내각의 배후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실제로 외교통 출신으로 총리가 된 미야자와가 ‘北韓과의 修交’를 公約으로 내건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야자와에 앞서 1991년 9월 사회당위원장이 된 타나베는 현실정책추구를 골자로 한 ‘黨路線’의 개편을 단행하였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하여 새도우 캐비닛을 구성하고 있다. 이미 참의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당은 자민당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부상하여, 카네마루는 사회당과의 연합을 주장할 정도이다. 對 한반도정책에서도 타나베는 지금까지의 친북일변도를 修正하여 韓國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북·일국교수립의 막강한 支援者라는 사실이다. 지난 10월7일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길에 日本에 기착한 연형묵총리와 회담한 타나베는 ‘내년 4월 15일 이내 수교’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約束하였다.

둘째로, 日本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70년대부터 거론되어 80년대 나카소네수상이 ‘創意外交’를 표명하면서 추진되어 온 독자외교노선과 ‘전후청산’ 노력은 北韓과의 수교교섭이 그 試驗舞臺가 될 것이다. 미야자와가 중·참의원 본회의에서의 所信表明演說(11.8)에서 “美·日친선이 日本외교의 기본구조”라고 하면서도 “아시아와의 連帶”를 강조한 것은 金日成이 대일수교를 의도로 “아시아는 아시아인

이 解決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無關하지 않다.

셋째로, 北韓은 ‘環日本海 經濟圈’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日本은 그 수립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對北경제진출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아직 日本의 財·業界는 대북경제진출에의 의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일수교의 진행상황과 함께 北韓의 개방지구에 대한 韓國 등 관련국가들의 진출성과를 觀望하면서 개입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日本은 대북경제진출에 있어서 적어도 두가지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나는 북·일수교가 이루어진 후 또는 그 이전에라도 經協資金이나 補償金이 支出되면 日本의 경제력의 뒷받침을 받는 資金·技術이 손쉽게 進出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日本이 이미 식민지시대에 北韓지역의 요소요소를 조사해 둔 資料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1930년대 이후 北韓지역을 공업화시킨 경험을 축적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日本이 대북경제진출에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엄청난 潛在力을 發揮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넷째로, 日本에 존재하는 조총련 및 친북세력은 북·일수교를 촉진시키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9년의 ‘과칭코 疑惑’ 사건에서 보듯이 조총련은 정치자금지원이나 로비活動으로 日本정계에 깊숙히 침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총련 외에도 日本내에는 정·재·학·예술계나 민간차원의 친북세력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활동하고 있다. 반드시 친북성향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남북을 공히 ‘하나의 조선’으로 여기고 남북의 衡平을 바라는 마음으로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多數 存在하고 있다.

한편 현재 北韓은 經濟難 脫皮가 體制維持를 위한 초미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 과제를 가장 가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보상 또는 청구권의 이름으로 日本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45억(日本측) 내지 100억(北韓측)달러의 資金 導入이다. ‘先수교 後경제협력’에 북·일 양국이 합의한 이상, 北韓으로서는 앞으로 북·일수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兩國 관계개선의 遲延要因을 살펴 본다.

첫째는 역시 北韓의 핵사찰 實行問題와 日本에 대한 한·미 양국의 協調 요구이다. 北韓의 핵사찰 전면수용문제는 북·일수교교섭에서도 最大의 障礙要因으로 되어 있으나, 北韓은 이 문제를 수교교섭과는 무관한 문제로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미야자와수상은 취임 후 핵사찰수용 없이는 “絶對로” 북·일수교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했으며, 부총리겸 외상인 와타나베(渡邊美智雄)도 내각출범 후의 첫발언(11.6)에서 北韓의 핵사찰과 북·일수교를 연계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 APEC에 참석한 와타나베는 北韓의 핵재처리시설의 포기까지 수교조건에 첨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北韓은 이제 핵사찰수용의 意思를 傳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은 北韓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비준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핵사찰의 ‘實行’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일수교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양국은 ‘補償原則’ 및 補償金 妥結등의 懸案問題를 안고 있다. 北韓側의 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결국 ‘補償 및 經協方式’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상금 액수의 결정과 자금의

이용, 경협의 방식 등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한·일 강제합방조약 및 식민지시대 구조약의 무효·유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日本측의 ‘李恩惠’문제와 日本人 妻의 고향방문 등의 문제나 北韓側의 재일조선인 문제 등의 타결도 수교교섭을 지연시키는 伏兵으로 남아 있다.

셋째, 韓·美 兩國은 日本의 발빠른 수교 움직임을 牽制하고 있다. 적어도 북한의 핵사찰수용 ‘實行’이 한·미 양국을 만족시킬 만큼 진전되기 전까지는 日本도 대북수교를 서두를 수 없는 立場이다. 남북 관계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韓·美 兩國의 입김도 北·日修交의 속도를 조절 내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다.

### Ⅲ. 北韓의 對外關係 展望

#### 1. 北韓과 中國·蘇聯 關係

##### 가. 北韓·中國 關係

北韓은 中國을 그들의 체제를 守護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唯一한 나라로 보고 있다. 中國의 입장에 있어서도 北韓과는 이데올로기의 공통성이 상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쌍무동맹체제에 의한 결속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독립국가연합의 견제 및 美

國에 대한 공동 방어 구축에 필요한 地政學的 필요성을 共有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改革·開放 政策을 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한다 하여도 北韓과 中國과의 사이에는 이질성이 심화되어 갈 것이다. 北韓이 中國의 방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양국 간의 관계는 크게 부식되거나 악화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즉 北韓이 中國과 같은 개혁·개방화 정책을 수용하여 당면 경제난을 해결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金日成 개인숭배체제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中國마저도 北韓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豫想되는 北韓·中國關係는 北韓이 최소한 中國式 개혁개방 모형을 극히 점진적으로 受容함으로써 中國의 호의를 자아내어 정치·군사적인 담보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원조 또한 증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中國도 北韓의 孤立은 원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이는 제3차 APEC에 참석한 錢其琛 외교부장의 北韓의 핵개발 저지 관련 발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中國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北韓의 핵사찰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원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핵개발과 관련하여 北韓을 국제적으로 孤立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中國은 오히려 北韓을 孤立시키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한 그들 자신의 안정적인 경제발전 정책 추구에 障礙가 되지 않도록 하는 範圍 내에서 北韓과 어느정도 既存의 關係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平和共存이 가능한 방

향으로 北韓을 誘導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北·中關係의 變化를 부문별로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政治的 側面에서, 蘇聯 보수파 쿠데타 실패 이후 北韓과 中國은 內部的인 體制團束을 위해 쌍방간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共感帶 形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공산당 붕괴를 불러온 蘇聯의 事態 및 독립국가연합의 급진적 개혁의 波及을 우려한 나머지 대내외적 역공세의 일환으로 主體思想을 바탕으로 한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간의 사회주의 연대는 中·長期的으로는 점차로 弱化될 可能性이 높다. 왜냐하면 中國이 그들의 개혁·개방정책을 심화시키고, 北韓도 ‘개방’을 시도하고 ‘실리외교’를 추구하기 위하여 양국 모두 보다 더 현실 외교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 北韓은 독립국가연합으로 붕괴된 소련의 經濟支援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狀況이므로 中國과의 交流協力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倍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北韓은 中國과의 교역에 있어서 국제가격의 절반 정도로 결제해 주는 우호가격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中國도 蘇聯과 마찬가지로 硬貨決濟를 요구하는 등의 교역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조치의 유예뿐만 아니라 곡물 및 에너지 수입선 전환에 따른 협조와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금융지원 등도 계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1992년부터 점차적으로 그들의 사회주의 무역관계에서 경화결제 양식을 도입함으로써 北韓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더 실리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中·長期的으로 改革·開放政策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발전을 追求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軍事的 側面에 있어서, 中國과 北韓간의 군사협력은 1991년에 이어 1992년에도 緊密化될 것으로 전망된다. 北韓은 蘇聯의 군사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中國의 軍事援助를 크게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中國도 북한과의 地政學的인 利害나 傳統的인 동맹관계를 중시할 것이다. 따라서 中國·北韓 間의 군사협력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全般的으로 中國은 北韓의 제2의 루마니아化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이익에 背馳된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고립을 막기 위한 정치적 지원이나 경제·군사적 원조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北韓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는 中·長期的으로 점차 조건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짙다. 즉 앞으로 中國은 北韓에게 中國式 개혁·개방 모델의 수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북한의 自救策 樹立과 함께 경화결제를 독촉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中國은 北韓의 對日 修交와 對美 關係改善을 측면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對南 和解도 적극적으로 勸獎할 것이다.

#### 나. 北·蘇 關係

蘇연방의 붕괴와 독립국가연합의 탄생, 그리고 이에 따른 既存 北·蘇關係의 급격한 變化가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北韓과 蘇聯과의 동맹관계는 有名無實하게 된



채로 그 재편 혹은 폐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제까지 경제, 군사, 외교, 기술의 全般的인 側面에서 蘇聯에 너무도 크게 依存해 왔다. 그러므로 北韓은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국가연합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設定하고자 할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 北韓은 독립국가연합의 여러 구성국들과의 持續的인 紐帶를 확보하기 위한 라인을 構築해 왔다. 즉 北韓은 소연방이 붕괴하기 이전부터 그 구성국들과 ‘貿易 및 經濟協力協定’을 締結-러시아 연방(1990.12), 백러시아·우크라이나(1991.4), 카자흐(1991.5)등-하여, 이들과 정치적 차원이 아닌 경제·기술차원의 협력을 도모해 왔다. 1991년 11월 6일에 北韓은 우크라이나 공화국과 ‘과학원간 협조협정’에 調印하기도 하였다.

북한에게 사회주의 동맹관계에 기초하여 원조해 주던 소연방은 이미 存在하지 않는다. 이제 북한이 舊소련 지역 또는 독립국가연합의 구성국으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資本主義國家들과의 관계와 똑같은 方式의 경화결제에 의한 무역거래, 자원 및 기술의 이전 등이다. 러시아 연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독립국가연합 구성국들은 市場經濟體制에로의 전환을 과격하게 推進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北韓과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는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쌍무적 및 다변적인 관계로 변할 것이며 특히 전통적인 安保論理에서 脫皮하여 經濟的인 側面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進展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기초로 北韓과 독립국가연합과의 關係를 전망해 본다.

政治的 側面에서 北韓과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독립국가연합 자체의 존립 여부나 그 구성국들의 장래를 점치는 일과 結付되어 있는 문제로서 展望하기 어렵다. 다만 독립국가연합의 主導國인 러시아 연방의 反應으로 판단하건대, 독립국가연합이 북한에 대하여 好意的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일본 共同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은 1991년 12월 27일 쿠바에 대한 원조를 즉시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sup>48)</sup> 이는 이미 원조중단상태에 있는 북한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이 같은 사실로 보아, 北韓과 독립국가연합은 독립국가연합이 보수파의 쿠데타 등으로 붕괴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서로의 體制를 批判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관계를 樹立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독립국가연합의 구성국과 개별적인 정치적 選好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세워 나가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도 北韓이 舊蘇聯(독립국가연합)과 기존의 동맹 관계에 의한 원조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사실 舊蘇聯은 1991년에 경제성장률 사상 최저치인 -1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가재정이 파탄위기에 놓여 있다. 국가재정을 살펴보면 總赤字 規模가 年末까지 1,533억 루블(2640억달러)로 확대되었고, 외화보유고의 고갈로 외채상환 능력(금년도 상환 의무액 130억달러)을 잃게 되었다. 더욱이 1991년 곡물수확 실적은 1억 6500만톤에 불과하여 연간 예상 소요량 2억 3200만톤에서 6700만톤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舊蘇聯의 경제난은 北韓과의 경제협력을 어렵게 할 뿐만아니

48) 「중앙일보」, 1991.12.29.

라 경화결제의 요구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 연방을 비롯한 여러 공화국들의 과격한 시장경제체제 도입은 北韓·舊蘇聯 간의 경제협력 지속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軍事部門에 있어서 소연방이 崩壞된 시점에서 北·蘇 군사동맹은 이미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소콜로프 駐韓 러시아 연방 대사도 “러시아 연방 의회에서 지난 61년 소련과 北韓 간에 체결된 상호우호동맹 조약의 개정 여부를 금명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sup>49)</sup> 러시아 연방이 상호우호동맹조약을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군사원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直面하여 北韓은 점차적으로 舊소련 또는 독립국가 연합의 구성국들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北韓과 舊蘇聯 地域의 構成國들과의 사이에 실리추구에 입각한 현실주의 외교관계가 새로이 樹立됨을 意味한다.

## 2. 北韓과 美國·日本 關係

### 가. 北·美關係

북·미 간의 관계개선은 兩國의 필요에 따라 進行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나, 양국의 不信으로 말미암아 國交交渉으로 移行되기까지는 상당한 時日을 요할 것으로 展望된다. 北韓의 핵사찰 전면수용문제가 解決된다 하여도 그외의 主要懸案들이 해결되기까지에는 양국의

49) 한국경제과학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1991.12.28)에서의 발표.

타협과 양보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다만 북·미관계개선에 있어서 漸進的이나 다음과 같은 實質的인 進展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즉 北韓은 미군 유해송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美國과의 非政治的 交流를 擴大시키면서 政治的 交流 및 協商을 加速시키고 있다. 北韓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는 柔軟性을 보이기도 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안’도 具體的이고 實現性있는 構想으로 提起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대남관계에 있어서의 화해 제스처는 ‘남북한 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타결시켰으며 북한은 북·미관계개선의 最大 걸림돌이던 핵안전 협정서명 및 비준과 핵사찰 수용을 천명하고 그 實行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구체화되고 있는 두만강 경제무역지구개발계획과 외자유치 프로젝트에도 美國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것들이 北韓의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라면, 美國은 北韓에게 있어 資本投資보다 우선 商品輸出市場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美國은 ‘동북아 경제권’에의 參與, 한·일과의 무역마찰 解消를 위해 北韓의 經濟開放政策에 關心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한편, 美國으로서는 북·일수교 교섭과 韓國의 북방정책의 발빠른 진전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對北관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는 中國과 러시아 聯邦이 북·미관계개선에의 支援 내지 同調勢力으로 존재하고 있다.

北韓의 핵사찰 實行을 포함한 全面受容이 이루어지면, 그에 相應하는 북·미관계개선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과의

대사급 접촉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관계개선이 크게 진전 중이다. 그러나 그 관계개선의 方式을 전망하기는 쉽지가 않다. 양국관계개선의 시나리오를 세가지로 나누어 전망해 본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合理的이고 漸進的인 관계개선의 方式이다. 즉, 북·미관계개선의 順序가 學術·文化·體育 分野와 같은 비정치적 교류로 시작해서 경제교류 협력단계를 거쳐 국교교섭으로 移行할 것이라는 展望이다. 이 과정에서 北·美兩國은 모든 전제조건을 해결을 피하고 이에 따라 이들 懸案은 段階的으로 해결되어 나간다. 이렇게 되면 관계개선은 漸進的으로 이루어지겠지만, 貿易代表部의 相互設置(영사관계)까지 2-3년, 國交樹立(대사급관계)까지는 빠르면 3-5년, 늦으면 5-10년이 소요될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위와 같은 점진적 관계개선의 순서와 反對의 經路를 밟는 方式이다. 즉, 北韓이 핵안전협정에 署名(1992년 1월 하순으로 예정)하고 이에 相應하는 핵사찰 實行(1992년 6월경으로 예정)이 進展되면, 美國은 破格的인 政治的 措置를 내릴 可能性도 존재한다. 이는 먼저 정치적 교섭을 優先시켜 관계정상화를 서두르면서 핵개발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들에 대한 北韓의 政策變化를 誘導하는 方式이다. 사실 북·미 간에도 정치적 타결에 의한 의외의 관계개선이나 修交가 進展될 可能性은 恒常 存在한다. 이렇게 되면 북·미관계개선이 '先수교 後협상'이라는 형태로 急轉될 수도 있다. 즉, 영사 및 대사급관계가 거의 동시에 1-2년 안으로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美國과 北韓은 직접협상을 통한 懸案의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北韓體制의 根本的 變化와 이에 따른 對外政策 및 對南政策의 커다란 變化가 있을 때까지, 美國이 국교수립은 고사하고 그 관계개선의 실질적 진전마저도 遲延시키는 方式이다. 우선 北韓의 핵안전협정 署名 後에도 핵사찰의 無條件 實行과 핵무기개발의 完全한 拋棄가 確認될 때까지 持續的인 壓力을 加한다. 그리고 北韓이 내건 다른 현안들에 대한 拋棄나 讓步가 있을 때까지 극히 제한된 비정치적 교류나 경제교류를 제외한 관계개선에는 消極的으로 對應한다. 더 나아가 北韓體制의 붕괴 또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制裁를 가한다. 이렇게 되면 북·미 간의 관계개선은 踏步하거나 過去에 回歸할 수도 있다. 영사관계 설정 및 대사급 수교의 가능성은 불투명하게 된다.

상기한 세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첫째 혹은 둘째의 方式으로 實現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세번째의 方式은 最惡의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서로 排他的인 것은 아니다. 이것들이 서로 補完的 또는 連繫的으로 進行될 수도 있다.

어쨌든 短期的으로 양국 간에는 이러한 활발한 接觸과 交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障礙要因은 北韓의 핵개발 의혹이다. 北韓은 핵문제를 이용하여 美國과의 직접협상(平和協定締結, ‘對北核不使用宣言’)이나 한·미와의 3자회담을 기도하고 있으나, 이의 실현은 실질적인 핵사찰의 實行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연될 것이다. 아직은 北韓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이후에도 國內 비준절차 및 사찰의 實行을 최대한 遲延시킬 가능성은 常存하고 있으며, 美國도 北韓의 핵사찰 수용과 핵재처리

시설 廢棄에 대한 確固한 展望이 서기 전에는 美·北韓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北韓이 표명한 핵안전협정 署名이 이루어지면 美國은 北韓과의 접촉수준을 格上시키는 한편 各種 交流를 再開하여 이에 따른 在美同胞의 對北經濟交流 및 協力は 본궤도에 進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中·長期的으로, 양국 간에는 무역대표부가 設置되고 國交正常화가 達成되면 美國 企業人들의 對北經濟進出이 試圖되고 재미동포의 경제교류 및 협력은 加速될 것이다. 國交樹立이 完了된 후 兩國間的關係가 緊密해짐에 따라 美國政府는 北韓과의 經濟交流 및 協力を 強化하면서 北韓의 市場經濟化를 多角的으로 試圖할 것이다. 北韓도 美國을 自國의 중요한 輸出市場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傾注하게 될 것이다.

#### 나. 北·日關係

北韓은 經濟困難과 外交孤立 脫皮를 목적으로 對日修交에 적극적이다. 소련의 붕괴와 독립국가연합의 탄생을 비롯한 주변정세의 변화는 北韓의 實利追求外交를 가속시킬 것이다. 실제로 北韓側은 핵사찰수용 의사를 表明했으며, 그 實行 여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즉 北韓側은 日本側의 수교교섭 전제조건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다. 日本은 이제 수교를 急進展시키고자 할 것이다. 최근의 주변정세의 변화로 일본은 北韓과의 수교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好

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東北亞經濟圈’ 形成이나 北韓의 경제특구건설 등 경제개방을 둘러싸고, 한·미·일 3국은 協力關係와 동시에 競爭關係이기도 하다. 특히 日本은 ‘環日本海經濟圈’ 구상을 위하여 北韓에의 진출을 서둘러, 他國의 기선을 제압하고 北韓의 제1무역 相對國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韓國과 美國도 北韓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키고 남북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北韓의 핵사찰 實行과 ‘남북한 합의서’ 등의 합의사항의 遵守 여부 외에는 더이상 북·일 수교교섭을 遲延시킬 이 유가 없다.

中國의 態度는 북·일수교 진전의 주요변수이다. 그러나 中國도 내부체제정비 및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北韓과의 이념·정치적 유대관계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이다. 中國은 북·일수교와 한·중수교를 연계시켜 놓고 있으나, 內心으로는 南韓과의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 한·중수교를 서두르고 싶을 것이다.

補償方式問題는 北韓側이 제4·5차 본회담에서 日本측이 내건 방식에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北韓側의 식민지 시대의 전쟁배상 및 보상과 전후 45년의 보상이라는 주장은 그 非現實性에 비추어 배상금 액수 및 경협지원에서의 유리한 高地를 확보하려는 카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北韓은 日本측이 내건 ‘請求權·經濟協力協定’ 방식에 기초한 ‘政治的 妥結’로 배상문제를 체결하는 데 동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短期的으로, 北韓이 핵사찰 수용 및 핵재처리시설의 포기에 관한 誠意를 표명하고 나선 이상 내년 중으로 貿易代表部 交換設置(영사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國交樹立은 빠르면 영사급관계와 비슷한 시기, 늦어도 1-2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따라 ‘補償原則’은 1992년 1월로 예정된 제6차 혹은 그 다음의 제7차 교섭에서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제는 ‘보상원칙’의 실질적인 합의, 즉 보상금 규모의 타결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보상금의 규모가 타결을 보게 된다면 이는 북측(약 100억달러)과 일측(약 45억달러)의 중간 썸에서 북측이 약간 양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經濟交流·協力 부문에서도 양국은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상당한 성과를 얻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총련을 비롯한 재일동포 기업뿐만 아니라 日本人 기업의 진출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며, 양국은 적어도 ‘貿易代表部’의 설치까지 합의를 이루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미 재미교포 박경윤(금강산 그룹 총사장)이 금년 9월 4일 東京의 모토 아자부(元麻布)에 설립한 「금강산 국제그룹 동경사무소」의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무소가 北韓의 東京貿易事務所의 역할을 대신하고 점차로 北韓의 ‘貿易代表部’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北韓은 政·財·學·文化 등 각종 분야의 인사들과의 連帶를 강화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日本 내의 친북세력을 양성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人民外交의 차원에서 상호방문 및 초청에 의한 민간교류는 물론 日本 정계의 前·現職官僚들과의 유대관계를 확보하여 修交交渉過程과 修交 後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中·長期的으로, 1-2년 이내에 北·日修交가 이루어지면 日本政府

의 對北經濟進出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日本의 財·業界의 對北 經濟交流 및 協力이 활성화될 것이다. 한편, 北韓은 조총련 資産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하려 할 것이다. 北·日修交의 達成은 양국 간의 政治的, 非政治的 交流를 활성화시키고 日本政府는 對北經濟進出을 加速시켜 日本의 거대한 經濟力에 의한 北韓 經濟의 從屬化 現象이 露出되기도 할 것이다. 北韓으로서는 조총련이나 재일 동포를 통한 日本 經濟에의 進出과 輸出 擴大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

### 3. 展 望

北韓의 對外關係는 점차로 ‘開放’과 ‘現實主義的 實利外交’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社會主義國家들에 있어서 ‘開放’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진영 혹은 자본주의권 제국에 대한 閉鎖的 姿勢 또는 路線에서 脫皮하여 오히려 이들 자유진영국가들과의 關係를 改善 및 深化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실주의적 실리외교’정책을 추구하게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시 범위와 그 농도에 따라서 社會主義 國家들의 對外關係 變化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北韓의 對外關係가 漸進的으로 開放化, 實利追求의 方向으로 가고 있다는 주요 認識指標로서 우선 70년대부터 對西方外交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발전해 가는 北韓의 정책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北韓은 國際環境의 急變에 直面하여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대미관계개선뿐만 아니라 대일수교를 위한 행보를 빠르게 해

왔다.

美國과의 경우 1988년 말부터 北韓은 北京에서의 참사관접촉 등을 비롯한 정부교섭을 지속시켜 왔으며 최근 핵사찰 수용문제의 진전으로 뉴욕에서의 차관보급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北·日間の 修交交渉도 北韓의 핵사찰 수용문제로 말미암아 큰 진척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전제조건이 거의 解決된 상태이다. 北韓의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대서방외교의 강화 움직임은 체제유지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苦肉策으로 평가된다.

北韓과 蘇聯 또는 독립국가연합과의 關係에서도 ‘개방’과 ‘실리추구’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保守派 쿠데타 실패 이후, 蘇聯이 여러가지 ‘혁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을 때 北韓은 이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반박조의 태도를 自制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內部問題라 하여 改革이 잘 進陟될 것을 고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호의를 보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北韓은 독립국가연합이 탄생하자 남한(91.12.30)보다도 빨리 그 構成國들을 과거 동맹국이었던 소련의 承繼者로 承認(91.12.27)하였다. 이것은 蘇聯이나 독립국가연합의 大變革이 北韓의 체제에 미치는 深刻性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維持시켜 나가야 한다는 실리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北韓이 정치·경제·군사·기술의 全般的인 側面에서 依存해 왔던 기존 關係를 斷絶할 경우 北韓의 체제는 보다 더 심각하게 打擊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北韓은 對南關係에 있어서도 ‘開放’과 ‘實利追求’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關係는 제5차 남북고위급

〈표 2-4-6〉

| 區分 | 變化認識指標      | 變化與否 判斷   |
|----|-------------|---|
|    | 對南 交流       | 부분적이며 소극적으로 나타남(경제교류를 중심으로).  |
|    | 南北對話        | 高位級會談 성사 및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짙어짐.                     |
|    |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 ‘단독가입’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일단 9월 유엔 가입.  |
|    | 駐韓美軍撤收 主張   | 큰 변화 없음. 그러나 南韓의 미군핵철폐로 군사분야의 본격적인 협상의 진전이 기대됨.   |
|    | 對南政策        | 한반도 공산화 목표에 있어서 큰변화는 없음. 그러나 남북대화의 태도가 유연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北韓의 대남정책이 평화공존적 정책으로 변할 가능성이 짙음. |

회담(1991.12.11-13)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開放的, 現實主義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합의서’의 具體的 文案에 署名함으로써, 北韓은 南北對話와 交流에 있어서 柔軟性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北韓은 對南關係에서도 제한적이거나 ‘開放 및 實利追求外交에로의 轉換’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표 2-4-6〉 참조).

물론 對南關係에 있어서 北韓은 남북대화와 통일전선전술을 병행하면서 2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體制維持를 위한 사항과 부문에 있어서만 戰術的인 變化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北韓 對外關係의 변화양상이 체제유지를 위한 변신이지 결코 체제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根本的 變化가 아니라는 것

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단 北韓의 對外關係가 ‘開放’과 ‘現實主義的 實利追求’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중·장기적으로 對外 및 對南政策은 물론 體制內部에 있어서도 根本的인 變化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록 2-4-1〉 北京에서의 參事官級 接觸

### ① 接觸의 日程과 內容(空欄은 未確認)

| 회수 | 일 정                        | 내 용   |
|----|----------------------------|---|
| 1차 | 88.12. 6                   | 北側은 韓半島 平和保障을 위한 4原則과 包括的 平和提<br>案을 美側에 提示함.<br>이 提案은 11월 7일 북한 중앙인민위와 최고인민회의상설<br>회의, 정무원연합회의에서 決定된 것임.<br>김영남 부총리겸 외교부장으로부터 슬츠 미 국무장관(당<br>시)에의 서한형식으로 전달됨.                   |
| 2차 | 89. 1.24                   | 미측이 前回の 回答을 전달함.  |
| 3차 | 89. 5.15                   |   |
| 4차 | 89. 5.15<br><br>(89.10.25) | ‘쌍방의 關心問題’에 관하여 회담함. 北側은 미군철수문제<br>등을 언급. 美側은 미군유해 반환문제 등을 언급.<br>駐中북한대사 주창준의 발언 “쌍방대사관의 참사관급에<br>서, 정부, 국회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한 대미관계 개선을<br>희망한다.”                                      |
| 5차 | 89.11. 1                   | 北側은 북한과 미국, 남한간의 3자회담 개최를 提案함. 이<br>에는 韓半島의 非核地帶化案과 3자회담개최, 남북간의 공<br>동선언 채택, 美國의 對北核不使用法の保障問題가 包含되<br>어 있음.  |
| 6차 | 90. 1. 5                   | 北側은 김일성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간의 障壁을 없애고<br>自由往來와 全面開放을 實現하며, 이와 관련된 협상회의<br>를 개최하는 統一方案을 說明함.<br>美側은 北側이 前回접촉에서 제기한 한반도 비핵지대화<br>안과 3자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러한 회담을 행<br>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回答함. |
| 7차 | 90. 1.18<br><br>(90. 2. 1) | 北側은 미군유해 5구를 返還하는 문제로 複數의 美議員<br>을 평양에 招請할 豫定임을 傳達함.<br>上院外交委에서의 베이커국무장관 발언 “미국은 남북한관<br>계와 미·북한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끈질긴 상호<br>주의원칙에 충실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
| 8차 | 90. 4.26                   |   |
| 9차 | 90. 5.15<br><br>(90. 5.24) | 美側은 北側의 遺骸返還을 歡迎한다는 意思를 表明함.<br>金日成은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1회회의 시정연설에서 조<br>국통일5대방침을 표명함.  |

| 횟수  | 일 정                    | 내 용   |
|-----|------------------------|---|
| 10차 | (90. 5.28)<br>90. 5.30 | 北側이 판문점에서 美軍遺骸 5구를 送還.<br>美側은 유해반환에 謝意를 表明하고, 북측은 금후 追加送還 意思를 밝힘.   |
| 11차 | (90. 5.31)<br>90. 6.13 |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연합회의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위한 軍縮提案을 表明함.  |
| 12차 | 90. 9.14               | 北側은 分斷사상 처음 열린 남북고위급회담(9.5-6서울)에서의 입장과 '남북단일의석에 의한 UN공동가입'에 관하여 미측에 說明함.<br>美側은 北韓의 核武器開發問題에 관하여 북측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수용을 중용한데 대하여, 북측은 미국이 우선 核武器 不使用을 保障할 것을 促求함.  |
| 13차 | 90.10.30               |   |
| 14차 | 91. 2. 4               | 北側은 미군유해 11구를 미하원 원호위원회 소속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引受할 것을 傳達함.   |
| 15차 | 91. 4.17               | 雙方은 미군유해 추가송환문제, 북미관계개선에 관련된 문제를 論議함.   |
| 16차 | 91. 5.10               | 美側은 핵병기불사용원칙 대상국에서 북한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方針을 傳達하면서, 북한이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진 核再處理施設의 廢棄를 要求함.<br>북측은 일반적·긍정적 핵불사용원칙을 넘어선 '대북한 핵불사용선언'을 要求함.   |
| 17차 | (91. 6.24)<br>91. 7.30 | 미군유해 11구 추가송환 로버트 스미드 상원의원은 개성에서 강석주 외교부副부장과 비밀회담 가짐.<br>이 회담에서 '북미관계개선에 대한 韓·美合意'(6.19한국측보도)를 美側이 北側에 전달.<br>그 내용은 북한이 무조건 핵사찰수용에 응했을 경우 ① 북경에 한정되어 있던 북미접촉을 뉴욕 등에서도 행함 ② 참서관접촉의 대사급으로 格上시킴 ③ 북미간의 진신·전화 직통회선을 개설함 ④ 인적교류를 확대함 등임.<br>쌍방은 핵사찰 수용, 미군유해문제, 주한핵무기 철수문제 등을 舉論함. |
|     | (91. 7.30)             | 북한은 외교부성은 명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을 發表함.   |
| 18차 | 91.11.20               | 북미간 미군유해의 송환접촉 定例化.   |

② 接觸水準

- 北京주재 雙方의 참서관급 외교관(각2명)

③ 兩側의 提起條件

| 미 국 측  | 북 한 측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의 진전</li> <li>· 비무장지대에서의 신뢰구축조치</li> <li>· IAEA핵사찰 수용</li> <li>· 테러리즘의 포기</li> <li>·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의 송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간의 직접대화(대사급회담 등) 및 관계개선</li> <li>· 북에 대한 '핵 불사용선언'</li> <li>· 한반도 비핵지대화</li> <li>· 주한미군과 핵무기철회</li> <li>·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및 3자회담의 실현</li> <li>· 팀 스피리트 훈련 중지</li> <li>· 미군유해 송환을 위한 쌍방정부간의 합의</li> </ul> |

〈부록 2-4-2〉 北 · 美關係改善의 內容

① 相互交流 및 訪問

- 1987년 11월 KAL858기 사건이후 단절되었던 북 · 미접촉의 再開.
- 1989년 시거박사(조오지 와싱턴대교수, 전국무차관보)방북(10. 20-27): 이종욱(부수상), 허담 (조평통위원장), 김영남(외교부장) 등 고위관료와 會談.
- 1990년 7월5-8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군축연구소 主催 '한반도



평화안보에 관한 회의'에 남북한 및 미학자 20여인 참석. 北韓은 군축평화연구소의 이형철실장 등 3인, 남한은 고대 한승주교수 등, 미국은 루이스 同연구소장 등 10여인 참석.

1990년 7월25일 미하원 아·태소위원회 證言.

㉑ 국무성 앤더슨 부차관보는 1988년이래 7개대표단 도합23명의 북한사람들이 학술 및 종교적 교류목적으로 방미했다는 사실과 1989년 1월3일부로 '외국자산관리 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이 수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들이 북한과의 비공식, 비정부급 교류를 許容하였음을 證言.

㉒ 롬버그 국무성보도관은 “남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한반도안정에 기여하는가, 저해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안정을 저해하며, 세계적 핵확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 “78년에 발표한 「소극적 안전보장」방침,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가맹,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어떠한 비핵국에 대해서도 그들이 美領土와 同盟國에 侵略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치 않는다’(Carter 대통령)는 방침을 북한에도 적용한다”고 答辯.

이후 1991년에 들어와서는 북·미간에 상호접촉과 교류가 激히 增加, 쌍방의 주장을 충분히 把握하고 있음. 다음은 타협정을 어떤 단계에서 이끌어 낼까라는 政治的 判斷의 問題만 남아있을 뿐임.

1991年度 北·美交流 및 訪問

- 1월17일 솔로몬국무성 동아시아담당차관보 뉴욕의 코리아협회 연설  
 “미국은 북에 대해, 核威脅을 가할 의사는 전혀 없다.”(북  
 의 핵사찰 종용시)(「한겨레」, 91.1.19).
- 1월 군축평화연구소 김병홍부소장(LA아시아학회와 미정치학술  
 원 공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전망’참석)은 주한  
 미군철수문제에 관하여 “불가침을 먼저 체결한 후, 狀況에  
 따라 漸次的으로 撤收하면 된다”고 融通性을 보임(「중앙」,  
 91. 1.24).
- 3월 조평통 박영수부위원장(캘리포니아 버클리대 「한반도평화  
 통일한마당」에서 강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망’)  
 · 한반도내에서의 전쟁방지를 위하여 핵무기철수, 남북불가  
 침선언의 채택, 군축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 在美同胞,  
 韓國學者, Scalapino教授도 參席.  
 · ‘미국은 한반도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원탁회의  
 討論.
- 4월 주한미군과 핵무기철수 論調 발표.  
 ① 4월17일 클라우前美통합참모본부의장은 「Foreign Affairs」  
 (1991봄號)논문에서 “북한이 IAEA핵사찰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미정부는 주한미군핵무기철수를 약속, 외교  
 관계 수립을 시도할 것” 이라고 제안. 이는 미국제관계  
 평의회의 롬버그연구원과의 공동집필문 ‘태평양의 안전  
 보장재고’에서 밝힌것. 논문은 주한미군의 삭감계획을 크  
 게 확대, 향후 5년에 최대로 半減시킬 것 주장.

- ② 4월 17일 「New York Times」社說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위해 한국배치 핵무기의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 사실은 禁輸 등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자는 소리도 있으나, 고립화는 거꾸로 북한의 핵개발 의욕을 부추긴다”고 指摘.
- 5월 2일 「일본경제신문」 ‘주한미군 핵철수 미·소가 비밀교섭, 북한의 핵개발 억지’.
- 5월 8일 솔라즈 상원 東아시아태평양 小위원장은 訪美中인 日本民社黨 야마우찌(山内)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지대화’ 主張.
- 5월11일 미아시아 협회대표단 평양도착. 16일 姜錫柱 외교부 제1부부장 회견(핵사찰, 북·미관계 문제등 論議).
- 5월17-18 조지와싱턴대 아·태문제연구소 주최 제3회 세미나: 金日成大 김수용경제학부장과 군축평화연구소 이근연구원, 金부장은 미국무성 Richardson 한국과장과 만남.
- 5월18일 (中央通信)조선군축평화연구소대표단과 미아시아 협회대표단(團長: Calif.大 동아시아 연구소 전소장 R. Scalapino교수)의 會談.
- 團員: 前정부고관: 메인즈 前국무차관보(국제기구담당) 후러 前부차관보(아시아·중동담당), 림버그 前부보도관
- 고급군인: 헤이즈 前 미태평양군사령관
- 재계인: 록펠러 재단부회장등 기업대표
- 방문국: 남·북한, 일본, 중국, 소련

테 마: '조선반도와 90년대 동북아시아에서의  
강대국 관계'

⇒ 방문결과 9월 11일부터 4일간 워  
싱턴 국제회의

성 격: 민간차원의 성격이나 실질적으로는  
미정부당국과의 접촉.

\* 동협회는 남북관계자 쌍방의 입장을 청취함.

북 : 許鍾 UN대표부 차석대사

남 : 李東馥 총리보좌관

- 5월19일 미국방성은 작년말 태평양 미군 삭감계획에 따라 한·일·필리핀 주류 미군부대 철수(일부)確認.
- 5월21일 협회대표단의 歸路에 「로동신문」은 “한국으로부터의 핵무기철수 문제와 관련 미·소협의 사실과 미국 국내에서도 주한핵무기 철수문제가 검토된다”는 외신을 전하면서 환영. 아울러, 北·美協商 수준의 格上을 요구함.
- 5월21일 협회대표단은 한국방문時 金泳三 民自黨代表委員에게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의 핵사찰은 물론이지만, 미국의 한국내에 있어서의 핵보유의 유무를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함이 필요하다”(「경향」 5.22)고 설명함.
- 5월23일 조평통 한시해부위원장(미 종교단체 초대)등 8인(목사 2인, 신학생 1인, 그외 정치적 인물: 박순덕 사회과학

원 주체사상연구소 부소장, 김구식 평통연구부소장, 로  
철수 해외동포원호위 부위원장 등) 訪美.

미동해안-서해안까지 돌아다니면서 美 政·學·宗教계  
인사들과 회견: 뉴욕시로부터 25마일 제한. 6월 5일에  
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주최 '북한과 미국' 세미나에서  
솔로몬 국무차관보를 위시하여 전·현직 미정부관계자  
와 만났음.(現職:국무성 한국과장과 정보연구국 동북아  
국장, 同북한 담당관, 중앙정보국 한국과장과 同북한 연  
구원)

(前職: 알렌 전국가안보담당보좌관, 하멜 전주중대사)  
(學者: B. Cummings 시카고대교수, 롬버그 외교협회 아  
시아 담당주임 연구원 등)

6월 7일 미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윌리엄테일러 핵무기 불사용,  
주한 핵무기 불필요 주장(이유: 남북신뢰조성, 군비관  
리협의를 통일에 害가 됨).

6월 7일 한시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Carter전대통령과 會同  
(金日成주석명의로 年내 평양방문 招請).

6월 9일 「LA Times」 “부시정권 한반도 핵무기삭감 또는 단계적  
철수 검토중”

6월11일 IAEA참석 진중국대사: 북한 핵사찰을 美 對北 핵무기  
불사용 및 주한 핵철수와 연계시켰음을 주장(≠미정부  
는 否認)

6월11일 리철 스위스주재대사 「共同通信」과의 인터뷰: 월포빛

츠 국방차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핵사찰 및 유해·  
행방불명 미군송환 문제 등을 협의했음을 주장(←美정  
부는 부인)

- 6월12일 「日經」“미정부의 핵무기 철수의사 비공식 일본 전달”
- 6월14일 키미트 국무차관(「日經」와의 인터뷰 “북한의 핵사찰 수  
용표명을 북·미국교정상화와 결부시킴은 시기상조”라  
하면서도 “북한이 핵사찰 협정에 조인하면 북미대화의  
格上등을 검토해도 좋다”(「日經」 6.15)
- 6월15일 한시해는 LA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 : 북미관계개선  
가능성과 북·남, 미 3자회담에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  
다고 ‘방미의 성과’를 밝힘.
- 6월16일 한시해는 레이건 전대통령부처가 다니는 LA시내 교회  
에서 예배한후, 인사나눔.
- 6월19일 UN주재 북한부대사 허종:북·미관계개선 돌파구(접촉  
정례화 제의에 미국 긍정적, 유해반환 접촉계기로 1.핵  
관련문제 2.평화협정 체결문제 3.군축과 한반도 긴장완  
화)
- 6월20일 스틸웰 미국방부차관(전 미8군 및 한국주둔 유엔군사  
령관)을 단장으로 미국제안보연구소 대표단「조선반도  
의 안보와 통일에 관한 원탁회의」(21 - 22,평양의 군축  
평화연구소 초청하에 한반도 긴장완화, 北·美관계등  
토의)
- 6월21일 김영남 부총리겸 외교부장이 同대표단과 會見.

- 6월23-24일 2차 유해(11구) 송환. 미상원 재향군인위소속 로버트 스미스 등은 개성을 방문하고, 강석주 副부장과 유해송환을 위한 ‘조·미공동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合意함.
- 6월25일 켄 남쿤(아시아협회 시사문제국장) 「日經」과의 인터뷰: “9월에 핵사찰협정조인이 끝나면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이 예상됨”이라하고, “2회의 북한방문으로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新世代리더층의 대두다. 40 - 50대전반의 테크노크라트, 경제계획가들이라 할 사람들이 김정일서기의 측근 구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민감하다”고 밝힘.
- 7월30일 북한외교부 성명 ‘비핵지대화’ 提案.
- 8월19-21 蘇聯 보수파 쿠데타
- 8월27-30 北韓의 두만강유역경제특구 개발문제를 논의하는 UN-DP회의(중국길림성 장춘):남북한 및 미·일·소·중·몽고 7개국회의
- 9월11-22 강석주외교부副부장 등 북한대표의 UN총회 참석, 18일 로버트 스미드와 미군유해송환문제 협의, 20일에는 미실업계인사 20여명과 만찬, 합작 등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교환. 18일 언론계인사(UPI, 로이터 등 미·영주요통신)와 회견, 19일 비즈니스위크지를 방문, 간부들과 간담회. 13일 컬럼비아 대 한국인학생회 주최의 토론회 참석 ‘현국제정세와 한국문제’란 주제로 토론. 이밖에도

僑胞들과 接觸·交流.

- 9월13일 북한 핵사찰문안의 IAEA승인. 북한은 署名拒否.
- 9월18일 南北 유엔加入 (46차 유엔총회).
- 9월28일 '부시 선언':주한핵무기 철수가가능성 증대.
- 9월27-10.6일 연형묵 등 북한대표단 17명 UN총회 참석및 연설(10.2):  
'부시선언'의 실질적 진전까지 핵사찰 수용유보, 연방제 통일, 불가침선언등 종래주장 되풀이. 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한편, 김영남외교부장의 미국관리접촉등 비밀스러운 외교활발.
- 11월21일 윌리엄 테일러 美전략문제연구소 副소장은 평양을 방문(11.12 - 18)하고 귀로에 서울에 들림. 제23차 SCM의 마지막 날인 이때 그는 로동당 국제부장 김형우와 인민무력부 副부장 김영철의 메시지를 휴대함. 이 메시지는 '남북동시사찰'을 조건으로 한 북한측의 핵사찰수용의 의사를 이종구 국방장관과 체니 美국방장관 앞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② 對北韓 輸出과 스포츠 交流

- 미 상무성이 의회에 提出한 報告書(1990.1.22)에 따르면, 89년 7월초순부터 대북상업수출을 시작하여 89년까지 840만불에 이르렀음을 公表.
- 經濟交流面에서의 미·북한관계 개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의 북미접촉 및 교류, 북한의 대미경제협력의 요구 등으로 비추어 보면, 앞으로 상당한 進展이 있을 것으로 豫상됨.



-북한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금년 10월12일 평양을 출발, 미국에서 몇차례의 親善競技를 가짐. 북·미간의 스포츠교류는 지난 79년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미국이 선수단을 파견한이래 12년만의 일이며 특히 양국만의 체육교류는 이번이 처음임.

③在美僑胞와의 經濟交流

-在美韓人經濟人聯合會는 작년 5월, 11월에 이어 금년 9월10-24일 제3차 北韓산업시찰단을 構成, 산업시찰 및 합영상담을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함.

-이번 3차까지 방문한 延人員은 80여명이며, 현재 최소한 10여명의 재미교포사업가들이 북한측과 합작사업을 위한 구체적 상담을 進行中임.

-금년 5월 한시해는 방미중 재미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준영을 중심한 재미사업가들과 親分協調關係를 깊이함.

-3차회담때는 당중앙위 윤기복비서가 불시에 산업시찰단원들을 목관관으로 초청, 환영만찬회를 베풀. 9월 16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경제인단 16명과 면담한 조선국제합영촉진위원회 서기장겸 합영공업총국 대상심의국장인 김창길은 합영법규정의 緩和, 재미동포와의 합영합작의 국가적 獎勵, 남한기업의 간접투자및 거래 가능성에 관하여 說明함.

## 〈부록2-4-3〉 北 · 日 修交交渉의 展開

### ① ‘三黨共同宣言’과 第18富士山丸 문제

- 1990년 9월24일 金丸信(전부총리), 田邊誠(당시 사회당부위원장) 등의 방북, “금세기의 일시기,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귀국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장애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謝罪함.”
  - 9월27일 북한측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개시 提案.
  - 9월28일 ‘三黨共同宣言’ (自由民主黨 · 사회당 · 조선로동당)  
“삼당은 과거에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 가한 불행과 재난,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하고 공식적인 사죄를 행하며 보상해야 할 것을 인정함”
- 金丸 노대통령 접견(10.8): 대북수교교섭에서 준수할 ‘5개조항’
  - ㉠ 정부간 충분한 사전협의 (경협규모 등 세부사항 포함)
  - ㉡ 남북간 대화 및 교류의 의미있는 진전고려
  - ㉢ 북한의 IAEA 핵안전협정 체결촉구
  - ㉣ 수교이전 대북한 보상 및 경협불가(북한군사력증강에의 연계 불가 보장)
  - ㉤ 북한의 개방화 및 국제사회 협력유도
- 동년 10월9일 土井多佳子(당시 사회당위원장), 10월10일 小澤一郎(당시 자민당간사장)의 방북시 富士山丸 선장 등이 釋放됨.

## ② 豫備會談과 核査察問題

· 1990년 11-12월 삼회에 걸친 예비회담 본회담의 시기, 장소, 의제 등을 決定.

-예비회담이 시작되기 전날인 11월2일, 외무성 渡邊외무보도관은 북한에 대하여 IAEA의 보호조치협정에 의한 핵사찰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할 방침을 밝힘(미국의 강력한 요구).

-第一回 예비회담(11.3-4)

北側요구: 12월중에 평양에서 본회담 개시할 것.

의제에 ‘전후 45년간의 補償問題’포함시킬 것 주장  
(<=<일본측 거부).

-第二回 예비회담(11.17)

雙方은 본회담을 1991년 1월 하순에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만 합의.

北側이 ‘전후 45년간의 補償問題’를, 일본측이 ‘핵사찰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채 결별.

-第三回 예비회담(12.15-17)

4가지 의제합의

제1의제 북·일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제2의제 북·일 국교정상화에 수반된 경제적 제 문제

제3의제 북·일 국교정상화에 관련된 국제문제

제4의제 그 외에 쌍방의 관심있는 문제(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일본인배우자문제 등)

‘戰後45年の 補償問題’는 제2의제 속에, ‘핵사찰문제’는 제3의제

속에 논의 하기로 妥協.

-12월21일 교섭담당대사로 결정된 유엔국장·전 말레이시아대사 나카히라 노보루(中平立)의 기자회견 핵사찰수용을 주장하면서 타협에 “대체로 2년 걸릴 것”이라는 見解 披瀝.

### ③ 제1차본회담과 賠償問題·在日朝鮮人問題

· 제1차회담 5일전(1991.1.25) 발표된 일본정부의 四항목의 기본방침

㉠ 교섭은 조선반도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함.

㉡ 日·朝 국교정상화가 日·韓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함.

㉢ 일본에 의한 식민지통치 36년간에 대해서는 청구권문제로서 성실히 대응하지만, 전후 45년의 ‘補償’에는 應할 수 없음.

㉣ 北朝鮮의 IAEA사찰수용은 일본의 安全保障上 重要함.

· 제1차 본회담(평양, 1.30-31)

-冒頭 發言

日本側:㉠ 일본과 북조선은 戰爭狀態에 있지 않았음. 따라서 戰爭賠償을 행할 수 없음 ㉡ 핵확산방지조약의 의무를 하루 빨리 이행할 것을 희망함.

北韓側:㉠ 일본의 공식사죄내용을 외교관계를 맺을 때 공식서류에 명시할 것 ㉡ 일본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이 불법, 무효였음을 선언할 것 ㉢ 전후 45년간의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 ㉣ IAEA에 의한 핵사찰은 한국내에 배치된 미군의 핵무기와 동시에 행할 것.

-1월31일 북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주장.

- ㉠ 조총련을 敵視하는 정책을 그만두고 활동을 보장할 것.
- ㉡ 재일조선인의 國籍을 認定하여, 한국국적및 일본국적에서 북 한국적에로의 변경을 認定할 것.
- ㉢ 외국인등록법을 全面的으로 是正하여, 등록증의 상시휴대의 무, 지문날인 형벌을 폐지할 것.
- ㉣ 안정된 在留權을 보장하고 출입국규제를 簡素化할 것.
- ㉤ 在留자격구분과 강제퇴거를 폐지하고, 북한국적취득자에의 差別 停止할 것.
- ㉥ 재일조선인 자녀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 편의와 보호를 提供할 것.
- ㉦ 조선학교에 공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에의 입학자격 등을 賦與할 것.
- ㉧ 기업활동과 생활조건 改善시킬 것.
- ㉨ 조선인 강제연행자, 피폭자의 實數를 분명히 하고, 피해를 補償할 것.

④ 제2차 본회담(東京,3.11-13)과 韓日合併條約 問題

- 회담전 中立대표가 전인철 단장에게 내건 세가지 조건
  - ㉠ IAEA의 핵사찰수용을 위한 보증조치협정 체결
  - ㉡ 남북고위급회담 재개
  - ㉢ 일본인 배우자문제 해결
- 회담시 中立대표의 주장

- ㉠ 일한병합조약, 그외(식민지시대)의 조약·협정은 합법적으로 체결·실시됨.
- ㉡ 당시 한반도에 주권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음. 빨치산은 독립부대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동북인민혁명군의 일부로서 주로 중국동북지방에서 활동했을 뿐임.
- ㉢ IAEA는 미국의 핵불사용의 보증을 수용조건으로 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 Team Spirit 훈련을 이유로 남북회담을 중단한 것은 유감임.

⑤ 제3차 본회담(북경,5.20-23)과 ‘李恩惠’ 問題

- 회담전 일본정부는 북한측에 대해서 유엔共同加入(단일의석가입)의 방침에서 同時加入방침에로의 전환을 요구(「朝日」,5.14). 사이타마警은 KAL폭파범인 김현희의 일본어교사 ‘이은혜’ 신분 확인·발표(5.15).
- 회담시 일본측이 내건 세가지조건
  - ㉠ IAEA의 핵사찰수용
  - ㉡ 남북대화의 조기재개
  - ㉢ 한국과 북한의 UN동시가입
- ‘이은혜’ 문제로 차기회담 일정 못잡고 決裂. 단, 북측은 자국주권이 “한반도의 북반부에만 미친다”는 管轄權問題를 言及.
- 7월9일 외무성아시아국 北東아시아課의 야마모토(山本榮二) 수석사무관과 아시아경제연구소 고마키(小牧輝夫) 평양파견.

⑥ 제4차 본회담(북경:8.30-9.2)

가. 意義

a. 일본측이 내건 수교전제조건 세가지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변화 이후의 회담

㉠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문제

- 북한의 독자적 유엔가입의사 표명(5.27)
- 남북한 유엔가입안의 안보리 심사통과(8.8)

㉡ IAEA 핵사찰 수용문제

- 북한의 국제핵안전협정 가서명(7.16)

㉢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문제

- 소련 보수파 쿠데타 기간중 남판의 콜레라발생을 구실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8.27-30)연기.
- 쿠데타 실패후 김일성은 방북중인 중국당대외연락부장 朱良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대화를 지속할 뜻을 밝힘.
- 결국 제4차 고위급회담은 10월22일-25일 평양에서의 개최로 합의됨.

b. 소련 보수파 쿠데타실패 후의 회담

나. 會談 進行

- a. 첫날 회담은 ‘이은혜’ 문제로 難航에 부딪힘.
- b. 전제조건에 새로운 전개
  - ㉠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문제
    - 일본측은 “북한측의 유엔가입을 환영한다”고 발언.
    - 북한측은 ‘내정문제’로 일축.
  - ㉡ IAEA 핵사찰 수용문제
    - 일본측의 무조건, 전면 핵사찰수용제의.
    - 북한측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박.
- c. 경제문제중 보상문제 논의
  - 일본측은 북·일관계가 교전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財産請求權’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
  - 북한측은 △ 교전국으로서의 배상, △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 등 기존주장 되풀이하면서 일본측에 ‘삼당공동선언’ 정신에 충실할 것을 촉구.
- d. 북한의 管轄權問題
  - 일본측은 ‘한국전쟁후의 휴전선이북’의 명문화 요구.
  - 북한측은 “검토하겠다”고만 답변.
- e. 식민지 謝罪問題
  - 일본측은 국교정상화때에 ‘정치선언’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 제시.
  - 북한측은 국교정상화때 체결하게 될 ‘朝·日 기본조약’(가칭)에 사죄를 명기할 것을 주장.
- f. 일본인배우자 귀향문제(9.2 마지막날 회담)



- 일본측은 인도적시점에서 교섭과 관계없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옴.
- 북한측은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자동적, 전면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조기실현에는 난색을 표명.

#### 다. 會談의 成果

- a. 前提條件의 一部消滅.
- b. ‘이은혜’ 문제는 비공식절충으로 합의.
- c. ‘보상원칙’에 대한 논의 진전.
  - 일본측 나카히라(中平立)대표의 회견
    -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원용, 경험형태로 청구권문제를 체결하는 ‘정치적 해결’을 도모함.
  - 북한측 전일철대표의 회견
    - 전후의 인적피해와 관련, 독일의 유대인보상사례 등을 근거로 기초자료를 수립하고 있으며, 자료조사는 한반도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補償의 範圍는 북한지역과 주민에 한정할 뜻을 밝힘.
    - ‘관할권문제’와 함께 補償 또는 賠償問題의 ‘請求權形式’에로의 해결가능성을 示唆.
    - 補償對象으로는 △강제연행이나 징병·징용·종군위안부 등으로 살해된 1백만명 △약탈된 金·銀·목재 등 천연자원 △

반일운동중에 몰수된 가옥이나 재산을 포함시킬 것.

⑦ 제5차 본회담(북경:11.18 - 20)

가. 意義

- a. '부시선언'과 '고르바초프'선언 이후의 회담.
- b. 노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의 회담.

나. 會談 進行

- a. 첫째·둘째날은 일본측의 핵사찰 협정의 조기체결 제기와 이에 맞선 북한의 종래 주장(미국과의 문제)으로 難航이 豫想됨.
- b. 18일 오후의 기자회견에서 전인철은 “과거에는 공화국의 협정체결의 길이 막연했으나 미국이 南으로부터의 핵철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 체결의 길도 스스로 열리게 됐다”고 發言.
- c. 셋째날 북한측은 돌연 '우호조약'의 체결을 제안함. 이는 북한측이 일본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돌파구를 노리는 것으로 解釋됨.
- d. 20일 회담을 끝낸 후, 전인철은 “쌍방의 견해에 격차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치점과 유사점이 있었다”고 評價를 내림.

## 다. 會談의 成果

- a.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측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한 이상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여, 식민지 교전상태에 대한 ‘賠償’이나 전후 45년의 補償要求에서 後退하였음을 보여줌.  
이는 북한측이 ‘補償原則’에 있어서 일본의 제의에 한발 더 다가선 성과가 있었음을 의미함.
- b. 일본이 보상의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한 데 대하여서도 “일본측이 모두 갖고 있으며 우리에게 자료·증거는 없다”고 말한 것은 결국 북한측도 일본의 ‘請求權·經協方式’에 의한 ‘政治的 妥結’에 同意할 것임을 示唆함.
- c. 내년 1월로 예정된 제6차 회담에서는 핵사찰 문제의 진전과 이에 따른 북일수교의 진전(특히 ‘補償原則’合意)이 豫想됨.

## 〈부록2-4-4〉 北·日 關係改善의 內容

### ① 相互交流 및 訪問

-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과 관련하여 같은 날 일본정부는 제18富士山丸사건의 해결을 전제로 “日·朝間 懸案의 모든 측면에 관하여 북조선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聲明.

1989년 1월 사회당 정기당대회에 출석하려는 로동당대표단(金養建 국제사업부 부부장)의 入國許可.

1989년 3월30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의 타케시다(竹下登)수상은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의사를 밝힘.

이후, 사회당의 타나베(田邊誠)당시 부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1990년 9월28일의 역사적인 ‘삼당공동선언’으로 이어짐.

1991년에 들어 4차에 걸친 본회담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회담의 진전과 별도로 북·일간에는 많은 相互交流 및 訪問이 이루어짐.

1991년 2.20-27까지 자민·사회양당의 초청으로 김용순서기가 방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간사장, 나카야마(中山太郎)외상과 회담함(북한의 요인이 일본각료와 정식으로 회담한 것으로 최초). 이때, 로동당과 자민당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서’採擇. 김용순은 조선신보사와의 인터뷰에서 ‘전후 45년의 보상’ 문제를 미루어둠.

제2차본회담(3.11-13)후 북한의 대외문화연락협회회장 정준기가 일본을 방문하여 문화·예술의 교류를 協議함.

3월19일 김일성은 모리 코이치(森浩一)「毎日新聞」편집국장 등과 회견하면서 북일수교에 강력한 희망을 피력하고 이 자리에서 ‘전후 45년의 補償’ 問題는 언급을 回避함.

7월24일 김일성은 일·조우호연맹단(7.21-25, 이시이 하지메(石井一)단장, 자민당중의원)과 담화하면서 북·일, 북·미 관계개선의

희망을 피력함 石井단장도 북·일수교교섭의 효과적인 진전과 9월 유엔총회시 카이후(海部俊樹)수상과 연형목총리와의 회담추진의 希望을 傳達함.

7월28일에는 ‘日·朝友好親善의 배’ 참관단(단장:마케다 모호후미)을 초청함.

8월6일에는 일본 탁구팀을 초청.

8월16일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日법률가·사회활동가’대표단(단장: 전 일본 변호사협 회장 키타야마 로쿠로(北山六郎)등) 초청.

8월24일 제2차 ‘일·조우호친선의 배’ 참관단(단장:나가노縣 민회 대표 스기야 마찌나오)초청.

9월들어서만 사회단체, 언론, 예술인 등 모두 7개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고, 일본측으로부터 언론·출판대표단과 日·朝우호촉진연맹 支部 대표단등 8개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비정치적교류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냄.

9월3일 職總부위원장 김근삼 단장의 職盟대표단 派日을 비롯해 보천보경음악단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민주법률가협회대표단 △사로청대표단 △대외문화연락협의회대표단 등이며 祖平統 부위원장 전금철도 방일함.

북한은 또 9월7일 日·朝우호촉진의원 연맹 前의장인 쿠노 추우치(久野忠治)를 초청한데 이어 이 연맹 산하의 미야기縣 대표단, 시즈오카縣 대표단을 각각 초청했으며 9월중순에 「每日新聞」 편집위원 마에다 야스히로 및 NHK방송 취재단, 그리고 社會黨 조직국장 후

- 카다 하지메(중의원의원)등을 잇따라 招請.
- 이와함께 평양에서 최초로 日本 도서전시회를 유치,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사장과 도서전시대표단(9.21-24)을 각각 招請하기도 했음.
- 보천보경음악단은 북한이 자랑하는 전자음악단으로서 북한음악의 개방적변화요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음악단이 9월13일부터 10월20일까지 일본 각지에서 18회의 公演을 가짐.
- ‘일·조우호협회’ 설립: 국교정상화를 후원하는 단체로서 설립하여 ‘삼당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9월 19일 축하모임을 가짐(金丸, 田邊을 비롯한 정·재계인사는 물론 노동계·학계·문화계 인사도 참여 지원함).

## ② 實質的 交流

- 1990.12. 1: 「官報」로 일본여권에서의 북조선여행규제의 폐지를 告示.
- 1990.12.11: 일본 국제전신전화(KDD)가 쌍방간에 위성통신을 이용한 국제전화 3회선 등 직통회선을 부설함.
- 북·일 간의 荷物탁송 91년 8월1일부터 개시: 조총련계 여행대리점 VIP항공서비스(본사 오사카 사장 장윤식).
- 북·일 간의 수출입창구 확충과 전세화물기 운항, 대규모 수입사 절단 파견 등 민간경제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음.
- 미쓰비시(三菱), 이토츠히(伊蘇忠), 마루베니(丸紅), 미쓰이(三井) 등

주요종합상사는 북한과의 무역루트 개설 중임(「조선」 8.12). 북한 측도 이에 대응하여 조총련계 회사를 통하여 일본무역회사들과의 상담창구를 넓히고 있음.

일본 運輸省은 8월 29일 북한으로부터의 화물수송을 위한 직행화물 전세항공기의 운항을 처음으로 許可함. 북한의 송이버섯 수입을 위해 북한 국영항공사 ‘조선민항’이 신청한 전세기편의 운항을 허가한 것임. 9월5-6일 각각 1편씩 평양에서 나고야(名古屋)까지 송이버섯 15톤을 수송했으며, 앞으로 한달에 약 15편정도씩 운행될 예정임. 이미 76년부터 송이버섯수출(4톤)을 시작, 80년 115톤, 85년 730톤, 89년 813톤을 기록했으며, 90년에는 1318톤을 수출, 일본의 총수입량 2660여톤의 50%를 占有.

「東京新聞」의 보도(8월28일)에 따르면, 북한이 1천8백명에 이르는 북한거주일본인 현지처들의 고향방문을 수교교섭타결 이전이라도 허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함.

‘금강산 국제그룹 동경사무소’ 設立(9월4일)

금강산 그룹 총사장인 재미동포 박경윤이 모토 아자부(元麻布)에 설립한 이 지사는 실질적인 북한의 동경무역사무소의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박사장의 주최로 남북유엔동시가입 축하연(9월18일)이 일본인과 일부교포를 합하여 500여명 참석하에 열림. 이 곳에는 金丸, 渡邊을 위시한 政·財界 및 學界, 勞動界, 文化界 人士가 대거 參席함(중앙. 9.16).

국교정상화에 앞선 경험논의의 進行

일·조무역회와 대형상사,메이커들로 조직된 ‘동아시아 무역연구회’  
에는 청진항으로 계획된 경제특구에의 협력요청이 들어와 있음.  
10월23일에는 일본교통공사(JTB)가 관광객 225명을 모집, 전일본  
항공(ANA)소속 전세기(보잉747)를 이용, 니이가타(新潟) 공항을  
출발하여 訪北함(일반여행객을 상대로 한 최초의 상업운항).



## 第 5 章 社會體制

지난 수년 사이에 社會主義 국가들은 급격한 사회변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혁과정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밑으로부터의 民主化 요구와 反體制 抵抗이 社會主義 체제의 변혁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동독 및 여타 동구국가 뿐아니라 심지어 社會主義 체제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蘇聯이나 中國에서도 발생하였다. 蘇聯에서는 후르시초프 이후 사회세력의 성장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낳게 한 사회적 바탕이 되었으며, 군부 쿠데타에 대항한 시민봉기가 共產體制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中國에서도 東歐 및 蘇聯革命 이후 체제단속의 일환으로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1978년 이후의 개방화와 産業化의 결과로 천안문사태와 같은 시민 봉기와 저항운동이 있었다. 이것은 社會主義 국가에서도 産業化와 근대화의 결과로 '市民社會'가 발전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체제가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변혁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政治決定論에 바탕을 두고 社會主義 사회를 설명해 왔던 기존의 전체주의 모델이나 엘리트 갈등 모델로서 이와 같은 社會主義 국가의 체제 변혁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론들이 社會主義 체제가 軍部 및 경찰에 의하여 고도로 통제된 전체주의

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으로 밑으로부터의 봉기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政治決定論을 비판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産業社會論 또는 近代化論이 새로운 社會主義 사회의 변혁을 설명하는 데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産業社會論은 資本主義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 사회도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革命後期局面이 등장한다는 것을 기본 假定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엑스타인(Eckstein)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논리가 共產主義 체제 및 그 정치적 上部構造를 수정하며 궁극적으로는 社會體制를 전환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sup>2)</sup> 현대 産業主義의 확산은 産業組織의 大規模化, 複合化, 專門的 機能分化, 機械化 등을 촉진하며, 도시화와 이에 따른 대중적 소비문화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만연하던 비합리성과 강제적 규범은 産業社會의 합리성과 대중문화의 보편성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産業社會論의 핵심적 주장은 경제발전을 社會主義 체제변화의 중요한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스탈린주의적 社會主義 體制는 경제적으로 낙

---

1) Jae-nam Ko, *Reform Communism: A Comparison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90);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 고현욱,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1987); 유길재, "김정일 권력승계와 80년대 북한 당·국가체제의 변화 고찰," 통일원, 「북한·통일 연구논문집」, (1990); 정은숙, "Social roots of political change in the Soviet Union,"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1991) 참조.

2) Alexander Eckste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World Politics* 22 (1970) 참조.

후된 사회에서 ‘위로부터의 革命’이란 방식으로 급속도의 産業化와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産業化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社會主義 사회가 다원화됨으로써 기존의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社會主義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東歐나 蘇聯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北韓 연구에서도 지금까지 주로 金日成과 金正日을 決定因으로 하는 政治決定論的인 설명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北韓社會의 변혁 과정을 설명하고 전망을 하기 위해서 産業社會論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론 적용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産業社會論으로 北韓社會와 그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産業社會論에서 주장하듯이 産業化를 北韓社會 變化의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 것은 進一步한 시각임은 분명하지만 産業化의 ‘결과’가 기계적으로 北韓社會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北韓社會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체제의 위기이며 北韓社會를 産業化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産業化論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産業化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변화의 기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産業社會論이 社會葛藤 메카니즘의 기본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 階級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

3)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대비계획 연구」(통일원, 1990) 참조.

고,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의 위기문제를 설명할 개념 도구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産業社會論을 적용하여 北韓社會의 변동을 조망하더라도 무엇보다 北韓社會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동시에 다양한 사회학적 분석틀을 원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北韓社會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北韓社會의 危機를 “工業化”와 같은 긍정적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체제유지의 기초가 되어 왔던 “革命”열기의 쇠퇴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유의하면서 이 글에서는 産業社會論을 중심으로 한 社會學的 理論과 接近法으로 北韓社會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I. 北韓 社會構造의 特徵

### 1. 社會構造의 概念

社會學에서 社會構造의 概念에 관한 두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있다. 하나는 파슨즈의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파슨즈는<sup>4)</sup> 社會體制가<sup>5)</sup> 적응(Adaptation), 목표달성(Goal Attainment), 통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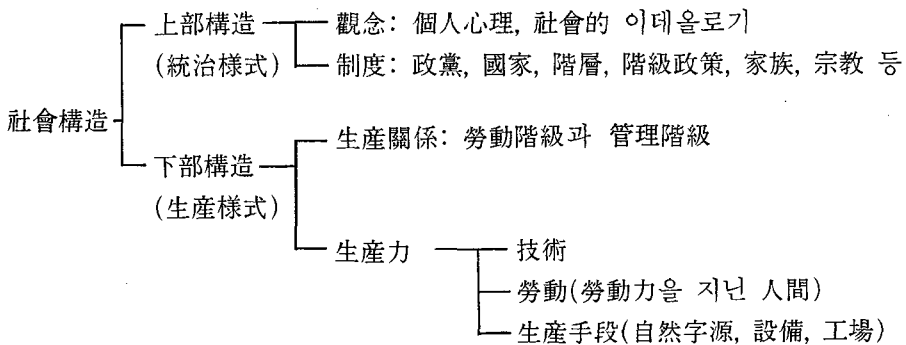
4) Talcott Parsons,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New York: Free Press, 1964); ———, *The Social System*(New York: Free Press, 1951).

5) 사회체제는 사회구조보다는 거시적 개념이며, 사회구조는 미시적 특징까지 포함하여 보다 분석적인 개념으로 쓰일 수 있지만 논자에 따라 혼용하여 쓰인다.

(Integration), 유형유지(Latency and pattern maintenance)의 네가지 기능적 요구(functional imperative)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각 부분은 그 요구를 충족하는 經濟, 政治, 文化, 教育 등의 하위체제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파슨즈의 社會體制는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나 社會體制가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반해서 마르크스의 社會構造 개념은 社會構造의 각 체계들 간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變化의 動態性을 추적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마르크스는 社會構造를 經濟的 土臺(또는 生産樣式)와 政治的 上部構造로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經濟的 土臺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번째 것은 生産力으로서 生産過程에 필요한 인간과 자연자원이 이에 포함된다.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生産樣式的 요소중 두번째 것은 生産關係로서 生産關係는 생산과정에 있어 階級關係를 의미한다.

〈도표 2-5-1〉 마르크스의 社會構造 概念



마르크스는 生産樣式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관념과 사회정치적 제도로 이루어진 上部構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經濟的 土臺와 上部構造는 밀접하게 상호연관되어 있어서 사회는 經濟的 土臺와 上部構造가 더불어 이루어진 단일화된 전체이며, 양자는 서로 상응하여 발전하며 양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면 갈등이 생겨 어느 한쪽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의 社會構造를 정리한 것이 위의 그림이다.

## 2. 社會主義的 生産樣式

北韓社會 體制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北韓社會가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北韓社會의 그 밖의 많은 정치적 사회적 측면들은 토대로서의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北韓社會의 生産樣式的 특징은 무엇인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生産樣式은 곧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어느 것이 더 선차적인 결정력을 갖느냐는 것은 좋은 질문이 못된다. 그것은 生産力과 生産關係는 양자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北韓은 초기에 社會主義的 이념에 따라 生産力을 사회화 또는 國有化시켰지만, 生産力 즉 기술이나 노동생산성, 그리고 生産手段(자연자원, 생산설비, 공장)의 발전이 너무나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농업을 집단화시켰고, 기업을 연합화시키는 등의 개혁조치를 취하였다.

北韓은 社會主義的 社會體制이기 때문에 당연히 社會主義的 소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社會主義的 소유제도는 제반 生産手段을 사회화 또는 國有化함에 따라 모든 인민대중은 無產者階級이 되고 개인들의 이해관계의 구조도 결정되어진다. 이해관계의 구조란 집단적으로 共同 勞動을 하고 국가에서 배분하는 대로 생필품을 배급받아 생활하는 생산과 분배의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매일같이 思想教養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할 개인적인 동기부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

北韓社會의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의 骨格은 대략 두차례의 社會主義化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분단 직후 金日成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 이루어진 부분적 社會主義化였고, 다른 하나는 6·25 전쟁이후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을 더욱 효율화한다는 명분으로 1958년 8월까지 완성한 전면적 社會主義化 조치이다. 政權樹立 過程에 취해진 조치는 土地改革과 중요 生産手段의 國有化 措置였다. 1946년 3월 5일 당시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구성된지 한달만에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한달만에 토지개혁의 실행을 완료하였다.<sup>6)</sup> 1946년 현재 소작지 중 토지개혁에 의해 무상 몰수된 비율이 99%였고, 농민의 100%가 자작농이 되어 농업분야는 小商品 生産樣式의 형태가 이루어졌다.<sup>7)</sup> 그러나 1946년의 토지개혁은 所有權의 國有化가

6) 토지개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강정구, "남북한 농지개혁 비교연구," 「경제와 사회」, 제7호 (1990); 도홍렬, "북한의 계급정책과 계층구조," 통일원 (편), 「북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연구」 (통일원, 1988) 참조.

7) 「조선중앙연감」 (1949), pp.71-7

아니라 均等分配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의 완전한 社會主義化는 1958년에 이루어졌다.

土地改革에 이어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國有化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일본 자본가와 일본인의 사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있는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sup>8)</sup>고 선언하고 즉시 이것을 실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北韓 전역에 설비된 全産業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주요 공장, 기업소들이 國有化되었다.<sup>9)</sup>

3년 간에 걸친 6·25 전쟁 중에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총력적 전쟁수행에 전념하였다가 휴전 후부터는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총력적인 건설작업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社會主義的 제도개혁을 본격화하였다.<sup>10)</sup> 전쟁의 피해는 北韓農業 전반에 걸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결과로 노동력, 농기구, 가축수 등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이념적 지침보다는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들을 이리저리 합치지 않고는 농사짓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農業의 協同化는 北韓農業再建의 유일한 방도로 모

---

8)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1권 1949년판, pp.107-14.

9) 「근로자」(1963.4), p.87

10) 김일성, “모든 것은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1953년 8월 연설), 「조선중앙연감」(1954-55), pp.11-9.



색되었다.<sup>11)</sup> 1946년의 토지개혁에 의하여 이루어진 小商品生産樣式 下에서 토지의 개인소유제도는 金日成의 1954년 3월 11일 지시와 1954년 11월 黨 中央委 全員會議가 農業協同化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1958년 8월에는 北韓의 전체 농민과 농지가 農業協同組合에 귀속되었다. 또 도시에 잔존하고 있던 상공업 분야의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와 소상품경제형태 역시 社會主義的 生産關係로 1958년 8월까지 이행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1958년 이후 北韓은 生産樣式의 측면에서는 철저한 社會主義 사회로 이행되었다.

### 3. 社會主義的 統治樣式

生産樣式이 그 社會構造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면 統治樣式은 上部構造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에 상응하는 統治樣式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生産樣式과 統治樣式의 관계는 단순히 이론적 도식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北韓社會에서 주요 사회세력은 蘇聯軍 駐屯 下의 일련의 社會主義 改革으로 와해되거나 체제 내로 포섭되었다. 지주와 상공인들은 해체되었고 그 밖의 노동자와 농민은 社會主義的 개혁으로 혜택을 입으면서 새로운 기득권층이 되었다. 따라서 北韓 建國 後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

11) 김일성, “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대책에 관하여,” (1954년 3월 11일 연설) 「조선중앙연감」 (1954-55), pp.63-64.

한 사회세력은 金日成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층이었을 뿐이며 이들을 견제할 만한 사회세력은 모두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金日成이 갖고 있는 政治權力이 北韓社會의 生産樣式과 統治樣式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主要因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金日成 一派가 國家와 黨의 支配集團이 되어 社會主義的 階級政策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國家, 黨, 金日成에 관해서는 앞의 정치 부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학적 의미의 統治樣式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革命’의 傳統과 動機誘發

北韓社會는 ‘혁명’의 사회이다. 社會主義的 통치의 내용이 ‘혁명’이고 그 통치의 방법도 ‘혁명’이며, 北韓의 사회적 정치적 언어에서 革命이 아닌 것이 없다. 北韓에서 개개 직장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革命이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革命이다. 이와 같이 革命을 강조하는 것은 개개인들이 전체를 위한 革命이라고 자각하지 못하면 일을 하고 공부를 할 동기유발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革命觀이 이론화된 것이 主體思想이다.<sup>12)</sup>

主體思想은 金日成의 政敵을 제거하고 權力을 鞏固化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抗日‘혁명전통’이라는 역

---

12) 主體思想에 관해서는 제2부 제1장 참조.

사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金日成의 표현을 빌면 抗日‘혁명전통’은 “오랫동안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이긴 항일빨치산들의 투쟁과 생활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그들을 영웅적 투쟁으로 고무하는 산모범”이다. 이 빨치산 革命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와 같이 오늘의 생활을 규정하는 革命的 指導方針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호와 함께 이를 뒤받침하는 논리와 이론이 「로동신문」, 「근로자」 등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人民大衆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항일유격대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근로자」에 나타난 내용을 몇가지 인용하기로 한다.

사회주의 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벽두밀림에서 높이 발휘하였던 그 불타는 열정과 투지,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그대로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산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전투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다그쳐 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sup>13)</sup>

抗日遊擊隊의 革命傳統 教養은 인민대중을 혁명정신으로 각성시키

13) 「근로자」(1980.3), p. 8.

는 데서 끝나지 않고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을 함양하는 데로 연결된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의 한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과 자기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 그리고 자기운명을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확고한 주체적 입장과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있습니다.<sup>14)</sup>

지난날 인간이 하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헤매이던 조선의 열혈청년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님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빛내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으며 수령님의 품은 인간의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따사로운 품이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위대한 영도자의 력사가 펼쳐지고 애국자의 존엄이 빛날 수 있게 됨에 따라 애국애족의 길에 나선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무장대오에 들어섰다. 이 순간부터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다하는데 조국을 찾는 유일한 길이 있고 민족의 밝은 전도가 달려있다는 것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게 되었다.<sup>15)</sup>

이러한 혁명전통은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 고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社會統수를 위한 論理로도 매우 설득력있게 사용되고 있다.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14)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자” 「근로자」(1980 3), p. 9.

15) 권중영,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숭고한 애국정신,” 「근로자」(1987.1), p. 4.

지난날 협산준령을 넘나들며 무장투쟁을 할 때에 늘 부모형제들에 대한 생각, 고향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싸웠습니다.<sup>16)</sup>

北韓社會에서 혁명전통은 인민대중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動機附與의 核心的 理念이며 金日成과 정권에 대한 忠誠의 歷史的 正統性의 根據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社會가 抗日革命과 對美革命을 경험한 지도 한세대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전 세대의 역사를 근거로 설득력있게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지 與否에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의 持續 문제가 달려있다.

#### 나. 階級政策 및 階層政策<sup>17)</sup>

北韓에 있어서 階級政策은 社會主義 건설에 가장 핵심이 되는 ‘社會主義 革命’ 그 자체를 의미한다. 北韓은 社會主義 건설을 사회 전체의 이념적 목표로 ‘搾取階級’을 청산하고 맑스·레닌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이론’에 입각하여 전 인민을 勞動階級化하려는 階級政策이 革命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까닭은 勞動階級이 ‘主體’가 되어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社會的 正當性의 理論的 基礎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

---

16) 「김일성저작집」 제3권, pp.237-38.

17) ‘계급정책 및 계층정책’과 ‘사회조직과 사회통제’는 민족통일연구원의 의뢰로 도홍렬 교수가 집필한 논문 “북한의 사회통제,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변동”의 일부를 轉載한 것이다.

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모양대로 개조해 나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 해나가는 과정”이다.<sup>18)</sup> 이와 같이 階級路線을 앞세워 金日成 1人體制의 基盤을 鞏固히 하고 政治權力의 安定維持를 도모하는 것이 北韓社會 統治樣式의 核心이다.

北韓의 階層構造는 北韓의 독특한 階級政策의 產物이다. 北韓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 重要産業 國有化, 농업협동화 등 제반 ‘社會主義化 改革’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차례 걸친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표2-5-1> 참조). 이러한 주민들의 성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에 따른 階級性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고 이에 黨性(政治性)을 첨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종 직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北韓의 階層構造이다. 北韓社會에서는 富, 權力, 威信 등 社會的 稀少價値의 配分基準을 주민들의 성분과 정치성에 두고 있다. 北韓 주민들은 각자의 성분과 당성에 따라 核心階層, 基本階層, 그리고 敵對階層(또는 複雜階層)의 세가지로 일단 분류되고 다시 64階層으로 세분되어 각 階層에 상응하는 特惠措置와 制裁措置를 받고 있다.

核心階層은 北韓 共產體制를 이끌어 나가는 統治階級으로서 北韓 社會의 핵심적 위치에 속하는 특수층을 말한다. 黨員, 政務員 管理, 軍將星級 將校, 朝總聯 幹部, 日帝時 革命鬪士와 그 가족, 6·25전쟁 전사자와 그 遺家族, 黨과 行政幹部 가족 및 軍幹部 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에게는 대학교에 진학할 기회, 입당할 자격, 당과 군 및

---

18) 「김일성저작선집」, 4권, p.369.

행정간부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 등이 부여되고 昇進, 配給, 居住, 醫療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조치를 받는다. 이러한 특수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등)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미래의 중견간부로 등용된다. 基本階層은 北韓 社會主義 體制의 기본군중으로서 일반노동자와 협동농장원 및 일반사무원 가족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종 하급간부와 기술자로 진출할 기회가 부여되며 이 중에서 극소수만이 핵심층으로 승진할 수 있다. 複雜階層은 주변의 疏外階層으로서 이들은 ‘不純分子’, ‘反動分子’로 구별되며, 과거의 지주, 자본가 가족, 일제시대의 공직자, 종교인 가족, 6·25당시 월남자, 부역자, 反革命的 사상 지지자, 포로 가족, 숙청·범죄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로 유해노동, 중노동에 종사하며, 대학진학과 노동당 입당은 금지된다. 다만 극소수의 여자에 대해서는 기본층으로 재분류될 수가 있다.

〈표 2-5-1〉 住民成分 調査事業의 實施現況

| 區 分                    | 時 期             | 內 容  |
|------------------------|-----------------|--|
|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            | '58.8-<br>'60.2 | ○ 공개투쟁과 소조투쟁 전개<br>○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로 강제이주  |
| 주민등록                   | '64.2-          | ○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개선, 강화할 문제' 토의, 결정(당 4기 8차 전원회의)<br>○ 기본군중(핵심군중, 기본군중)과 복잡한 군중 구분             |
| 주민 재등록사업               | '66.4-<br>'67.3 | ○ 공안사찰기관 등을 행정, 생산단위에 파견, 성분 조사<br>○ 100만명 노농적위대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br>○ 직계 3대, 본가, 처가, 외가 6촌까지 내사 |
| 51계층 구분사업              | '67. -<br>'70.9 | ○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51계층으로 분류   |
| 주민 요해사업                | '72.2-<br>'74   | ○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 파악<br>○ 전 주민을 반신반의자, 변절자, 믿을 수 있는 자로 분류                                       |
| 공민증 대조사업               | '80.1-          | ○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재교부<br>○ 불순계층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강화  |
| 월북자 및 외국귀화인 13계층 분류 사업 | '80.4-          | ○ 월북자 및 외국귀화인을 13계층으로 분류<br>○ 계층분류에 의한 감시자료의 체계화로 감시 및 통제기능 강화                                 |

北韓의 階層分類事業은 결국 舊支配階級을 타도하고 공산당원 스스로가 새로운 支配階級으로 등장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北韓體制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색출하여 이들의 反黨的, 反革命的 行위를 진압하고 소위 '반동계급'에 대한 감시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통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4년 현재, 核心階層이 전체인구의



28%, 動搖階層에 45%, 그리고 敵對階層은 27%로 알려져 있다. 이는 北韓體制가 신임할 수 없는 인구가 적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社會組織과 社會統制

階級政策이나 階層政策이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간접적인 통제라면, 北韓社會에서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국가기구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金日成은 勞動者階級이 資本家들로부터 권력을 쟁취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한 후에도 정치적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체제로, 또 그것으로부터 공산사회로의 이행은 과도기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기에는 반혁명세력이 창궐하는 까닭에 강력한 통제가 요구된다”라고 전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로서 종속상태에 있었던 사회에는 식민시대의 잔재와 봉건적 소유관계의 분쇄, 기업의 국유화 등 1차단계를 거친 후에도 생산관계의 공산화, 농촌의 기술혁명, 무계급 사회 실현, 공산사회 이행 등 여러 단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더욱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동안 변화를 거듭해 온 社會統制의 메카니즘과 방법들 중에서 北韓體制的 성격을 가장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가지 社會統制方法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組織生活 統制

北韓은 공식적 조직이 지배하는 통제된 사회로서 ‘집단주의 원칙’에 준거하여 全社會를 一元的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모든 사회조직

〈표 2-5-2〉 北韓 社會團體와 活動

| 단체명                      | 가입대상                   | 구성인원                 | 구성방법·활동   | 창립일      |
|--------------------------|------------------------|----------------------|---|----------|
| 직업총동맹<br>(직총)            | 노동자·사무원<br>31-65세(여60) | 약 150만명<br>(71.12현재) | ○ 노동자·사무원의 직장단위조직<br>○ 10개의 산별직업동맹으로 구성<br>○ 사상 교양·기술습득·노력경쟁 지도 | 45.11.30 |
| 농업근로자<br>동맹<br>(농근맹)     | 협동농장원<br>31-65세(여60)   | 약 130만명<br>(82.12현재) | ○ 농장단위의 농민단체<br>○ 사상 교양·농촌사업지도                                  | 66. 3.25 |
| 사회주의노동<br>청년 동맹<br>(사로청) | 14-30세                 | 약 400만명<br>(81.12현재) | ○ 학교·직장단위로 조직<br>○ 당후비대로서 사상 교양·노력동원                            | 46. 1.17 |
| 민주여성동맹<br>(여맹)           | 여성<br>31-60세           | 약 270만명<br>(추계)      | ○ 여성위주의 직장단위조직<br>○ 당후비대역할·사상교양·노력동원                            | 45.11.18 |
| 소년단                      | 7 - 13세                | 약 300만명              | ○ 학교단위조직<br>○ 사로청의 지도·집단생활 습득                                   | 46. 6. 6 |

자료: 방환주, 「조선개관」(평양: 외국출판사, 1987, pp. 90-91; 통일원, 「북한개요」(통일원, 1990), p. 64.

은 勞動黨을 정점으로 하여 계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정치적 목표달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北韓의 조직은 당의 방침에 따라 그 참여 여부가 결정되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는 政治社會的 指向에 대한 복종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된다.

北韓은 <표2-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급 社會團體(勤勞團體)를 社會統制의 가장 중심적인 매개적 도구로 활용한다. 그 반면 자생적 조직의 생성은 個人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門閥主義, 宗派主義로 규정되어 철저히 배척될 뿐만 아니라 革命的 투쟁의 타도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대신 黨組織을 頂点으로 하여 黨의 후비대역할을 담당하는 외곽단체들을 의도적으로 육성하고 이의 활동을 권장한다.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서는 '직업총동맹', '문학예술동맹', '기자동맹',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등이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는 각종 行政的 組織들이 계통적·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5호담당제와 人民班 그리고 각종 學習班 등을 조직하여 金日成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한다. 人民班은 北韓住民들을 15-20세대로 묶어놓고 그 단위조직에 따라 그들을 직접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적 제도이다. 각 인민반에는 班長(직장에 나가지 않는 여성당원이거나 간부부인), 世帶主班長(공산당이 통제, 선거시나 행사시에 인민반을 통제), 衛生班長(환경·청소담당), 煽動員(인민반의 당 분조장 겸임) 그리고 監視員과 監督員을 두고 있다.

이처럼 北韓式 社會主義體制가 개인을 조직 속으로 묶어 黨的인 행

동지도와 思想的 관리를 형식화하고 사회동원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면에서 北韓의 사회단체와 각종 조직은 思想鍛鍊의 용광로이며 革命的 教養의 학교로서 社會統制의 役割을 떠맡고 있다.

## (2) 個人生活統制

北韓의 개인생활에 대한 經濟·社會的 統制는 주어진 특정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北韓體制는 ‘全人民的 所有’를 표방하고 모든 生産手段을 黨·國家가 독점하고 있다. 1958년 이후 일반 주민들의 사적 소유는 극히 한정적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政權은 일반 주민들의 직장에 대해서도 配置, 昇進, 移動, 報酬, 配給 등 일체의 권한을 장악하고 주민들을 黨政策과 金日成 敎示에 따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즉 黨과 首領은 인간생존의 기본수단 일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階層과 階級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를 주민통제의 도구로 이용한다. 예컨대 ‘核心階層’에게는 경제적인 특혜를 주고, 敵對階層에는 經濟的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이 한결같이 체제에 순응하고 충성을 바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食糧 配給制 및 주요 생필품의 배급제 역시 주민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에 속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社會組織(직장 및 사회단체)에 속해야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배급제는 勞動者와 非勞動者(부양가족)간의 지급기준에 차등을 줌으로써 노력동원

의 기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능도 한다.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예 식량을 줄 수 없다는 발상이다. 주택은 직위를 기준으로 배당하고 직장 중심으로 아파트 또는 연립(문화) 주택형으로 집단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동원이나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上層階層에 올라갈수록 주택환경이 좋아진다.

한편 北韓은 천리마운동, 속도전, 3大革命 붉은기 쟁취운동 등을 조직하여 노력경쟁을 강화하고 경제과제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주민들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한 방향의 사회심리적 통일을 유도한다.

歸順者의 證言에 의하면 北韓 주민은 누구나 社會·政治的인 懸案問題에 대해서 국가가 취하고 있는 공식적인 견해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고려연방제가 왜 우월한가”, “남조선에서 미군들은 왜 철수해야 하는가”, “무엇이 통일을 막고 있는가”라는 등의 정치적 문제에는 주어진 ‘정해답’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에 누구에게 물어도 거의 거침없이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사상교육을 통한 사회통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주민생활은 그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던 각기 직장에서 하는 일에 못지않게 사회·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社勞靑, 職盟, 女盟 등 사회단체 구성원들은 다양한 제2차적인 집단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이 집단들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組織活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선 빈틈이 없고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 이외에는

만 생각을 할 겨를이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다는 점 등도 폐쇄적인 社會政治體制를 維持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組織生活 속에서 주민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현실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 北韓社會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현실수용적 사회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 (3) 査察機關의 社會統制

北韓은 갖가지 사회적 일탈에 대응하여 사찰기관에 의한 社會統制를 強化하고 있다. 사찰기관은 2중 3중으로 중첩되어 있으며 각 기관들의 역할도 매우 복잡하다. 社會安全部, 國家保衛部, 國家檢閱委員會, 社會主義法務生活 指導委員會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동태를 직접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대표적 기관은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이다.

美國務省은 議會에 제출하는 「人權報告書」에서 “사상이 불순하다는 혐의를 받은 北韓住民들 다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제로 납치당하거나 제거당한 뒤 가족들은 그 생사를 모르는 예가 허다하다”라고 고발한 바 있다. 北韓은 사찰기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1973년 2월 社會安全部內의 政治保衛局을 독립·승격시켜 國家政治保衛部로 擴大·改編하였고 1982년 4월 國家保衛部로 개칭하였다. 國家保衛部는 정치적 범죄자에 대한 감시·구금·체포·처형을 책임지고 있

으며 형사재판제도 밖에서 운영된다. 즉 법적절차도 밟지 않고 反黨·反體制陰謀者, 間諜 등 용의자를 구속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國家保衛部'는 金日成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으로서 중앙으로부터 도·시·군의 지역단위와 행정 최말단조직인 리단위까지 요원을 상주시키고 있고 군대 내부에도 중대단위까지 정치지도부 지도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은 金日成 호위행위, 정치사상범 심문, 각급 정권기관내의 搜查, 사회단체·공장·企業所의 감시, 北送僑胞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통신도청, 비밀문서관리, 장병들의 動態 감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金日成 부자세습체제 구축에서 야기되는 제반분야의 저항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社會安全部는 1945년부터 北韓정권기구로서 당시 내무성 산하 일개국의 형태로 존속하다가 1972년 12월 헌법 채택과 함께 社會安全部로 발전하였다. 社會安全部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北韓 내 사회 안전질서를 유지·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秘密警察組織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이동사항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北韓 주민들은 이상과 같은 各級 査察機關의 활동에 대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각종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적어도 공개적 상황하에서는 査察機關들의 지시와 행동준칙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特別 獨裁對象區域과 集團收容

北韓은 체제에 반항하거나 金日成·金正日의 요구에 불성실한 자

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集團收容하는 方式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自己修正過程(self-correcting process)인데 北韓은 이러한 집단수용의 방법을 통하여 체제의 지속성 및 엘리트집단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 北韓의 政治犯 集團收容所는 1956-58년 ‘8월중파 사건’의 연루자와 가족들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한데서 시작되었다. 그후 1958-60년간 실시된 中央黨 集中指導와 1966년-70년간 계속되었던 주민등록사업과정에서 ‘위해하다고 지목되는 자’들을 反革命 적대분자로 규정하여 수용하는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1973년 金正日 世襲體制를 구축하는 3大革命小組활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규모도 더욱 확대되었다.

특별 獨裁對象區域에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金正日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희생된 정치범들이 수용인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3大革命小組에 의해서 반당 관료주의자로 지탄을 받아 숙청된 당원들과 그 가족들도 있다. 日本에서 귀국한 북송교포 가운데 北韓體制를 비판하고 자유세계를 동경하던 자들도 반혁명분자로 몰려 상당수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소 생활은 각 수용소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 6시까지 아침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량을 부여받고 7시부터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한 하오 8시까지 작업을 계속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갱도작업과 벌목, 개간 등 중노동이며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하오 11시까지 2시간에 걸쳐 자기비판을 위주로 思想改造 學習을 마친 후에 취침에 들어간다. 이같은 하루의 일과



는 휴일없이 연중 계속된다.

이밖에도 北韓은 反革命·敵對分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감시하는 이른바 '149호 대상지역'을 설치해 두고 있으며 또 과거의 종교인이거나 지식인 가운데 北韓體制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집단수용하는 '49호 보양소',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교화소', 재판에서 교화노동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는 '노동교양소', 일을 태만하거나 불성실한 자들과 기술지도를 잘못한 하부일꾼 등을 단기간 수용하는 '69호 노동교화소', 18세 미만의 학생과 학교생활 불량자 그리고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을 6개월간 수용하는 '소년교양소',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불량아, 사건 계류자 등을 단기간 수용하는 '10호 위반자 집결소' 등을 설치해두고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예방 및 통제하고 있다.

#### 4. 社會主義的 生産樣式과 統治樣式이 社會體制에 미친 影響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北韓社會 體制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社會主義的 生産樣式과 그에 상응하는 社會主義的 統治樣式, 그리고 政權樹立 以後 지금까지 金日成 1인의 장기독재와 그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는 主體思想이라는 네가지 요인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와 함께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에 상응하여 노동에 대한 정치적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動員的 組織體系와 思想體系가 統治樣式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社會體制에 全人民을 통합하고 逸脫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

해서 정치적 성분에 기초한 階層政策을 채택하고 있다.

社會主義的 生産樣式, 社會主義的 統治樣式, 金日成 獨裁, 全體主義를 강조하는 主體思想의 네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 낸 北韓 社會體制의 기본적 특색은 모든 것이 1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中央統制體制로서 國家가 社會에 대해 최대한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勞動黨은 정치체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國家와 社會 모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國家와 社會의 각 부분은 黨 組織들에 의해 침투되고 연계되며 지도를 받는다. 國家의 엄격한 통제는 개인들에게도 행해지며 개인들은 國家가 규정해 놓은 社會關係網 속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1950년대 중반에 형성된 이러한 體制는 현재에도 완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역동성의 결핍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사회의 모든 부분이 일사불란하게 統制되고 명백하게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존의 체제가 외부의 변화나 국내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것에 실패하면 많은 모순이 체제 내부에 축적된다.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들이 증대함에 따라 保守的 反動을 추구하고, 諸般問題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理念的, 政治的, 心理的 도구들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體制變革의 주요 동력으로는 인민대중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변화와 인민대중들의 의식과 태도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다.<sup>19)</sup>

---

19) Oleg Davydov, “북한의 정치체제변화와 대외정책”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 (1991) 발표논문, p.

北韓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東歐社會 體制가 갑자기 무너진 현상에서 두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 첫째는, 다비도프가 지적하듯이<sup>20)</sup>, 동유럽에서 共產主義 體制 속의 작은 변화가 초래한 사태진전이 함축하는 뜻은 마치 共產主義 體制는 모든 요소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작은 변화에도 전체 시스템의 궁극적인 붕괴나 支配階級의 제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共產主義 體制의 구조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상호의존되어 있으므로 급격하게 개선되거나 재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경제의 모든 구성요인들이 경직된 연계 속에서 얽혀있는 北韓과 같이 과도한 中央集權的 體制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北韓은 모든 요소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만 제대로 운영되고 安定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만약 한 요소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 새로운 요소는 체제내의 다른 요소들과 모순을 일으켜 그 체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東歐의 몰락은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의 所有構造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資本主義 體制가 社會主義化된다면 資本家들과 中間階級의 결사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도 이에 반대할 것이다.<sup>21)</sup> 왜냐하면 社會主義化되면 그들의 소중한 私有財産이 박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社會主義 사회에서는 그 체제가 붕괴됨으로 해서 所有財産을 잃어버리는 다수의 집단, 즉 '保

20) *ibid.*, p.4

21) 자세한 논의는 서재진, “남한사회의 공업화와 계급구조의 재편,” 「계간 광장」(1991. 여름) 참조.

守的 階級'이 없어 체제 전체가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東獨이 砂上樓閣처럼 무너져 버리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階級構造는 소유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반해 社會主義 사회에서는 이념으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體制의 凝集力(cohesiveness)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東歐에서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있으면 정부의 武力과 극소수 지배 엘리트 저항을 제외하고는 체제를 지탱할 세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北韓社會가 지속되는 것도 物質的 이해관계에 의한 有機的 社會統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의한 機械的 社會統合이 기존의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대로 철저한 통제장치를 가진 北韓社會가 이미 大瓦解를 경험한 東歐 社會主義와 유사한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 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다음 부분의 작업이 될 것이다.

## II. 社會體制 變化의 潛在力 增大

北韓社會를 變化시키는 要因으로 위로부터의 개혁, 체제 외부로부터의 압력, 밑으로부터의 변화 압력의 세가지를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 위로부터의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는 政治的 側面을 다루었고 4장에서 對外的 要因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주로 社會的인 要因에 한정해서 北韓社會 變化의 潛在力이 얼마나 증대하

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內部的 變化要因의 核心變數로서 産業化論者들이 주장하는 産業化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産業化의 영향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産業化의 결과로 사회가 多元主義化되는 肯定的 측면이 있는가 하면 혁명열기의 쇠퇴와 같은 否定的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産業化에 따라 이루어지는 社會構造의 分化, 職業分化, 都市化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産業化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되는 교육수준 향상이 역으로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産業化의 결과로 새롭게 편성된 階級構造가 社會葛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北韓社會의 世代交替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社會構造의 한 구성요소인 이념체계나 사회적·정치적 문화를 담지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분단 이후 45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 가져 온 北韓住民의 변화는 사회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변수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韓國社會에서 정치변화의 한 측면인 선거에서의 ‘이변’ 현상을 설명할 때 20대 또는 30대의 有權者가 全體 有權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더욱이 北韓의 경우는 현재의 집권세력이 특이한 역사적 경험을 한 빨치산세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집권층이 되었을 경우 어떠한 방식의 社會的 合意를 창출해낼 지에 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해진다.

마지막으로는 北韓이 채택하고 있는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의 效率性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東歐 社會主義 體制崩壞의 한 원

인므로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주의체제가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며 결과적으로 밑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北韓의 사회주의체제의 생산양식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北韓社會變혁을 설명하고 전망하기 위하여 중요한 과제가 된다.

## 1. 工業化와 階級構造의 再編 및 階級葛藤의 構造變化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階級構造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封建主義的 生産樣式에서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에 의해서,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에서는 資本家階級과 勞動階級の 관계에 의해서 전체사회의 질서와 갈등구조가 규정된다. 韓國에서는 階級概念을 정치적으로 은닉하고 회피하고자 하지만 北韓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社會統制와 社會的 正當化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프로레타리아 階級獨裁의 역사적 사명은 擄取階級(資本家, 地主)을 청산하고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며, 모든 근로자를 개조하여 勞動階級化 함으로써 온갖 階級的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勞動階級の 普遍的 利益(universality)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階級理論과 階級鬭爭이 北韓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언어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北韓에서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건설하는 過程이란 주권을 잡은 勞動階級이 經濟와 文化, 思想과 道德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해 나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해 나가는 과정”<sup>22)</sup>이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勞動階級化 되지 않은 階級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勞動階級の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勞動階級の 이름으로 여타 階級을 타도하는데 이것이 北韓에 있어서의 階級鬭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北韓社會의 이해를 위해서는 階級理論에 기초한 階級分析이 매우 중요한 接近法이 되며 階級構造의 재편에 관한 분석이 北韓社會 변동에 관한 분석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가. 社會主義 政權創出 過程의 階級再編

北韓社會의 階級構造 再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가지 메카니즘은 社會主義 政權의 創出과 社會主義的 工業化라고 볼 수 있다. 北韓의 金日成 정권 창출은 蘇聯政府 후견 하에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각 행정국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라는 이름의 中央政權機關이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 臨時人民委員會는 북조선에 反帝·反封建的 民主革命을 완수하고 人民民主主義制度를 확립한다는 목표 하에 일련의 '민주개혁'을 수행하였다. '민주개혁'은 토지개혁법령(3월 5일),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6월 24일),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6월 27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7월 30일), 중요산업국유화법령(8월 10일)을 통해 실현되었다.

---

22) 「김일성저작선집」 4권, p.369.

土地改革은 北韓 金日成體制의 구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당시 北韓에서 지주가 총농가호수의 4%밖에 안되면서도 총경지면적의 58.2%를 소유한 한 반면 총인구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작인이었다. 土地改革은 北韓 특유의 '균중로선'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해방 직후 소작료 3·7제 요구투쟁을 통해 정치적으로 단련 각성된 농민들은 1946년 3·1절을 기해 전국적으로 3백여만명이 낫과 호미 등을 들고 토지요구 시위를 전개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의 토지무상몰수와 농민에게 無償分配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밑으로부터 대중동원에 성공한 공산당은 3월 5일에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20일만에 土地改革을 완수하였다.

이러한 土地改革을 통하여 北韓社會의 階級構造는 완전히 재편되어 전통적인 支配階級이었던 地主階級은 해체되었다. 그 대신 小作農, 貧農, 雇用農民들이 土地改革의 혜택을 받은 계층으로 부상하였고 그들은 토지를 준 黨과 정권기관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 전체인구의 74.1% (1949년말 현재)를 차지하는 농민층은 金日成정권이 뿌리를 내리는데 절대적인 지지기반이 되었다.

土地改革에 이어서 취해진 重要産業國有化는 도시지역에서의 階級構造를 革命的으로 재편하였다. 해방직후 北韓의 산업구성을 보면 총산업 중 62.4%가 일본인 소유인데다가 불입자본의 91.2%가 일본인의 것이었다. 집권세력은 이들 산업을 1946년 8월 10일에 「주요산업국유화령」을 발표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支配階級の 경제적 토대를 완전히 剝奪하였다.

土地改革과 産業의 國有化를 통해서 당시의 지주와 자본가는 물론



이고 親日派, 民族反逆者들의 물적 기반마저 해체함으로써 金日成 정권은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새로운 정권은 광범위한 大衆的 基盤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46년의 土地改革으로 농민들에게 私有할 수 있는 토지를 분배하였으나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부터 農業再建의 方道로 協同化를 추구하여 1958년에는 土地私有가 완전히 폐지되고 社會主義的 生産關係가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에 잔존하고 있던 商工業分野의 資本主義的 經濟形態와 小商品 經濟形態 역시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으로 전환되었다.

#### 나. 社會主義的 工業化와 階級構造의 再編

社會主義 政權創出 過程에서 地主와 資本家 階級이 와해된 것은 意圖的인 階級構造의 再編이라면, 그 이후의 階級構造 재편은 사회주의 工業化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은 전쟁 이후 복구사업과 社會主義 경제발전의 전략에 따라서 工業化가 비교적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급격한 工業化의 결과로 北韓의 직업구성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1987년 현재 北韓의 總人口 중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北韓의 성인중 약 75%가 非農業人口로 분류되어 있어<sup>23)</sup> 北韓이 농업

---

23) 북한에서의 도시란 용어의 정의는 자의적인 면이 있지만 대체로 도시의 행정구역인 동은 3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산업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도시인구는 비농업인

사회에서 비농업사회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다. <표2-5-3>에서 보는 대로 농민이 1946년 당시 74.1%에서 1987년 현재 25.3%로 대폭 감소했고 대신 勞動者의 比率이 1946년 말의 12.5%에서 1987년에 57.0%로 대폭 증가했다.

工業化가 야기시킨 階級構造의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新中間階級の<sup>24)</sup> 증가이다. 新中間階級の 비율은 1946년 말의 6.2%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 약 17%에 이르게 될 정도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新中間階級 또는 근로인테리는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상승이동을 하여 권력엘리트(power elites)집단에 진입한 專門官僚集團이 빨치산세대와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政務院과 勞動黨의 30-40%, 政治局 正委員의 50%, 候補委員의 70%가 전문 엘리트 출신이다.

---

구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시의 전체인구에 포함되지만 도시인구에서는 제외된다. 즉, 행정구역상 '리'는 총도시 인구에서 빠지게 된다.

- 24) 북한사회에서 신중단계급에 해당하는 직업집단은 주로 근로인테리로 불리는 사무원이며 사무원 외에 고급 간부의 일부도 포함된다. 고급간부의 어느 선까지가 신중단계급인가는 개인의 주관적 계급귀속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 2-5-3〉 北韓住民의 職業別 構成 變化

|            | 1946<br>년말 | 1949<br>년말 | 1953<br>년 | 1956<br>년 | 1960<br>년말 | 1963<br>년 | 1965<br>년말   | 1986<br>년 | 1987<br>년 |
|------------|------------|------------|-----------|-----------|------------|-----------|--------------|-----------|-----------|
| 노동자        | 12.5       | 19.0       | 21.2      | 27.2      | 38.0       | 40.1      | 41.0         | 56.3      | 7.0       |
| 6.2        | 6.2        | 7.0        | 8.5       | 13.6      | 13.7       | 15.1      | 16.5         | 17.0      | 16.8      |
| 사무원(근로인테리) | -          | -          | -         | 40.0      | 44.4       | 42.3      | 40.8         | 25.9      | 25.3      |
| 개인 농민      | 74.1       | 69.3       | 66.4      | 16.0      | -          | -         | -            |           |           |
| 협동기업노동자    | -          | 0.3        | 0.5       | 1.1       | 3.3        | 1.9       | -            | 0.9       | 0.9       |
| 수공업자       | 1.5        | 0.8        | 0.6       | 0.3       | -          | -         | -            |           |           |
| 기업자        | 0.2        | 0.1        | 0.1       | -         | -          | -         | -            |           |           |
| 상인         | 3.3        | 1.7        | 1.2       | 0.6       | -          | -         | -            |           |           |
| 기타         | 2.2        | 1.8        | 1.5       | 0.5       | 0.3        | -         | 1.7<br>(조합원) |           |           |

자료: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1990).

〈표2-5-4〉에서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의 직업별 출신성분을 보면 노동자와 농민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事務職과 專門職 출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工業化의 결과 사무·전문직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82년 이후 사무·전문직이 대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25)</sup> 北韓은 아직도 革命 1세대가 지배하는 다른 社會主義 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思想과 政治指導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產業化가 진전되고 사회적 복합성과 다원화가 증가하면서 사상

25) 서진영, 앞의 책, p.123; 도홍렬, “북한의 계급정책과 계급구조,” 통일원(편), 「북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연구」(통일원, 1988) 참조.

과 정치적 리더쉽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쉽이 더욱 중시됨에 따라 專門官僚集團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 이후의 북한사회에서는 新中間階級の 기능이 강화되어 이들이 北韓社會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제한적이거나 改革과 開放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표 2-5-4〉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의 職業成分別 構成比

| 期 別       | 勞 動 者 | 農 民   | 事 務 · 專 門 職 |
|-----------|-------|-------|-------------|
| 제4기(1967) | 63.89 | 15.12 | 20.79       |
| 제5기(1972) | 64.14 | 13.13 | 22.56       |
| 제6기(1977) | 42.8  | 11    | 46.2        |
| 제7기(1982) | 34.6  | 10.2  | 55.2        |
| 제8기(1986) | 36.4  | 12    | 51.6        |

자료: 통일원 편, 「北韓최고인민회의자료집」(1988).

중기별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보고 분석」.

#### 다. 新中間階級の 成長과 階級葛藤의 構造變化

北韓에서 政權創出 初期에 이미 搾取階級을 말살하고 勞動階級の 獨裁를 실현하여 階級없는 사회를 건설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階級問題가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階級鬭爭을 선동하고 동원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마르크스의 階級理論은 資本家階級과 勞動階級の 兩極的 對立을 가정하여 搾取階級인 資本家階級을 해체하면 勞動階級の 독재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産業化의 進展은 새로운 階級分化를 창출하여 마르크스의 이론적 각본에 없던 中間階級이 비대해졌다. 이것은 전인민의 勞動階級化, 無階級社會의 건설정책과 상충됨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하고 새로운 階級鬭爭의 요인이 된 것이다. 다렌도르프가 1957년에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에서 마르크스의 階級理論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中間階級の 成長은 資本主義 社會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마르크스 이론의 맹점이 여기에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의 핵심이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예기하지 못했던 中間階級の 비판적 역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中間階級の 팽창을 체제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산주의에서는 中間階級の 出現이 勞動階級 獨裁의 理念과 相衝되어 체제의 모순으로 대두되었으며 북한사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新中間階級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다루어야 하는가가 北韓의 새로운 階級政策의 핵심이 되었다. 北韓에서 賃金勞動者 一般을 勞動階級으로 보지는 않고 勞動階級, 農民階級, 兵士, 勤勞인테리의 4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나 勤勞인테리를 獨立的인 階級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階層'이라는 다른 개념을 사용으로써 勞動階級の 독재라는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北韓의 정치사전(P.185)의 階層 概念은 다음과 같다.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집단. 계층은 독자적인 사회정치적 세력으로는 될 수 없다. 계층 가운데는 인테리같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도 있으며 룬펜부르조아지같이 계급으로부터 탈락되어 기생적 생활을 하는 계층도 있다. 착취사회에는 기생적 생활을 하는 사회계층들이 있으나 사회주의 사회에는 오직 노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근로인테리만이 계층으로 남아 있다.

北韓에서는 이와 같이 ‘階層’을 이루고 있는 인테리에 대한 階級的 통합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혁명투쟁에서 중산층을 쟁취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 중산층은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농과 도시 소시민들은 협동화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였고 지난날의 인테리를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인테리로 만들었다.<sup>26)</sup>

中産層에 대한 이러한 사전적 定義를 보더라도 인테리의 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金正日의 연설에서도 인테리 문제의 해결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sup>27)</sup>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그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문제를 옹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첫시기부터 인테리를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중요한 혁명 역량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을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

26) 「철학사전」, pp. 686-87.

27)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의 담화 (1991.5.5), 통일원, 「통일속보」 91-19.(1991).

인테리階級이 체제내에서 행하는 役割의 重要性을 인정하면서도 勞動階級 利益의 普遍性(universality)을 階級政策의 기초로 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요구는 사회적 진보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일치하며 노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요구에도 맞는 사회입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 뿐 아니라 농민과 인테리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주체구성부분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할 것을 요구합니다.<sup>28)</sup>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北韓에서 階級政策이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근로인테리 階級の 문제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라. 北韓에서 新中間階級の 社會勢力化

産業化의 결과 어느 사회에나 新中間階級이 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잠재적인 階級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潛在的인 階級(latent class)이 반드시 現在的이며 活動的인 階級(manifest class), 또는 사회세력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新中間階級이 北韓에서도 동구에서처럼 자율적 階級으로 등장하여 사회갈등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여 北韓社會 변화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東歐와 蘇聯에서 처럼 革命後記 국면을 주도할 것인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넘어서 階級分化의 主體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은 사회·정치

---

28) 윗글, p. 4.

적 변화 국면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하는 문제가 북한사회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

(1) 北韓 新中間階級の 二元的 性格

원래 新中間階級은 二元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라이트(Erik O. Wright)는<sup>29)</sup> 新中間階級을 矛盾的 階級(contradictory class) 이라고 규정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쪽 발은 資本家階級에 딛고 다른 한쪽 발은 勞動階級에 딛고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新中間階級은 사안에 따라 다른 이념적 지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新中間階級은 상이한 이념적 집단으로 분열되기도 한다. 즉,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완전히 자본가 階級の 偏에 서고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勞動階級の 偏에 서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펜하이머(Martin Oppenheimer)는<sup>30)</sup> 新中間階級の 理念的 偏向이 體制安定指向, 改革指向 등 二元的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韓의 新中間階級도 모순적이고 이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保守指向的이고, 다른 하나는 改革指向的 이다. 체제안정지향 집단으로 핵심당원, 군부엘리트, 3대혁명소조원 등이 포함되고, 개혁지향 집단으로 外交官, 留學生, 海外勤勞者, 外國軍事顧問, 技術官僚의 일부가 포함된다. 차츰 밝혀지겠지만, 최근 남한의 新中間階級은 개혁지향에서 안정지향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의 新中間階級은 安定指向에서 改革指向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

29) Wright, Erik O., *Classes* (London: Verso, 1985).

30) Martin Oppenheimer, *White Collar Politics* (N.Y.: Monthly Review Press, 1985).



## (2) 北韓 新中間階級の 批判勢力化의 可能性

社會主義 社會에서 新中間階級은 구조적으로 비판세력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가? 뤼머(Jon Roemer)는<sup>31)</sup> 자본주의 사회에만 적용되던 마르크스의 搾取 概念을 수정하여 사회주의 사회에도 적용되는 '搾取의 一般理論'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階級은 新中間階級이라고 주장했다. 기능상으로 보아 높은 보수를 받아야할 新中間階級 등 전문가 직종이 사회주의에서는 평등의 원칙 하에서<sup>32)</sup>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수를 받음으로 해서 社會主義的 搾取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의 新中間階級은 본질적으로 비판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에서 新中間階級은 계급정책상 독자적 이익을 추구하는 階級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勞動階級の 이익에 복무하는 階級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社會 批判勢力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조적 조건이 된다. 北韓의 勞動階級 위주의 階級정책 때문에 수반되는 勞動階級の 세도가 勤勞인테리로 하여금 相對的 剝奪感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에서는 적지 않는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

31) Jon Roemer,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32) 1960년대 말 蘇聯의 所得分布에 대한 자료를 보면 동일 시기 미국의 소득편차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렌스키, "탈계층화를 위한 마르크스주의의 시도," 송복 (편저) 「사회불평등 갈등론」 (서울: 전예원, 1986).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보수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노동계급의 세도까지 나오게 되었다. 당세도에 또 노동계급의 세도까지 생겼다.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sup>33)</sup>

근로인테리의 상대적 박탈감은 勞動階級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權力엘리트와의 관계에서도 생겨난다. 그들은 권력엘리트의 獨占과 官僚主義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1991년 5월 5일의 金正日 담화에서 관료주의와 세도에 대해서 매우 강도높은 비판을 한 것에서 北韓에서의 세도와 관료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만 때문에 인테리들은 실제로 體制批判과 動搖勢力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北韓 指導部에서 지적되고 있다.

인테리들에게는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있으며 나쁜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인테리들은 생산실천과 떨어져 있고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할 기회가 적으며 낡은 사상에 쉽게 물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참다운 로동계급 인테리로 만들어야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인테리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모든 인테리들이 늘 현실 속에 들어가 실천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테리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강인한 혁명적 의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 온갖 지

---

33) 「김일성선집」 제6권, p. 31.

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sup>34)</sup>

이러한 내용은 여러 言論媒體를 통하여 되풀이해서 인민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北韓의 근로인테리는 매우 지속적으로 反體制의 잠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최근의 예를 든다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근로자」의 최근 호에서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議長 양형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르조아 사상의 영향도 비교적 많이 받은 오랜 인테리는 물론,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자란 새 인테리들도 생산활동과 떨어져 주로 개별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며 사상수양에 힘쓰지 않으면 개인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sup>35)</sup>

또 1991년 9월 15일자 勞動新聞 論說과 朝鮮中央放送은 다음과 같이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인테리들은 직업상 특성으로부터 낡은 사상의 영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여야 한다.

최근의 東歐와 蘇聯에서의 改革이 新中間階級 또는 인테리들의 주

---

34) 김일성 1980. 10.1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35) 「근로자」(1990.8), p.20.

도로 이루어졌던 것을 北韓의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양형섭의 다음 말에서 이러한 우려가 잘 나타나고 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인테리들을 노동계급의 진정한 인테리로, 참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일단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 사상공세 앞에서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고 변질되어 사회주의의 길을 포기하고 치욕스러운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36)</sup>

## 2. 社會分化, 都市化, 教育水準의 向上에 따른 社會統制의 弛緩

### 가. 社會分化

工業化가 초래한 필연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社會分化의 정도가 심화되는 것이다. 사회구조의 분화는 두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첫째는 직업과 관련된 분화이다. 1946년 말 현재 북한주민의 74.1%가 농부였으나 점차 勞働者, 事務員, 販賣員, 技術者 등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직업분화와 병행하여 각 직업의 기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서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며, 工業化와 더불어 도

---

36) 「근로자」(1990.8), p.21.

시화도 진전된다. 社會分化的 두번째 水準은 職業分化, 都市化, 教育水準의 向上에 따라 職位集團(status group)이라 불리는 사회관계의 분화이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을 통해서 개인들은 각급 학교의 동기 동창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도시화의 진전으로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고향을 가진 동향집단이 발전한다. 또한 같은 직장에 종사하는 職場同僚, 留學同僚 등이 생겨남에 따라 다원화된 사회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구조가 분화되면 이전과 같은 劃一的이고 일사불란한 國家統制가 이완되기 마련이다. 각종의 비공식집단이나 소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사회의 독자적인 여론형성구조를 낳게 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것이다. 스타스(Starrs)는<sup>37)</sup> 蘇聯에서 KGB와 경찰이 현대적 대도시의 수백만 인구들 속에서 감시와 감독의 수준을 예전같이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 아프카니스탄 사태발생시 유례없는 징집회피 사례의 증가 등을 실례로 들고 있다.<sup>38)</sup> 北韓에서도 사회분화의 진전으로 非公式集團이나 小集團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상대적으로 黨과 國家의 독점적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도 北韓社會 분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논의한 인테리 집단의 성장일 것이다.

---

37) Starr, S. Frederick, "Soviet Union: A civil society," *Foreign Policy*, 70 (1988).

38) 서진영, 앞의 책, p.3.

## 나. 都市化

工業化의 또다른 결과는 都市化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표2-5-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987년 현재 北韓 총인구 중 약 60%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 首位都市比率이 높아 1980-1987년간 평양의 인구는 전체 도시인구의 34.4%에서 30.7%로 약간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남한의 1990년 현재 首位都市比率 32.8%보다 약간 낮을 뿐이다. 이렇게 도시화가 진전되면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이 달라져서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퍼지는 ‘유비통신’이 발달할 수 있다. 유비통신은 공식적인 통신에 비해 같은 애

〈표 2-5-5〉 南北韓 都市化 比較, 1935-1985

| 年度   | 北 韓        | 南 韓        |
|------|------------|------------|
| 1935 | 4.9        | 6.0        |
| 1944 | 10.6       | 12.3       |
| 1949 |            | 17.1       |
| 1953 | 17.7       |            |
| 1955 | 29.0(1956) | 24.5       |
| 1960 | 40.6       | 28.0       |
| 1965 | 47.5       | 33.5(1966) |
| 1970 | 54.2       | 41.1       |
| 1975 | 56.7       | 48.4       |
| 1980 | 56.9       | 57.3       |
| 1985 | 59.0       | 65.4       |

자료: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1990).

기라도 과장되게 소문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都市化의 進展은 情報統制에도 불구하고 批判意識이 전파될 가능성을 높인다.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도시에서 일어난 것은 이러한 정보소통과 상호작용의 도시화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教育水準의 增加

北韓社會 工業化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은 교육수준의 향상이다.北韓에서는 1972년부터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면서 1977년부터 고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이후 교육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해마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1987년 한해에 10개 대학과 3개 전문대학이 새로 생겨났다. 이로써 大學은 1987년 말 현재 244개이며 大學과 專門大學에서 49만 4천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990년 현재 146만의 大學卒業者가 있다.<sup>39)</sup> <표2-5-6>을 보면北韓의 학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39) 「조선중앙연감」(1988).

〈표 2-5-6〉 各國의 教育水準

| 國別 | 年 度                | 成人中 高等教育을 받은사람<br>및 大學生比率 | 性 比數<br>(男子 / 女子 100名) |
|----|--------------------|---------------------------|------------------------|
| 북한 | 1987 / 1988(16세이상) | 13.7                      | 184                    |
| 남한 | 1980(15세이상)        | 9.2                       | 283                    |
| 일본 | 1980(15세이상)        | 18.5                      | 161                    |
| 중국 | 1982(15세이상)        | 0.9                       | 297                    |
| 홍콩 | 1981(15세이상)        | 6.6                       | 175                    |
| 미국 | 1987(16세이상)        | 36.0                      | 105                    |
| 동독 | 1981(15세이상)        | 14.9                      | 107                    |
| 소련 | 1979(16세이상)        | 9.4                       | 101                    |

자료: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199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제유지 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北韓體制가 南韓體制보다 열등하다는 정보가 일단 유입되면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思惟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自由化의 傾向은 높아지는 것이다. 한 귀순 유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北韓에서도 대학생 정도면 생각은 한다”는 것이다. 또 학력수준의 상승으로 기대수준이 상승하여 政治的 正當性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해방 직후 土地改革으로 토지가 분배되었을 때에는 소작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만족했지만 현재의 고학력자에게는 만족의 수준이 다를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北韓에서 青年世代의 革命性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단지 이들이 革命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北韓의 젊은 세대가 高等教育을 받고 理性的으로 보다 覺醒된 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 3. 工業化와 革命後期 症候群

#### 가. 革命의 傳統과 革命後期局面의 딜레마

北韓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혁명’을 사회동원의 핵심적 메카니즘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은北韓의 체제유지는 지속적인 革命의 熱意, 革命의 불꽃을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革命의 불꽃이 꺼지면 무너져버릴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北韓에도 社會構造가 分化되고, 都市化가 進展되고 教育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이전 시기의 革命傳統이 쇠퇴하고 있다. 로웬살(Lowenthal)은 工業化에 따른 革命의 動態性 약화에 관한 3가지의 가설을 제시했다.<sup>40)</sup> 첫째 가설은 工業化 過程에서 위로부터의 계획된 革命은 계획되지 않은 밑으로부터의 變化와 葛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가설은 工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밑으로부터의 변화의 힘은 강해지고 위로부터의 革命의 힘은 약해져서 지속적인 유토피아적 革命의 힘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세번째 가설은 革命의 動態性의 약화는 결국 체제 변화의 主要原因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웬살은 이와 같이 유토피아적인 革命의 動態性이 약화되는 단계를 革命後期局面(post-revolutionary phase)이라고 부르고 있다.

北韓에서 이러한 社會變化가 進行되고 있는가? 제1세대 革命엘리

---

40)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10.

트가 아직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北韓社會에서 ‘혁명의 전통’이 현실적인 경제의 논리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면에 있지만 그것이 얼마 동안 더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비도프(Davydov)<sup>41)</sup>는 理念教化에 기초를 둔 革命期의 정권들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두가지 주요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첫번째는 政權이 統合되었을 때인데 이 시기는 공식적으로 선언된 교리와 선전구호가 주민들의 기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교리와 주민의 기대가 제대로 연결되면 이념은 주민의 체계화된 행동의 확고한 기초가 된다. 이 경우 이념적 열성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지도층과 주민 사이에 연계교리 역할을 하여 社會秩序維持에 기여한다. 남한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보여 주었던듯이 이념은 物質的 補償이 충분하지 못할 때 經濟政策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는 도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안정되고 복지가 증진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념의 역할은 줄어들어 대신에 성숙된 사회에 적합한 實用主義的 思考와 多元主義的 價値가 盛行하는 두번째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다비도프는 두번째 단계에 돌입하면 政權이 理念을 社會經濟發展의 지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政治的 理念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격은 넓어진다고 본다. 이 단계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특색은 ‘分裂된 思考’이다.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공식적 선전에 무관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 충성심을 표시해야 하는 二重性向을 갖게된다. 개인들의 생각은 두개

---

41) Oleg Davydov, *op.cit.*, pp. 6-7.

의 수준으로 분열되는데 첫번째는 정부에서 선언한 목표와 구호를 충실히 지지하는 수준이고 두번째는 상식이 통하는 수준인데 이 경우에 주민들은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선전과는 다른 사회적 판단을 하게 된다.

#### 나. 漸增하는 革命後期 局面의 徵候들

실제로 北韓에서 革命性的의 弱화로 革命後期局面이 도래하고 있다는 징후의 하나는 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망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면서 계속 일만 시키고 주는 것은 그대로라는 식의 懷疑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노동의 댓가로서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고의적으로 노동을 기피한다든가 指導理念과 指導體制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로동신문」 논설은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하여 '혁명성' 미약에 따른 근로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의 결여, 官僚主義的 事業方法과 消極的 態度를 보이고 있는 경제지도 관계자들과 근로자의 괴리 상태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혁명의식이 日常化되고 혁명후기 국면이 나타나는 징후에 대한 또 다른 예로서 노동기피현상을 들 수 있다. 勞動忌避現象은 중국사회과학원 S교수가 한 농사꾼 청년과 나눈 다음의 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당신들은 왜 열심히 농사를 안짓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 농사지어서 우리 입에 들어와요?”

“소변 세번하고 대변 한번 하면 해져요.”

“집단농장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서로 감시를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러나 한 마을에서 같이 평생을 살다보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젠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젠 한 가족같이 살아요. 몇 십년을 같이 사니까, 그리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열키고 설키고 친척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옛날같이 「혁명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 반동분자다」하는 뭐 그런 고발이 없대구요.”

“일을 하다가 ‘야, 소변 한번 보고 와’ 하면 소변하러 가서는 뭐 한시간 아니면 30분, 그러니 소변 세번하고 또 대변하러 간다 해서는 1시간 놀다 오고 이러면 하루 소변 세번하고 대변 한번 하면 해져요.”<sup>42)</sup>

이와 같은 北韓 주민들의 勞動忌避現象은 주요 언론에서 자주 언급된다. 최근 「로동신문」의 社說<sup>43)</sup>은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착취계급의 낡은 사상”이라고 지적하고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노동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공동노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인민들에게 생산에서 경이적인 위업달성과 충성심을 보일 것을 라디오와 선전간행물을 통해 독려하는 공식적인 미사여구가 끊임없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共產主義 社會와 마찬가지로 北韓住民들이 상점, 사무실과 공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음을 北韓訪問者들은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한다. 일종의 순환관계가 성립하는데 인민들의 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수록 과

42) 「최근 북한의 경제 사회상: 중국과학원 S교수에게 알아본다」, 통일원 (1989), p.2

43) 「로동신문」 (1991.8.31).

대선전을 하기 마련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44)</sup>

현재의 北韓狀況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입장, 새로운 슬로건을 표방하면서 思想教養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가 느끼는 실제적인 성취감과 현실적 조건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은 이러한 思想教育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인의식과는 별개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繼續革命路線과 강화되는 思想學習教養은 오히려 ‘혁명’을 일상화시켜 역효과를 낳게 될 가능성도 있다.

#### 4. 世代交替와 革命後期 症候群

北韓社會에서 社會主義 體制가 수립된지 45년이 지났다. 그 이념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식이라고 본다면 세대의 교체는 개인의 의식과 이념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革命性的의 傳承이라는 측면에서 世代交替가 北韓社會의 變化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분석이다.

##### 가. 世代의 概念

世代의 概念은 첫째, 부모世代와 자식世代과 같은 家系繼承의 單

---

44)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버마스 위기이론의 적용,”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1991) 발표논문, P.10.

位(unit of kinship decent)개념, 둘째, 青年層 世代나 大學生 世代라고 부를때 처럼 생애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概念, 셋째, 나이를 먹음에 따라 年齡層을 함께 이동하는 동시출생집단 또는 동기집단(cohort)을 지칭하는 개념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정 기간 내에 주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되는 동기집단으로서의 世代概念이 오늘날 세대 연구의 中心的인 概念이다.<sup>45)</sup> 동기집단의 世代概念이 학계에 보편화되게 된 것은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동기집단들 간에 모종의 意識的 共感帶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知識 社會學的 思考가 보편화 되고나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46)</sup>

이렇게 세대의 개념이 정의된다면 世代效果(generation effect)라는 말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同期效果(cohort effect)와 흔히 成熟效果 즉,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年齡效果(age effect)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sup>47)</sup> 따라서 北韓에서 世代交替의 影響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 세대가 구세대와 革命意識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동기효과의 분석과, 구세대가 나이를 먹어 노년층이 되면서 革命意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年齡效果의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5) David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983).

46) Karl Mannheim, "The problem of generatio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47) Norval D. Glenn, *Cohort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s Series 5 (Sage Publication, 1980).

나.北韓社會의 人口構造

대체로 45년 이후 北韓社會에서 일어난 변화의 하나는 우선 革命世代之 死滅과 革命後期世代之 成長이다. <표2-5-7>에서 보는 바와

<표 2-5-7> 北韓의 年齡別 性別 人口分布

| 年齡    | %    | % 累計 | 全體         | 男子         | 女子        |
|-------|------|------|------------|------------|-----------|
| 0     | 2.3  | 2.3  | 493,552    | 252,079    | 241,473   |
| 1-4   | 8.5  | 10.8 | 1,808,316  | 922,501    | 885,815   |
| 5-9   | 9.6  | 20.4 | 2,046,355  | 1,042,714  | 1,003,641 |
| 10-14 | 9.1  | 29.5 | 1,949,407  | 991,168    | 958,239   |
| 15-19 | 11.8 | 41.3 | 2,531,943  | 1,283,591  | 1,248,352 |
| 20-24 | 12.4 | 53.7 | 2,658,012  | 1,342,791  | 1,315,221 |
| 25-29 | 9.5  | 63.2 | 2,041,534  | 1,024,064  | 1,017,470 |
| 30-34 | 8.8  | 72.0 | 1,875,169  | 939,853    | 935,316   |
| 35-39 | 6.5  | 78.5 | 1,380,927  | 691,191    | 689,736   |
| 40-44 | 5.2  | 83.7 | 1,100,728  | 548,727    | 552,001   |
| 45-49 | 4.2  | 87.9 | 900,998    | 446,532    | 454,466   |
| 50-54 | 3.5  | 91.4 | 757,991    | 345,978    | 412,013   |
| 55-59 | 2.9  | 94.3 | 620,179    | 269,532    | 350,647   |
| 60-64 | 2.1  | 96.4 | 450,494    | 181,397    | 269,097   |
| 65-69 | 1.5  | 97.9 | 329,689    | 125,824    | 203,865   |
| 70-74 | 1.0  | 98.9 | 223,830    | 82,942     | 140,888   |
| 75-79 | 0.6  | 99.5 | 137,636    | 47,668     | 89,968    |
| 80+   | 0.5  | 100  | 104,858    | 28,398     | 75,462    |
| 계     | 100  |      | 21,411,618 | 10,567,950 | 10,843,66 |

자료: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1990). 에서 계산.

같이 6.25전쟁 (1953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표2-5-7>에서 39세 이하)은 전체 인구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革命世代라고 불리는 전쟁 전에 태어난 사람(<표2-5-7>에서 40세 이상)은 21.5%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 엄격히 말하여 전쟁 전에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의 유년기에 있었던 사람을 새세대로 본다면 戰後世代(<표2-5-7>에서 44세 이하)는 83.7%에 달한다. 北韓에서 革命世代로 일컬어지는 일제 기간 동안 抗日運動에 참여했거나 6.25 전쟁기간 동안 ‘美帝’와 싸운 경험이 있는 세대(6.25 당시 10세 이상을 포함하면 현재 50세 이상)는 12.1%에 불과하다. 이것은 北韓 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戰後世代라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새 世代의 特徵

오늘날 北韓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靑長年世代는 일제의 지배, 전쟁,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기성세대에 비해 대체로 思想性과 革命性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北韓 지도부의 표현에 의하면 “학생 등 새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물들기 쉽다”<sup>48)</sup>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새세대가 민주적 시민의 식과 진보적 성향이 강하듯이 北韓의 새세대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言論媒體에 매우 자주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의 강

48) 「로동신문」 (1991.6.5).



력한 체제유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상회하는 靑長年層의 黨性和 革命性 부족이 既存 體制維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1960년대 초에 金日成이 지적하고 있는데, 1963년 2월에 金日成은 休戰線 너머에 있는 적들이 우세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階級의 적에 대한 투쟁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도 했고,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도 받아본 사람들은 점점 늙어가며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도 모르고 고생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가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날 압박받고 빈궁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우리 생활은 끝없이 행복하고 보람찬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동무들은 자기들을 오늘의 행복한 처지로 이끌어 준 우리 당을 언제나 목숨으로 지키며 우리 혁명의 진취물을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견결한 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자라난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악독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대장들이 정치상황을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질문들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이 좋아지면서 일부 청년들속에서 투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도 전쟁영화 같은 것은 깨끗해서 싫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저 좋다 좋구나 하면서 놀기만 좋아하고 곤난을 이겨내기를 싫어합니다. 곤난을 이겨내는 투쟁을 강하게 전개해야 용감성과 참을성이 배양될 것인데 이런 투쟁이 없고 점차 라태하고 안일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세대들이 적을 잊어버리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한 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혁

명위업을 계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sup>49)</sup>

#### 라. 社會化의 失敗와 革命性의 退潮

새로운 세대의 이러한 문제는 社會化가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50)</sup> 北韓의 젊은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自我를 의식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게 되지만 高等中學校를 마치는 단계에 오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과 北韓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韓國·美國·日本 등 외부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한층 더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심리적 변화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포함된다.

북한은 평등사회이고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대학진학, 직장배치, 장교입관, 로동당입당, 도시지역 거주 등 모든 생활분야에서 성분·핵심계층·당간부의 자녀·출신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인가?<sup>51)</sup>

---

49)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 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3.2.8. 「김일성저작선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1), pp.468-72.

50) 도홍렬 “북한사회의 개방화요인과 전망” 「통일논총」 (통일원, 1984)

51) 「내외통신」 (1983.8.26)

이는 北韓이 출신성분을 철저히 따져 당간부들의 경우, 그 자녀들에게까지 政治的·社會的 惠澤과 優先權을 주어온 결과 불평등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각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高等中學校 卒業班이나 대학에 들어 갈 단계가 되면 회의와 불만이 더욱 깊어지고 終局에는 체제에 대한 批判意識으로 발전하게 된다. 北韓當局도 청소년들 간에 安逸主義가 팽배하고 鬭爭이 약화되고 革命性이 퇴색하고 있다고 스스로 비판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하기 싫어하고」, 「조직생활을 싫어하고」, 「학습하기 싫어하고」, 「직장이탈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경향은 청소년층에 서구풍조가 확산되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平壤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北韓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디스코풍의 록음악을 즐겨 들으며 은밀한 곳에 모여 디스코를 추기도 하는데 이같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日本, 홍콩 등지로부터 방문하는 상인을 통해 카세트라디오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高級 黨幹部 子女들이라는 것이다. 평양에는 주민을 위한 공개적인 디스코텍은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등 10여곳에는 디스코텍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간부 자녀를 비롯한 일부계층은 외화와 바꾼 돈표 3원을 내고 입장하고 있으며 돈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동행하여 입장하려고 호텔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세대에서는 西歐文化가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전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있지만 진보적인 대학생의 경우는 改革·開

放 活動을 위해 同調勢力을 규합하고 있으며 급진적인 청소년들 가운데서는 노골적인 體制顛覆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작년 7월 함흥시 풍흥리의 한 게시판에 金日成-金正日 世襲體制를 비난하고 정당한 선거를 통한 「主席」 선거를 주장하는 벽보가 부착된 사건이 있었다. 또, 평양축전이 열리기 직전인 88년 5월경에 金日成 大學 철학부 학생 4-5명이 反金日成 유인물을 살포하던 중 체포된 事件이 있었다.<sup>52)</sup>

靑少年의 ‘革命性’의 문제가 우려할 정도임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의 하나는 새로 제정되어 시행된 「靑年節」 행사라고 할 수 있다.<sup>53)</sup> 北韓은 1991년에 8월 28일을 처음으로 「靑年節」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8월 18일부터 청년절 당일인 28일까지를 「靑年學生祝典期間」으로 설정하고 정치, 경제, 예술, 체육 등 분야별로 나누어 北韓 전역의 청년학생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金日成과 金正日의 생일 행사 다음 가는 전국 규모의 거대한 행사를 치루었으며 中央報告大會에는 전국의 10만여 인파가 동원되었다.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한 이유에 대해 中央人民委員會 政令은 “김일성이 항일혁명 투쟁기에 청년운동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한 1927년 8월 28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청년절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행사동안 北韓 전역의 청년, 社勞靑員들에게 보낸 서한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가 되자」에서 金正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양하였다.

52) 「내외통신」 주간판 745호 (1991.5.24).

53) 「내외통신」 주간판 759호 (1991.8.30).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가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와 생활풍조에도 물젓지 말아야 합니다. — 청년들은 썩어빠진 부르조아적 사상문화와 생활양식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항일혁명투쟁속에서 마련된 빛나는 革命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이룩하자면 그 계승자인 청년들이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sup>54)</sup>

이 행사에서 北韓은 金正日과 青年世代의 관계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각 宣傳 媒體를 통해 청년절이 金正日의 배려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金正日이 청년세대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金正日이 전체 青年들에게 보냈다는 書翰 내용을 관철한다는 명목의 대규모 青年蹶起集會를 개최한데 이어 10여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이같은 집회를 잇달아 열어 思想教養과 ‘김정일 따라배우기 운동’강화,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함양,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발양을 강조했다.<sup>55)</sup>

北韓과 같은 閉鎖國家에서 사람들의 개성, 동기 혹은 가치관을 개방사회에서와 같은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두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실제로 北韓으로부터 탈주한 사람이나 北韓을 방문한 재일교포들로부터

54) 「월간 북한동향」 (통일원, 1991년 8월).

55) 「내외통신」 9481호 (1991.9.18).

불평 불만(봉기가 있었다는 소문까지도)에 대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비록 北韓住民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 무지하다고는 하나 만약에 그들이 低級의 노역과 보상받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즐기고 찾아하고 있다면 人間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sup>56)</sup>

## 5.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의 社會的 效率性的 危機

北韓社會의 변화 잠재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징후는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의 비효율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절의 목적은 北韓社會의 생산양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 있다. 로웬살은 사회주의 生産樣式이 변화하게 되는 원인을 세가지의 갈등구조에서 찾았다.<sup>57)</sup> 革命期 엘리트와 革命後期 전문 엘리트간의 갈등, 革命 이념에 의한 동기부여와 물질적 동기부여 사이의 갈등, 위로부터의 革命的 계속과 아래로부터 革命的 동태성의 상실에서 오는 갈등이 그가 지적하는 세가지 갈등 양식이다. 로웬살은 이 세 갈등은 革命後期局面이 강화됨에 따라 체제자체의 正當性的 危機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최근에 카터(Aidan Foster-Carter)는 하버마스(Habermas)의 正當性 위기이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위기, 합리성의 위기, 동기부여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의 측면으로 나누어 北韓社會를 설명한 적이 있다.<sup>58)</sup>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

56) Aidan Foster-Carter, *op.cit.*, p.11.

57) Richard Lowenthal, *op.cit.*, pp.110-11.

적 생산양식의 위기를 합리성의 위기, 동기부여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로 세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合理性의 危機

北韓의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위기는 '주체의 경제관리체제'에서 오는 것 같다. 즉 北韓이 지금 겪고 있는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는 金日成을 위대한 首領이라고 부르는 정치적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합리성의 위기는 다음의 몇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金日成의 경제이론이 도그마화되어 北韓經濟를 지배하는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北韓 學者들이 실물경제에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金日成의 도그마 때문에 경제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말부터 北韓의 경제학자들은 社會主義 經濟 초기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화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성장율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金日成은 이러한 주장을 이론적으로 불충한 궤변이라고 공격하였다.

요즘 일부 경제학자들 속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장성은 하지만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 속도는 한해에 4-5% 아니면 6-7%를 넘지못한다는 리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 그들은 이러한 주장의 론거로 복구기에 비하여 개건기에는 생산장성의 예비가 적어지며 따

---

58) Aidan Foster-Cater, *op.cit.*

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업이 발전할수록 예비는 점점 적어지며 생산장성속도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후복구기에는 예비가 많았지만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닦아지고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건기에 들어선 오늘에는 예비가 얼마 없으므로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또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 노동이 낭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높일 수 있습니다.<sup>59)</sup>

그러나 金日成의 主體의 경제관리체계의 이론은 틀렸고 경제학자의 예측이 정확하였다. 北韓의 經濟 成長率은 실제로 쇠퇴하여 지난해는 -3.7%를 기록하게 되었다.

둘째는 中央集中的 계획경제와 ‘현지도’사이의 혼란이다. 北韓은 모든 통제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중앙집중된 경제계획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립된 계획에 대한 무원칙한 간섭들에 의해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도 金日成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차라리 계획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가 된다. 金日成 전집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듯이 金日成은 ‘현장지도’를 통하여 이미 설정된 계획을 심각하게 변경시키거나 철회하곤 하였다. 어

---

59)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주체의 경제관리체제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365-66.



편 경우에는 한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그가 편애하는 공장으로 옮겨가라는 지시까지도 내리고 있을 정도이다. 金日成의 지시는 반박될 수 없고 반드시 복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金日成의 잘못된 지식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간섭에 의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적지 않다. 더욱이 그의 아들 金正日도 현지지도를 하고 있으니 北韓 경제의 장래는 더욱 어둡다고 할 수 있다.<sup>60)</sup>

세번째의 合理性 위기의 徵候로는 努力動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北韓은 勞力動員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勞力動員을 강화시키는 것은 경제적 效率性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社會主義 體制가 資本主義 體制에 패배하게 되는 주원인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의욕도 없는 사람들을 다년간 고된 일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시책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sup>61)</sup>

네번째의 合理性 위기의 예로서 정부의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문제를 들 수 있다. 金日成 개인숭배는 직접·간접적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평양에 있는 불필요하게 많은 ‘위대한 기념건물’(주체탑, 개선문, 105층 류경호텔)들과 반복적으로 치루어지는 축제행사에서 잘 나타난다. 北韓은 서울올림픽에 대항하여 1989년 7월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였는데, 15,000명 이상을 北韓側이 비용을 부담하고 초청하여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였다. 또한 40억불을 투자하

---

60) Aidan Foster-Cater, *op.cit.*, p.6.

61) *ibid.*, p.8.

여 건설한 남포 갑문과 댐 공사도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sup>62)</sup>

다섯번째의 합理性 위기는 絶對 無誤謬의 誤謬이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北韓 共産黨은 사실상 絶對的인 無誤謬性을 주장한다. 黨의 모든 정책은 세부사항에 있어서까지 항상 絶對적으로 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수가 정직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된다. 그 결과 北韓의 정책결정 체계에서 정직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의 통로가 부재한다. 물론 비공식적인 피드백의 통로는 작동하고 있으나 체제전체는 이같이 우스꽝스러운 無誤謬性의 걸치레 때문에 해를 입고 있고 불구가 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無誤謬性의 주장은 金日成의 절대적 능력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sup>63)</sup>

#### 나. 動機誘發의 危機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革命의 불꽃이 타고 있을 때에나 가능하다. 그 불꽃을 계속 타게 하는 것이 動機誘發이다. 北韓에서 아직은 동기유발의 위기가 만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北韓에서 동기유발의 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은 확실하다. 포스터-카터(Aidan Foster-Carter)는 동기유

---

62) *ibid.*, p.9.

63) *ibid.*, p.9.

발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身分制’를 지적하고 있다. 北韓에서 모든 인민들은 세 기본계층, 즉, 核心階層, 動搖階層, 複雜階層이며 각각은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분류되어진다. 이것이 ‘身分制’로 명명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비록 계층분류가 정치적이고 임의적이기는 하나 기능적으로 전통적인 身分制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신분제와 마찬가지로 北韓의 계층제도는 삶의 방향을 미리 결정짓는다. 오로지 핵심계층만이 평양에서 살 수 있으며, 역으로 대부분의 복잡계층은 시골에 살아야 한다. 따라서 파슨스(Parsons)의 개념을 빌면 歸屬(ascription)이 業績(achievement)을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계층은 어떠한 경우에도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으며 동요계층에게도 승진의 기회는 희박하다. 그러나 이 두 계층이 전 人口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動機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또한 열심히 일하여 계층의 上昇移動을 해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sup>64)</sup>

자발적 동기유발을 억제하는 두번째의 요인은 지나친 順從的 文化라고 할 수 있다. 北韓住民들은 유별나게 순종적이다. 그것은 北韓에서 순종은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 사회·문화적 전통과 경험에 의해 철저히 조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첫째가 전통적 儒教思想으로서 중국과는 달리 北韓에서는 儒教가 격하되거나 공격되지 않았으며, 둘째는 日本 식민주의시대에 천황숭배로 절정을 이룬 권위주의는 오늘

---

64) *ibid.*, p.12.

날의 金日成의 카리스마에 대한 전통적 기초가 되고 있으며, 셋째는 스탈린주의 전통으로서 전체(階級 혹은 黨)의 지시사항에 대한 개개인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여 왔다는 점이다.<sup>65)</sup>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근원은 - 남한에서도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 휴전선 이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분제도와 순종적 문화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한다는 동기유발은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다.

#### 다. 正當性의 危機

經濟와 政治는 사회구조의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로 상호연관되어 있다. 北韓이 經濟危機를 비롯하여 合理性의 危機, 動機誘發의 위기로부터 총체적인 사회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 그것은 체제의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비효율성이 유발한 정당성 위기의 형태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北韓社會에서 正當性의 문제가 쉽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資本主義 사회는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힘에 있어 어떤 단일한 중심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토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책임주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北韓

---

65) *ibid.*, p.14.

에서 정책의 실패가 인민대중에게 인식될 때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체제도전이 즉시 일어날 수 있다.

둘째로, 金日成의 正當性의 객관적 기초가 급속히 소멸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北韓 정권 초기에는 상당수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이고 자발적인 충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비록 시작부터 잔인한 全體主義의 요소가 있었음은 부인하지 않지만 정권수립이 억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北韓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을 앞서고 있었으며 통일원의 자료에 의하면 1973년 까지도 생활 수준은 남북한이 비슷했다. 현재의 위기상태와는 판이하게 北韓은 한때 성공한 나라였으며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는 정권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 지난 20년간은 상태가 더이상 호전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 過去의 榮光 때문에 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sup>66)</sup>

세번째로,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서 北韓의 대다수 인민들이 抗拒의 소리를 높일 수 없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단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도 변할 것이다. 최근 망명한 외교관 고영환의 증언 중 北韓經濟 官僚들이 자신들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사회안전부에서 이들을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이들 모두를 도저히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증언도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계속되는 경제적 그리고 合理性의 위기는 正當性의 위기와 이를 토론할 공

---

66) *ibid.*, p.16.

간을 창출하고 있으며 정당성의 위기를 반복적으로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sup>67)</sup>

이러한 여러가지 양상의 危機의 징후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蘇聯의 원조가 거의 완전히 중단된 지금, 中國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원조가 주어지고 있으나 경제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인민들의 生活水準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北韓社會 변화의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Ⅲ. 社會的 挑戰

지금까지 北韓社會구조의 여러 측면의 변동, 세대교체 등에 기인한 革命的 動態性의 쇠퇴, 그리고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의 위기를 분석했다. 이러한 變化의 潛在力의 增大가 당장은 東歐 여러나라들이나 蘇聯에서처럼 顯著한 改革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67) *ibid.*, p.17.

## 1. 經濟難과 社會的 不滿

北韓의 經濟的 危機와 그 구체적인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는 편이다. 통일원의 자료에 의하면 北韓은 1990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3.7%)을 기록하였으며 생산시설稼動率은 기계고장, 원자재부족, 전력부족 등의 이유로 4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8)</sup> 최근에 망명한 北韓의 외교관 고영환은 심지어 주요산업시설(대안중기공장 등)도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수분간만 가동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北韓의 言論들은 석탄, 전기, 교통, 경공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부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고 정부는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다.

특히 식량부족 문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北韓은 식량원조와 식량수입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中國, 泰國은 물론 최근에는 南韓으로부터도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 왜냐하면 農業분야야말로 말로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정치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北韓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옥쌀’, ‘혼합국수’, ‘속도전 가루’ 등 독특한 代替食品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옥쌀은 강냉이 가루에 밀가루 등 낱알가루를 섞어 물을 뿌려 익힌 뒤 성형기로 압축, 쌀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주로 도시주민에게 배급해 주고 있다. 혼합국수는 나무껍질

---

68) 「내외통신」 주간판 755호 (1991.8.2).

가루와 옥수수가루 및 감자가루를 혼합해 만든 국수로 대부분 산간 지방의 주민들에게 배급되고 있다. 속도전가루는 통강냉이를 물에 불려 가루를 낸 다음 압축 가열시키면 푸석푸석한 가루로 변하는데 이것을 물에 타서 먹으면 되는 것이다. 속도전가루라는 이름은 아무 곳에서나 물에 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졌으며, 주로 공장이나 기업소 등의 勤勞者들에게 주로 배급되고 있다.<sup>69)</sup>

이러한 식량난의 영향으로 北韓 각지에서 주민들의 暴動과 식량약탈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주민폭동과 식량 약탈사건은 1989년부터 각개인에 대한 식량 배급량이 격감하고, 하루에 두끼먹기 운동이 강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배급 비율마저 쌀과 잡곡이 지방의 경우 종전의 3:7 또는 2:8에서 1:9로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北韓에서 금년들어 발생한 식량폭동 및 약탈사건은 외부에 알려진 것만해도 4~5건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난 5월 평북 운산지방에서 일어난 폭동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며칠씩이나 늦어진 식량배급을 항의하던 주민 500여명에게 郡黨 보급소측이 무성의하게 대한 것이 暴動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식량이 언제 나오느냐,” “며칠째 굶은 사람도 있다”는 주민들의 항의에 郡黨 보급소측에서 “며칠이나 굶은들 나오지 않은 식량을 우리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건 동무들의 사정이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오”라고 대답하여 격분한 주민들이 糧穀倉庫를 부수고 보급소 기물을 파괴하는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sup>70)</sup> 日本의 反北韓 교포단체

69) 「내외통신」 주간판 764호, (1991.10.4).

70) 「내외통신」 주간판, 771호 (1991.11.22).



인 在日韓國朝鮮人民主統一聯盟(議長 李光)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에 걸쳐 평안북도의 신의주와 함경남도의 흥남 등 北韓의 36개소에서 8천여명의 주민이 식량약탈소동을 벌였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인민군 4천여명이 출동했으나 이들까지 주민들에게 동조하게 되자 보위부원 3천여명이 비상출동해서 이들을 진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진압과정에서 軍의 최고 지도자가 보위부원에게 소요민중과 抗拒人民軍에 발포 등 일체의 공격을 하지말 것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회유책을 취했기 때문에 유혈충돌은 없었다는 것이다.<sup>71)</sup>

北韓은 油類 부족현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金正日 지시로 유류절약조치를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등에 하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금, 토, 일요일에는 전 차량에 대한 유류공급을 중단할 것, ② 화물자동차는 목탄 대신에 옥수수 속대를 말려 묶은 “주체 연료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것, ③ 지방과 농촌에서는 우마차를 이용하여 짐을 운반토록 할 것, ④ 각 도당위원회에서는 낡은 차량을 폐차시키고 불요불급한 차량을 회수할 것, ⑤ 일체의 유류낭비를 막고 유류를 절약하는 사람이 애국투사라는 정치적 공세를 벌일 것 등이다. 이같은 유류절약 조치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금, 토, 일요일에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화물수송과 ‘특별한 불일’을 볼 수 없다 ②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제 때 배차되지 않아 생활 쓰레기가 쌓여 불편을 주고 있다는 등이다.<sup>72)</sup>

71) 일본 「세계일보」(1991.7.26); 「내외통신」 주간판 755호 (1991.8.2).

72) 「내외통신」 주간판 769호 (1991.11.8).

식량과 유통부족 뿐 아니라 경제적 후퇴에 대한 社會的 不滿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테리들은 北韓社會가 이러다가는 망한다는 의미에서 체제비판을 하는데 반해, 복잡계층 및 인민대중은 생활고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1991년 귀순한 고영환의 증언). 1975년 한해 동안에 北韓 전역의 農民들 사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항거의 사건들은 1백여 건에 달했다는 것이 幹部들에게만 주는 극비 1호 통보자료를 통하여 밝혀졌다.<sup>73)</sup> 1989년 이후 해외 유학중 귀순한 學生들의 증언에 의하면 요즘에는 南韓의 中學生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도 사회비판을 하고 못먹고 못사는 불평을 하는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sup>74)</sup>

蘇聯 외무부 1급 서기관인 다비도프에 따르면 北韓에서 ‘심리적 이반’이 확산된 전환점은 1989년 개최된 평양 청년학생축제였다는 것이다.<sup>75)</sup>

北韓 전문가들이 충분히 관심을 쏟지 않았으나, 이 행사는 北韓 주민들의 사회 심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北韓 주민들에게 北韓과 北韓 지도자들이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계획되었던 이 행사는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물자를 절약하고 노력동원을 하고 식량배급을 줄이는 등 전주민이 장기간 극도로 긴장하여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반 주민들은 그들이 초대받지 않은 향연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

73) 신경완, 「월간중앙」 (1991.7).

74) 「신동아」 (1991.9).

75) Oleg Davydov, *op.cit.*, p.7.

처럼 속았다고 느꼈다. 더욱이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이 행사가 외국인과의 접촉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되었고 강요적 선전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 무언가를 배웠다. 그리고 가게 진열장은 평소에 北韓 주민이 볼 수 없었던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창구였다. 그것을 통해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北韓 당국이 말하는 北韓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선전이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형식적인 충성심은 남아 있지만 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태이고 안으로 실제로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駐韓 루마니아 大使 이찌도르씨에 의하면 루마니아에 1989년의 민중봉기가 일어난 배경 중의 하나는 루마니아에, 차우체스크 집권 기간 동안 주민의 생활수준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이것을 차우체스크의 책임으로 생각한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6)</sup> 다비도프에 의하면 北韓의 주민들도 쌀과 고기가 충분했던 1970년대를 향수에 젖어 회고한다고 한다.<sup>77)</sup> 따라서 北韓도 현재의 경제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축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정치적 紛糾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76) 「민족통일연구원 초청 간담회」(1991).

77) Oleg Davydov, *op.cit.*, p.8.

## 2. 反金正日 思潮의 一般化

北韓社會의 경제적 곤란은 金正日에 대한 불만으로 직결되고 있다. 北韓 주민들은 1970년대 초에는 잘 살았는데 金正日이 등장한 1970년대 중반부터 經濟가 침체되었으며 이것은 “철없는 아이가 정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sup>78)</sup> 金正日是 1972년에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평양시 건설을 주도 하였고 대규모 상징적인 혁명전적비들을 건립하였다. 1980년대 초에 준공된 「인민대학습당」, 「창광거리」, 「창광원」, 「평양산원」, 「평양제일백화점」, 「만경대 유희장」, 「빙상관」, 「청류관」, 「주체사상탑」, 「개선문」, 「국제친선박물관」 등 20여개가 넘는 이른바 ‘대기념비적 건조물’의 건설과 41층짜리 아파트 건립(2동), 「김일성경기장」 확장(「모란봉」경기장을 5만명에서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확장) 그리고 105층짜리 류경호텔 건설은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비경제적·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상품 생산부문의 投資가 상대적으로 감축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北韓의 경제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음을 대부분 北韓 주민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金正日에 대한 비판여론은 경제적 失政에서 비롯되어 점차 그의 지도자적 자질, 우상화정책 반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sup>79)</sup> 한 귀순留學生의 증언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78) 귀순 유학생 남명철의 증언 (1991).

79) 「통일속보」 91-21 (1991), p. 9.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은 그대로 다 남아있고 김정일을 욕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김정일 욕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그런데 北韓 대학생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김정일 그 사람 나쁘다, 그 사람 사치하고, 기쁨조·행복조 거기에 대해서 말 많이 하고, 뭐 밤마다 갈아대고…… 젊은 사람 특히 간부집 자식들이 김정일이는 사람이 안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똑똑한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 생각에는 10년내 北韓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변화할 것 같습니다. 꼭 변화할 거고 변화해야 된답니다. 밑으로부터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조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행동엔 못나선단 말입니다. 그것이 축적되면 터질 때가 있겠지요.<sup>80)</sup>

金正日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로 최근 北韓에서 ‘김정일 지지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金正日에게 ‘충성의 편지’ 보내기 운동이 한 예가 된다. 北韓에서 사회단체나 군중집회 등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金父子에 대한 참석자들의 충성결의를 다짐하는 ‘편지’를 채택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신문 및 방송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金正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北韓 社會 저변에 팽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sup>81)</sup>

1989년 北韓의 평축 이후 귀순한 사람들과 방북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관찰해 볼 때 인민대중 뿐만 아니라 北韓의 간부급을 포함한 인텔리들과 金正日과의 알력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北

---

80)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pp. 160-61.

81) 「내외통신」 종합판 42호 (1990), p.20.

韓 고위간부들은 金日成에 대해서는 항일 빨치산 경력, 정권창건 업적 등을 인정하여 대단한 충성심을 보이지만, 金正日에 대해서는 측근을 제외하고는 정책노선과 지도자 자질, 그리고 세력다툼으로 인해 불만이 많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강성산이 金正日과 정책마찰로 總理에서 해임되어 함경북도 당위원장으로 좌천되었으며, 국가보위부장 김병하는 金正日과 권력다툼으로 체포되었다. 또한 부주석 박성철의 아들도 金正日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근모는 주식펀드제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정무원 총리직에서 해임되었다.

金日成 독재 45년은 어쩔 수 없이 인정되어 왔지만 金正日 후계체제 준비 10여년의 과정에서 抗日빨치산 출신의 원로그룹과 신진 소장그룹간의 갈등, 군부와 관리 및 黨僚階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 北韓 방송은<sup>82)</sup> 「우리 당은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대를 이어 꽃피워 나가는 위대한 당」題下의 논설을 통해 “김정일 동지는 당의 통일 단결 대오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오의 단합을 저해하는 사소한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도 스쳐 보내지 않고 그를 반대해서 원칙적으로 투쟁하도록 이끌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당내에 ‘부정적 현상’에 대한 투쟁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 동안 은폐해 왔던 勞動黨내의 문제들이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金日成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인데 金正日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

82) 「조선중앙방송」(1990.9.25).

는 것은 北韓社會의 구성원들이 金日成 시대와 金正日 시대를 비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교의 관점이야말로 ‘절대성’을 초월하는 첫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北韓 주민들은 情報統制 때문에 외부와 직접 비교가 어려워도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며, 비교의 준거틀을 가지게 됨으로써 北韓 주민들이 현실적인 사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金正日이 경제문제를 크게 개선하여 金日成 시대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기 전에는 北韓 주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3. 體制比較 및 體制批判의 思潮

최근에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北韓을 외국과 比較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두가지 환경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外國과의 교류 증가로 외부의 情報가 유입됨에 따라 비교의 계기(cue)가 점차 증가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經濟的 위기에 따라 주민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정보의 유입은 冷戰의 종식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韓蘇 修交와 韓中 관계 개선 이후 在蘇, 在中 韓人 교포들이 南韓의 발전된 모습을 알게 됨으로써 蘇聯 및 中國을 연결고리로 하는 南北韓 주민들간의 간접적인 접촉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北韓 주민과 외부 문물과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외화획

특의 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北韓은 1985년 5월 政務院 산하에 국가관광총국을 설치했고 1987년에는 세계관광기구(WTO)에 가입했으며 이어서 1989년 7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회사를 로스엔젤레스 거주 교포인 박경윤과 합작으로 설립하였다. 이러한 결과 관광객이 1990년에는 전년에 비해 무려 41.4배나 증가하였다. 1991년에는 일본 관광객이 직항로선으로 北韓을 방문하였고 在美, 在日 동포의 관광객 및 사업가의 방문 등으로 방문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sup>83)</sup> 무엇보다도 1989년 7월의 「평양축전」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국제행사는 北韓 주민들이 외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평양축전 기간 동안 北韓에는 160여개 국가 및 단체에서 1만4천여명의 外國人이 일시에 찾아왔다. 北韓 주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의 의복이나 휴대품, 자유분방한 행동양상, 심지어는 天安門사태를 규탄하는 것까지 목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외국 문물과의 접촉은 결과적으로 北韓 주민의 사상적 동요와 정신적 해이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평축」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北韓에서 「평축」이후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사상교양강좌, 조직정비 및 강화, 노력동원 촉구 등을 위한 쫓기모임, 토론회, 강습회 등은 주민들의 動搖와 弛緩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4)</sup>

이와 더불어 南韓과의 비교하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한 귀순자

83) 「내외통신」 종합판 42호(1990.7.1-12.31), pp.406-41.

84) 「내외통신」 종합판 41, p.30.



의 증언이 이를 시사해 주고 있다.

TV에서는 韓國에서 데모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처음에는 무심코 보았는데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거리풍경으로 보아 상당히 잘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1985년 고향방문단이 다녀간 이후에는 못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자 그 다음부터는 韓國의 거리나 사람들의 모습을 TV에 방영할 때는 아주 흐리게 빨리 지나가게 하고 있다. 또 데모를 매일 하면서 매일 잡아가도 자꾸 데모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한번에 몽땅 다 쓸어버리면 다시는 데모가 안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자유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임수경양이 北韓에 온 것을 본 후에는 점점 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그 먼 나라를 돌아 평양에 올 수 있었으며 北韓이 더 살기 좋다면 왜 이곳에 남지 않고 굳이 돌아가려고 하는가?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임수경양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자유스럽게 구속받지 않고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北韓 TV를 통해 본 바에 따르면 대학생은 늘 싸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임수경양을 보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았다. 여러 사람 앞에서 준비해 온 자료도 없이 말을 굉장히 잘했다. 임수경양이 돌아간 후에도 韓國정부가 부모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 왜냐하면 北韓에서는 임수경양의 부모가 당연히 감옥에 갇거나 사형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sup>85)</sup>

이러한 體制比較의 경향은 더 나아가 北韓體制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 귀순자들이 증언한 체제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6)</sup>

---

85) 귀순자 임정희 증언. 조선일보사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p.149.

86) 「내외통신」 (1983.8.26).

北韓은 평등사회이고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대학진학, 직장배치, 장교입관, 「로동당」입당, 도시지역 거주 등 모든 생활분야에서 성분·핵심계층·당간부의 자녀·출신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인가?

北韓에도 당간부들의 부정부패, 관료주의적 특권의식, 호화생활 등 소위 반사회주의적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당간부들이 모든 청탁행위를 뇌물로 해결해 주는 사회적 비리현상이 많아지고 있는가 하면 일부 외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일본제품인 손목시계, 스카프 등은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암거래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자본주의 나라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蘇聯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당간부와 관리들이 한편으로 남조선 해방과 金日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표리부동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대하여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고 깊은 불만의식에 젖어 있다.

만약 北韓 청소년들이 韓國의 현실을 똑바로 깨닫게 된다면 70퍼센트는 월남할 것이다.

체제비교와 체제비판은 인민대중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全 社會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몇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째가 엘리트들의 체제비판이다. 北韓의 지도층은 일반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현재 北韓의 實情을 외부와 비교할 수 있는 감각 및 안목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北韓 지도층은 北韓의 경제적 낙후, 지나친 社會統制, 主

體思想의 맹점 등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體制 및 政權에 대한 비판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들은 경제체제 정책 및 기념비적 건설사업에 대하여 주로 비판적이다. 이러한 비판의 구체적인 사례는 최근에 귀순한 蘇聯留學生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졌다. 駐蘇 北韓 대사관 참사관 등이 北韓體制의 모순 및 체제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었고, 金策工大 學長, 평성과학원 설계실장 등이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건의한 후 좌천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있었고, 또 黨 간부, 김책공대 教授가 主體思想탑, 남포갑문 등 기념비적 건설사업을 비판하다가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sup>87)</sup>

둘째, 海外留學生들의 체제비판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蘇聯을 비롯한 東歐국가에 나가 있는 留學生 수는 20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蘇聯 留學生 수는 약 1000명쯤이었으나 東歐社會主義 체제가 붕괴하면서 北韓은 1989년 이후 留學生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조치하였다. 최근에 韓國으로 망명한 留學生의 증언에 의하면, 東歐나 蘇聯으로 나간 留學生들은 2년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北韓體制에 대해서 비판적이 된다는 것이다. 東獨에 유학 중이던 한 학생은 北韓體制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동독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는데도 北韓보다 잘 삽니다. 이게 의문이었읍니다. 北韓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못사나 하고 유학 처음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외국 留學生 중 제일 잘한다

87) 「통일속보」, 91-21 (1991.7.23).

고 합니다. 독일 교수에 물어보면 北韓이 발전 못하는 것은 아시아적인 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암만 공부를 잘해도 北韓이 발전할 수 없구나, 北韓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정치가 개방되어야 하고...그런데 왜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김일성 우상화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급격히 변했습니다.<sup>88)</sup>

88년 8월에 3년만에 방학을 틈타 돌아갔는데 눈뜨고 못 볼 정도였습니다. 3년전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우상화는 더 심해졌고 또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변한 것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평측 맞으면서 사람들을 외국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요리사도 보내고 留學生도 갔다와서 많이 말해주니까 이제는 안전원이고 국가보위부 사람이고 당원이고 간에 우선 먹고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평측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산다, 외국인들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보니 정말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더라 말입니다...평양 사람들 南韓이 北韓보다 잘산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sup>89)</sup>

세째, 反體制 組織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體制에 대한 회의 및 金正日에 대한 불만은 위기 의식과 결합하여 차츰 체제 불만 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미 불만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반체제 활동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軍 및 黨간부를 중심으로 인테리, 학생조직과 연계되어 소그룹을 형성, 지하조직을 구축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北韓體制를 위협할 요인이 되리라고 보여진다.<sup>90)</sup> 귀순 留學生의 증언에 따르면, 1987년에 당 간부와 학생이 연계된 반정부조직이 탄로나서 처형된 사례가 있으며,

88) 귀순 유학생 전철우의 증언.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p.157.

89) 귀순유학생 김은철의 증언.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p.15.

90) 「통일속보」 91-21, p.4.

1988년 6월에는 軍部, 黨幹部, 留學生이 연계된 반체제조직이 적발되어 처형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sup>91)</sup> 또, 1990년에 北韓을 방문한 재미교포에 따르면, 평북 신의주는 中國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개혁·개방의 바람을 쉽게 감지하여 불만이 팽배하여 있을 뿐 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세력 및 저항세력의 지하조직망이 구축되어 계기만 주어진다면 폭동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1990년에 中國을 방문한 K대 教授의 증언에 따르면 1990년에 蘇聯·東歐에서 소환된 留學生들 중심으로 한 지하조직이 적발되었으며, 1990년에 귀순한 留學生에 따르면 1985년에 金日成綜合大學과 東歐 留學生이 연계된 반정부 그룹이 조직되었다는 것이다.<sup>92)</sup> 金正日 자신도 東歐社會가 개혁을 하고 있는 시점인 1991년 5월5일에 행한 담화에서 체제도전의 징후를 시사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세한다면 반혁명분자들이 민심을 오도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본 반체제의 징후를 뒷받침하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

#### IV. 變化의 展望

지금까지 北韓 사회가 生産樣式과 統治樣式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

91) 「통일속보」 91-21, p.5.

92) 「통일속보」 91-21, p.10.

조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성격의 社會變化가 있어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北韓社會는 특이한 통치양식, 특이한 이념체제 및 철저한 대외 정보차단 정책으로 동구와 소련과 같은 社會主義의 大瓦解는 경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 환경의 압력과 대내적 경제 위기, 사회구조의 變化, 그리고 사회적 불만의 누적적으로 말미암의 變化의 잠재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北韓社會의 향후 變化를 규정할 變化의 促進要因과 抑制要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抑制要因

北韓 變化의 潛在力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다음의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東歐 社會主義 국가의 개혁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의 敎訓이다. Davydov가 지적한 대로<sup>93)</sup> 北韓은 蘇聯을 포함한 社會主義 국가들이 개혁을 시작함으로 모순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배우면서 90년대에 들어섰다. 北韓 지도층이 소련과 東歐 社會主義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은 개혁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더욱이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1989년 북경 天安門 사태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 활동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도 黨의 사회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증대시키

---

93) Oleg Davydov, op.cit., p.4.

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개혁에 의한 발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 때문에 北韓지도층은 동구의 이러한 예를 따르지 않기로 하였다.<sup>94)</sup> 그들은 소련의 경험이 北韓에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蘇聯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은 당국이 범한 실수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北韓 지도자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되거나 정정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北韓은 ‘동유럽 현실과 비교될 수 없는’ 北韓의 독자적인 발전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유럽국가들의 개혁은 국내적 요인 때문에 요구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압력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社會主義와 자본주의간의 투쟁의 결과로 간주한다. 「로동신문」은 “동유럽과 소련에서 나타난 위기의 상황은 인민대중 사이에 이념적 革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산당이 사회에 대한 통제를 잃은 데서 기인되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또한 北韓의 체제는 강하고 단일화된 당에 의해 지지되고 인민들은 독창적이고 가장 발달된 이념체계를 제시한 위대한 지도자 밑에 결속돼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둘째로, 北韓사회에서 東歐나 蘇聯과 같은 變化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주체사상인데, 동구사회의 교훈을 기초로 더욱 철저히 교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北韓은 金日成과 金正日 권력의 정당성의 기반은 경제가 아니고 이념적 순수성에 입각한 주체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로 경제적 발전성에 의존함으로써 야기될 남한에 대한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

94) 陶炳蔚, 「민족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1991.11.15).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 특징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는 데 있습니다. --- 오늘 우리 인민들이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며 노동자 농민과, 사무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르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sup>95)</sup>

제2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北韓은 1986년 이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首領, 黨, 大衆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단일한 생명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있으며, 1989년 이후로는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論을 새로 도입하여 인민대중이 주인인 北韓 사회에서는 인민이 이반하여 체제전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교양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인민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유지하는 한 北韓社會의 變化는 억제될 것이다.

세째로, 北韓 사회의 變化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동구사태 이후 외부세계로부터 대중이 더욱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北韓의 일반 주민들은 해외 경험자나 방송, 로동신문 등을 통해 얻은 단편정보나 왜곡된 정보 이외에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제국과 蘇聯 공산체제 붕괴의 원인과 의미, 현재 北韓이 처해 있는 국제적 상황, 경제체제의 문제점,

---

95) 김일성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대회에서 행한 시정연설) 「로동신문」 (1990.5.25).



南北韓간의 생활 격차 등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蘇聯의 강경보수파가 주도한 쿠데타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공산체제가 종식된 후 폐쇄화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蘇聯과 동구의 공산당을 몰락시킨 자유화 바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金正日의 지시에 따른 '외부바람'을 막기 위해 소련 및 동구 社會主義 국가에 관한 기존 자료를 모두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자료의 회수 폐기의 조치를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출판총국은 고르바초프 문헌집을 비롯한 동구 社會主義 국가 정상들의 연설문을 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할 것, ② 중앙당 교육국은 고등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蘇聯과 동구국가들의 역사교육을 중단하고 학습 교재를 수정 보완할 것, ③ 각 도당위원회는 각급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레닌선집」과 「레닌저작집」을 전량 회수하고 대출을 일체 중단할 것, ④ 중앙방송위원회는 만수대 TV를 통한 동구 社會主義국가들의 극영화 방영을 일체 중지할 것 등이다.

또, 外國에 체류했거나 여행을 경험한 주민에 대해 특별감시를 하고 있다. 이들은 「710번 감시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유학생, 원양어업 노동자, 중국여행자, 공무원, 사절단 및 시베리아 벌목공들이 주류를 이루며 이들은 「오염사상 세척과정」이라고 불리는 이념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北韓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1:1로 감시를 붙여놓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총련 조국방문단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비디오 녹음테이프와 일본의 신문, 잡지, 서적 등을 일체 휴대하지 못하게 하며 北韓주민에게 蘇聯과 東歐의 變化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96)</sup>

北韓 사회의 變化를 억제하는 네번째의 요인은 金日成의 절대적 카리스마이다. 北韓의 고위 간부들, 신중관계급, 인민대중 할 것 없이 金日成의 항일 빨치산 경력, 정권창건 업적 등으로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귀순자들이나 방북자들의 증언이다. 이것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네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여러가지 變化의 잠재력이 이들 變化의 억제요인에 의해서 억압되어 당분간은 현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이나 위로부터의 의도적 개혁이 없는 한 金日成 생존 동안은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파괴적인 결과를 우려하여 현 사회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체제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한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없이 필요에 따라서 ‘숨은 개혁’(hidden reforms)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UN가입과 같은 것이 사례인데, UN가입 그 자체는 정책상으로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내부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도 전통적인 논리로 본래의 의도를 은폐하면서 상황에 적응해가는 방식인 것이다.

## 2. 促進要因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外

---

96) 「내외통신」 주간판 771호 (1991.11.22).

風의 통제와 사상교양으로 정치권력은 유지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改革을 필요로 했던 원래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갈 것이다.

北韓 社會 變化를 促進하는 요인은 지금까지 北韓 社會에서 꾸준히 증대된 개혁잠재력을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자세히 분석된 바와 같이 東歐나 蘇聯과 마찬가지로 北韓 社會變化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신중간계급의 성장과 계급정책의 모순이다.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여 그림으로써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共產主義 社會를 건설하는 것이 정책목표이었다. 그러나 착취계급은 청산되었지만 산업화의 결과로 새로운 신중간계급이 등장함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 이 모순이 동구 및 소련에서의 공산체제를 붕괴시켰고 中國에서 천안문사태를 일어나게 했으며 北韓에서도 變化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다. 北韓 社會에서 인테리들의 사회비판기능과 여론주도 역할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두번째로, 北韓에서도 정도는 미약하나마 產業化의 진전으로 정치주도적 社會에서 시민사회주도적 社會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교육수준의 향상, 도시화, 사회분화 또는 직업분화의 진전 등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는 金日成과 金正日의 정치적 구도에 의해서 구성된 北韓 社會에 점차 市民社會의 공간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동구 제국과 소련에서의 밑으로부터의 원인은 이러한 시민사회적 성장으로 설명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주도하고 개방을 추진하는 세력은 전문관료출신의 고위 간부들, 젊은 엘리트층, 소환 유학생들, 외교관 그룹, 북송교포 등이다. 北韓은 현재 위로부터는 외교관 및 체제불만 중견간부 등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터는 소환유학생 및 인테리층을 중심으로 체제비판 세력이 심정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에서 대체로 新中間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리다간 北韓 체제가 망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하층계층은 식량등의 생활고 때문에 불만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번째로 北韓사회에서 變化를 촉진하는 구조적인 요인은 革命熱氣의 소진이다. 北韓 사회는 革命의 불꽃이 타고 있는 한에서만 제대로 운영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社會變化의 결과 점진적으로 革命後期 症候群이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혁명후기 세대의 성장으로 革命後期 症候群은 심화되어가고 있다. 北韓 사회에서 6.25 전쟁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8.5%에 달한다. 또, 北韓에서 ‘革命’이라고 말하는 항일투쟁과 6.25 전쟁동안의 ‘對美투쟁’을 10세 이상의 나이로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전체인구의 12% 미만이다. 北韓 사회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문제의 하나는 ‘지주와 자본가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함’을 모르는 전후세대로의 교체이다. 동구와 소련 사태이후 대대적인 사상교양의 주된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준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社會主義 사회들의 變化유형의 공통성이다. 동구, 루마니아, 소련의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社會主義체제가 역사적 변혁의 격랑에 휩쓸려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마니아와 東獨에서의 변혁과정은 社會主義체제에서의 變化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革命的일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앞에서 두가지로

논의되었다. 하나는,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모든 요소들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작은 變化에도 전체 시스템의 궁극적인 붕괴나 지배계급의 제거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한 요소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 새로운 요소는 체제 내의 다른 요소들과 모순을 일으켜 그 체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격변을 경험한 동구사회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과도기적 혼란이 장기화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다른 하나는 社會主義的 所有樣式의 특징이다. 동구에서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抵抗이 있으면 정부의 武力 외의 ‘보수적 계급’이 없어 砂上樓閣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덧붙여 지적될 수 있는 것은 Goodwin과 Skocpol이<sup>97)</sup> 주장한 바와 같이 硬化된 政權일수록 變化에 적응을 못해서 밑으로부터의 체제전복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東歐 社會主義가 급속하게 붕괴한 것은 硬化된 체제가 變化하는 주변환경에 柔軟하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이 비록 현체제를 유지하고 變化를 억제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Giddens가<sup>98)</sup> 지적한대로 그러한 요인들이 역으로 작용하여 체제에 역기능적 요인으로 전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金日成의 카리스마와 폐쇄정책의 임시방편으로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金日成 사후는 北韓에서도 위의 촉진요인에 의해 돌발적이고 革命적인 變化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유엔 가입과 日本과의 수교 그리고 두만강 유역의 경제특구개발 등 부분적이나마 개

---

97) W. Goodwin and Theda Skocpol, "Explaining revolutions in the contemporary Third World," *Politics and Society* 17(1989).

98) Anthony Giddens, *Studies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London : Hutchinson, 1977).

방화 정책으로 이행하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變化의 촉진요인은 強化되고 억제요인은 弱化될 것이다.

### 3. 展望

결론적으로, 北韓 사회의 變化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구조 변동의 거시적 흐름을 볼 때, 北韓이 變化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가 이슈이다. 社會的 側面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示唆하는 변화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結論지을 수 있다. 북한 사회의 철저한 사회통제와 외부로부터의 정보통제에 기인하여 인민대중들이 밑에서 부터 먼저 蜂起하여 변화를 촉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층부의 권력엘리트와 중간층의 신중간계급이 急變하는 주변상황과 내부 체제의 문제를 인식하여 새로운 狀況定義와 政策變化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 사회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北韓 사회 변화의 類型을 결정지을 집단은 이들 인테리들과 전문가 집단 및 정치 엘리트일 것이다. 마치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와 그 주변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인테리집단의 상황 변화에 대한 認識變化가 축적되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듯이 북한에서도 위로부터의 정책변화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 위로부터의 변화의 主導가 있을 경우 정체된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변화의 주체로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부터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표출되면 사회구조 분화와 더불어 성숙해가는 革命後期 段階의 症候 또는 多元主義的 요소를 각성시켜 위와 아래가 연결되어 사회전체의 變化의 大勢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빈 면

## 第3部

### 結 論



빈 면

北韓社會는 아직까지 통치양식, 특이한 이념체계 및 철저한 대외 정보차단 정책으로 인하여 東歐 및 蘇聯에서와 같은 체제의 변화는 경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社會主義體制가 東歐 및 蘇聯과는 다른 아시아적 사회주의체제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환경변화, 경제 위기의 누적, 정치권력 교체시기의 압박, 사회구조의 變化, 그리고 사회적 불만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體制變化의 潛在力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경제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 운영, 대외적으로는 합영법의 제정 등 社會主義 體制의 틀 내에서 여러가지 개혁을 실시했으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理念, 政治體制, 對外政策, 社會部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兩面的인 實相을 볼 때 北韓體制의 향후 變化展望은 어떠한가? 북한에서도 東歐나 蘇聯에서처럼 체제내의 부분적 변화가 體制의 變化로 연결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내용을 토대로 하여 향후 북한에서 전개될 變化를 短期와 長期로 구분하여 전망해 보기로 한다.

## 1. 短期的 展望 : 改革과 統制의 딜레마

### 가. 딜레마의 性格

단기적으로<sup>1)</sup> 보아 北韓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中國의 경

힘을 쫓아 政治的으로는 통제와 폐쇄를 계속하되 經濟的으로는 실질적인 개혁과 개방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이러한 선택을 추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sup>2)</sup> 그의 직관이 어떤 면에서는 옳은 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派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개혁을 통해서 合理性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動機誘發의 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정당성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3)</sup>

실제로 개방의 문호를 넓히면 남한의 경제적 우월성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요인이 될 것이다. 일단 北韓 인민들이 南韓의 1인당 소득이 그들보다 무려 5배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을 속아왔으며 아무 이유나 목표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金日成主義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변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파멸을 초래하여 인민봉기를 유발할 것이고,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경제는 회생시킬 수 있겠지만 北韓體制의 정당성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北韓體制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sup>4)</sup>

1) 여기서 '단기'는 김일성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을 의미하며, '장기'는 김일성 사후의 김정일에게로 승계된 기간을 말한다.

2) 陶炳蔚, 「민족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1991.11.15).

3)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1991.10.28-29), p.18-9.

4) *Ibid.*, p.19.

北韓社會가 쉽게 개혁·개방으로 선회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東歐 社會主義體制들의 붕괴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모든 이념, 정치, 경제, 사회의 요소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變化도 전체 시스템의 궁극적인 붕괴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이었다. 즉 사회주의체제의 하위체제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급격하게 개선되거나 재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北韓과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체제의 경우에 더욱 긴밀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체제의 安定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개혁·개방을 회피함으로써 체제 전체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다.<sup>5)</sup>

北韓社會는 金日成 長期獨裁에 대한 비판·저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인민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조직화하여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정책을 變化시켜 인민에 대한 급작스런 통제를 완화시키는 경우에는 정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파괴적 결과를 일으킬 뿐이다.<sup>6)</sup> 만약 개혁·개방의 潛在力이 현 체제를 유지시키는 힘보다 커지게 되면 東歐 社會主義國家에서처럼 ‘밑으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改革 潛在力 보다는 統制의 힘이 아직 크다.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意志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北韓은 아직 현 체제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

5) Oleg Davydov, “북한의 정치체제변화와 대외정책”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1991.10.28-29), p.4.

6) 이정식, “표류하는 북한” 민족통일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기초연설(1991.10.28-29).

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개혁을 하더라도 현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숨은 改革(hidden reform)<sup>7)</sup>을 制限的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sup>7)</sup>

#### 나. 變化의 抑制要因

北韓體制 變化의 잠재력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첫째, 東歐 社會主義國家의 개혁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의 敎訓이다. 다비도프(Oleg Davydov)가 지적한 대로<sup>8)</sup> 北韓은 蘇聯을 포함한 社會主義國家들이 개혁을 시작한 이후 모순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90년대에 들어섰다. 北韓지도층이 蘇聯과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은 개혁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욱이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1989년 北京 天安門事態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도 黨의 사회통제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증대되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의 처형, 東獨의 호네커의 망명, 레닌 동상의 철거 등은 金日成·金正日의 개혁·개방 공포증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이 내포하고 있

7) Hy-Sang Lee, "The Economic reforms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s,"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h Int'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 (1991).

8) Oleg Davydov, *op.cit.*, p.4.

는 위험요인 때문에 北韓 指導層은 東歐의 이러한 예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실제로 그들은 蘇聯의 경험이 北韓에는 수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蘇聯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은 당국이 범한 실수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말한다. 즉 北韓 지도자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하거나 訂正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北韓은 東歐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北韓의 독자적인 발전양식을 주장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東歐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을 국내적 요인 때문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간의 투쟁의 결과로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동유럽과 蘇聯에서 나타난 위기의 상황이 인민대중 사이에 이념적 혁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산당이 사회에 대한 통제를 잃은 데서 기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또한 北韓의 체제는 강하고 단일화된 당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인민들은 독창적이고 가장 발달된 이념체계를 제시한 위대한 지도자 밑에 결속돼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둘째로, 北韓社會에서 東歐나 蘇聯과 같은 變化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主體思想인 바, 최근에는 東歐社會의 교훈을 토대로 主體思想 教養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北韓은 金日成과 金正日 권력의 정당성의 기반이 경제가 아니고 이념적 순수성에 입각한 主體思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를 경제적 發展度에 두지

9) 陶炳蔚, 「민족통일연구원 초청간담회」(1991.11.15).

10) 「로동신문」, 1991.10.10일자 사설. “당의 기치따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어 나가자.”

않는 것이다. 金日成은 北韓의 “인민들이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며 노동자, 농민과 사무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sup>11)</sup>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은 1986년 이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首領, 黨, 大衆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단일한 생명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있으며, 1989년 이후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새로 도입하여 인민대중이 주인인 北韓體制에서는 인민이 離叛하여 체제전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교양하고 있다. 따라서 主體思想이 인민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유지하는 한 北韓體制의 變化는 억제될 것이다.

셋째, 北韓體制의 變化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체제의 폐쇄성이다. 東歐사태 이후, 특히 蘇聯의 강경보수파가 주도한 쿠데타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공산체제가 종식된 후 북한의 폐쇄화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蘇聯과 東歐의 공산당을 몰락시킨 자유화 바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외부바람’을 막기 위해 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國家에 관한 자료를 모두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넷째, 北韓社會의 變化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金日成의 절대적 카리스마이다. 北韓의 고위 간부들, 인테리, 인민대중 할 것 없이 金日成의 항일 빨치산 경력, 정권창건 업적 등으로 金日

11) 김일성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대회에서 행한 시정연설) 「로동신문」 (1990.5.25).

成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귀순자들이나 방북자들의 증언이다. 이것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北韓의 군부,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와 같은 조직들의 물리적 통제력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北韓 軍部는 金日成의 積極的 支援政策으로 인하여 극도로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北韓體制 變化의 가장 큰 沮害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진우, 최 광, 오극렬, 주도일, 전병호, 김철만 등 군의 고위장성들은 金日成·金正日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있고, 金正日 時代에도 金正日이 軍의 位相에 害가 되는 革命的 轉換을 시도하지 않는 한 체제변혁세력과 對抗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北韓體制 變化의 潛在力은 이들 變化의 억제요인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표면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이나 위로부터의 의도적 개혁·개방이 없는 한 개혁·개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체제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한, 개혁이라는 이름없이 필요에 따라서 ‘숨은 개혁’(hidden reforms)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예컨대, UN 가입, 南韓과의 합의서 채택과 같은 것이 사례인 바, 이들 변화는 그 자체로 대단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 2. 長期的 展望: 統制의 限界와 改革潛在力의 顯著化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外風의 통제와 사상교양을 통해 정치권력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改革을 필요로 했던 원래의 모순은 해소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되어갈 것이다. 北韓體制에서 改革·開放 潛在力과 이에 대한 통제능력이 균형을 잃어 체제자체에 變化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일 것인가?

### 가. 統制力의 限界

기든스(Giddens)가 ‘개구리 뿔뛰기식 변화’(leapfrog idea of change)<sup>12)</sup>라는 말로 표현했듯이 한때 變化의 억제요인이었던 것이 變化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北韓의 경우, 北韓體制를 유지하는데 金日成의 절대적 존재가 절대적 역할을 했다면, 반대로 金日成의 죽음 그 자체는 체제유지에 절대적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주체사상이 北韓社會의 질서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主體思想이 대중적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主體思想과 같은 관념체계는 물질적 유인동기에 점차 침식당하게 되고 체제붕괴의 원인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폐쇄적 사회통제가 北韓體制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이었다면 UN가입 이후 대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인민대중의 離叛이 가속화될 수 있다. 통제력

12) Anthony Giddens, *Studies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Hutchinson: London, 1977).

과 개혁 잠재력의 균형이 깨어지는 시점은 김일성의 사망, 사회세력의 조직화 여부, 경제위기의 극복 여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발전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다.

#### 나. 改革 潛在力의 顯著化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北韓體制에서 꾸준히 성장한 개혁·개방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顯著化(manifestation)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北韓社會가 東歐와는 달리 붕괴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변화의 억제요인도 있지만 개혁·개방의 잠재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변화의 요인과 변화의 실상을 종합해 볼 때 현단계의 北韓에서는 經濟問題 해결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體制內 變化와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經濟問題 克服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 1991년에 있었던 일련의 대외관계 變化 가운데 UN가입, 對日 수교교섭, 남북합의서 서명, 핵사찰수용선언은 외국으로부터의 資本과 技術 流入을 위한 사전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변화의 촉진요인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中國, 쿠바, 베트남, 北韓을 제외한 東歐 및 蘇聯의 사회주의체제들이 와해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北韓體制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주의권에 의존해 온 北韓의 대외경제협력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특히, 蘇聯은 北韓 무역 총액의 58.4%, 원유도입의 17%, 총외채의 50%를 차지해왔던 바, 蘇聯이 국제가격의 30%로 제공하던 원유를 91년부터 국제가격으로 판매하고 대금의 경화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北韓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가격의 50%로 원유를 공급하던 中國도 1991년 5월 李鵬 총리의 訪北時 1992년부터 국제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를 요구하였다.

둘째,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만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南北韓의 경제적 격차가 80년대에 더욱 크게 벌어져서 90년 말 北韓의 GNP는 남한의 1/10, 1인당 GNP는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격차는 北韓으로 하여금 경제개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즉 北韓의 경제는 기존의 생산양식과 정책으로는 되살릴 수 없으며 개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계에 직면했다. 따라서 北韓은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北韓의 경제난은 사회적 불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前평양주재 蘇聯 외교관인 다비도프(Oleg Davydov)에 의하면 北韓 주민들이 '心理的 離叛'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北韓의 주민들은 쌀과 고기가 충분했던 70년대를 향수에 젖어 회고하고 있는 바, 현재의 경제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축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셋째, 韓國의 대북정책 변화이다. 北韓은 '美帝와 남한괴뢰'를 '共同의 敵'으로 규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社會統合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남북합의서 채택을 통해 쌍방의 實體를 認定하고 쌍방 간의 교류·협

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바, 합의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 나간다면 北韓은 傳統的 對南政策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넷째, 金日成이 高齡化되어감에 따라 조만간 권력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리더가 交替되면 政策的 轉換이 있어 왔다. 카리스마가 부족한 金正日이 국내외적 危機를 效率的으로 管理하지 못할 때, 軍部나 技術官僚, 人民들로부터 강한 政治的 抵抗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東歐나 蘇聯에서와 마찬가지로 北韓에도 신중단계급의 성장과 계급정책의 모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에서 자본가, 지주 등 ‘착취계급’은 청산되었지만 산업화의 결과로 새로운 신중단계급이 등장함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모순이 東歐 및 蘇聯에서는 공산체제를 붕괴시켰고 中國에서는 천안문사태를 야기시켰으며, 北韓 인테리들의 사회비판기능과 여론주도역할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에서도 變化의 要因은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北韓도 정도는 미약하나마 工業化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정치주도적 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수준의 향상, 도시화, 사회분화 또는 직업분화의 진전 등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는 金日成과 金正日의 정치적 주도에 의해서 구성된 北韓社會에 점차 市民社會의 공간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주도하고 개방을 추진하는 세력은 전문관료출신의 고위간부들, 젊은 엘리트층, 소환유학생들, 외교관 그룹, 북송교포 등이다.

北韓에서는 현재 위로는 외교관 및 체제불만 中堅幹部 등을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소환유학생 및 인테리층을 중심으로 체제비판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北韓社會에서 變化를 촉진하는 구조적인 요인은 革命熱氣의 消盡이다. 北韓社會는 革命이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유지되는 동원사회이다. 그러나 社會變化의 결과 革命後期 症候群이 나타나고 있다. 北韓社會에서 6.25 전쟁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8.5%에 달한다. 또한 北韓에서 ‘革命’이라고 말하는 항일투쟁과 6.25 전쟁동안의 ‘對美鬭爭’을 10세 이상의 나이로 직·간접 체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2% 미만이다. 北韓 社會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문제의 하나는 ‘지주와 자본가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함’을 모르는 전후세대들의 정치·사회적 진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東歐와 蘇聯 사태이후 대대적인 사상교양의 주된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사실이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준다.

여덟째, 反金正日 思潮의 一般化이다. 北韓社會의 경제적 곤란은 金正日에 대한 불만으로 직결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70년대 초에는 잘 살았으나 金正日이 등장한 70년대 중반부터 經濟가 침체되었다고 인식하며 그것은 “철없는 아이가 정치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金正日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3)</sup>. 일반주민들 역시 상층부와 마찬가지로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나 金正日에 대해서는 불만 및 비판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는 실정이다.

13) 1989년 이후 망명한 북한의 외국 유학생의 증언,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1991), pp.160.

1989년 「평양축전」 이후 귀순자들과 방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관찰해 볼 때 北韓의 간부급을 포함한 인테리들이 金正日과 알력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北韓 고위간부들은 金日成에 대해서는 항일 빨치산 경력, 정권창건 업적 등을 인정하여 대단한 충성심을 보이지만, 金正日에 대해서는 측근을 제외하고는 정책노선과 지도자 자질, 그리고 세력다툼으로 인해 불만 및 내부 알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體制比較 및 體制批判 思潮의 증가이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外國과의 교류 증가로 말미암아 비교의 계기(cue)가 점차 증가하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1989년 「평양축전」은 큰 계기가 되었다. 체제비교와 체제비판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첫째, 엘리트들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北韓 지도층은 北韓의 경제적 낙후, 지나친 사회통제, 주체사상의 맹점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體制 및 政權에 대한 비판으로 비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경제개혁 건의 및 기념비적 건설사업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해외유학생들의 체제비판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蘇聯을 비롯한 동구국가 유학생은 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바, 북한은 1989년 이후 이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 한국으로 망명한 유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東歐나 蘇聯으로 나간 유학생들은 2년만 지나면 거의 100%가 北韓體制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變化된다는 것이다. 셋째, 反體制 組織의 징후이다. 軍 및 黨의 中堅幹部, 인테리, 학생들 중에는 소그룹을 형성, 지하조직을 구축하는 단계로까지 발

전하고 있어 北韓의 잠재적인 체제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3. 結 論

北韓社會의 變化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아직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구조 변동의 거시적 흐름을 볼 때, 문제는 北韓이 變化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이다. 이론적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變化의 類型은 점진적·단계적으로 變化하는 경우와 대부분의 東歐 사회처럼 매우 폭발적·혁명적·폭력적으로 變化하는 경우이다. 급진적인 變化로는 현재의 집권층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는 위로부터의 계획적 개혁이 있을 수 있고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교체를 하고 급속한 政策變化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루마니아처럼 민중봉기가 발생하여 새로운 體制가 출범하거나 기존의 體制가 급속하게 變化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에는 政治보다는 經濟 위주로, 對內分野보다는 對外分野를 앞세워 단계적으로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체제개혁 보다는 경제관리개선과 대외개방에 중점을 두는 北韓 특유의 개혁·개방모델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개혁·개방모델은 지금까지의 선례 중에서는 中國의 경우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이지만, 變化의 速度는 中國보다 완만하며 幅과 深度 역시 中國보다 좁고 얇을 것으로 보인다.

結論的으로 北韓體制 내에서의 위로부터의 통제력과 밑으로부터의 變化 潛在力을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金日成의 生死, 南北韓 關係, 日·北韓 修交, 사회적 압력 등 變數의 變移(variation)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變化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또한 日·北韓 修交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재의 경제적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급진적인 변화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北韓에서 루마니아식의 폭력적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아시아적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北韓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르며 루마니아의 경우와 같이 政權과 人民이 괴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金日成을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主體思想과 같은 정치이념이 사회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體制的 變化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變化의 類型을 결정지을 집단은 인테리 및 전문가 집단일 것이다. 마치 蘇聯에서 고르바초프와 그 주변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인테리 집단의 상황변화에 대한 認識變化가 축적되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던듯이 北韓에서도 위로부터의 정책변화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北韓에서의 변화는 東歐나 蘇聯에서와 같이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體制的 變化라기 보다는 中國과 같이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體制內 變化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